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 변화 안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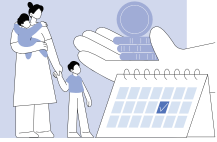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 변화 안내서

* # 청년, # 주거 등 인공지능(AI) 검색 편리

본 책의 내용은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혜택별·제도별 대표 정책 40선

01 농치면 아까운 든든한 지원책 “현금·할인·지원금·감면”



대상 소상공인
2026년 7월
재정경제부 / 중소기업부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자세한 내용은 p. 007

대상 누구나
2026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자세한 내용은 p. 100

대상 소상공인
2026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자세한 내용은 p. 016

대상 누구나
2026년 5월
금융위원회

주가지각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자세한 내용은 p. 025

대상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2026년 10월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자세한 내용은 p. 044

대상 제대군인
2026년 8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자세한 내용은 p. 057

대상 노동자
2026년 8월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신설

자세한 내용은 p. 067

대상 남성 노동자
2026년 9월
고용노동부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자세한 내용은 p. 068

대상 난임치료 노동자
2026년 11월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금 지원 기간 확대

자세한 내용은 p. 069

대상 누구나
2026년 2월
기획예산처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자세한 내용은 p. 017

대상 장애인·유공자, 다자녀가구
2026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자세한 내용은 p. 175

대상 장교, 부사관
2026년 8월
국방부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자세한 내용은 p. 215

02 시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서비스 “앱·디지털·절차 간소화”



대상 누구나

2026년 12월
행정안전부

AI 정부24 정식 개통

🔍 자세한 내용은 p. 242

대상 누구나

2026년 10월
행정안전부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 자세한 내용은 p. 248

대상 공장 노동자

2026년 4월
산업통상부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 자세한 내용은 p. 134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2026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p. 146

대상 고속철도 이용객

2026년 8월
국토교통부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 자세한 내용은 p. 174

대상 철도 이용객

2026년 10월
국토교통부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 자세한 내용은 p. 180

대상 광역전철 이용객

2026년 6월
국토교통부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 자세한 내용은 p. 181

대상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2026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 자세한 내용은 p. 235

대상 해외여행객

2026년 7월
관세청

면세범위(800\$) 이나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 자세한 내용은 p. 033

대상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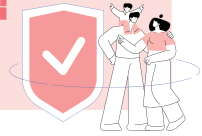
2026년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 자세한 내용은 p. 112

혜택별·제도별 대표 정책 40선

03 안전을 더하고 건강을 채우는 정책 “예방·접종·안전망”



대상 남성 청소년
2026년 5월
질병관리청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자세한 내용은 p. 092

대상 서울지역 주민
2026년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자세한 내용은 p. 111

대상 누구나
2026년 11월
기상청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자세한 내용은 p. 118

대상 고령 농업인
2026년 6월
농촌진흥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자세한 내용은 p. 207

04 소비자, 시민이 보호받는 정책 “소비자 권리·공정 강화”



대상 여성
2026년 7월
성평등가족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자세한 내용은 p. 082

대상 임산부
2026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자세한 내용은 p. 196

대상 학교 밖 청소년
2026년 6월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자세한 내용은 p.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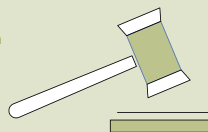
대상 위조 우려 상품 소비자
2026년 11월
지식재산처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자세한 내용은 p. 159

05 **알아두고 준비해야 하는 제도**

“의무·처벌·신고”



대상 **채납자** 2026년 3월
국세청

국세·국세외수입 채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자세한 내용은 p. 028

대상 **CEO** 2026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자세한 내용은 p. 279

대상 **체불사업주** 2026년 10월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자세한 내용은 p. 079

대상 **담배업체** 2026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자세한 내용은 p. 088

대상 **공연, 스포츠업계** 202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압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자세한 내용은 p. 103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2026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자세한 내용은 p. 155

대상 **통신판매 중개업자** 2026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자세한 내용은 p. 195

대상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자 등** 2026년 6월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자세한 내용은 p. 258

대상 **공무원 채용예정자** 2026년 6월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자세한 내용은 p. 263

대상 **주류업체** 2026년 11월
보건복지부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자세한 내용은 p. 064

수혜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① 아동·청소년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1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98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063
단기 육아휴직 신설	고용노동부	067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고용노동부	068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076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성평등가족부	045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성평등가족부	083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276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092

②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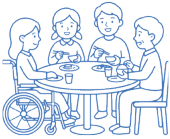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교육부	04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교육부	04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외교부	055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행정안전부	245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국가보훈부	057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01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	058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보건복지부	062
K-뉴딜 아카데미 신설	고용노동부	077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문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성평등가족부	047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중소벤처기업부	147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병무청	217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병무청	218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병무청	219
충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병무청	220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병무청	221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병무청	222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병무청	223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병무청	224

③ 중·고령층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재정경제부	006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5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국가보훈부	056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200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고용노동부	074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078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고용노동부	08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081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조달청	169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농촌진흥청	207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농촌진흥청	208

④ 가족·여성·장애인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외교부	239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법무부	240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행정안전부	246
체장의 인술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보건복지부	059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	061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249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046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	255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성평등가족부	256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	257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	175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090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기상청	119

⑤ 전국민



시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9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6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행정안전부	243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02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고용노동부	251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253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국토교통부	173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02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024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77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78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국가교육위원회	048
세무전문 시 토크스 챗봇 단계적 운영	국세청	027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국세청	029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재외동포청	282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소방청	091

⑥ 직장인·근로자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065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고용노동부	066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	07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073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25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노동부	254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084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해양수산부	261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해양수산부	262
「중행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274

⑦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	007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법무부	099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195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산업통상부	134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016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154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155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금융위원회	026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국가데이터처	269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국세청	030

⑧ 중소·벤처기업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재정경제부	011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고용노동부	07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고용노동부	071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해양수산부	140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015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150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151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152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156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조달청	034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조달청	036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조달청	166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228

⑨ 수출·혁신기업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8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0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92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116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산업통상부	132
제조업의 AI 대전환(M.AI)을 통한 혁신 성장	산업통상부	13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부	136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산업통상부	137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해양수산부	141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해양수산부	142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해양수산부	143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해양수산부	145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법제처	157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일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	086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지식재산처	158
K-브랜드 지킴이 구축	지식재산처	160

⑩ 농어업인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191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19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4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197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198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99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	202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해양수산부	203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해양수산부	260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농촌진흥청	206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농촌진흥청	209
신선농산물 「CA 수출 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농촌진흥청	210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산림청	211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산림청	212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01 금융 · 재정 · 조세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재정경제부	005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재정경제부	006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007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재정경제부	008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재정경제부	009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재정경제부	010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재정경제부	011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재정경제부	012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재정경제부	013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재정경제부	014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015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016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기획예산처	017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기획예산처	018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기획예산처	019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020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02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022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02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024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금융위원회	025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금융위원회	026
세무전문 AI 플랫폼 챗봇 단계적 운영	국세청	027
국제·국제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국세청	028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국세청	029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국세청	030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국세청	03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관세청	032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관세청	033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조달청	034
공공조달 종합 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조달청	035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조달청	036

02 교육 · 보육 · 가족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9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0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1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교육부	04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교육부	043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성평등가족부	044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성평등가족부	045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046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성평등가족부	047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국가교육위원회	048

03 보건 · 복지 · 고용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외교부	055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국가보훈부	056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국가보훈부	057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	058
취장의 인술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보건복지부	059
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보건복지부	060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	061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보건복지부	062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아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063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보건복지부	064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065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고용노동부	066
단기 육아휴직 신설	고용노동부	067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고용노동부	068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069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고용노동부	07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고용노동부	071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	07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073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고용노동부	07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고용노동부	075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076
K-뉴딜 아카데미 신설	고용노동부	077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078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고용노동부	079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고용노동부	08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081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성평등가족부	082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성평등가족부	083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084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설	기획예산처	085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일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	086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087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088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089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090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소방청	091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092
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질병관리청	093

04 문화·체육·관광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98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법무부	099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100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01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02
공연 및 스포츠경기 양묘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103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04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05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해양수산부	106
세계한인대회 개최	재외동포청	107
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	국가유산청	108

05 환경 · 기상 · 에너지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111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	112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113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114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종대상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115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116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	117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기상청	118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기상청	119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	기상청	120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기상청	121

06 산업 · 중소 기업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8
데이터·AI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한 4개 경진대회 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9
수출용 전자차단장치 인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0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1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산업통상부	132
제조업의 AI 대전환(M.AX)를 통한 혁신 성장	산업통상부	133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산업통상부	134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산업통상부	13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부	136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산업통상부	137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산업통상부	13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부	139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해양수산부	140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해양수산부	141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해양수산부	142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해양수산부	143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해양수산부	144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해양수산부	145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146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중소벤처기업부	14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변경	중소벤처기업부	148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149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150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151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15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153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154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155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156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법제처	157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지식재산처	158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지식재산처	159
K-브랜드 지킴이 구축	지식재산처	160
수도권·대경관·전남권 IP 종합지원센터 개소	지식재산처	161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특허 요약·검색서비스 적용	지식재산처	162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지식재산처	163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4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관세청	165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조달청	166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시 가점 부여	조달청	167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조달청	168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조달청	169

07 국토 · 교통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국토교통부	173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국토교통부	174
장애인·유가족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	175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176
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국토교통부	177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	178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179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국토교통부	180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181
연안여객선 예비선 2척 신규 건조·투입 운영	해양수산부	182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해양수산부	183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복합 재개발 활성화	해양수산부	184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경찰청	185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새만금개발청	186

08 농림 · 수산 · 식품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191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92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19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4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19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96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197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198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99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200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1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	202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해양수산부	203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해양수산부	204
중국 수출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205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농촌진흥청	206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농촌진흥청	207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농촌진흥청	208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농촌진흥청	209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농촌진흥청	210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산림청	211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산림청	212

09 국방 · 병무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국방부	215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책,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국방부	216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병무청	217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병무청	218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병무청	219
충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병무청	220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병무청	221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병무청	222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병무청	223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병무청	224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방위사업청	225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방위사업청	226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시선도연구협력사업 지원	방위사업청	227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228

10 행정 · 안전 · 질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5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6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7
민원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8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외교부	239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법무부	240
전자증거 보존요청 제도 시행	법무부	241
AI 정부24 정식 개통	행정안전부	242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행정안전부	243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행정안전부	244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행정안전부	245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행정안전부	246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행정안전부	247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행정안전부	248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249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250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고용노동부	251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252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25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노동부	254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	255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성평등가족부	256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	25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성평등가족부	258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259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해양수산부	260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해양수산부	261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해양수산부	26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인사혁신처	263
공무원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인사혁신처	264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 혁신	인사혁신처	265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법제처	266
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법제처	267
시기관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국가데이터처	268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국가데이터처	269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70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271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272
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국민권익위원회	273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국민권익위원회	27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국민권익위원회	275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276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77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78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79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원자력안전위원회	280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관세청	281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재외동포청	282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재외동포청	283
연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해양경찰청	284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01 재정경제부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005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006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007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008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009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010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011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012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013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014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039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040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041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098
토틸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128
데이터·AI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한 4개 경진대회 통합	129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130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131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235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236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237
민원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	238

03 교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04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043

04 외교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055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239

05 법무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099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240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241

06 국방부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215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216

07 행정안전부

AI 정부24 정식 개통	242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243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244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245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246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247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248

08 국가보훈부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056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057

09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100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101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102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압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103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104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개정	105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191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192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19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94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19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96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197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198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199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200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시행	201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202

11 산업통상부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132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한 혁신 성장	133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134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13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136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137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13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139

12 보건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058
체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059
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060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061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062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063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064

13 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111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112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113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제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114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확대	115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116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117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249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250

14 고용노동부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065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066
단기 육아휴직 신설	067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068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069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07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071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07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073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07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075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076
K-뉴딜 아카데미 신설	077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078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079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08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081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251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252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25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254

15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044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045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046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047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082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083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255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256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25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258

16 국토교통부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173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174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75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176
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177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178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179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180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181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259

17 해양수산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일부개정	084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106
어선건조·개조 수리업 등록제 전환	140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141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142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143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144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145
연안여객선 예비선 2척 신규 건조 투입 운영	182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183
공공선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활성화	184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203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204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260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261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262

18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015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016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146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14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변경	148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149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150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151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152
외국인 환자 유치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153
소상공인 SI 도우미 서비스 도입	154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155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156

19 기획예산처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017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018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019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설	085

20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263
공무원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264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 혁신	265

21 법제처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157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266
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267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일로 단축	086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087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088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089
중국 수출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205

23 국가데이터처

SI기반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268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269

24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158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159
K-브랜드 지킴이 구축	160
수도권·대경권·전남권 IP 종합지원센터 개소	161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특허 요약·검색서비스 적용	162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163

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090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270

26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020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02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022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02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024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71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272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273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경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27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275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276

28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025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026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164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277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278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279

30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280
------------------------	-----

31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048
---------------------	-----

32 국세청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027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028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029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030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031

33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032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033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165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281

34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034
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035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036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166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시 가점 부여	167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168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169

35 재외동포청

세계한인대회 개최	107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282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283

36 병무청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217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218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219
총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220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221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222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223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224

37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225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226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시선포연구협력사업 지원	227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228

38 경찰청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185
------------------------	-----

39 소방청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091
--------------------------	-----

40 국가유산청

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분시설 설치 기준 개정	108
-------------------------	-----

41 농촌진흥청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206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207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208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209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210

42 산림청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211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212

43 질병관리청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092
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093

44 기상청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118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119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	120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121

4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186
------------------	-----

46 해양경찰청

연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284
--------------------------	-----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월 이전

공사계약 계약보증금을 인하	재정경제부	012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기획예산처	017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기획예산처	019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024
추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금융위원회	025
세무전문 AI 토크스 챗봇 단계적 운영	국세청	027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국세청	028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국세청	029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조달청	036
시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9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0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	061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보건복지부	062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063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고용노동부	07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고용노동부	071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고용노동부	074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092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100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0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0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	117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한 혁신 성장	산업통상부	133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산업통상부	134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산업통상부	135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산업통상부	138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152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국토교통부	173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새만금개발청	186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1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농촌진흥청	206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산림청	212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병무청	219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병무청	224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228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6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	255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	257
공무원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인사혁신처	264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 혁신	인사혁신처	265
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국민권익위원회	273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276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제외동포청	282
연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해양경찰청	284

6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교육부	042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성평등가족부	045
국민의권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국가교육위원회	048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	072
K-뉴딜 아카데미 신설	고용노동부	077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설	기획예산처	085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일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	086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법무부	099
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분시설 설치 기준 개정	국가유산청	108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비체계 시범구축·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111
툰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8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부	139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146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155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181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해양수산부	204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농촌진흥청	207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농촌진흥청	210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5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법무부	240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행정안전부	245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고용노동부	251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25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성평등가족부	258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해양수산부	26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인사혁신처	263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국가데이터처	269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271

7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재정경제부	005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재정경제부	006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007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재정경제부	008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재정경제부	009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재정경제부	010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재정경제부	013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재정경제부	014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015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016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국세청	030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국세청	03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관세청	032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관세청	033
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조달청	03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교육부	043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046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외교부	055
취장의 인술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보건복지부	059
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보건복지부	060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073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고용노동부	075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076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07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081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성평등가족부	082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087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소방청	091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04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116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해양수산부	141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149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150
외국인 환자 유치에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153
K-브랜드 지킴이 구축	지식재산처	160
수도권·대경권·전남권 IP 종합지원센터 개소	지식재산처	161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관세청	165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시 가점 부여	조달청	167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경찰청	185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9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9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96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197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198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99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농촌진흥청	209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산림청	211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국방부	216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병무청	217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병무청	218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병무청	221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병무청	223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법무부	241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행정안전부	247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성평등가족부	256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해양수산부	260
SI기반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국가데이터처	268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70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272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국민권익위원회	274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원자력안전위원회	280

8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02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022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023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금융위원회	026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국가보훈부	057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065
단기 육아휴직 신설	고용노동부	067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01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10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부	136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지식재산처	158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조달청	166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국토교통부	174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176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	178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191
중국 수출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205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국방부	215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병무청	2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노동부	254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77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관세청	281

9월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재정경제부	011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조달청	034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	058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고용노동부	068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고용노동부	080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089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해양수산부	106
세계한인대회 개최	재외동포청	107
충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	112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114
데이터·AI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한 4개 경진대회 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9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154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4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193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200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제 개선	해양수산부	203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농촌진흥청	208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25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국인권익위원회	275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78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79

10월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1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성평등가족부	044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고용노동부	079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성평등가족부	083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088
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질병관리청	093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98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0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산업통상부	137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조달청	168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조달청	169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국토교통부	180
통신판매증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195
렘피스킨병 가족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	202
총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병무청	220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7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외교부	239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행정안전부	243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행정안전부	244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행정안전부	246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행정안전부	248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재외동포청	283

11월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보건복지부	064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069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113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기상청	118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기상청	12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변경	중소벤처기업부	148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지식재산처	159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179
민원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8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249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법제처	266

12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기획예산처	018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020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국가보훈부	056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고용노동부	066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084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종대상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115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기상청	119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	기상청	120
어선건조·개조 수리업 등록제 전환	해양수산부	140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해양수산부	142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151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156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법제처	157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특허 요약·검색서비스 적용	지식재산처	162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지식재산처	163
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국토교통부	177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해양수산부	183
AI 정부24 정식 개통	행정안전부	242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259
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법제처	267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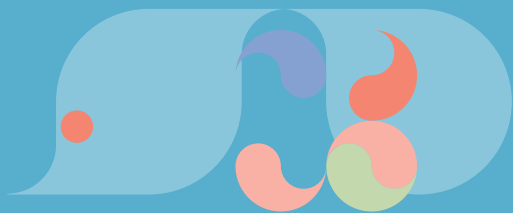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문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성평등가족부	047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090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산업통상부	132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해양수산부	143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해양수산부	144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해양수산부	145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중소벤처기업부	147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	175
연안여객선 예비선 2척 신규 건조·투입 운영	해양수산부	182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활성화	해양수산부	184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방위사업청	225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방위사업청	226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시선도연구협력사업 지원	방위사업청	227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253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해양수산부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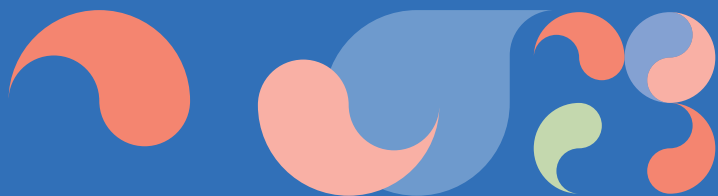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01 금융·재정·조세
- 02 교육·보육·가족
- 03 보건·복지·고용
- 04 문화·체육·관광
- 05 환경·기상·에너지
- 06 산업·중소기업
- 07 국토·교통
- 08 농림·수산·식품
- 09 국방·병무
- 10 행정·안전·질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01. 기획예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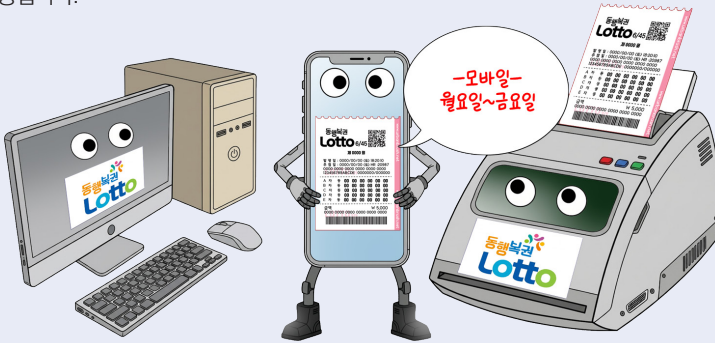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017

로또복권 이제는 모바일에서 쉽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시행일 2026년 2월 9일 시범운영 개시

- 로또복권 구매처를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및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합니다.
 - 복권수익금(판매액-당첨금-유통비용, 판매액의 40% 수준)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02.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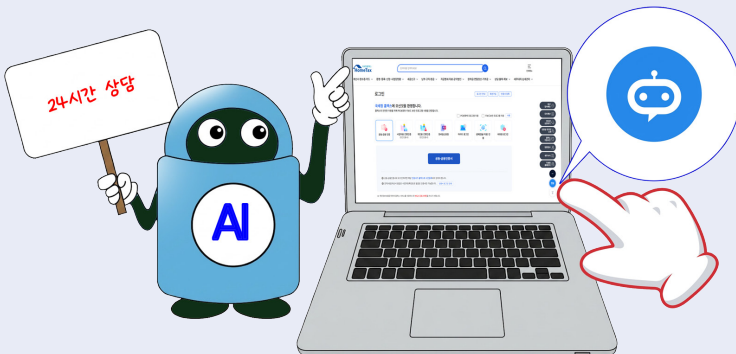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027

복잡한 세금 문의, 궁금한 내용은 빠르고 정확한 AI 홈택스 챗봇을 이용해 보세요.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시행일 2026년 5월 1일(종합소득세·장려금) → 2026년 7월 1일(부가가치세)

- 납세자와 대화하며 빠르고 정확한 AI 홈택스 챗봇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운영합니다.



03. 국세청

🔍 자세한 내용은 p. 028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실시합니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시행일 (국세 체납관리단) 2026년 3월 5일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26년 7월 1일

- 생계형 체납자, 고액·악의적 체납자 등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위해 실태확인을 실시합니다.



04.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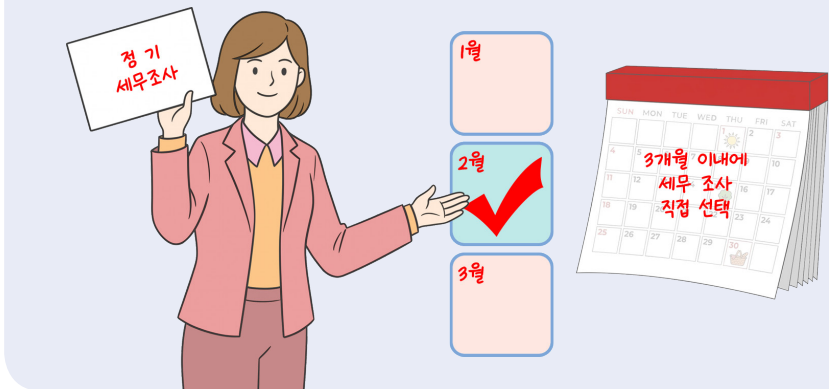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p. 029

정기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시행일 2026년 4월 2일

- 정기조사는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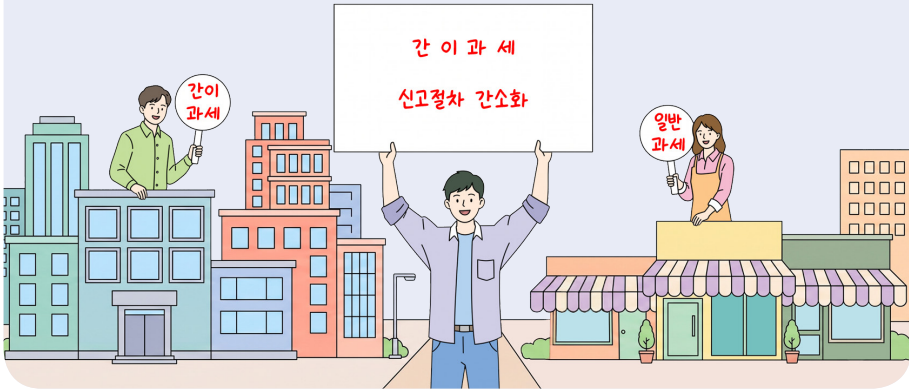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로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 정비합니다.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보다 간편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영팀 ☎ 044-215-4151

납세자, # 납부지연, #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 **추진배경** 체납 이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 단위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 **주요내용**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기존-변경 비교

	법정납부기한	고지일	지정납부기한
기 존	1일당 0.0022%		1일(日)당 0.0022%
변 경	(상동)	X	1월(月)당 0.67%

- ⊕ **기대효과** 가산세 산출방식의 간소화로 납세 편의 제고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정납부기한이 지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납세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산출방식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일(日) 단위 산출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월(月) 단위 산출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정납부기한 도과이후 납부시점까지 개월 수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함에 따라 가산세 계산이 보다 간소화
- 본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체납액 납부계획수립·이행이 용이하게 되어 납세협력 비용 및 체납액 축소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영팀: 044-215-4151
- 국세청: 126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개인사업자 박○○씨는 자금 사정으로 세금을 몇 달 늦게 납부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직접 계산해야 했는데, 1일 단위로 날짜를 일일이 세어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매번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했다. 2026년 7월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식이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바뀌면서, 박 씨는 체납 후 몇 개월이 지났지만 확인하면 가산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혼자서도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어 훨씬 편해졌다'고 박씨는 말했다.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소득(펀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652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금계좌, # 펀드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 **추진배경** 연금계좌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 **주요내용**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등 연금계좌 인출소득 추가
- ⊕ **기대효과**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분부터 적용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연금계좌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펀드 등 구매) 한 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연금계좌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여 연금계좌 인출소득 증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연금계좌 인출소득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연금계좌를 타 금융사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계좌내 자동 적용
- 금융사 간 연금계좌를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 연금계좌가 있던 금융사 또는 현재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문의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6
- 국세청: 126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퇴직을 앞둔 김○○씨(58세)는 연금계좌로 해외펀드에 투자해 왔지만,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또 내야 해 이중과세가 늘 부담이었다. 2026년 7월부터 연금계좌 인출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되면서, 별도 신청 없이 실수령액이 늘어 노후 준비가 한결 든든해졌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 044-204-7859

노란우산공제, # 소상공인, # 소득공제
목돈마련, # 사회안전망강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 **추진배경**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 **주요내용**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만원 한도에서 연 1,800만원 한도로 전환
- ⊕ **기대효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산형성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소득) 사업소득금액
 - ※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율) 공제부금 전액
 -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600만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연 1,800만원

※ 2026.6.30까지의 납입분은 종전 납입한도 적용, 2026.7.1. 이후 하반기 납입분은 개정 후 납입한도 적용(예: 1·2분기 각각 300만원 납입한 경우, 하반기 추가 납입한도는 1,200만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란우산공제 앱·홈페이지(8899.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요 은행·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후 자동이체 설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 국세청: 126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044-204-7859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www.8899.or.kr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7년 차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자영업자 특성상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안전장치인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늘리고 싶었으나, 기존에는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 원) 한도에 묶여 넉넉한 노후 대비에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장 7월부터 납입액이 늘어나 훗날을 위한 든든한 재기 자금과 노후 안전망을 한층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되었다.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간소화하여 주류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7

주류제조자, # 용기신고, # 제조면허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 ⊕ **추진배경**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조면허 발급 및 용기검정 절차 간 필요서류·확인절차 등이 유사하므로 중복 부담 완화 필요
- ⊕ **주요내용**
 - 주류 검정절차를 신고절차로 변경하고,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 신청 시 별도의 용기 신고를 생략
 - (신고대상) 제조·저장·판매용 기계, 기구 및 용기에서 제조·저장 용기로 축소
 - (신고의무자) 주류·밀술·술덧 제조자
- ⊕ **기대효과** 주류 제조자 등 부담 완화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류·밀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검정절차를 신고절차로 간소화하고,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별도의 용기 신고를 생략
-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 * (현행) 제조·저장·판매용 기계·기구·용기
- (신고의무자) 주류·밀술·술덧 제조자
 - * (현행) 주류·밀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확인절차	주류 용기 등 검정	주류 용기 등 신고
신고대상	제조·저장·판매용 기계·기구·용기	제조·저장 용기
신고의무자	주류·밀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판매업자	주류·밀술·술덧 제조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① 주류제조자(밀술·술덧 제조자 포함)는 제조·저장 용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수리* 후 사용할 수 있음
 - *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
- ② 제조 면허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용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용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주류판매업자는 판매용 기계·기구·용기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용기 신고 불필요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용기 검정이 신고절차로 간소화되고, 제조 면허 신청 시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으로 주류제조자의 부담 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7 / 국세청: 126

경기도 가평에서 수제 맥주 창업을 준비 중인 박○○씨는 자체 개발한 디자인의 갈색 유리병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용기 검정을 받으려면 검정기관 심사 및 통과, 이후 면허 신청을 해야하는 등 면허 취득까지 절차가 번거로웠다. 신고제 전환 후 박○○씨는 면허 신청 시 용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 창업 준비 과정이 간소화되었다.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3

중고차, # 매입세액공제, # 공제한도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 **추진배경**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합리화
- ⊕ **주요내용**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및 이월공제 허용
- ⊕ **기대효과** 공제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다 매입세액공제를 방지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Q. 누가 적용받나요?

-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매매업자, 수출업자)

Q.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무엇인가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Q.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과세기간 별로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차 매입가액을 뺀 범위 내에서 중고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
- 특례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 다음 2개 과세기간(1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특례 공제한도	-	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
이월공제	-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 국세청: 126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2025년 세재개편안(2025.7.31.)”

중고차 매매업자 이○○씨는 그동안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한도없이 적용받아 왔지만, 일부 업체들이 과다 공제로 인해 업계 내 불공정 경쟁이 심해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2026년 7월부터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뺀 범위 내로 공제한도가 신설되고 초과분은 1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면서, 이씨는 공제 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세워 건전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관세사 등이 자율발급하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관세환급, # 증명서, # 자율발급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 ⊕ **추진배경** 신속·간편한 증명서 발급으로 수출기업 편의 제고 및 세관 발급 업무(年 30만 건 이상) 간소화 필요
- ⊕ **주요내용**
 - (지정신청) 자율발급 희망자는 세관장에게 지정신청
 - (발급방법)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증명서 입력
- ⊕ **기대효과**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편의 제고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을 희망하는 성실 업체, 관세사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자율발급 지정받은 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세관장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증명서 발급 절차	① 세관장 발급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출 → 세관장 심사 → 발급	① 세관장 발급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출 → 세관장 심사 → 발급 ② 자율발급증명서 입력 → 발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자율발급업체 지정요건 확인 후 관할지세관장에 신청
 - * (지정요건) 외국인투자기업, 성실도와 위법도 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
- 2단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 증명서 자율 발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3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2026.1.16.)”

수입한 원면으로 면직물을 제조하여 의류업체에 공급하는 A사는 그간 기납증 발급시 일일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했다. 자율발급 절차 신설 이후, A사는 세관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기납증의 자율발급이 가능해졌다.

AI 산업에 진출한 혁신적인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춥니다.

-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 044-215-5233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 042-724-6316

AI, # 혁신제품, # 혁신조달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 ⊕ **추진배경** 진짜 AI제품이 공공에 쉽게 유입되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전문화
- ⊕ **주요내용** AI 융복합 제품 특성을 반영한 혁신제품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AI 전용 지정 트랙 신설
- ⊕ **기대효과** AI제품의 공공 유입 및 AI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 ⊕ **시행일** 2026년 9월경(2026년 공급자제한형 제4차 지정 공모 분부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I 혁신시제품을 개발한 AI 혁신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I 혁신제품에 대한 전용 심사 트랙 활용
 - 일반 혁신제품 평가와 다르게 AI 기술우수성, 리스크 관리 등 AI 기술력 평가의 핵심요소(신뢰성, AI 모델 적합성 등) 중심으로 평가항목 신설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공공성 심사	기존 제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 안전-위생 등 심사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의 안정성 등 심사
혁신성 심사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시범사용 수행역량 등 심사	데이터의 적절성 및 활용성, 성능 우수성, 기술 기여도 및 독창성 등 심사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업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AI제품이라면 혁신장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혁신시제품 제안서·규격서·신청대상 별첨서류 및 AI제품 신청 시 확인 체크리스트 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044-215-5233
-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042-724-6316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구윤철 부총리 AI 혁신기업 현장방문(2026.2.27.)”

AI 전용 심사 트랙이 도입되면서, AI 융복합 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기존보다 훨씬 수월하게 혁신제품 지정을 받음으로써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은 이 실증 기회를 활용하여 제품 상용화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공사계약시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을 현행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하겠습니다.

-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 044-215-5212

#국가계약, #공사, #공사계약보증금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 ⊕ **추진배경** 국가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지방계약 및 물품·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10%)으로 인하
- ⊕ **주요내용**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15% → 10% (5%p 인하)
- ⊕ **기대효과**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
- ⊕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체결 업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국가발주 계약 계약보증금률	(공사) 15% (물품·용역) 10%	(공사·물품·용역) 10%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5%p 인하하여 계약보증금 관련 비용부담 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공공계약 참여기업 부담 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2026.5.6.)”

건설공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〇씨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도로공사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금액의 15%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회사 자금 운용에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는 국가의 공사계약도 계약보증금률이 10%로 인하되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

선금 지급 시, 계약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 044-215-5211

#국가계약, #선금, #단계적지급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 ⊕ **추진배경** 코로나19 시기 민생·경기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 지급 운영해왔던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의 정상화 추진
- ⊕ **주요내용** 최초 지급시 (현재) 최대 70% → (개선) 의무지급률(30~50%) 범위 내 원칙, 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 지급
- ⊕ **기대효과** 코로나19 시기 확대 운영되었던 선금 제도를 원상회복하여 원활한 계약 이행 및 국가 재정운용의 정상화 도모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	의무지급률 범위(30-50%) 내 지급 원칙(발주기관 판단시 의무지급률 초과지급 가능)
지급방식	-	선금 사용 목적 및 계약이행 수준 확인 후 추가 선금 지급 허용(누적 70% 한도)

Q.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선금의 사용 목적 및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 후 추가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선금 지급을 방지하여 국가의 재정운용 부담 완화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044-215-5211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2026.2.25.)”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주민 한○○씨는 매일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2027년에 전동차 80대를 구매하여 1호선에 투입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근 전동차 납품을 담당했던 업체가 선금만 받고 전동차 납품을 지연하고 있다고 들어 걱정되었으나 선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개선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여 안심되었다.

1월 1일과 주말(토·일)을 제외한 주중에 은행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됩니다.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 044-215-4731

성인, # 외환시장, # 24시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 **추진배경**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 등 감안하여 은행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추진
- ⊕ **주요내용** 1월 1일, 주말 제외하고 은행간 외환시장 24시간 무중단 운영
- ⊕ **기대효과**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의 제약없이 우리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 가능
- ⊕ **시행일** 2026년 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시간 제약없이 은행에 환전을 주문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증권사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개장 시간	09:00 ~ *10:00	24시간 운영
개장일	공휴일 및 주말(토·일) 제외	1월 1일, 주말(토·일) 제외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증권사 등이 시간의 제약없이 우리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외환 거래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044-215-4731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발표(2026.1.9)”

밤사이 입금된 수출 대금을 다음날 업무 시간에 환전하려면 A 수출기업 자금 담당 부장 이○○ 씨. 밤중 급작스러운 중동 전쟁 휴전 소식에 환율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어, 곧바로 주거래은행과 연락하여 수출대금을 환전하였다.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되어 실시간 환율로 환전할 수 있었던 덕분에 환차손을 줄일 수 있었다.

내 손으로 키우는 유니콘! 벤처투자 더 꼼꼼하게 안정적으로 바꿉니다.

-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 044-204-7728

벤처, # 창업, # 투자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 ⊕ **추진배경** 불필요한 투자 집행 및 부득이한 법규 위반사례 발생
- ⊕ **주요내용**
 - (공통) 벤처투자 의무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벤처) 벤처투자조합 개별투자 의무(20%) 폐지
 - (개투) (창업기획자(AC)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경우) 투자범위에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차 기업 포함
- ⊕ **기대효과** 벤처투자의 적절성과 효율성 제고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조합을 통해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국민(투자자) 및 초기 자금이 필요한 유망 창업·벤처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 (지원대상) 2026년 하반기 기준 등록·운영 중인 조합 등
- (지원내용) ① 벤처투자 의무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② 벤처투자조합의 개별 펀드 투자 의무 폐지 (전체 펀드는 유지) ③ (창업기획자(AC)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경우) 투자 가능 범위에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차 창업기업 포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투자의무기한	3년 이내 투자 의무비율 준수	5년 이내 투자 의무비율 준수
개별펀드 의무 폐지	벤처투자조합 개별 의무(20%)	조합별 투자 의무 비율 폐지
투자범위 확대	투자유치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	투자유치 이력 없는 5년내 창업기업 포함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벤처투자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어 조합 투자자(출자자)의 수익률은 높이고, 안정성을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044-204-7728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보도자료)“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안내(2026.1.06.)”

박〇씨는 평소 유망한 비상장 스타트업에 발굴해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관심이 많았지만, 투자 의무기한으로 인해 원하는 비상장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가 어려울 것 같아 참여를 망설였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조합의 투자 의무기한이 5년으로 연장된 것을 듣고, 비상장 스타트업을 여유롭게 검증할 수 있게 되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벤처투자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지원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044-204-7861

소상공인정책자금, # 폐업 후 취업, # 상환연장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 **추진배경** 폐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시 금리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 기회 제공
- ⊕ **주요내용**
 - (상환연장)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2025년 포함)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최대 7년간 연장
 - (금리감면)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p 인하하여 상환부담 추가 경감
- ⊕ **기대효과** 취업·근속 시 실질소득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전환 유인을 제공하고 재무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
- ⊕ **시행일** 2026년 7월 시행 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취업한 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취업 성공 시 보유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의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보유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대출잔액에 대해 0.5%p 금리 인하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상환연장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폐업 후 취업 성공 시 지원대상 포함
금리감면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지원대상 포함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폐업 직후 겪을 수 있는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취업 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여 월 상환 부담 경감
-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높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 전환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044-204-7858

소상공인 정책자금 5천만원을 대출받아 가게를 운영하던 조○씨는 경기 악화로 2025년 폐업하였다. 기존 상환 조건대로라면 조씨는 매월 153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갚아야 했기에, 폐업 이후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상환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다행히 조씨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데 성공하면서,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 조씨의 월 상환액이 55만원으로 크게 줄어 금전적 부담을 덜게 되었고, 재무 상태를 회복하며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정착할 수 있었다.

로또복권 이제는 모바일에서 쉽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 ☎ 044-214-3431

#로또복권, #모바일, #인터넷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 ⊕ **추진배경** 로또복권은 오프라인 판매점 방문 또는 PC로만 구매가 가능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 존재,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하여 구매 편의성 개선
- ⊕ **주요내용**
 - 로또복권 구매처를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및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
 - 2026년 시범운영*을 통해 복권판매·판매점 매출·구매자·구매형태 변화 등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확대 여부 등 검토 계획
 - * 인터넷(PC+모바일) 판매한도(전년도 판매액의 5% 이내) 및 1인당 1회차당 구매가능 금액(5천 원 이하) 현행 유지, 모바일 구매가능일(월~금) 제한
- ⊕ **기대효과** 소비자 편의성 증대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젊은 세대 등 신규수요를 창출하여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
 - * 복권수익금(판매액-당첨금-유통비용, 판매액의 40% 수준)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
- ⊕ **시행일** 2026년 2월 9일 시범운영 개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구매 방식	인터넷(PC에서만 구매 가능)	인터넷(PC + 모바일 구매 가능)
구매 금액	1인당 1회차당 최대 5천 원	현재와 동일
구매 가능일	PC : 제한 없음	PC : 현재와 동일 모바일 : 월요일 ~ 금요일(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보호를 위해 주말 제외)

Q. 로또복권을 왜 모바일로 판매하게 되었나요?

-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하여, 복권 구매 편의성을 제고

Q. 1인당 구매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인터넷(PC·모바일) 구매금액 합산 기준으로, 1인당 1회차당 최대 5천 원까지 구매 가능

Q. 언제,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가능 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 다만, 주말(토·일)에는 모바일 구매가 제한되며, PC를 통한 구매만 가능

Q. 모바일 구매와 오프라인 구매 간 당첨 확률 차이가 있나요?

- 로또복권은 회차별 동일한 구조와 당첨 확률로 운영되며, 인터넷(PC·모바일)과 오프라인(판매점) 간 구매 방식에 따른 당첨 확률 차이는 없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 044-214-3431 / 동행복권 고객센터: 1588-6450

간호사인 박○○씨(29세)는 “당직 및 순환 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로또를 구매하려 갈 기회가 적어 힘들었는데, 마치 주식이나 코인처럼 살 수 있어서 좋았다”며 “온라인 시대에 복권을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흐름인 것 같다.”고 전했다. 중견기업 직장인 이○○씨(35세)는 로또복권 모바일 구매가 시작된 이후, “출퇴근 시간에 복권 구매를 위해 매장에 찾아가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니 좋다”고 말했다.

국민이 국가재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공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

기획예산처 열린재정정보과 ☎ 044-214-1950

통합재정정보, # AI 재정플랫폼, # 정보공개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 ⊕ 추진배경** 재정정보가 중앙·지방·교육 재정별 플랫폼*을 통해 분산되어 제공되고, AI를 활용한 분석도 어려워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기 어려움

* 열린재정(기획처), 지방재정365(행안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 ⊕ 주요내용**

 - 「열린재정」을 중앙·지방·교육재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 「모두의 재정」으로 개편하여, 재정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범위도 확대
 - AI가 재정정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개양식을 AI 친화적으로 표준화하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흥미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정보 콘텐츠 개발
- ⊕ 기대효과**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와 활용도를 제고
- ⊕ 시행 일** 2026년 12월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학생, 일반인, 연구자 등 재정정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용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통합	중앙재정 중심의 재정정보 공개	중앙·지방·교육 재정 정보 통합 제공
AI	AI 검색 서비스 시범운영 * 재정보고서 4,000여건 학습	AI 검색 서비스 고도화 * 재정보고서 및 사업설명자료 등 82,000여건 학습 - 사업설명자료 등 공개기준 및 범위도 통일 - 통계·보고서 분석 AI 신설
학습	공급자 중심 콘텐츠 제공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정 콘텐츠 확대 - '온라인 재정박물관' 신설

Q. 실제로 어떤 부분이 좋아지나요?

- 어려운 재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 언어 기반 AI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 가능
- 쉽게 풀이된 콘텐츠와 온라인 재정박물관을 통해 재정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학습
-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한번에 제공해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분석하고 활용
- AI를 활용하여 국민이 재정의 전 과정을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획예산처 열린재정정보과: 044-214-1950 / 한국재정정보원: 02-6908-8200

*참고: 기획예산처 누리집)보도자료)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정보 공개 확대 나라살림 투명성 높인다(2026.1.22.)”

대학원생 이○○씨는 지역 복지예산을 연구하면서 중앙재정은 열린재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각각 찾아야 했다. 그러나 2026년 12월 모두의 재정 플랫폼이 출시되면서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AI 검색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정보를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시에게 질문하면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연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이씨는 말했다.

인구감소지역과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방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합니다.

-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 044-214-3334

지역균형, # 민간투자, # 인프라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 ⊕ **추진배경** 인구감소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민자사업 추진이 어렵고, 민자사업자 선정시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미비
-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 (지역업체)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및 지역업체 우대가점 신설
- ⊕ **기대효과** 지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강화
- ⊕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 및 지역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 지원
 - 인구감소지역 민자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5%p 상향
- 지역중소업체의 민자사업 참여 우대
 -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하여 해당 지역에 분점을 두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공고할 수 있는 재량 허용
 -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업체가 민자사업자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 선정시 가점 신설(비율에 따라 1000점 중 10점까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인구감소 지역	종합평가 가중치 - 경제성 30~45% - 지역균형발전 30~40%	종합평가 가중치 - 경제성 25~42% (Δ5%p) - 지역균형발전 35~45%(5%p)
지역업체	- 구체적 우대규정 부재	- 국가 88억원, 지방정부 150억원 미만 사업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허용 -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사업자 선정시 10점까지 가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인구감소지역에 돌봄시설 등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생활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 증대
- 지역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통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성장 기회 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044-214-3334

*참고: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회 개최”) 「별첨」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 044-200-4991

가맹, # 가맹점사업자단체, # 협의의무화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 **추진배경** 기존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나, 관련 요건 등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대표성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는 사례 발생
- ⊕ **주요내용**
 - (단체 등록제) 일정 요건 충족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단체 난립 방지
 - (협의 의무화)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시, 제재조치 부과 근거 신설
- ⊕ **기대효과**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가맹 문화 확산
- ⊕ **시행일** 2026년 12월 31일

Q. 어떤 요건을 갖추야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나요?

- ①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할 것

Q.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시정조치

Q. 언제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 2026년 12월 31일 이후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개정법이 적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1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소식·뉴스)보도자료)“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18.)”

가맹점사업자인 ○○치킨 점주 최○○씨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가격 결정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여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된 이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제재 대상이 되므로 협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하도급 시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됩니다.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956

건설하도급, # 지급보증, # 하청업체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 ⊕ **추진배경** 건설하도급 시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어 발주자 지급불능(부도·파산 등)시 하청업체는 대금 수령 불가
- ⊕ **주요내용**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 ⊕ **기대효과** 발주자가 지급불능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하청업체의 대금보호 사각지대 보완
- ⊕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건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수급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적용대상) 원-하청업체 간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
 - 단,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는 제외
- (주요내용) 발주자 및 원청업체 부실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을 통해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
 -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도 포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급보증 면제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보증의무 면제 ① 1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 ②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 ③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의무 면제(면제사유 대폭 축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대금 미지급 위험 감소: 발주자 부도·파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하청업체의 안정적인 대금 확보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4956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

전기공사 하청업체 대표 박○○씨(경력 15년) 업체는 수도권 물류센터 건설에서 전기공사를 맡아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를 하였다. 2024년 발주자가 갑작스레 부도를 내면서 공사대금 2억 3천만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3자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보증도 없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며 허탈해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계약부터 3자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보증기관 보증이 의무화 되어 박씨는 '이제는 보증서만 있으면 발주자가 망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안도했다.

에너지 비용 변동분까지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956

하도급대금연동제, # 에너지비용, # 하청업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 ⊕ **추진배경** 기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적용되어,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비용 급등 시 하청업체의 부담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 ⊕ **주요내용**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 ⊕ **기대효과** 에너지 비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어 하청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 및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
- ⊕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청 및 하청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적용대상) 하도급대금 중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인 하도급거래
- (주요내용) 기존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에까지 하도급대금이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 확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하청업체 부담 완화: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시 그 비용을 하도급 단가에 반영 가능
-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비용 변동을 원·하청업체간 합리적으로 부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4956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금속 열처리 하청업체 대표 이○○씨 (종업원 22명) 업체는 열처리 공정 특성상 산업용 전기를 대량 사용한다. 2024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에너지 비용이 7천만원 늘었지만 원청은 '에너지는 원재료가 아니다'며 단가 인상을 거부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에너지도 연동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씨는 신규 계약에 전기요금 연동 조항을 넣어 '전기요금이 올라도 단가가 자동 조정된다'며 한숨을 놓았다.

원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시,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956

하도급법위반, # 신고포상금, # 하청업체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 **추진배경** 기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 유인이 부족한 문제 존재
- ⊕ **주요내용**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피해 하청업체도 포함
- ⊕ **기대효과** 피해 당사자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및 예방 강화
- ⊕ **시행일** 2026년 8월(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피해 하청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
- (신고대상 행위) 하도급법에 따른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 유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상금 지급대상	제3자 중심(피해 하청업체는 제외)	누구나(피해 하청업체 포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서·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요건 충족 시 포상금이 지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신고 활성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인 증대
- 불공정 관행 개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적발 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4956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3.25.)”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 대표 김○○씨(종업원 35명) 업체는 완성차 납품 후 원청으로부터 '검사 불량'을 이유로 대금의 15%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했다. 부당 감액임을 알면서도 피해 하청업체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 신고를 망설였다. 2026년 8월부터 피해 하청업체도 포상금 대상이 됨에 따라 김씨는 부당감액 통보서와 이메일을 증거로 공정위에 신고해 시정 명령을 이끌어냈고 포상금도 받게 됐다. 김씨는 '피해자가 신고해도 포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관행을 억누르는 힘'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어 기업들의 반복적·관행적 법 위반이 근절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044-202-4134

경제적 제재, # 과징금, #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 **추진배경**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아 기업들의 반복적·관행적 법 위반을 근절하기에 한계
- ⊕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을 하한 상향) 모든 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금액) 하한을 상향
 -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1회의 위반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감경규정 축소) 위원회 조사·심의 협조,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부여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축소하고,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규정을 삭제
- ⊕ **기대효과** 담합 등 기업들의 법 위반행위가 억제되어 담합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방지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 ⊕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Q. 개정 고시는 어떤 행위에 적용되나요?

- 고시 시행(4.30.) 후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종료된 경우 적용

Q.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 (과징금 부과기준을 하한 상향) 모든 법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금액)의 하한을 상향
- (반복 위반 시 가중 강화) 1회 법 위반 전력(과거 5년)만으로도 최대 50%(기존 10%), 위반 횟수에 따라 100%(기존 80%)까지 과징금 가중
 -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시 100%까지 과징금 가중
- (과징금 감경규정 축소) 조사·심의 협조,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 혜택을 축소하고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 삭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액	- 담합행위 부과기준율(%):매우 중대(10.5~20)/중대(3~10.5)/중대성 궤(0.5~3) - 부당지원 사익편취행위 부과기준율(%):매우 중대(120~160)/중대(50~75)/중대성 궤(20)	- 담합행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18~20)/중대(15~18)/중대성 궤(10~15) - 부당지원 사익편취행위부과기준율(%): 매우 중대(250~300)/중대(200~250)/중대성 궤(100~200)
반복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시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	-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시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 -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시 100%까지 가중
과징금 감경	- 공정의 조사·협조 시 10% 까지, 심의 협조 시 10%까지 각각 감경 -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위반 효과 제거 정도에 따라 30% 범위 내 감경 - 가벼운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 10%의 범위 내 감경	- 공정의 조사·심의 모두 협조한 경우 10%까지 감경 - 자진시정 시 위반효과가 상당 부분 제거된 경우 10% 범위 내 감경 -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 삭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34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소식·뉴스)공정위 소식)보도자료)“과징금 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2026.4.28.)”

아이가 3명인 주부 김○○씨는 식구가 많아 각종 식료품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평소 면밀히 살피는 편이다. 김○○씨는 일부 기업들의 가격 담합으로 구간 높은 값을 주고 식료품을 구매하였으나, 4월 30일부터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담합 없이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된 낮은 가격으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상한(30억원)이 전면 폐지됩니다.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02-2100-2691

주가조작, # 신고포상금, #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 **추진배경**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신고가 중요하나, 신고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 ⊕ **주요내용**
 - (지급상한 폐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30억원) 폐지
 - (지급기준 단순화) 적발·환수된 부당이익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개선
 - (접수방법 개선) 경찰청·권익위에 신고하더라도 공유·이첩시 포상금 지급
- ⊕ **기대효과** 내부자 신고 활성화에 따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 **시행일** 2026년 5월 26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고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부당이익이 적발·환수된 경우 부당이익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없이 지급
- 부당이익이 실제 환수되기 전이라도 지급예정인 포상금액의 1/10(1억원 한도)을 먼저 지급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상한 30억원	포상금 지급상한 전면폐지
포상금 산정방식	위반행위 중요도 등에 따라 등급별로(10등급) 구분	부당이익의 30%로 단순화
신고경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경찰청, 권익위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공유·이첩시 포상금 지급 가능
가담자 포상여부	고발·수사기관 통보시 포상금 지급 불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반복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1332 통해 신고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신고·적발된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여 포상금 수령 가능
- 내부자 신고 활성화에 따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초기에 적발 및 근절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대내외의 신인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91, 02-2100-2688 / 금융감독원 조사1국: 02-3145-5552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2026.5.20)

입사 5년차 김○○ 과장은 동료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00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을 알고 내부고발 낙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증거를 수집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김 과장의 구체적인 제보 덕분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고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게 되자 김 과장은 100억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수령하게 되었다.

금융이력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5

소상공인, # 신용평가, # 대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 ⊕ **추진배경**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인해 체감 경영환경은 악화되는 데 더해, 대표자의 금융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보수적 대출 심사 관행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문제 개선 필요
- ⊕ **주요내용** 매출, 업종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시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 매출, 업종, 근로자수, 사업업력, 플랫폼 성장지수(방문/재방문, 북마크 등 종합) 등 활용→ 높은 성장등급(예 : S10등급 중 상위 S1~S2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 금리·한도 등 우대
- ⊕ **기대효과** 금융권에서 SCB 등급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대출 공급, 한도 확대 및 금리우대 등이 가능해지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문제 개선 가능
- ⊕ **시행일** 2026년 8월부터 은행권 시범운영 실시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출 심사	소상공인들은 대출 심사시 미래 성장성 평가 없이 기존 신용등급으로만 심사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대출 심사시 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적용
혜택	한도, 금리 혜택 기대 X	한도, 금리우대 기대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범운영 대상 은행*에 방문하여 SCB 적용 대상 대출상품을 신청
* 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제주 등 (추후 확대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매출, 업종, 업력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등 대출심사 과정에서 한도·금리우대 등의 혜택도 적용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SCB 대출 이용 방법은 시범운영 대상 은행에,
SCB 시스템 운영 관련은 신용정보원(02-3705-5959)에 문의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금융이력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2026.4.9.)”

지역 상권에서 특색있고 다양한 메뉴의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홍○○씨(30대)는 기존 CB 평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금융이력이 부족함에 따른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신용평가(SCB)를 통해 사업장의 매출 성장추이 및 온라인 주문 증가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고, 그 결과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성장형 사업자”로 평가되어 연 5%대 금리로 4,000만원의 A은행 소상공인 대출을 승인받았다.

복잡한 세금 문의, 궁금한 내용은 빠르고 정확한 AI 홈택스 챗봇을 이용해 보세요.

-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 044-204-4452

#세금문의, #AI챗봇, #상담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 ⊕ **추진배경** 정해진 대로 답변하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쉽고 유연한 상담이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 챗봇으로 고도화하여 상담 편의 제고
- ⊕ **주요내용** 납세자와 대화하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문의나 장려금 신청,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단계적 운영
- ⊕ **기대효과**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담 환경 제공(24시간 상담 가능)
- ⊕ **시행일** 2026년 5월 1일(종합소득세·장려금) → 2026년 7월 1일(부가가치세)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홈택스(모바일손택스 포함)를 이용하는 전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기능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납세자와 대화하듯 쉽고 유연한 상담이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 서비스 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답변 범위	정해진 질문에만 답변 가능	AI학습 기반의 유연한 답변 제공
언어 이해	납세자의 질문 이해력 부족(문맥 파악의 한계)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질문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
유지 관리	시나리오가 쌓일수록 관리가 어려움	데이터를 입력하면 AI가 학습

Q.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 PC(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의 AI 챗봇 상담에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고 24시간 신속·정확한 서비스 이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빠르고 정확한 세무상담: 국세청이 검증한 사례 및 최신 세법을 반영한 답변을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상담 가능
- 편리한 전자신고 지원: 상담화면에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가능하도록 상세히 안내하여 쉽고 간편한 상담서비스 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 044-204-445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AI 챗봇에 '수영장 신용카드 공제돼?'라고 질문을 하였다. AI 챗봇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라고 답변하며, 개정된 법령 출처도 함께 제공하였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실시합니다.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국세청 체납분석과 ☎ 044-204-3042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 02-760-9163

국세, # 국세외수입, # 체납, #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 **추진배경** 누적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실태를 파악하여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체납관리 체계 구축 필요
- ⊕ **주요내용** 모든 체납자의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확대 운영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
- ⊕ **기대효과**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등 경제재기를 지원하고, 국세청의 징수역량은 고액·상습체납에 집중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입 확보
- ⊕ **시행일** (국세 체납관리단) 2026년 3월 5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26년 7월 1일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전체 국세 체납자 134만명 및 국세외수입체납자 424만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모든 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제여력, 납부여력 등을 확인하고 맞춤형 체납관리 제공
-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각종 복지연계를 통해 경제재기를 지원
- 국세 체납의 경우, 생계형 체납자가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하면 실태조사를 거쳐 5천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의무 소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인력 운용	공무원 중심, 현장 대응 인력 부족	실태확인원+공무원 협업하여 촘촘한 현장대응
체납자 정보	전산자료 중심의 제한된 정보소집	실거주지, 사업여부 등 현장정보 확인
생계형 체납지원	체납자의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복지 연계가 어려움	체납관리단에서 체납자별 맞춤형 지원을 안내·연계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체납관리단의 연락으로 방문 일정을 조율한 후, 실태확인원이 직접 방문해 소득·재산 등 실태확인 진행
- 2단계: 국세 체납의 경우, 납부의무 소멸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 결과 안내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경제적 재기의 기반 마련: 체납으로 인해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반 제공
- 안정적 세입 확보: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으로 국세청 징수역량을 고액·상습체납에 집중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입 확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청 체납분석과: 044-204-3042 /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02-760-9163

조○○씨는 거래처 부도로 자금난을 겪다가 폐업한 후 4천 5백만원의 국세 체납이 생겼으며 현재는 생계급여에 의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진행하였고, 체납관리단에서 조 씨의 사정을 확인한 뒤 납부의무 소멸 절차를 도왔다. 그 결과 조 씨의 약 4천 5백만원의 국세 체납액이 납부의무 소멸되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국세청 조사기획과 ☎ 044-204-3512

세무조사, # 조사시기, # 선택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 추진배경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점이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함에 따라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불편 발생
- ⊕ 주요내용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
- ⊕ 기대효과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 시 행 일 2026년 4월 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모든 법인·개인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자 약 1,300만명(법인사업자 약 100만명, 개인사업자 약 1,200만명)
- (지원내용) 정기조사 대상자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시기선택제 안내문 확인
- 2단계: 안내문을 받은 정기조사 대상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
- 3단계: 신청 내용을 반영한 시기선택 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안내된 일정에 따라 세무조사 대비
- 4단계: 세무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받아 조사 개시일 확인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
- 세무조사 부담 완화: 세무조사 일정을 미리 알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고, 실제 조사 시 세무 이슈에만 집중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청 조사기획과: 044-204-3512

*참고: 국세청 누리집(보도자료)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2026.4.2.)"

전자제품 제조업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씨는 최근 기업공개 준비와 관련하여 주요 일정이 집중되어 세무조사까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기선택 안내를 받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해소되었다. 남 씨는 업무가 집중되는 4~5월 대신 비교적 여유가 있는 6월로 조사 시기를 선택하였고 조사 기간에는 다른 업무와 충돌 없이 세무 이슈 대응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로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01

간이과세, # 세금 부담, # 자영업자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 ⊕ **추진배경**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상권 변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 지역 기준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미적용 받는 어려움 발생
- ⊕ **주요내용**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정비
- ⊕ **기대효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세 부담 및 신고·납부의무 완화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집단상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집단상가 등에 소재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10%)에 비해 낮은 세율(1.5%~4%)을 적용받아 세 부담 완화
 - 매년 1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간편한 납세의무 이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과세유형	일반과세	간이과세
매출세액	매출액 × 10%	▶ 매출액×부가가치율(15~40%)×10%
신고의무	연 2회(1·7월)	연 1회(1월)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없음	연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인 경우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없이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영세사업자 세 부담 완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4.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시 납부의무 면제
- 간편한 신고절차: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1월)만 신고·납부하여 신고절차 간소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01

지방 ○○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A씨는 도로 건너편 사업자와 매출액 규모가 비슷함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일반과세 적용으로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되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었고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어들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장기 체류 재외국민, 국내 유턴(U-Turn)시 세금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 044-204-2812

재외국민, # 복귀, # 세무상담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 ⊕ **추진배경** 해외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은퇴 이후 세금으로 없이 국내 복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필요
- ⊕ **주요내용**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거주자 판정, 세무관련 관심사항 등 국내복귀 관련 세무컨설팅 제공
- ⊕ **기대효과** 재외국민 국내 복귀를 통해 투자·소비 증가 등 국내 경제활동 활성화에 뒷받침하고 세원증가를 통한 세수확보에 기여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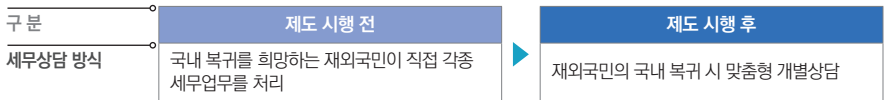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0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Q.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복귀 희망 재외국민
- (지원내용) 거주자 판정, 양도·상속·증여세 등 세무 관련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한 개별 상담 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10년 이상 해외거주자로서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 이메일(uturn2026@nts.go.kr), 팩스(0503-110-9071)
- 2단계: 화상 또는 전화로 국내복귀와 관련된 주요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해 개별상담 서비스 제공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외국민에게 세무컨설팅을 비롯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교민의 세무편의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044-204-2812

중국 진출기업 임원인 최○○씨(60세)는 은퇴 후 국내 복귀를 고민하던 중 연금소득과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금 신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세무관련 지식이 없어 걱정하던 도중 한인회를 통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재외국민 세무컨설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최 씨는 즉시 세무 상담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상담을 받아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내 복귀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기한 도과로 인한 수혜누락을 방지하고, 디지털 격차없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

관세청 통관검사과 ☎ 042-481-7886

수출입, # 검사비용, # 지원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 ⊕ **추진배경** 현행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신청 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서비스 접근성 격차 존재
- ⊕ **주요내용** 재난 피해·디지털 취약 화주를 위한 신청기한 연장 및 오프라인 신청 허용
- ⊕ **기대효과**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 및 서류제출의 편의성 향상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급박한 사정으로 신청기한 준수가 곤란한 화주 및 디지털 미숙련 화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하거나, ②전자적인 신청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수출입 화주
- (체감 혜택) ①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예외적인 기한 특례 제공, ②전자적 신청이 어려운 화주는 E-mail, 팩스 등 수기 접수도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신청 기한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0일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고령자 등 전산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팩스로도 신청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상황1: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세관검사비용 서류를 기한 내(60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해소: 신청기한 연장 신청 시 60일 추가 연장 가능
- 상황2: 외국인, 고령자 등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사용이 어려워 전산신청이 불가한 경우
 - 해소: 팩스, 이메일로 검사비용 신청서류 제출 허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른 신청기간 도과로 발생하는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책 마련
- 신청편의 제공: 공인인증 절차 등 전자적인 신청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해 이메일, 팩스 신청 허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관세청 통관검사과: 042-481-7886 /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50

관세법인에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 안○씨는 검사비용 신청 마감 전날 예상치 못한 전산 시스템 오류를 겪었다. 이로 인해 수십여개 업체의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기한 연장(최대 60일)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을 알게 되어 다행히 수출입 검사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국 시 구매하신 면세품이 면세범위(800\$) 이내라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

관세청 보세산업과 ☎ 041-481-7853

면세품, # 교환, # 해외여행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 ⊕ **추진배경** 중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하여 교환하고자 할 때, 입국 시 세관신고, 면세점 방문, 재출국 시 수령 등 교환절차가 복잡하여 해외여행객의 불편 발생
- ⊕ **주요내용** 면세한도(800\$) 이내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 (동일물품으로 교환 시 적용,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자진신고 필요)
- ⊕ **기대효과** 해외여행객의 면세점 이용편의 제고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수혜자) 면세품을 구매한 해외여행객
- (지원내용) 해외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하여 동일물품으로 교환할 때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휴대품신고와 재출국할 필요없이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 우편·택배를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 가능
* 면세범위: (기본면세범위) \$ 800(별도면세범위) 술 2ℓ 이하(400\$ 이하), 담배 200개피(킬로그램), 향수 100ml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면세품 교환 시	입국 시 자진신고 필수이며 재출국할 때 교환된 면세품 인도 가능	자진신고와 재출국없이 집에서 면세점 방문, 택배 우편을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만 가능(동일물품으로 교환 시 적용)
- 2단계: 구매한 면세점의 고객센터에 교환 요청.
- 3단계: 면세점 방문, 택배·우편 중 자유롭게 교환방법을 선택하여 교환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외여행객) 해외여행 시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에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되어 면세품 구매에 대한 부담 경감
- (면세업계) 면세품 교환 관련 민원 감소 및 면세점 이용편의 제고에 따른 이용률·매출 향상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관세청 보세산업과: 042-481-7853

해외여행을 앞둔 오○○씨는 면세품 교환절차가 복잡해 면세점에서 부모님 선물을 구매하기 망설여졌다. 기존에는 교환하려면 귀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뒤, 다음 출국 때에만 새 제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면세범위 내 물품은 입국 시 신고의무 없이 국내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덕분에 A씨는 교환부담 없이 부모님 선물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면세점 이용 시 가장 불편했던 점이 개선되었다"라며 크게 만족했다.

더 공정한 조달시장,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 042-724-6028

#공공조달, #공정경쟁, #불공정조사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 ⊕ **추진배경**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체계 강화 및 수요기관의 부당한 관행 차단
- ⊕ **주요내용**
 - (직권조사권 신설)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조달행위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수요기관의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 (조사방해시 경제적 제재)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거부 불응시 과태료 부과
- ⊕ **기대효과** 성실한 조달기업이 우대받는 선순환 구조 정착
- ⊕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Q. 누가 혜택을 받나요?

-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60만여 조달기업

Q. 어떤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나요?

-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공정조달 3중세트' 도입
- 첫째,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한 조달행위가 의심되면 조달청이 '직권조사' 실시
- 둘째, 공공기관이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금지. 신고가 접수되면 조달청이 조사하여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 조치
-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조사 방식	신고가 있어야 조사	불공정 의심시 조달청 직권조사 실시
수요기관 부당요구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부당한 요구	공공기관의 부당한 요구 법으로 금지 및 조달청의 시정요구 등 조치
조사 실효성 제고	조사 거부 방해도도 강제 수단 부족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 042-724-6028

*참고: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 "조달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2026.2.13.)"

중소 IT업을 운영하는 최○○씨는 공공기관 납품 계약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계약서에 없는 추가 작업을 요구받았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참아왔다. 2026년 9월부터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가 법으로 금지되고 조달청이 조사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최 씨는 부당 요구를 조달청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울의 입장에서 부당한 요구를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최 씨는 말했다.

건실한 전문건설기업의 수주기회가 보호되도록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합니다.

- 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

조달청 시설총괄과 ☎ 042-724-7628

공공조달, # 입찰자격사실조사, # 전문건설업, # 공정경쟁

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 ⊕ **추진배경** 페이퍼컴퍼니 등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의 입찰참여로 건실한 기업의 수주기회 침해
- ⊕ **주요내용** 적격심사 대상 시설공사 중 종합건설업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문건설업’ 낙찰예정자까지 확대
- ⊕ **기대효과** 부적격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등록기준을 성실히 유지한 건설기업 중심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어떤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나요?

- 2026년 7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까지 낙찰예정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조사대상 업종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조사방식	낙찰예정자 대상 입찰자격 서류심사	낙찰예정자 대상 입찰자격 서류심사 + 현장조사

Q.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 1단계: 입찰참여 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체 점검
- 2단계: 낙찰예정자 선정 및 관련 서류 제출
 - 적격심사 공사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면, 조달청 요청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3단계: 서류·현장 확인
 - 조달청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사무실 운영 여부, 기술인력 상시근무 실제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 4단계: 조사결과에 따른 계약절차 진행
 - 등록기준 미달 등 입찰자격에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건실한 전문건설기업의 수주기회 보호,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 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 시설총괄과 : 042-724-7628

*참고: 조달청 누리집(보도자료) “부실업체 퇴출 빨라진다... ‘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 마련(2026.4.29.)”

전문건설업체 A사는 기술인력과 사무실,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성실히 유지하며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실제 기술인력이나 사무실 운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면서, A사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만을 느껴 왔다. 하반기부터 전문건설업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자격 사실조사에 따라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줄어들어 실제 참여업체의 낙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A사와 같이 등록기준을 성실히 유지하는 업체는 상당한 수주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높여 조달기업이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302

#공공조달, #낙찰하한율, #적정대가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 ⊕ **추진배경** 중소기업 경영부담, 현장 안전관리,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업계, 국회 등으로부터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 지속 제기
- ⊕ **주요내용** 중앙조달 물품·용역 적격심사 전 구간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
-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제값받는 공정조달' 환경 조성
- ⊕ **시행일** 2026년 5월 26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앙조달 물품·용역 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조달업체

Q. 어떤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나요?

- 중앙조달 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 입찰의 낙찰하한율 2%p 상향 조정
- (일반물품) 기존80.495% ~ 84.245% → 개선82.495% ~ 86.245%
- (일반용역) 기존80.495% ~ 87.995% → 개선82.495% ~ 89.995%
- (기술용역) 기존79.995% ~ 87.745% → 개선81.995% ~ 89.745%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일반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 80.495~87.995%	82.495~89.995% (+2%p)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79.995~87.745%	81.995~89.745% (+2%p)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해 물품·용역 분야 입찰가격 투찰 시 개선된 낙찰하한율 자동 적용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5월 26일 공고 건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낙찰하한율 상향으로 지나친 저가 낙찰을 줄이고, 조달기업이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은 약 90% 수준까지 올라,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302 /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042-724-7133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 042-724-7578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 "공공계약(물품·용역) 낙찰하한율 2%p 상향"(2026.3.20.)

청소용역 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낙찰을 받아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다. 2026년 5월26일부터 낙찰하한율이 2%p 상향되면서 단순노무용역은 약 90% 수준까지 올라 박 씨는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어 직원들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박 씨는 말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02

교육·보육·가족



0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 042

구직 청년(비재학생)에게 대학-기업이 함께 제공하는 단기집중교육이 지원됩니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시행일 2026년 6월(운영대학 선정)

청년의 내일을 잇는 도약!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기업과 대학이 함께, 청년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실무 중심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



 대상 만 19~34세 미재학생 청년	 운영 대학 + 기업 공동 설계·운영	 교육형태 단기 집중형 실무교육(부트캠프)	 규모 40개 대학 약 4,000명 지원	 예산 283억원 (2026년 기준)
--	--	---	--	--

02. 성평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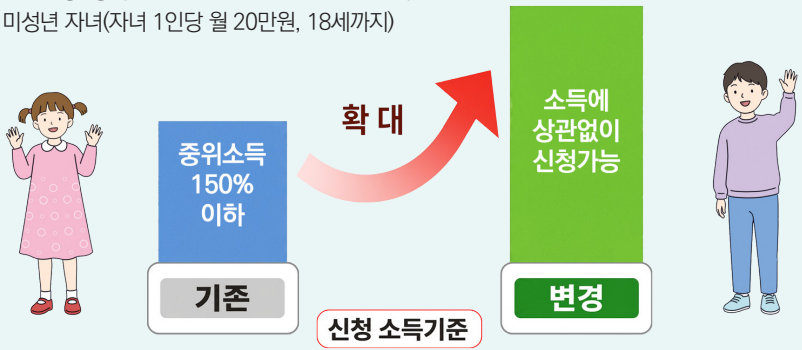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044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시는가요?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가 먼저 월 20만원씩 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 소득기준 폐지(2026.10.29. 시행)로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누구나 쉽게 배우는 AI·디지털, 'AI디지털배움터'가 69개소로 확대됩니다.

-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044-202-6152

#AI디지털배움터, #디지털격차해소, #맞춤형교육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 ⊕ **추진배경** AI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AI가 일상생활과 밀접해지면서, AI·디지털 취약계층의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AI디지털배움터 32개소를 올해 신규 구축하여 전국 69개소로 확대·운영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제공 및 AI 기본 역량 강화
- ⊕ **기대효과** AI·디지털 기초 역량 교육을 통해 차별이나 배제없이 AI·디지털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 **시행일** 2026년 5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누구나 (소득 수준 및 연령 무관)
- (지원내용)
 - 상담 : 학습자 역량을 진단하고, AI·디지털 수업 추천·체험에 관한 상담 지원
 - 교육 :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및 AI 개념·활용·윤리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체험 : AI 기기 및 생활형 기기를 구비하여 일상 속 AI·디지털 기술 직접 체험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5월부터 순차적 운영, 하반기 본격 운영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AI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 문의를 통해 AI디지털배움터 위치 및 교육과정 확인
- 2단계: 방문상담 또는 AI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AI·디지털 교육 과정 신청
- 3단계: 디지털 기기 활용 및 AI 기초역량 교육 수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일상의 자립도 제고 : 실생활 디지털 기기 조작의 두려움 극복 및 편의성 제고
- AI 기본역량 강화 : AI 기본 원리 이해 및 활용을 통해 일상 문제 해결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디지털배움터 콜센터 : 1800-0096

항암치료 요양을 위해 충남 ○○군으로 귀향한 전 씨는 인근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를 방문하여 AI·디지털 교육을 수강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전 씨는 이곳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기차표 예매를 할 수도 있게 되었고, 다양한 가상 체험과 디지털 헬스케어 키오스크 교육을 받으며 일상에서 겪던 불편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전 씨는 "디지털 배움터가 자신감과 건강을 되찾아준 새로운 희망의 거점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AI를 체험하고 성취할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지속 운영됩니다.

-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기반조성팀 ☎ 044-202-6316

AI 활용역량, # 국민 누구나 참여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 ⊕ **추진배경** 우리 사회 전반의 AI 활용문화 확산을 위해 누구나 참여하여 AI를 직접 써보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 개최
- ⊕ **주요내용**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AI퀴즈, 활용사례공모), △초·중·고(AI창작), △대학생(AI루키)·연구자(AI챗피인) 등 세분화 운영
- ⊕ **기대효과** 국민 모두가 AI의 유용성을 체감하고 일상에서 활용·확산
- ⊕ **시행일** 대회 지속 운영 중(~12월)
※ (주요대회 일정) △(일반국민) AI퀴즈·AI활용사례공모·AI오류찾기(계속) △(고령층·장애인 등) 국민행복AI경진대회(7월~), (쉬었음청년·경력보유여성) 리부트AI활용대회(8월~)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Q. 어떤 대회가 개최되나요?

- (일반국민) AI 퀴즈대회(일일 퀴즈 풀이), AI 활용사례 공모(일상의 AI 활용사례 발굴), 클릭은AI(온라인 AI체험콘텐츠 제공) 등
- (초중고) AI 창작대회(AI를 활용 동화·동요·웹툰 등 제작), 로보틱스 챌린지(AI와 로봇을 활용해 실생활의 과제를 해결) 등
- (대학생·연구자) AI 챗피인·AI 루키(혁신적인 AI기술·서비스 개발) 등
- (고령층·장애인 등) 국민행복AI경진대회(정보검색 등 AI·디지털 활용역량 경진)
- (쉬었음청년·경력보유여성) 리부트 AI 활용대회(AI교육 후 결과물 제작)

Q. 어떻게 해야 참가할 수 있나요?

- 대회 통합 홈페이지(aichallenge4all.or.kr)에 접속한 후 본인이 해당하는 대상(일반국민, 청소년, 전문가 등)에 맞는 세부 대회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네이버, 다음 중 주요 포털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으며, 홍보영상, 포스터, 우체국 택배박스 등에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게시

Q. 대회의 상금 규모는 어떻게 되고 참가자에 대한 혜택은 있나요?

- 대회 총상금 규모 : 30억원
- 우수 참가자 대상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취·창업 기회* 제공
*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연계 지원 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기정통부 SW기반조성팀: 044-202-6316/6323
- 전국민AI경진대회 홈페이지: <https://aichallenge4all.or.kr>

지방에서 홀로 거주하는 76세 최○○ 할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외출이 어려워졌고, 이웃과의 교류마저 끊겨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그러던 중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안내로 AI 디지털배움터 교육에 참여하여 스마트폰 생성형 AI 활용법을 배우게 되었고, 평생 외롭게 간직해 온 사연들을 AI와 대화하며 따뜻한 동화책으로 엮어냈다. 할머니는 이 결과물을 'AI 활용사례 공모전'에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할머니는 "시가 내 외로운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주었다"며, 상금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미뤄두었던 재활 치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초·중·고 학생 대상 과학관 특화 인공지능(AI) 교육이 확대됩니다.

-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 042-601-7940

아동·청소년, # 시교육, # 과학관교육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 **추진배경**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따라, 과학관 전시·교육 자원으로 AI 원리와 활용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과학관 특화 교육 필요 증가
- ⊕ **주요내용**
 - (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
 - (교육내용) 과학관 전시 콘텐츠와 연계한 과학관 특화 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 **기대효과** 학생의 AI 이해도와 과학 탐구 흥미를 높이고, 과학관형 AI 교육 모델 확산 기반 마련
- ⊕ **시행일** 2026년 10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과학과 AI에 관심이 있고 더 알고 싶어하는 초·중·고등학생
- (교육내용) AI의 기초 개념, 데이터 활용, 과학 문제 해결, AI 도구 활용 등을 과학관 전시와 연계하여 체험
- (체험혜택)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과학 개념을 AI와 연결해 탐구하는 체험형 교육 참여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학년, 교육 내용 확인 가능
- 2단계: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원하는 교육 신청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0월부터 확대.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AI이해도 향상: AI의 기본 원리를 과학 탐구 맥락에서 이해
- 과학 탐구 흥미 제고: 전시와 교육을 연결해 과학 개념을 체험적으로 이해
- AI 교육 참여 기회 확대: 과학관에서 AI 교육 참여 기회를 향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042-601-7940

중학교 2학년 김○○군은 평소 과학시간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지만 정작 무엇인지 직접 느껴본 적이 없었다. 2026년 10월 국립중앙과학관 시체험 교육에서 전시물 센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AI모델이 분류하는 과정을 실습했다. “교실에서 설명만 했던 시를 과학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아주 신기했어요”라고 말했다.

구직 청년(비재학생)에게 대학-기업이 함께 제공하는 단기집중교육이 지원됩니다.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044-203-7254/7255

청년, # 교육, # 부트캠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 ⊕ **추진배경** 최근 준비중 청년 증가, 일자리 미스매칭 심화 등에 대응하여 청년(비재학생)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하는 수준별 단기집중교육 제공
- ⊕ **주요내용** 재학생 대상 운영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의 대상 및 분야를 확대하여, '첨단인재형' 20개교, '실전인재형' 20개교 지원
※ (첨단인재형) AI, 반도체 등 첨단분야, (실전인재형) 인문·사회 등 다양한 직무분야
- ⊕ **기대효과** 구직 청년 4,000명의 직무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 진출 확대
- ⊕ **시행일** 2026년 6월(운영대학 선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 청년 누구나(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및 교양, 사회 프로그램 지원
 - 첨단인재형: AI,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항공우주, 로봇 등 첨단분야의 수준별 단기집중 교육과정 제공
 - 실전인재형: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과 함께 청년층의 AX 실전 직무 역량 함양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대상	부트캠프 운영대학 재학생	구직 청년 누구나(비재학생)
지원분야	AI,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항공우주, 로봇 등 첨단분야	첨단분야 + 금융, 사회복지 등 인문·사회·예술 서비스 관련 AX 실전 직무분야
지원내용	수준별 단기집중교육	수준별 단기집중교육 + 사회참여, 경력설계 등 청년 맞춤형 종합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첨단산업 인재양성 통합관리 플랫폼(www.nais.or.kr) 또는 전화(02-6009-3313)를 통해 신청
※ 상세 신청 절차는 운영대학 선정(2026년 6월) 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7월~)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대학 교수님과 기업 전문가가 함께 제공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진출 직무역량 제고
- 대학별 청년지원단을 통한 사회참여, 마음건강, 경력설계 등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 프로그램 경험
- 디지털배지 등 다양한 인증수단 및 이수증 발급, 대학 여건에 따라 마이크로디그리 등과 연계하여 청년층 경력개발 기반 마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044-203-7254/725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전략실: 02-6009-3306/3307

경영학을 전공한 이○○씨는 졸업 후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큰 고민에 빠졌다. 요즘 기업들은 단순한 경영 지식뿐만 아니라, AI 활용 능력 및 실무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인근 대학에서 개설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실전인재형)에서 AI 기본 교육을 받고 기업과 함께 AI 기반 시장구조 및 산업분석 실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취업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6구간 이하,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69

대학생, # 취업후상환, # 이자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청년층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으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가중
- ⊕ **주요내용**
 - (이자면제대상)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이하 (개선) (공통)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 (지역)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이자면제기간) (기존) 대출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개선) 대출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졸업 시점 무관)
- ⊕ **기대효과**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2026년 기준 3,037만원)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6구간 이하까지 확대 및 이자면제기간 확대)
2026년 11월 20일(지역대학학생 8구간 이하 이자면제대상 추가)
* 기존 대출실행자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발생 이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면제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자,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2026년 기준 3,037만원) 대출 이자 면제
- 법 시행 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면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이자면제대상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공통)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지역)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이자면제기간	대출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대출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졸업 시점 무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학자금지원 구간 확인
 - 학자금지원 구간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확인 가능
(직전학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 이전 학기)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문의(1599-2000)
- 2단계: 신청없이 이자면제 혜택 적용
 - 소득구간 및 대학소재지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9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지방사립대학교 3학년 박○○씨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학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졸업 후 2년이 지나도록 취업이 되지 않아 이자가 쌓이는 것이 큰 걱정이었는데, 2026년 7월부터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인 박 씨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전액 면제되었다. 박 씨가 다니는 대학은 지역대학에 해당해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이자면제 대상이 8구간 이하까지 확대 적용되어, 같은 처 친구들도 추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별도 신청없이 소득구간과 대학 소재지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이자가 면제되어, 박 씨는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시는가요?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가 먼저 월 20만원씩 드립니다.

-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2

선지급, # 양육비, #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 ⊕ **추진배경**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
- ⊕ **주요내용**
 - (기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변경) 소득기준 폐지로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확대
- ⊕ **기대효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재산 조사 미실시로 신속하게 양육비 선지급
-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 ①신청일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②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경우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미성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
- ※ 다만, 선지급금은 법원결정 양육비 집행권원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지급 대상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 가능.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메뉴)선지급 → 지원신청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메뉴)정보공간 → 자료실 → 선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 필요
- 2단계: 선지급 심사·결정 통지 이후 해당 월 25일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선지급금 지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통한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선지급금 적시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이혼 후 혼자 자녀 4명을 키우는 양육부 김○○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4명을 키우면서 매달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미이행되어 생활에 부담이 되었으나 2025년 7월 선지급 신청 후 매달 자녀 4명에 대한 선지급금 80만원을 받게 되었다.

학교 밖에서도 꿈은 계속됩니다.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회당 1만 2천원)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9

학교 밖 청소년, # 수능 모의평가, # 응시료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 **추진배경**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국고 지원받는 재학생과의 차별 해소
- ⊕ **주요내용** 수능 모의평가(6월, 9월)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 최대 2회(회차당 1만 2천원) 응시료 전액 지원
※ 수능 모의평가 응시 신청 후 청소년1388(1388.go.kr)에서 응시료 지원 신청
- ⊕ **기대효과**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진학 준비 과정에 도움
- ⊕ **시행일** 2026년 6월 4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 * 소득수준 무관 (수능 모의평가 응시 신청 후 지원금 신청 필수)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재학생만 국고 지원	학교 밖 청소년도 전액 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 2026년 '수능 모의평가' (6월, 9월)에 응시(응시료 납부)한 '학교 밖 청소년'이면 지원 가능
- 2단계: 청소년1388(1388.go.kr)에서 신청
 - 필요 서류: 당해연도 수능 모의평가 수험표, 예금주 통장사본
 -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보호자가 신청 가능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이용자인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증명 서류 제출(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의외관리증명서, 유예면제확인서, 검정고시 합격증 등), 보호자 대리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함으로써 응시료 부담 해소 및 시험 접근성 증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9
- 청소년상담1388: ☎지역번호+1388, 온라인(1388.go.kr)·문자·카카오톡

*참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보도자료)“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선(2026.1.30.)”

최○○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건강 문제로 자퇴하고 지금은 혼자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재학생 친구들은 학교에서 모의평가 응시를 무료로 처리해주는데, 최씨는 혼자 12,000원씩 납부해야 했다. “별것 아닌 돈 같아 보여도, ‘나는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공부 의욕을 꺾었다”고 말했다. 2026년 6월 모의평가부터 응시료를 신청하면 통장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씨는 6월·9월 두 번 모두 응시하며 실력을 점검하고, “이제 학교를 안 다녀도 내가 차별받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초보 부모부터 사춘기 부모까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맞춤형 가족 교육을 시작합니다.

-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23

부모, # 가족관계, # 교육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 ⊕ **추진배경** 가족 구조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부모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
- ⊕ **주요내용**
 - (교육대상) 예비부부·부모,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등
 - (교육내용) 전국 가족센터에서 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핵가족,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특성에 맞는 부모 역할, 아동 양육방법 등에 대한 부모교육
- ⊕ **기대효과** 가족 내 발생하는 문제 예방,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 ⊕ **시행일** 2026년 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예비부부, 예비부모,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예비부부·부모,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등
- 소득수준 무관! 부모역할 및 아동 양육방법이 필요한 모든 부모 지원
- (지원내용) 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 특성(한부모, 다문화 등)에 맞는 부모 역할 및 아동 양육방법 등 교육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교육정보	지역 가족센터별 개별 홈페이지 안내	가족센터 통합 홈페이지(familynet.or.kr)에서 종합 안내 등 교육정보의 접근성 향상
교육방법	지역 가족센터별 비정기적 운영	가족센터의 가족관계교육 확대 - 가족센터별 교육주간 운영(매월 셋째주) - 주말·야간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 기업, 학교 등 찾아가는 가족관계교육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가족센터 홈페이지(familynet.or.kr)에서 일정 확인.
- 2단계: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통한 교육 신청.
- 가족센터 홈페이지,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없음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7월부터 전국 가족센터에서 확대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아동 양육·훈육 방식 습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안정
- 가정 내 아동학대 위험 감소 및 가족 관계 개선 도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전국 가족센터 (familynet.or.kr): 1577-9337

○○가족센터의 이용자 최○○씨는 부모교육에 참여해 청소년 도박 문제 등에 대해 자녀와 대화하면서 부모가 먼저 다가가야 마음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교육 때마다 '새로고침' 되면서 아이와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고 부모로서 성장해 가게 되었다.

청년의 목소리, 당신의 아이디어가 성평등정책이 됩니다.

-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

성평등가족부 성형평성기획과 ☎ 02-2100-6144~6

청년, # 네트워크, # 성별균형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 ⊕ **추진배경** 청년세대는 남녀 모두가 자신을 성차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성별 인식격차 발생
- ⊕ **주요내용** (공개형 공론장 운영)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국민 참여형 소통·숙의 공간 마련 (홍보콘텐츠 공모전)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발굴
- ⊕ **기대효과** 청년세대 남녀의 상호 이해 제고, 성별인식 격차 완화 및 성별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변화 주도
- ⊕ **시행일** 2026년 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청년세대 성별 균형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개형 공론장) 청년들이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을 통해 성별 균형 이슈에 대해 학습하고 대안 논의
- (홍보콘텐츠 공모전)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홍보콘텐츠 공모전 참여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청년세대 남녀의 상호 이해 제고, 성별 인식격차 완화 및 성별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변화에 참여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 성형평성기획과: 02-2100-6144~6

평소 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20대 대학생 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남녀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성별 인식격차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청년들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쉬움을 느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개최되는 "공개형 공론장"에 참여하여 성별 균형 이슈의 대안을 논의해볼 수 있었고,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계기로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담은 영상과 이미지를 제출하였다.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문턱을 5만 명 동의로 대폭 낮추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소통기획과 ☎ 02-2100-3381

교육, # 국민의견플랫폼, # 국민의견수렴조정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 ⊕ **추진배경**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속의·토론 기반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국민의견플랫폼 요청사항 중 게시일로부터 90일 이내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건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 **기대효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현장, 일반 국민 등 의견에 기반한 실효적 교육정책 추진
- ⊕ **시행일** 2026년 6월 30일(예정)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 마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국민의견수렴조정 요청 동의 인원수	90일 이내 국민 10만 명 이상	90일 이내 국민 5만 명 이상

Q.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국가교육위원회의 국민의견플랫폼(www.ne.go.kr/platform)에 교육정책 관련 요청 사항을 작성하거나, 동의를 표시
 - 의견 작성 : 플랫폼 로그인 후 '요청하기' 메뉴에서 작성
 - 동의하기 : 플랫폼 로그인 후 '동의하기' 메뉴에서 의견 확인 및 동의

Q. 교육정책 국민의견수렴·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①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요청사항의 동의 요건 충족
- ②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여부 결정(국가교육위원회) 및 요청자에게 진행 여부 결과 통보
- ③ 설문조사·토론회·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실시
 - * 교육정책 토론·속의 등을 위한 상설 기구로, 지역·연령·성별·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된 국민 500명이 2년 임기로 참여
- ④ 의견수렴 실시 후 요청 내용에 대해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요청자 및 관계 기관에 처리 결과 통보
- ⑤ 관계 기관은 조정안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정책 추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소통기획과 : 02-2100-3381, 3384, 3385
- 국가교육위원회 대표전화 : 02-2100-3312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오○○씨는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AI교육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양해 막연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자녀의 디지털 과몰입 방지 대책과 AI 활용 역량 사이에 균형을 갖춘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026년 7월, 오씨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가능한 AI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얼마 뒤, 국교위로부터 오씨의 제안 내용에 국민 5만 명이 동의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오씨는 "요건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됐다든 정부 팸플릿을 보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 제안하였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가능한 통로가 마련되어 기쁘고, 앞으로 교육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가능한 정책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03

보건·복지·고용



01.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 065

회사가 도산하여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됩니다.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합니다.



02.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 066

4시간 근무 시 노동자 선택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시행일 2026년 12월 10일

- 반차 등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03.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 067

자녀의 질병,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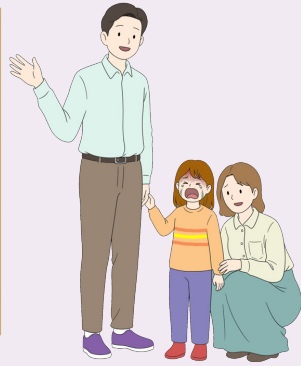
단기 육아휴직 신설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 단기간 돌봄 필요시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분할 횟수 미 차감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단위로 급여를 환산하여 지급



04.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 068

임산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가 강화됩니다.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성의 돌봄 여건이 개선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의 경우
5일 범위 내에서 휴가 사용

남성도 배우자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05.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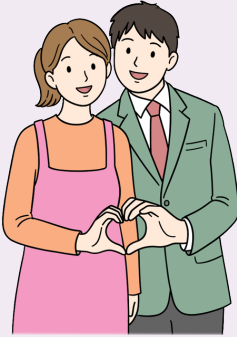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069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이 4일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개선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4일 급여 지원
(상한액336,840원)

06. 성평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 082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생리대를 비치합니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시행일 2026년 7월

-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지급기)를 상시 비치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7.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 086

현장에 속도를 더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국민 치료 기회가 앞당겨집니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일로 단축

시행일 2026년 6월 1일

• 국민 치료기회를 앞당기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증진을 위해 허가·심사체계를 혁신합니다.

속도 빠르게
허가·심사 기간 240일로 단축

소통 강화
대면회의·수시소통으로
이해도와 완성도 향상

허가·심사 혁신
허가심사 기간 240일로 대폭 단축

- ✓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개별 단계부터 소통·지원
- ✓ 수시검토·보안 자료 보완 중에도 검토 지속
- ✓ 맞춤형 규제지원 허가·심사 체크리스트 개발·제공

안전성은 더 꼼꼼하게
심사는 더 빠르게

08. 소방청

자세한 내용은 p. 091

소방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이 문을 엽니다.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시행일 2026년 7월

• 소방공무원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기반 구축 및 지역 필요의료 확충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소방병원을 개원합니다.

**SNUH 서울대학교병원영
국립소방병원**

19개 진료과, 302병상 규모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12세 남성청소년(2014년생)도 지원됩니다.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시행일 2026년 5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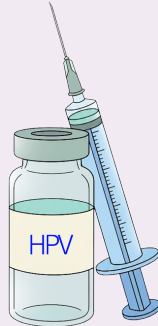
• 여성으로 한정된 지원 대상을 남성청소년으로 확대합니다.



여성

12~17세 여성청소년
(2008~2014년생)

18~26세 저소득층여성
(1999~2007년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남성

12세 남성청소년
(2014년생)



지방청년들에게 재외공관에서 해외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 ☎ 02-2100-8482

청년, # 지방인재, # 재외공관 일경험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 ⊕ **추진배경**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자체 국제교류(지방외교)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해외 일경험 기회 확대 및 국제화 역량 강화
- ⊕ **주요내용**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지역인재를 추천받아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파견하여 6개월간 일경험 기회 제공
* 파견기간 동안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등 연구
- ⊕ **기대효과** 지역 인재들이 외교현장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 **시행일** 2026년 7월 ~ 12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청년으로 어학능력, 학과성적 등이 우수한 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파견되어 외교현장 체험 및 해외 일경험
- 항공료, 체류비, 의료비 등 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신청 절차는 완료】

- 광역자치단체(시·도)에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지원(3~4월) → 시·도에서 심사평가 후 외교부로 추천
- 파견 대상자 최종 선발 및 파견 공관 확정(5월)
- 재외공관 파견 근무(7월~12월)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2026년 7월부터 파견 근무 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 02-2100-8482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한 임○씨는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 연구와 관련된 직무에 관심이 많았지만 해외 일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2026년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주 르완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6개월간 외교현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임○씨는 '그동안 지역에서 쌓은 국제교류와 관련된 봉사, 인턴 경험들을 살려 해외에서 한발짝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설레고, 그동안 지방에 살아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방 청년이라는 이유로 선택받아 기쁘다며, '돌아와서 우리 지역 국제교류 분야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제주권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혜택을 지원합니다.

-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044-202-5693

강원제주, # 국가유공자, # 의료복지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 ⊕ **추진배경** 보훈병원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위탁병원 운영중이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가 보훈병원에 비해 협소
- ⊕ **주요내용** 강원·제주 권역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보훈병원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 ⊕ **기대효과** 강원·제주 권역 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접근성 제고
- ⊕ **시행일** 2026년 12월 이후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훈병원 이용이 가능한 국가보훈대상자(단, 유가족의 경우 선순위 유족 1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강원·제주 권역 보훈대상자도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지원내용) 진료비용 중 요양급여 및 비급여 일부
 - (전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 요양급여+보훈병원 동일 비급여 항목(단, 다빈치로봇수술 및 예방접종 제외)
 - (참전유공자 등 비상이유공자 본인) 요양급여+비급여 3개 항목(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국가유공자 유가족) 요양급여+비급여 3개 항목(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인지 확인(7월 선정 예정)
- 2단계: 진료비용 감면: 대상 구분에 따라 30~100% 진료비용 지원(단, 비급여는 일부 항목만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의료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제주 권역에 위탁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상이유공자) 전상군경 등 본인 - (비상이유공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제주 권역에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상이유공자) 전상군경 등 본인 - (비상이유공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선순위 유가족 1인(보상금 수령 여부 및 연령 무관) - 장기복무제대군인
의료지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유공자) 급여+비급여 3개 항목(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비상이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유공자) 급여+보훈병원 지원 비급여 600여종 • (비상이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급여+비급여 3개 항목(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의료사각지대 해소: 강원·제주권역에서도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혜택 제공으로 의료비 절감효과 발생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044-202-5693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참고: 국가보훈부 누리집(보도자료) '준보훈병원 도입 및 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와 등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2.10).'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전상군경 박○○ 할아버지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을 앓고 계신다. 병원비 걱정으로 매년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올해 제주도내 준보훈병원이 생겨 집과 가까운 곳에서 진료비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을 수호한 장병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044-202-5736

제대군인, # 조국수호, # 무료법률구조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 ⊕ **추진배경**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제대군인의 권익 구제와 보장 방안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조국 수호 장병까지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 ⊕ **기대효과**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 (경상이자)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 상 등급기준 요건 미해당자
 - (취업맞춤특기병) 병무청 기준에 따라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
 - (저소득·모범장병) 모범적으로 병역생활을 하여 국방부에서 저소득·모범장병으로 선발된 자
- (조국수호장병) 국토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가한 자
- 최종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자 중, 승소가능성 및 법률구조의 실익 등을 감안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결정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상담 예약 후 법률상담을 진행
- 2단계: 국가보훈부 지방보훈관서(보상과)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
- 3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구 월소득 증빙서류(중위소득 125% 이하) 제출
- 4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6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취업특기병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김○○ 예비역 병장은 전역 후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회초년생으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변호사 선임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소송비용 부담 없이 법적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국의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분들께 청년미래센터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044-202-3702,3703

가족돌봄청년, # 고립은둔청년, #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 ⊕ **추진배경**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위기아동청년법이 2026년 3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전국 운영 예정
- ⊕ **주요내용**
 -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200만원, 중위소득 100%이하)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고립은둔청년)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공동생활, 일상회복, 일경험 등)으로 단계적 사회복귀 지원
- ⊕ **기대효과** 가족돌봄,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을 청년미래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연계하여 사각지대 해소
- ⊕ **시행일** 2026년 9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족돌봄) 청년미래센터에서 욕구에 따른 밀착 사례관리 진행
 - (돌봄 대상 가족) 일상돌봄, 장기요양급여를 보다 간소한 절차로 연계
 - (청(소)년 본인) 자기돌봄비 지급(200만원, 1회, 중위소득 100%이하) 및 맞춤형 서비스(장학금,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 연계
- (고립은둔) 청년미래센터에서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공동생활, 일상회복, 일경험 등)으로 단계적 사회복귀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청년미래센터	인천, 충북, 전북, 울산 4개소	전국 광역시도별 17개소
가족돌봄 특별지원	아픈 가족 대상 돌봄서비스 단순연계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확인서로 공격급여 대상자 간편 확인 1.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률 5%p 할인 2. 장기요양 시설 급여 전환 지원 3. 기초생활수급 자활청년 유예
고립은둔청년 지원	지자체별 일회성 사업 중심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회복시까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 공간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 부족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대상확인(가족돌봄청(소)년 : 13세~34세, 고립은둔청년 : 19세~34세)
- 2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대리 신청 (도움필요 아동·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가능
 - 온라인 신청: 청년on 홈페이지(www.mohw2030.c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청년미래센터 또는 읍면동
 - 신청 서류: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가족돌봄청년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미래센터에서 자기돌봄비 200만원, 심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다 공부에 집중 할 수 있었고, 최근 약학대학을 합격 하는 등 본인을 돌보고 꿈을 이룰 수 있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

*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90

장애인, # 췌장장애, #1형당뇨병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 ⊕ **추진배경** 2024년 1월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1형당뇨병 환자인 7세 딸과 부모의 사망)을 계기로 2024년 국정감사 등 장애 인정 요구 증가
- ⊕ **주요내용**
 - (장애인정 범위확대) 기존 15개 장애유형에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췌장의 내분비기능 이상에 대한 췌장장애 신설
 - (췌장장애 인정기준)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면서 (1)C-peptide가 0.6ng/ml 미만이거나 (2)단회포 C-peptide/creatinine ratio가 0.2nmol/mmol 미만인 경우는 심한 장애/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심하지 않은 장애
- ⊕ **기대효과** 1형당뇨병 등 췌장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7월 1일부터 당뇨병 환자가 모두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중 6개월 이상의 인슐린 집중 치료 및 소정의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

Q. 췌장장애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하고 췌장장애 진단 필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단 필요)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다만,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수술기록지만 제출

Q. 췌장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서비스별 추가요건 충족시 해당 서비스 제공
- 기타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시설이용료 감면 서비스, 소득공제(연말정산), 자동차취득세등 감면, 상속세·증여세 공제 등의 세제 혜택, 공동주택 특별분양, 어린이집 우선 입소(자녀·형제자매), 대학입시 장애인전형, 장애인 일자리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최○씨의 큰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1형 당뇨 진단을 받았다. 인슐린 펌프를 24시간 달고 다니며 혈당을 수시로 체크해야 했지만 장애 인정이 안 돼 어떤 복지 지원도 받지 못했다. 2024년 태안 사건을 뉴스에서 보며 '우리 아이도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2026년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이가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게 처음에는 슬펐지만, 이제는 국가가 우리 아이를 보호해준다는 것이 더 큰 안도감'이라고 말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대상 지역 및 지원인원을 확대합니다.

- 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 044-202-2683

지역의료강화, # 필수의료, # 지역필수의사

필수과목 전문의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 ⊕ 추진배경 지역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대상 지역 및 지원인원 확대
- ⊕ 주요내용
 - (지급대상) 지자체·의료기관과 장기근무계약을 체결한 필수과목 전문의*
 -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8개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자
 - (지급금액) 월 400만원 (세전)
- ⊕ 기대효과 지역 내 필수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지역의료강화 도모
- ⊕ 시행일 2026년 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장기근무계약(5년)을 체결한 필수과목 전문의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8개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 (세전), 전문의 본인에게 지급
- (정주여건) 주거·교통, 자녀 교육, 여가 문화 등 지자체별 지원내용 상이(지자체 內 자원 활용하며 자체적으로 지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4개 시도 시행 (강원, 경남, 전남, 제주)	▶ (기존) 4개 시도 시행 (확대) 7개 시도* 추가 시행 * 충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 충북, 전북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무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해당 사업 참여 여부 확인 후 지자체·의료기관과 장기근무계약 체결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7월부터 확대(지자체별 시행시기 상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3

*참고: 보건복지부 알림)보도자료)“충남·경북, 올 하반기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이○○씨는 전공의 수료 후 서울 대형병원 취업을 준비하던 중 충남 지역에서 필수과목 전문의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월400만원 지역근무수당과 숙소·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서울보다 실질 소득이 오히려 높다는 사실에 결심을 굳혔고 지역 환자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보람이 있다. 지역에서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생계 위기로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께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확대됩니다.

-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 044-202-3261

그냥드림, # 먹거리지원, # 생계위기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

- ⊕ **추진배경** 국민 먹거리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강화
- ⊕ **주요내용**
 - 생계 위기에 처한 모든 분
 - (지원물품) 1인당 3~5개 품목 기본 먹거리·생필품(2만원 한도)
 - (지원장소) 158개 시군구·280개소(2026.5.18) → 229개 시군구·300개소(2026.하반기)
 - (이용절차) 1차 이용시 개인정보 수집 및 자가체크리스트 작성 후 물품지원 → 2차 이용시 기본상담 거친 후 물품 지원, 필요시 복지지원 연계·사례관리
- ⊕ **시행일** (시범사업) 2025년 12월 1일 → (본사업) 2026년 5월 18일 → (전국시행) 2026년 9월 1일(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위기에 처한 모든 분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 지원
- 필요시, 전문 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운영지역	68개 시군구	158개 시군구(2026.5 ~ 8) 전국 229개 시군구(2026.9 ~)
사업 개소수	129개 사업장	280개 사업장(2026.5 ~ 8) 300개 사업장(2026.9 ~)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차 이용: 지역내 그냥드림 사업장 방문,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지원 필요성 검토
- 2차 이용: 그냥드림 사업장 재방문, 기본상담 진행 후 서비스 이용
- 3차 이용부터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필요성 인정시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61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참고: 보건복지부)보도자료)“그냥드림, 도움이 필요한 국민께 더 빠르고 촘촘하게 다가갑니다(2026.5.17)”

한부모 가족 부양자였던 43세 김○○씨는 자녀의 뇌종양 치료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다. 자녀 병원비 지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양자 본인도 끼니를 걸러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그냥드림을 통해 먹거리를 즉시 지원받고 긴급복지지원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청년층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경험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044-202-3276

청년, #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 청년인턴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추진배경** 공공이 주도하여 청년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한시적으로 청년인턴 채용 및 배치
- ⊕ **주요내용**
 - (모집기관 및 인원) 5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479명 청년인턴
 - (모집대상) 만19세~34세 청년(사업·지역별 최대 39세 또는 45세)
 - (활동비 및 활동기간) 월 215만원 수준(세전) / 채용시~12월
 - * 향후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 경력 80% 인정
- ⊕ **기대효과** 청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일경험 제공을 통한 성장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부담 완화

Q.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사업·지역별 최대 39세 또는 45세 가능

Q. 어디서 근무하나요? 언제까지 근무하나요?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40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명), 정신요양시설(59명),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343명), 자립지원전담기관(17명)
- 채용시부터 2026년 12월까지

Q. 어떤 일을 하나요?

- 서류작성, 문자발송, 회계처리 지원 등 행정업무 보조,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은 아동 안전귀가 확인 및 기록 등 돌봄 보조 수행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월 215만원 수준(세전)의 활동비 지급, 향후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 경력 80% 인정

Q.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나요?

- 입문교육(채용시, 온라인), 직무기술 이해를 위한 기본교육(8월, 온라인), 진로탐색 교육(12월, 대면) 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4-202-3276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청년은 일경험을 통해 성장, 돌봄 현장은 인력난 완화(2026.4.26.)”“보건복지부 누리집)참여)국민참여이벤트)“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479명 모집”

이○○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현장 경험 없이는 취업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자원봉사로 경력을 쌓으려 했지만 생계 때문에 포기한 상태였다. 2026년 5월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 청년인턴에 지원해 월 215만원을 받으며 현장에서 아이들의 귀가를 돕고 돌봄 기록을 담당하면서 ‘무급 자원봉사가 아니라 월급을 받으며 진짜 현장을 배울 수 있어 처음으로 내 미래가 구체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아이의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6

취약지, # 달빛어린이병원, # 소아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 ⊕ **추진배경**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 완화
- ⊕ **주요내용** 강원 태백시, 속초시, 영월군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시군구 13개 지역에서 여건에 맞춰 주 20시간 이상 소아 야간·휴일 진료
- ⊕ **기대효과** 야간·휴일 소아진료 접근성 향상, 경증 소아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 지역 소아 의료 기반 강화
- ⊕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소아청소년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평일 야간(18~23시), 토요일(13~24시), 일요일(09~24시) 등 동네 병원 외래 시간 이후에도 소아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2026년 2분기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소아 경증환자가 야간·휴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참여 확대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운영형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심 병·의원 야간·휴일 진료(달빛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또는 소아 진료 가능 병·의원이 야간·휴일 일부 진료
운영시간	주 41시간 이상(일반운영 기준) - 평일 18~23시, 주말 10~18시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휴일 주 20시간 이상 진료
지정현황	148개소(2026년 5월 기준)	13개소(2026년 5월 기준)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달빛어린이병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 내 운영 중인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과 운영시간 등을 확인 후 방문 (진료 비용은 환자 부담)

※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아이가 밤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플 경우 먼 지역 응급실 대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 보호자의 부담 감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6 /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취약지-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 시작”(2026.4.13.)

강원도 속초에 거주하는 박○○씨는 두 돌 지난 둘째 아이가 밤 9시에 갑자기 39도가 넘는 열이 나며 보채기 시작했다. 동네 소아과 의원은 문을 닫는 시간이고 해열제도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전에는 가까운 거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어 히는 수 없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2026년 4월부터 속초에도 소아 야간 진료기관이 생겼다고 들었고 이젠(E-GEN) 어플로 확인하니 15분 거리 병원에서 밤 11시까지 진료가 가능해서 바로 아이를 데리고 내원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를 세심하게 진찰하고 이틀치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중증 환자가 진료 받는 응급실에 가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동네 병원에서라도 아이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어 큰 힘이 되었다.

주류용기·주류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이 붙습니다.

-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1

술병, # 주류용기, # 주류광고, # 경고문구, # 경고그림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 ⊕ **추진배경** 주류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구를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선택하여 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 **주요내용** 음주운전 금지 문구 및 그림 추가, 경고그림의 표시 근거 마련, 경고문구 글자 크기 확대
- ⊕ **기대효과**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고그림을 통해 가독성·가시성을 확보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
- ⊕ **시행일** 2026년 11월 9일

Q.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알 권리가 강화되고, 건강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정보 제공
- 경고그림,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도입, 글자크기 확대로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체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표기방법	경고문구 표기 1.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2.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 1.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2.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3.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크기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7포인트 이상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9포인트 이상	<table border="1"> <thead> <tr> <th>판매용 용기의 용량 기준</th> <th>글자 크기</th> <th>그림 크기</th> </tr> </thead> <tbody> <tr> <td>300ml 이하</td> <td>8pt 이상</td> <td>8mm×8mm 이상</td> </tr> <tr> <td>300ml 초과 500ml 이하</td> <td>10pt 이상</td> <td>10mm×10mm 이상</td> </tr> <tr> <td>500ml 초과 1,000ml 이하</td> <td>14pt 이상</td> <td>12mm×12mm 이상</td> </tr> <tr> <td>1,000ml 초과</td> <td>16pt 이상</td> <td>15mm×15mm 이상</td> </tr> </tbody> </table>	판매용 용기의 용량 기준	글자 크기	그림 크기	300ml 이하	8pt 이상	8mm×8mm 이상	300ml 초과 500ml 이하	10pt 이상	10mm×10mm 이상	500ml 초과 1,000ml 이하	14pt 이상	12mm×12mm 이상	1,000ml 초과	16pt 이상	15mm×15mm 이상
판매용 용기의 용량 기준	글자 크기	그림 크기															
300ml 이하	8pt 이상	8mm×8mm 이상															
300ml 초과 500ml 이하	10pt 이상	10mm×10mm 이상															
500ml 초과 1,000ml 이하	14pt 이상	12mm×12mm 이상															
1,000ml 초과	16pt 이상	15mm×15mm 이상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고그림을 통해 가독성·가시성을 확보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전 국민 보호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1, 2835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 ‘음주운전 금지’경고도 추가(2026.5.8)”

직장인 이○○ 씨는 최근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달라진 술병 디자인에 깜짝 놀랐다. 주류용기에 음주운전 경고그림이 생겼고, 경고문구 글자도 커졌기 때문이다. 맥주병을 집을 때마다 위험성을 알리는 시각적 경고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날 회식을 마친 이 씨는 잠시 찾아온 ‘이 정도면 운전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접고 곧바로 대리운전을 호출했다. 이 씨는 “술잔을 채울 때마다 선명한 경고그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경각심이 확 들었다”며 “예전보다 확실히 메시지가 와닿는다”고 말했다.

회사가 도산하여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됩니다.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6

체불임금, # 도산, # 대지급금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 **추진배경**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도산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 ⊕ **기대효과** 도산 사업장에서의 장기 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 강화
-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산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
 - * 도산의 유형으로는 ①재판상 도산(법원의 파산선고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②사실상 도산(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음
- 다만, 퇴직기준일(재판상·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한함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급 범위) 최종 6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
- (지급 한도) 항목별·연령대별 상한액 있으므로 한도 확인 필요(「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여부 확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 후 통지 수령
- 2단계: 온라인(labor.moel.go.kr)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지급 신청
- 3단계: 지급 요건 충족 시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도산대지급금 입금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1588-0075

제조업 종사자 송○씨(32세)는 회사 파산으로 5개월치 임금 약 1,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분만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최대 6개월분까지 보전받아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시간 근무 시 노동자 선택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044-202-7545

휴게시간, # 선택권, # 4시간 근무 후 퇴근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 **추진배경** 고용형태 다변화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희망하여도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 ⊕ **주요내용**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규정을 개정
- ⊕ **기대효과**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 **시행일** 2026년 12월 10일

Q. 누가 제도를 적용받게 되나요?

- 반차 등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휴게시간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휴게시간 적용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4시간 근무 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고용형태 다변화, 연차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 활성화 등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여 편익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4-202-754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워킹맘 직장인 정○○씨는 매주 수요일 반차를 써서 오후1시에 업무를 마친다. 하지만 4시간 근무 규정으로 30분을 더 회사에 있어야 해서 1시30분에야 나올 수 있었다. 어린이집 픽업 시간이 맞지 않아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2026년 12월부터 4시간 근무 시 명시적으로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되었다. '30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 픽업 시간에 맞출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자녀의 질병,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05, 7475

단기 육아휴직, # 육아지원제도, # 일가정양립

단기 육아휴직 신설

- ⊕ **추진배경**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필요시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 **주요내용** 단기간 돌봄 필요시 육아휴직을 연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 **기대효과** 긴급 돌봄사유 발생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일가정양립 활성화
-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Q. 누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단기육아휴직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단기 육아휴직 사용시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환산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유) ①휴원·휴교, ②방학, ③질병·사고로 입원, ④감염병으로 등원·등교 중지
- (기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가능(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분할횟수 미 차감)
- (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급여를 환산하여 지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직청구: 단기 육아휴직 사유 발생 시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 급여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우편 또는 방문
 - 제출서류: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05, 74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초등학교 자녀 둔 맞벌이 부부 이○○씨는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려 3일간 등교 중지 통보를 받았다. 배우자도 직장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고, 육아휴직을 내자니 최소 30일이라 망설여졌다. 급하게 어머니께 연락드렸지만 먼 거리에 계셔서 3일 내내 연차를 쓸 수밖에 없었다. 2026년 8월부터 단기 육아휴직(1주 또는 2주)이 생겨 급여도 받으면서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씨는 '이런 제도가 빨리 생겼다면 연차 쓰지 않고 걱정 없이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다.

임산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가 강화됩니다.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1, 7412 # 배우자출산전후휴가, # 배우자유산사산휴가, # 일가정양립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 ⊕ 추진배경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 개선 필요
- ⊕ 주요내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및 급여지원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기대효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돌봄 강화 및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
-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Q. 누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유산·사산하거나 임신 중인 남성 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휴직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지원
 - 휴가 청구: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 청구
 - 급여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 제출서류: 급여 신청서, 휴가 확인서 등
- 배우자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업주에게 휴가 고지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직 개시일 7일 전에 신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1, 7412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아내가 임신 중인 이○○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 출혈로 조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절대 안정을 권유했지만, 이 씨는 자녀 출생 전까지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 연차를 모두 소진하며 아내 곁을 지켰다. 2026년 9월부터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에도 배우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제도가 우리 곁에 없는 것 같아 외로웠다. 이제는 임신부터 함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이 4일로 확대됩니다.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045, 7438

난임휴가, # 난임치료지원, # 출산지원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 **추진배경** 난임치료휴가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 개선 필요
- ⊕ **주요내용**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일부 지원
- ⊕ **기대효과**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 개선
- ⊕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2일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4일 급여 지원
지급액	상한액 168,420원	상한액 336,840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청구한 노동자
- (휴가) 사업주가 연간 6일(최초 4일 유급) 범위에서 휴가 부여
- (급여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상한액 336,840원)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 급여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www.work24.go.kr),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045, 7438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2026. 4. 23.)"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 김○○씨는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서 병원 방문이 잦아졌지만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2일분에 그쳐 나머지 날은 개인 연차를 써야 했다. 연차가 빠듯한 중소기업 직원으로서 '치료받으면서도 연차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2026년 11월부터 급여 지원이 4일분으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두 배가 됨에 따라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을 정부가 이렇게라도 응원해줘서 힘이 난다'고 전했다.

전국적인 고용 상황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29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위기, # 휴직휴업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 **추진배경** 전국적 고용위기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필요
- ⊕ **주요내용**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근거 마련
- ⊕ **기대효과**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 발생시 사업주 지원 강화를 통한 제도 탄력성 및 효과성 제고
- ⊕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등 금품의 1/2~2/3을 지원(1일 최대 68,100원)
- * 단, 코로나와 같은 전국적 고용위기 발생시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수준을 상향하는 등 지원 확대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업종, 지역의 고용위기 시에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가능	▶ 전국적인 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사업주)
- 2단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확대하여 사업주 및 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29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코로나19 때 전례 없는 전국적 고용위기에 정부가 신속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줬지만 그건 당시 임시방편이었고, 다음 위기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고 중소 제조업 대표 박○○씨 말했다. 그러나 2026년 5월부터 전국적 고용위기 발생 시에도 지원 확대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박 씨는 '다음 위기가 와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용 유지에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사업주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과 요건을 통일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29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위기, # 휴직휴업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 ⊕ **추진배경** 휴업·휴직 등 지원유형 및 요건이 구분되어 있어 제도 활용시 현장에 혼란이 있는 경우 유
- ⊕ **주요내용** (지원유형 통일)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지원유형을 통일하여 제도 간소화
- ⊕ **기대효과** 기업의 제도 활용 편의 제고 및 인력 운영의 탄력성 확보
- ⊕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당 등 금품의 1/2 ~ 2/3을 지원(1일 최대 68,100원)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시 특정 부서, 일부 인원,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5.12. 시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유급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20% 초과 단축	▶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유급휴직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휴업	① 30일 이상 휴업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	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휴직, ② 30일 이상 휴직, ③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사업주)
- 2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유급 고용유지조치: 특정 부서만 근로시간 20% 단축시에도 활용할 수 있고, 휴직자도 일정 시간 출근하여 업무 처리 가능
- * 개선 전에는 휴직기간 1개월 중 하루라도 출근 시 부정수급으로 보아 지원금 전액 환수 경험도 있었다. 2026년 5월 제도개선으로 일부 라인만 휴업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휴직자가 일정 시간 출근하여도 부정수급이 아니게 됐다.
-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요건 통일로 제도 간소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29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수출 중소기업 인사팀장 최○○씨는 회사의 수출 물량이 급감하면서 특정 생산라인만 휴업이 필요했지만 기존에는 전체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해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휴직 중 긴급한 품질 문제로 잠깐 출근시켰다가 전액 환수를 당한 경험도 있었다. 2026년 5월 제도개선으로 일부 라인만 휴업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휴직자가 일정 시간 출근하여도 부정수급이 아니게 됐다. 최 씨는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서도 회사를 살릴 현실적인 방법이 생겼다"고 전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3-7213

상습체불사업주, # 고용장려금, # 임금체불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 **추진배경**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추가하여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 **주요내용**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구직자 또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 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 ⊕ **기대효과**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여 임금체불 억제
- ⊕ **시행일** 2026년 6월 1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사업주 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 •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여 임금체불 억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3-7213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소기업 근로자 박○○씨는 이전 직장에서 3개월치 임금을 체불당한 경험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 사장은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고용장려금은 계속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6년 6월부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박 씨는 '임금을 안 주는 회사에 세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 모순이 해소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3-7213

고용장려금, # 신청기간, # 취업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 ⊕ **추진배경**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12개월이지만, 6개월이상의 고용유지가 필요하여, 실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
- ⊕ **주요내용**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실제 사업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 **기대효과** 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장려금 부지급 사례 감소로 제도 실효성 증가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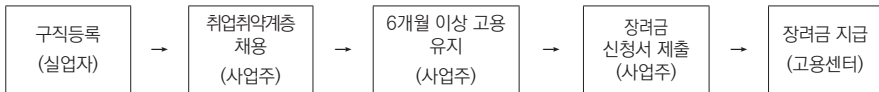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기업 증가, 취업취약계층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원(대규모 기업 360만원)까지 지원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장려금 부지급 사례 감소로 장려금 활용 기업 증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3-7213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 대표 김○○씨는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바쁜 사업 운영 중에 신청 기간을 12개월로 알고 있다가 실제로 신청해보려 하니 고용유지 기간 6개월을 빼면 신청기간이 불과 몇 달밖에 남아 서류를 못 갖추고 기한을 넘겨버린 경험이 있었다. 2026년 7월부터 신청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여유 있게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현장의 고용위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를 개선합니다.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3

고용위기,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 추진배경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위기를 적시에 포착·지원할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정량요건 산정기간 단축 및 구직급여 신청자 수 판단범위에 일용직도 포함
- ⊕ 기대효과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한 지역·업종을 신속히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
- ⊕ 시행일 2026년 5월 4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 또는 업종에 속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정지역 또는 업종에 속하는 구직자·실업자·재직자·사업주 등 대상으로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우대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기간: 직전 12개월 • 상용직 기준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기간: 직전 6개월 • 구직급여 신청자 정량지표 판단 시 일용직 구직급여 신청(회사사정)도 포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자치단체장(고용위기지역) 또는 사업주·근로자단체(특별고용지원업종)는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 2단계: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역·업종의 고용위기 발생 시 특정 지역·업종의 고용위기가 다른 지역·업종으로 확산되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적시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장○○씨가 근무하는 기업이 위치한 A지역 산업단지는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주요 대기업들이 생산량을 감축하는 등 중소·협력업체 사이에서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으나,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은 장기간의 판단기간, 상용직 위주의 지표판단으로 이러한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다. 장 씨는 “산단이 어려워지면 먼저 일감이 줄어든 주변 일용노동자들부터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며, “이번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현장의 어려움이 보다 적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기한을 단축하여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신속한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08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 # 지역일자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 **추진배경**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한을 사업장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소요기간과 무관하게 1년 6개월로 규정하여 사업장의 시설투자 및 채용 결정을 지원
- ⊕ **주요내용** 조업시작 기한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대규모 시설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허용
- ⊕ **기대효과** 지역고용계획에 따른 시설투자 및 신규 채용 촉진으로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 지정기간 내 신속한 고용창출 효과 기대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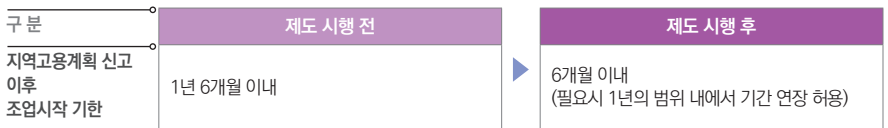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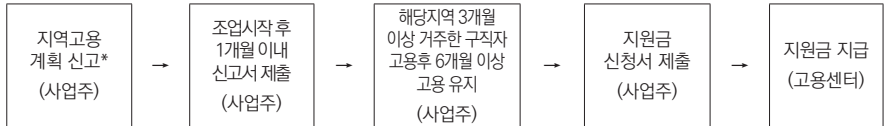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 기업 1/3)을 1년간 지원(1일 최대 68,100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고용계획서는 노동부가 지정한 고용위기 지역 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에만 신고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간이 단축되어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 지정기간 내 신속한 고용창출 효과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 보상을 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7

#배우자 출산휴가, # 업무분담지원금, # 일가정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 **추진배경**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분담이 중요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 ⊕ **주요내용**
 -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급금액) 30인 이상 최대 40만원, 30인 미만 최대 60만원
- ⊕ **기대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활성화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사용기간 전체에 대해 업무분담자(최대 5인)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최대 60만원 (30인미만 최대 60만원, 30인이상 최대 40만원)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급
지급액	월 최대 60만원	월 최대 60만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7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2026.3.26.)”

작은 IT회사를 운영하는 최○○씨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나머지 동료 직원들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100%지만 작은 회사에서 한 명이 빠지면 정말 빡빡하다”고 말했다. 2026년 7월부터 정부가 최대 6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최 씨는 “60만원이 전부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동료들에게 업무분담수당이라도 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다녀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대기업이 설계한 아카데미에 참여해 직무역량을 키우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044-202-7279

청년고용, # K뉴딜, # 미래일자리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 **추진배경**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로 청년 선호 분야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과 자신감 회복, 재도약을 지원
- ⊕ **주요내용**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자율기획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자율운영·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 **기대효과**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과 자신감 회복, 재도약
- ⊕ **시행일** 2026년 6월말~ (순차적으로 개설)

Q.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 (교육제공) 직무훈련 + 현직자 멘토링, 소프트스킬, 진로·경력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참여수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 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K-뉴딜 아카데미' 검색
- '아카데미 정보' 확인 후, 연계된 개별 기업 모집 사이트에서 신청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개설 예정 (6월말~7월초)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과 자신감 회복을 돕고, 노동시장 진입 등 재도약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K-뉴딜 아카데미 총괄운영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 044-415-3869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2026.5.26.)”

2년째 취업 준비 중인 김○○씨는 대기업 직무 교육은 재직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자격증 공부를 해도 현장 감각이 없다는 면접관의 말에 자신감이 떨어졌다. 2026년 7월 K-뉴딜 아카데미가 열리면서 대기업이 직접 설계한 AI 분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비수도권 거주자라 월 50만원 참여수당도 받으며 생활비 걱정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다. 김 씨는 '드디어 스펙이 아니라 진짜 실무를 배울 기회가 생겼다'며 설레어 했다.

주말 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에게 일 5만원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317

주말훈련, # 재직자훈련, # 평생직업교육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 **추진배경**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역량개발이 중요하나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워 유인책 필요
- ⊕ **주요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가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일 5만원 (청년 7.5만원)의 훈련수당 지원
※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 ⊕ **기대효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훈련참여 제고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말훈련 참여 노동자에 훈련수당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중소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내외국인 모두 해당)
- (지원내용) 1인 1일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 (청년은 일 최대 7.5만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훈련수당 지급대상	채용예정자, 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재직자
훈련수당 지급요건	월 120시간 이상 훈련	(채용예정자·구직자) 월 120시간 이상 훈련 (재직자) 주말 일 4시간 이상 훈련
수당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채용예정자·구직자) 월 최대 20만원 (재직자) 일 최대 5만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확인한 뒤 훈련 참여
- 2단계: 사업주가 HRD-Net을 통해 훈련비를 신청할 때 훈련수당도 함께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사업주가 주말훈련 참여 재직자에게 지급한 금액 증빙자료
- 3단계: 사업주계좌에 훈련수당 지급(훈련비 포함)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평일에 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훈련참여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숙련도 제고에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317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052-714-8272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응○○씨는 한국에서 4년째 일하면서 용접 기술을 더 배우고 싶었지만 평일에는 업무가 끝난 후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고 주말 교육은 교통비도 부담이었다. 2026년 7월부터 주말 기업훈련에 참여하면 하루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응 씨는 '수당이 생기니 주말에 교육받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며 용접 자격증 취득 교육에 등록했다.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48

임금체불, # 체불, # 법정형상향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 **추진배경**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
- ⊕ **주요내용**
 -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기대효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임금체불 사전 예방
- ⊕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임금 체불 범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자발적인 지급 유도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사전 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8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자 이○○씨는 3개월치 임금 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신고를 했지만 사업주는 '최악의 경우 3천만원 벌금이면 된다'는 식으로 나왔다. 2026년 10월부터 최대 5천만원 벌금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처벌이 약해서 사업주가 버티는 것' 같았다. 법정형이 강화되면 사업주도 함부로 임금을 미루지 못할 것'이라고 이 씨는 전했다.

퇴직급여 체불 예방을 위해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95

퇴직급여, # 체불, # 법정형상향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 **추진배경** 퇴직급여는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형 상향
- ⊕ **주요내용**
 -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기대효과** 퇴직급여 체불 사전 예방 및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
-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체불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9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5년을 성실히 일하고 퇴직한 이○○씨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2,800만원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어렵다’며 6개월째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 ‘어차피 처벌받아야 벌금 3천만원’이라는 말에 배신감도 느꼈다. 2026년 9월부터 최대 5천만원 벌금·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퇴직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15년 노후 준비금이다. 처벌이 강해지면 사업주들이 더 이상 퇴직금을 체불하거나 미루지 못할 것’이라고 이 씨는 말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0

퇴직연금, # 중소기업지원, #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퇴직급여의 안정적 적립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대상 확대
- ⊕ **주요내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현행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자기 부담으로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 가능
 - * (사업장) 現 30인 이하 → (2026.7.1.) 50인 미만 → (2027.1.1.) 100인 미만 기업
 - ** (가입자) 現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 → (2026.7.1.) 모든 일하는 사람
- ⊕ **기대효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소속 노동자, 자영업자·노무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간편한 절차(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의무 면제), 수수료 면제(가입후 3년간), 전담운영기관의 자산운용(OCIO)
- (체감 혜택) 행정절차 간소화(중소기업), 비용 부담 경감·적립금 직접 운용에 대한 부담 완화(중소기업·가입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가입 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 일하는 모든 사람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사업장 규모(2026년 7월 1일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와 자격(모든 일하는 사람) 확인
- 2단계: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푸른씨앗 홈페이지(<http://pension.comwel.or.kr/fund>)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64개 소속기관(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3단계: 부담금을 납입하면 전담 운영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수수료는 면제(가입후 3년간)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7월 1일 시행
- ※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경기도에 대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상시근로자 수가 40명이라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었다. 대부분이 경비원, 청소원이고 바쁜 일상으로 퇴직연금을 개인이 알아보고 투자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대상 확대로 인해 기금제도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맡기고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생리대를 비치합니다.**

-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 02-2100-6157

성평등, # 여성건강, # 생리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 ⊕ **추진배경** 생리대는 장기간 소비해야 하는 필수품임에도 가격 부담 지속, 현재의 지원체계는 대상과 방식이 한정되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및 접근성 개선 필요
-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12개 시범지역(기초자치단체)의 여성
 - (지원 방식)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지급기)를 상시 비치하여,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기대효과** 여성 건강과 밀접한 체감도 높은 정책 구현을 통해 여성 건강권 제고 및 생리대 가격 안정 효과 기대
- ⊕ **시행일** 2026년 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2개 시범지역(기초자치단체) 내 생리대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 대상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소득 무관)
지원 방식	바우처 방식	바우처방식과 공공시설에 무료 지급기 비치 (현물지원 병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범지역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소년센터 등)에 설치된 생리대 지급기를 통해 배출된 생리대(1팩, 2개들이) 수령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7월부터 순차적 추진 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공시설 내 생리대 상시 비치를 통해 긴급한 순간에 안심하고 사용, 여성 건강권 제고 및 생리대 가격 안정 효과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 : 02-2100-6000
- 시범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추후 안내)

대학생 이○○씨는 생리대 가격이 부담스러워 평소 인터넷으로 대량 구매해 쓰곤 했으나, 생리 예정일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에 올 때는 미처 챙겨오지 못한 적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한참 공부하던 중 갑자기 생리가 시작되었는데, 당장 몇 개만 쓰기 위해 편의점의 비싼 날개 제품을 또 사자니 이중 지출이 너무 부담스러워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씨는 "다행히 7월부터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어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에 비치된다고 하니, 여성들이 긴급히 생리대가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청소년의 목소리, 이제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8

청소년 참여, # 청소년정책, # 청소년 대표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 ⊕ **추진배경** 각 지자체마다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요구, 의견 등을 청취,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강화가 필요
- ⊕ **주요내용**
 - 각 지자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해당 지역 청소년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
- ⊕ **기대효과** 지역 청소년 욕구 적극 반영 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Q.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등 지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 청소년 시설 설치 및 단체 지원 등 심의, 자문 등을 수행

Q.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청소년지도자, 경찰관, 교육자, 변호사, 행정공무원 등 청소년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지역별 상이)

Q.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 각 지방정부에서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규정, 추천·공모 등을 통해 청소년 포함 위원을 선정·위촉하여 구성

Q. 누가 청소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Q.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는 언제부터 구성할 수 있나요?

- 2026년 10월 29일부터 관련 근거인 개정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며,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위원회 명칭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청소년지도자, 경찰관, 교육자 등		청소년 추가(명문화)
기대효과	활동·복지·보호 대상으로 수혜적 입장		활동·복지·보호 등 지역 청소년정책 능동적 참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8)
또는 각 시·도 또는 시·군·구 청소년정책 담당부서(팀)

고등학교 2학년 박○○씨는 사는 동네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없어 학교 운동장에서만 운동해야 했다. 지자체에 민원을 내봤지만 결과가 없었다. 2026년 10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박 씨는 위원회 심의 자리에서 직접 청소년 체육시설 필요성을 발표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청소년 의견을 들어주는 것을 경험하며 '어른들이 우리 말을 정말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한 선내 환경이 조성됩니다.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51-773-5742

선원, # 안전, # 보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일부개정

- ⊕ **추진배경** 고시 시행(2025.6) 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식별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구 수정 등 고시 체계 정비를 통해 현장과의 괴리감 해소 필요
- ⊕ **주요내용**
 - (안전대표자 선출) 선출 방식을 ‘호선’에 추가하여 ‘임명’ 포함
 - (청력보존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용하여 시행 요건 명확화
- ⊕ **기대효과** 협약내용 반영 및 명확한 기준 제시로 선박소유자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선내 안전·보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선원 처우 개선
- ⊕ **시행일** 2026년 12월(잠정)

Q. 기준의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

- 어선을 제외(단,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 선박은 포함)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해당 선박의 선원·선박소유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안전대표자 선출) 「2006 해사노동협약(MLC)」 조문과 일치하기 위해 선출 방식에 기존 ‘호선’에 추가하여 ‘임명’ 포함
 - (청력보존프로그램) 정확한 청력 보존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준용하여 시행 요건 명확화
- *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조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선박소유자 수립)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안전대표자 선출	선원 간 호선(互選)으로 선출	선원 간 호선(互選) 또는 임명(任命)으로 선출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	위험성 평가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선원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장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안전대표자 선출 방법을 확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선택지를 늘리고, 관련 국제협약과 일치시켜 현장의 혼선을 방지
- 모호했던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773-5742, 5768

외항상선을 운항하는 김○○씨는 선내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만, 소음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소음으로 인해 선원이 청력을 잃게 되어 문제가 생길까 봐 항상 불안했는데 2026년 10월부터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이 명확하게 되면서 소음 기준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게 되니 선원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에게 맞춤형 역량강화와 경영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설 -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 044-214-1753

협동조합, # 도약, # 고도화, # 협동조합 홍보포털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설

- ⊕ **추진배경** 장기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 기존의 교육·판로 등 기능별 지원에서 협동조합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의 전환 및 지원 확대
- ⊕ **주요내용**
 - (도약 지원) 설립 5년 미만의 초기 협동조합 30개소 대상 최대 1천만원 상당의 협동조합 운영 등에 관련한 경영 컨설팅 제공
 - (고도화 지원) 설립 5년 이상의 본격적인 규모화(Scale-up)가 필요한 성장기 협동조합 27개소 대상 최대 5천만원까지 사업 고도화 지원
- ⊕ **기대효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
- ⊕ **시행일** 2026년 6~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약 지원) 설립 5년 미만 운영 안정화가 필요한 협동조합
- (고도화 지원) 설립 5년 이상 사업 규모화가 필요한 성장기 조합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도약 지원) 최대 1천만원 상당의 경영·운영 진단 및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 (고도화 지원) 최대 5천만원까지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자금조달 다각화, 연구개발(R&D),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방식	성장단계별 구분 無	성장단계별 대상 선정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내용	교육지원, 판로 확보 등 기능별 구분 지원 → 불특정 다수 집합교육, 일회성 지원 등 한계	도약(5년미만) : 문제점 진단, 기초 경영지원 등 고도화(5년이상) : 투·융자 유치, R&D 지원 등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지원대상 확인
- 2단계: 온라인(www.seis.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3단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도약 지원은 7월부터, 고도화 지원은 6월부터 제공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경제 문제 해결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044-214-1753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성장팀: 031-697-6952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모여 만든 A협동조합 이사장 김OO씨와 조합원들은 회계·세무·노무 등의 기초적인 경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배워본 적이 없어 시행착오만을 반복해 왔다. 특히, 총회·이사회 등 주식회사와는 다른 협동조합 운영체계에 대해 혼란스러웠으나 협동조합을 잘 운영해보고자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되었다. 2026년 6월 '도약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최대 1천만원 상당에 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아, 협동조합 경영관리에서부터 운영체계에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김OO씨는 '협동조합이 처음이라 막막했는데, 전문가 도움을 받으니 협동조합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장에 속도를 더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국민 치료 기회가 앞당겨집니다.

-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일로 단축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정책추진단 ☎ 043-719-1372

의약품, # 의료기기, # 허가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일로 단축

- ⊕ **추진배경**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및 전주기 규제지원 필요
*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10.16.)
- ⊕ **주요내용**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제품(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 이내로 단축
- ⊕ **기대효과**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 및 의료제품 신속 공급을 통한 국민 치료 기회 확대
- ⊕ **시행일** 2026년 6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 신청을 하려는 업체
- 제약 바이오 기업(직접수혜자), 환자 및 의료현장(잠재수혜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허가·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허가 신청 전부터 허가·심사 쉼 단계 규제지원 및 소통 확대
- 제품 개발 전주기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개발·제공
- 심사 예측성 제고를 위한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 도입
- 다수 심사인력 기반 '동시·병렬심사' 및 '수시검토·보완' 체계 도입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허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약 420일(2023) • 바이오시밀러 406일(2022-2024) • 신기술의료기기 398일(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 : 240일
제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검토·보완요청·접수 체계 도입 • 허가·심사 체크리스트 개발·제공 •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등 소통 확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의약품) 의약품안전나라(허가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
* (의료기기)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신기술의료기기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의료제품 신속 공급을 통해 국민 치료 기회 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정책추진단: 043-719-1372
- (신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 043-719-2318
- (바이오신약, 시밀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허가과: 043-719-1962
- (신기술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043-719-5353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보도자료)“식약처,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시대(240일 허가) 활짝 연다(2026.5.26)”

난치병 환자 보호자인 공〇씨는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새로운 치료제가 출시 되기를 오해불망 기다리고 있었다. 허가·심사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약 허가가 빨리 이뤄져서 아픈 아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위생용품 수입신고, 전자심사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043-719-1744

위생용품, # 수입, # 전자심사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 ⊕ **추진배경** 시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수입 위생용품 검사 업무의 신속 처리 필요
-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수입 위생용품 중 구강관리용품 등 12개 품목
※ 구강관리용품, 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행균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일회용행주·타월·종이냅킨·면봉·팬티라이너, 마른티슈
 - (운영방식) 규칙기반 AI 전자심사 시스템을 통하여 서류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수입신고 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 ⊕ **기대효과** 기존 서류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규제부담(보관비, 통관 시간)완화 지원으로 수입신고 신속 통관 행정서비스 구현
※ 서류검사 처리기간 : 기존 2일 → 5분 이내 처리 가능
- ⊕ **시행일** 2026년 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위생용품을 수입신고 하려는 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위생용품 수입신고 시 수입검사 중 서류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2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
* 서류검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구분		
검사방법	검사관이 검사	자동화된 시스템*이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자동 신고수리 * (수입안전 전자심사24) :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까지 전 과정을 규칙 기반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심사하는 시스템 **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검사관이 검사
처리기간	서류검사 최대 2일 소요	서류검사 시간 단축(5분 이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입신고 시 수입검사 단계에서 전자심사가 진행되어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도의 결재 과정 없이 자동 신고수리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365일 24시간 신속·정확한 수입검사 업무 처리로, 사업자의 규제 부담 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043-719-1744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보도자료)*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5.12.19.)”

중국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수입하고 있는 최○씨는 납품기한에 쫓겨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신속하게 위생용품이 통관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적용 중인 전자심사가 도입되어 5분 이내 신속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창고 보관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겠습니다.

-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팀 ☎ 043-719-1796

담배, # 유해성분, # 공개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 ⊕ **추진배경**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공개하여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 ⊕ **주요내용**
 -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
 - *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44종 / (액상형 전자담배) 20종
 - ** (지정 3개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충북대 담배연구부분석센터, 국제특성분석연구소
 -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국민에게 유해성 정보를 공개
 -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경우 2027년 하반기부터 공개 예정임
- ⊕ **기대효과** 담배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금연 인식 제고 및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
- ⊕ **시행일** 2026년 10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흡연자, 비흡연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유량 등 유해성 정보
 - *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니코틴, 타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납 등 20종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담배 유해성분 공개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 미제공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물질 등 각종 성분의 유해성 정보 제공 *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 20종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mfds.go.kr) 을 통해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정보 확인 가능
 - * <http://mfds.go.kr> > 정책정보 > 유해정보 > 담배 유해성 정보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금연 정책에 활용되어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담배유해성관리TF팀 : 043-719-1794~6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2023.10.31 제정, 2025.11.1 시행)

(대학생 정○○씨) 담배에 니코틴이나 타르 같은 유해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유해 성분이 들어 있더라고요. 친구들에게이런 사실을 알리고, 금연도 권해볼 생각입니다.

일상 속 건강관리 의료가기, 통합심사로 신속하게 인증합니다.

- 2등급 의료가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가기허가과 ☎ 043-719-5353

#보청기, #의료가기, #인증

2등급 의료가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 ⊕ **추진배경**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2등급 의료가기의 경우, 민간 기관의 기술문서 심사 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인증이 추가로 요구되어 신속한 제품 출시가 어려움
- ⊕ **주요내용**
 - (대상) 2등급 의료가기 제조·수입업자
 - (방식) 2등급 의료가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기대효과** 인증·심사 원스톱 제도 도입으로 제품 출시기간 단축(기존 약 40일 → 25일)
- ⊕ **시행일** 2026년 9월 30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등급 의료가기 제조·수입업자 중 인증 원스톱 처리를 희망하는 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인증 소요기간 단축 (약 40일 → 25일)
- * ①기술문서심사(25일, 기술문서심사기관)→인증신청 준비(약 10일, 기업)→②인증(5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인증처리기간	약 40일	25일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가기전자민원시스템(<https://emedi.mfds.go.kr>)을 통해 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업체) 인허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 가능
- (국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2등급 의료가기를 보다 빠르게 일상에서 사용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가기허가과: 043-719-5353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02-860-4461

의료가기 스타트업 대표 ○○○씨는 기존에는 기술문서 심사를 마치고 다시 인증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열흘 가까이 걸려서 어려웠던 아쉬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원스톱 처리를 통해 한 달도 안 되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급변하는 헬스케어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확대되고, 방송사업자의 규제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02-2110-1465 # 장애인방송, #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 ⊕ **추진배경**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및 규제합리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 ⊕ **주요내용**
 - (보장대상) 시각·청각 장애인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모든 장애인
 - (적용범위) 지상파 등 기존 방송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함
 - (의무사업자 지정기준) 방송사가 예측 가능한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
 - (장애인방송 편성)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의무 부과
 -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장애인방송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 (장애인방송 실적평가) 연 2회 평가 → 연 1회 이상 평가
- ⊕ **기대효과** 장애인은 더 다양한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고, 방송사는 규제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장애인방송 제공
- ⊕ **시행일** 2026년 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에 시각·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장애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보장대상	시각·청각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든 장애인
적용범위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함
의무 사업자 지정기준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1% 이하* (전년도 시청점유율 0.2% 이상)**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 150억 이상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
방송편성	-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 (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23시)
품질향상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실적평가	연 2회	연 1회 이상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 지정 기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단독 지정기준

Q. 어떻게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나요?

- 방송 프로그램 시청 시 리모콘으로 장애인방송 기능을 설정하면 패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방송을 시청 가능
- * 장애인 맞춤형TV 경우 패쇄자막 키 조절, 화면해설 속도·음성 변경, 수어방송화면 확대 등 다양한 편의기능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장애인은 다양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방송사의 규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장애인방송 제공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02-2110-1465

*참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2026.4.15. - 5.15.)

시각 장애를 가진 한○○씨는 캠퍼스 풍경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화면해설방송을 들으며 대학 진학의 꿈을 키웠다. 2026년 하반기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OTT도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고 기존 방송의 경우 주시청시간대(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23시) 장애인방송 제공하도록, 노력의무가 부과되었다. 한 씨는 인기있는 콘텐츠를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OTT에서도 자주 화면해설방송을 들을 수 있고 인기 프로그램의 화면해설방송도 많아지면 주변 사람들과 더 즐겁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이 문을 엽니다.

-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

소방청 구급의료팀 ☎ 044-203-7095

공공의료, # 보건, # 종합병원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 ⊕ **추진배경** 소방공무원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기반 구축 및 지역 필요의료 확충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소방병원 개원
- ⊕ **주요내용** 19개 진료과, 302병상 규모의 외래·입원 진료 가능한 종합병원 개원
※ 서울대학교병원 위탁 운영으로 지방에서도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체계 마련(화상·통합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센터)
- ⊕ **기대효과** 소방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전문적 공공의료 제공
- ⊕ **시행일** 2026년 7월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전 국민 모두 이용 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서울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 (전 국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및 19개 진료과 이용
- (소방공무원)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4대 특성화센터 (화상·통합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 진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국립소방병원 개원 전	국립소방병원 개원 후
국민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선택지 상대적 제한	총복 중부권에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외래 진료, 건강검진 등 지역 필수의료 제공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를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병원 부재	소방 특화 진료, 재활, 정신건강 관리, 건강검진까지 연계 가능

Q.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 대표전화(1670-0119)로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접수하여 진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방공무원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에게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검진 등 필수의료 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립소방병원 대표전화: 1670-0119
- 국립소방병원 정책 문의: 044-205-7095
- 국립소방병원 위치: 총복 음성군 맹동면 용두4길 19

총복 혁신도시 인근에 사는 50대 주민 고○○씨는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그동안 다른 지역 대형병원을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국립소방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 이동 부담을 덜게 되었다.

현장 출동이 잦은 소방공무원 구○○씨는 근골격계 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치료와 상담 재화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국립소방병원이 정식 개원하며 한 병원 안에서 진료와 상담, 재화를 함께 받을 수 있어 회복과 건강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12세 남성청소년(2014년생)도 지원됩니다.

-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65

HPV 예방접종, # 남성청소년, # 접종지원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 ⊕ **추진배경** 여성으로 한정된 기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12세 남성청소년(2014년생)
 - (지원내용) HPV 4가 2회(6개월 간격) 예방접종(무상지원)
- ⊕ **기대효과**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자궁경부암 등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관련 질환 예방 및 우리 사회의 질병 부담 감소
- ⊕ **시행일** 2026년 5월 6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12~17세 여성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12~17세: 2008~2014년생, 18~26세: 1999~2007년생	12~17세 여성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추가) 12세 남성청소년(2014년생)
지급액	HPV 예방접종비용	HPV 예방접종비용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12세 남성청소년(2014년생)
- (지원내용) HPV 4가, 2회(6개월 간격) 예방접종(무상지원)
- (체감혜택) 기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유료로 접종하던 남성청소년까지 예방접종 2회 무료지원 확대
- ※ HPV4가 백신가격 : 약 34만원(1회 HPV4가 백신가격* 17만원 X 2회)
- * 백신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 HPV4가 백신가격 기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시 무료접종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65, 8384, 8392, 043-913-2258

*참고: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① 보도자료: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보도자료)“남학생도 이제 무료접종, 5월부터 12세 남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시작(2026.4.16.)”
- ② 사업안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예방접종정보)국가예방접종사업 소개)HPV 국가예방접종

2014년생 12세 김○○ 군의 부모님은 남자의 HPV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 HPV 예방접종을 해주고 싶었지만 1회당 17만 원, 총 34만 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루고 있었다. 2026년 5월부터 12세 남성청소년도 HPV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김 군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 부담 없이 첫 번째 접종을 마쳤다. “여자들이만 맞는 줄 알았는데 남자아이도 지원되어 무료접종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김 군의 부모님은 말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시험 승인 및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규제가 완화됩니다.

- 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 043-719-8042

유전자변형생물체, # 국가승인, # 규제완화

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 ⊕ **추진배경** 인체 위해 가능성이 낮은 미생물을 활용한 개발·시험 및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합리적 규제개선 추진
- ⊕ **주요내용**
 - 인정 속주-벡터계 목록 확대로 국가승인 면제 범위 확대
 - 인체 위해성이 낮은 미생물을 취급하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생산하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 ⊕ **기대효과** 합리적 규제 완화로 보건 안전성은 확보하고 생명공학기술 이용 바이오 연구·산업 활성화 체계는 지원
- ⊕ **시행일** 2026년 10월 30일(예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면제대상 확대) ‘인정 속주-벡터계 목록’ 개선으로 인체 위해성이 낮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개발·시험 국가승인 면제 대상 확대
- (간소화)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보건의료용 LMO의 인체위해성 심사기간 단축 및 인체위해성 심사를 위한 평가자료 제출 범위 축소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LMO 개발시험 국가승인	열거형으로 승인제외 대상이 한정적	특성기반 개념적 정의 추가로 제외대상 확대
인체 위해 가능성이 낮은 LMO 위해성심사	심사 기간 270일 평가요소 13개 내역(세부항목 102개) 제출	심사 기간 90일 평가요소 6개 내역 (세부항목 24개) 제출

Q. LMO의 개발·시험 국가승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 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LMO를 개발·시험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 연구시설을 허가(또는 신고확인) 받은 기관이 LMO 개발·시험 승인 신청서, 개발 LMO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문 또는 메일로 질병관리청에 제출

Q. 간소화된 보건의료용 LMO 위해성 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확인) 연구기관 시설에서 운영하는 생산공정 1등급 시설여부 및 제조하는 최종산물에 LMO 포함 여부 확인
- (서류 준비 및 신청) 유전자변형생물체 통합고시 [별표 5-2] 위해성 평가자료와 [별지 제5-3서식] 신청서 작성 후 공문을 첨부하여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으로 이메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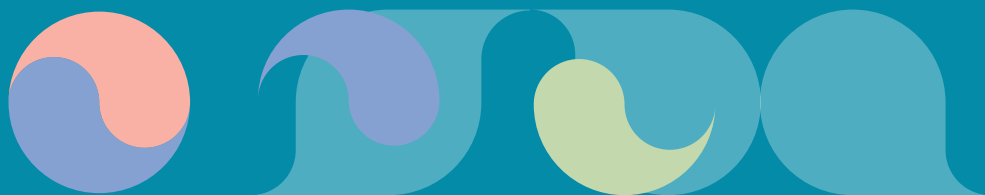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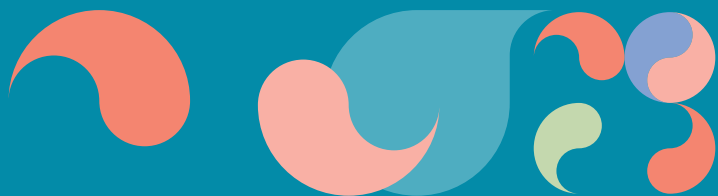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인정 속주-벡터계 범위 확대로 LMO 개발·시험을 위한 승인 대상이 연간 11% 감소가 예상되고, 위해성 평가항목 간소화, 심사기간 축소(6개월)되어 바이오 연구·산업 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 및 예산 절감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2, 043-719-8046

바이오벤처 연구원 이○○씨는 화장품 원료용 보건의료 LMO 개발을 위해 5,000만원 이상의 외부 용역비를 들여 독성·알레르기 등 평가자료를 준비했으나, 270일간의 위해성 심사로 연구 일정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26년 10월 규제 완화를 위한 고시가 개정되어, 생산공정 1등급 시설을 사용하는 LMO의 심사 기간이 90일로 대폭 단축되었다. 제출 서류 또한 기존 13개에서 6개로 축소되어 행정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이○○씨는 “행정 절차에 소모되던 시간과 예산을 핵심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제도 개선을 환영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



01.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 100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이 1인 2매 배포됩니다.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시행일 (1차) 2026년 5월 13일(수) / (2차) 2026년 7월 중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문화활동을 증진하고 민간 소비를 촉진합니다.



02.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 101

19세~20세 청년에게 연 최대 20만원까지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시행일 2026년 8월 이후 사용 분야 확대(도서)

· 기존 공연전시영화 분야에서 도서까지 확대 사용가능합니다.



03.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 102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이제 발견 즉시 최대 1~6일 안에 차단됩니다.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사이트 적발 즉시 각각 접속차단 조치하여 촘촘한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합니다.



04.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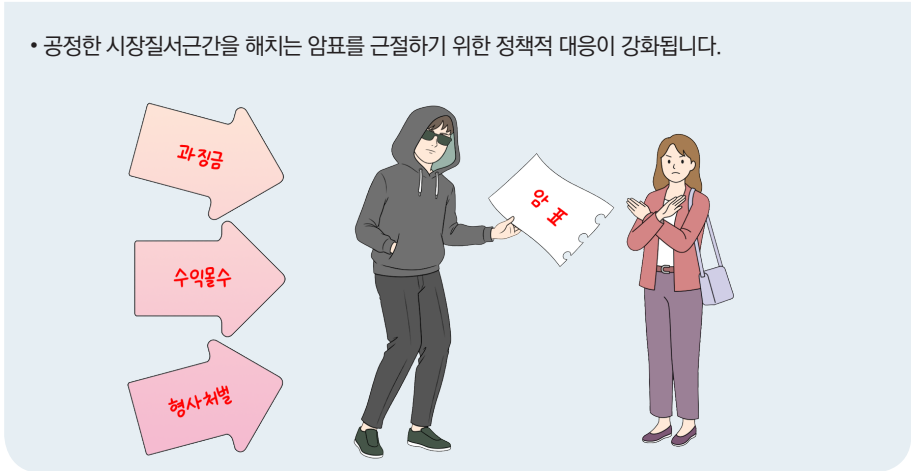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03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거래는 전면 금지!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 공정한 시장질서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강화됩니다.



어려운 첨단기술을 흥미롭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산업기술팀 ☎ 042-601-7988

국립중앙과학관, # 첨단기술, # 과학문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 ⊕ **추진배경** 일반인들의 첨단기술 접근성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흥미로운 초능력 컨셉으로 풀어내어 과학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문턱을 낮춤
- ⊕ **주요내용** 상상속의 초능력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슈트, 증강현실 등으로 현실로 구현되는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 수강생이 되어 배우고 체험하는 몰입형 전시 제공
- ⊕ **기대효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흥미 유발,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적 융합 사고력 증진 및 과학문화 확산
- ⊕ **시행일** 2026년 10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과학과 상상력을 좋아하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 단위 관람객 누구나(초등 고학년 이상 권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관람을 넘어 관람객이 직접 '아카데미 수강생' 주인공이 되어 미션을 수행하는 스토리텔링형 전시 체험·교육 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관람방식	일반 체험	스토리텔링형 미션 수행
관람객 역할	-	아카데미 수강생 주인공

Q. 언제부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0월 신규 전시관 개관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립중앙과학관 산업기술팀: 042-601-7988

과학을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군(11세)은 아빠와 함께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을 찾았다.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 수강생으로 입학한 순간부터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웨어러블 파워 슈트를 착용하고 괴력을 발휘해 평소에 들지 못하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미션을 마친 이 군은 "슈트를 입으니깐 진짜 내가 괴력이 생긴 것 같았고, 장비들이 내 움직임을 도와주는 게 신기했어요"라며 눈을 반짝였다. 집에 돌아온 후 스스로 웨어러블 슈트 관련 책을 찾아보기 시작한 아들을 보며 아빠 이 씨는 "TV나 인터넷에서 보던 기술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니 아이가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을 통해 K-메디컬·지역 관광산업 도약을 지원합니다.

-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0

의료관광, # 비자, # 지역관광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 ⊕ **추진배경**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산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각종 혜택이 있는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 완화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중 불법체류율이 낮고 유치실적이 우수한 유치기관을 지정하여 비자발급 편의 등 혜택 제공
- ⊕ **주요내용**
 - ('유치업자'의 신청요건 등 완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관광 유치 인프라가 미비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대부분 소상공인)의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요건·심사기준 완화
 - (지역가점 신설) 수도권 이외 지역 '유치기관' 확보를 위한 지역가점 신설
- ⊕ **기대효과** 지역 중소 유치기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가능성을 높여 비자발급 편의 등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 ⊕ **시행일** 2026년 6월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료기관, 유치업자) 중 ①지방소재 유치기관, ②유치 인프라가 미비한 유치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정 입증 서류 생략 등 비자신청 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초청 가능 외국인 동반가족 확대(직계가족 → 4촌 이내 친족)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역가점	없음	가점 부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이상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유치실적 500명 이상 신청 가능, 5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점 • (유치업자) 유치실적 200명 이상 신청 가능, 2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신청자격 확인
 - ① 외국인환자 유치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경력사유(행정제재 등) 해당 여부
 - ② 유치실적 총측 여부(최근 1년간 의료기관 500명, 유치업자 200명 이상)
 - ③ 지역가점 혜택 대상 확인(수도권 외 지역 소재)
- 2단계: 접수기간 내에 이메일(visa@korea.kr)로 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역 소재 중소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업 안정적 유지·확장
- 의료관광 입국자 증가 및 K-메디컬·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0

2026년 9월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결과 부산 서구의 한 소규모 의료관광 유치업체가 신규 지정되었다. 우수 유치기관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외국인환자 유치가 늘어나면서, 해당 업체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며 지역 의료관광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이 1인 2매 배포됩니다.

-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 044-203-3232

영화관람, # 할인권, # 영화관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 ⊕ 추진배경 영화관 시장 회복 및 국민 문화 활동 진작을 통한 민간 소비 활성화
- ⊕ 주요내용 영화관 관객 대상 영화관별 6천원 할인권 1인 2매 지원
※ 결제 기준 선착순 적용(450만 장),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 기대효과 영화관람 수요 증가에 따른 투자·제작 활성화 유도로 산업 전체의 활력 제고
- ⊕ 시 행 일 (1차) 2026년 5월 13일(수) / (2차) 2026년 7월 중



<2026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포스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영화 관람을 희망하는 누구나 (결제 기준 선착순)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영화관별)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권 2매 지원
- (चे합혜택) 문화가 있는 날(매월 둘째주, 마지막주 수요일)의 경우 4천원영화 관람 등(기준 1만원에서 6천원 할인) 국민 부담 축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경로 할인, 장애인 할인 대상자	온라인 영화 예매 필요	현장 할인 적용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멀티플렉스 4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
 - 1단계: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가입
 - 2단계: 온라인 예매 시 쿠폰함에 있는 할인권 적용하여 결제
 - 별도 다운로드 필요 없이, 전체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 자동 생성
- 그 외 영화관(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등)
 - 1단계: 현장 방문하여 할인 적용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차 배포) 2026년 5월 13일(수) / (2차 배포) 2026년 7월 중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영화 관람시 국민 부담 완화, 가장 대중적인 문화장르인 영화의 관람을 진작하여 시장 회복과 문화 향유 촉진
 - 특히, 문화가 있는 날(매월 둘째·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관람료 4천원으로 가족·단체 단위 문화 경험 활성화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예매 및 사용 관련 안내 창구 : 02-2135-2618
- 기타 영화관별 궁금한 사항

영화관	문의처	
	모바일/온라인	유선
CGV	고객센터 1:1 문의	1544-1122
롯데시네마		1544-8855
메가박스		1544-0070
씨네Q		1544-1533

이○○(만 67세)는 요즘 영화관 가는 것이 취미이다. 5월 13일부터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이 지원돼 기존 경로 할인 요금 7천원에 정부지원 6천원 할인이 적용돼 1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즐길 수 있어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19세~20세 청년에게 연 최대 20만원까지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044-203-2516

#청년, #문화예술,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 ⊕ **추진배경** 청년의 문화예술 분야 관람료 지원으로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K-예술·콘텐츠에 대한 미래 관객 확보 필요
- ⊕ **주요내용** 국내 문화예술분야 공연·전시·영화·도서(하반기 온라인 협력에매처에서 사용이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연 15~20만원)' 발급
- ⊕ **기대효과**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K-예술·콘텐츠의 미래 관객으로 성장 촉진
- ⊕ **시행일** 2026년 8월 이후 사용 분야 확대(도서)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청년(19세~20세) * 2006~2007년 출생자(생애 최초 1회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연 15만원~20만원의 국내 공연·전시·영화·도서 소비 비용 지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 분야	공연·전시·영화	도서(하반기) 까지 확대 사용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출생년도 확인. (2026년 기준 2006년~2007년생)
- 2단계: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 3단계: 협력에매처에서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도서 구매에 지원금 사용
- 이용 기간: 발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7월 말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8월 1일부터 사용 불가)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8월 이후 도서 분야 추가 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청년 문화예술패스 고객지원센터(1577-1968)

참고: 문체부 누리집(보도자료)'올해 19~20세 여러분,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과 전시, 영화까지 즐기세요(2026.2.9.)"

지역 거주 청년 김OO씨(19세)는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알차게 문화 활동을 해볼까?' 고민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지급받은 20만 원을 떠올렸다. 장바구니에만 담아두었던 문화예술 분야 서적들을 과감하게 결제했다. 서점에서 보내 온 택배 상자를 여는 순간, 종이 냄새와 함께 설렘이 밀려왔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 책과 함께 풍요로운 청년의 여름이 시작되었다.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이제 발견 즉시 최대 1~6일 안에 차단됩니다.

-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 044-203-2091

#창작자, #콘텐츠, #저작권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시행

- ⊕ 추진배경**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규모,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지연* 및 차단 중단 지속되어 콘텐츠업계 피해 누적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2~3주 소요되어 피해 규모 확대 (2024.10.23./웹툰산업협회/이투데이)
- ⊕ 주요내용** 문체부장관의 긴급차단 제도(신설)를 통한 저작권침해 불법사이트 적발 즉시 신속 차단, 문체부장관(저작권보호원)의 접속차단으로 촘촘한 저작권보호체계 구축
- ⊕ 기대효과**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강화로 접속차단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의 84% 이상 감소 효과 기대
- ⊕ 시행 일** 2026년 5월 1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창작자 및 콘텐츠 업계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으로 저작권 피해액 감소, 창작 의욕 강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해당 제도 없음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조치
저작권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제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만 조치 가능 (문체부, 저작권보호원 권한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시정명령), 저작권보호원(시정권고)도 조치 가능
조치 소요기간	2~3주	1~6일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저작권보호 종합포털(portal.kcopa.or.kr)에 불법사이트 신고
- 2단계: 신고 내용 및 증빙 등 확인
- 3단계: 불법사이트로의 접속 차단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합법 사이트 이용 증가, 불법 사이트 개수 감소
- 창작 활동 활성화로 양질의 콘텐츠 증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091, 2092 / 저작권보호원 접속차단대응팀: 1588-0190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보도자료)“케이-컬처’ 좀먹는 불법유통 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2026.4.27.)”

웹툰 작가 박○○씨는 매주 성실히 연재했지만 불법 복제 사이트가 며칠 새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접속차단에 2~3주가 걸리는 사이 합법 플랫폼 수익은 반 토막이 났다. 2026년 5월 11일 긴급차단 제도 시행 후 대체사이트가 즉시 차단되면서 합법 플랫폼 구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불법 사이트가 살아있는 한 창작자는 항상 피해자였는데, 이제 국가가 빠르게 막아줘서 그림 그리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압표 거래는 전면 금지!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압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044-203-273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3

압표, # 매크로, # 관람권, # 티켓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압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 ⊕ **추진배경** 공연·스포츠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압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강화 방안 마련
- ⊕ **주요내용**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압표 부정거래행위 금지, ▲입장권등 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화, ▲신고 접수·처리 기관 지정, ▲신고포상금 지급, ▲압표 거래 제재를 위한 이익 몰수 또는 가액 추징 및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 ⊕ **기대효과** 압표 근절 관련 대국민 인식 확산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공연자, 공연관람자 및 공연업계, 스포츠경기 관람자, 스포츠업계

Q.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습적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 초과 판매 행위 전면 금지
-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판매·부정구매 기술적 조치 의무화, 부정 거래 확인 자료 제출명령 불응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포상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압표 부정거래를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
- 부정판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 수위가 대폭 상향
 - (과징금) 부정판매로 얻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 부과
 - (수익 몰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
 - (형사처벌)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Q.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 공정한 문화·스포츠경기 향유 기회 확대: 선량한 관람객이 정당한 순서와 노력에 따라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회복
- 공연·스포츠산업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 압표로 유입되던 부당 수익이 차단되고 건강한 티켓 예매 생태계 구축
- K-컬처 브랜드 가치 제고: 전 세계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 공연의 대외적 신뢰도와 품격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연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2
- 스포츠경기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K-팝 콘서트 팬 최○○씨는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려 했지만 발매 1분 만에 매진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배가 넘는 가격의 압표만 올라와 있었다. “정당하게 기다렸는데 내 티켓이 압표로 돌아다니는 게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게 됨에 따라 최 씨는 압표 게시물을 신고기관에 접수하여 포상금까지 받았으며 “앞으로는 기다린 팬이 제값에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더 투명한 미술시장을 만들기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044-203-2748

#미술, #미술서비스업, #신고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 ⊕ **추진배경**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및 미술시장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미술 서비스업의 제도권 내 편입 필요
- ⊕ **주요내용**
 -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무 규정 (→지자체)
 - 미술 서비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영업 승계,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 **기대효과** 미술시장 투명화 및 체계적인 정책 지원체계 구축
- ⊕ **시행일** 2026년 7월 26일

Q. 누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자)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
 - *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 (신고 대상)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 구분) 신고, 변경 신고, 폐업 신고, 지위승계 신고

Q.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자는 제정되는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신고 서식 규정*에 맞추어 성명, 상호, 소재지, 미술 서비스업의 종류 등을 작성.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증 부여.
- * (제출서류) 미술 서비스업 신고서(성명·상호·소재지·서비스업의 종류) (확인서류)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에 한함), 영업소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내용	별도 신고 없이 자유 영업	지자체장에 미술서비스업 신고 필수

Q. 신고를 하지 않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신고 상태로 미술서비스업을 할 시 미술진흥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 조치.
(미신고 영업 최대 500만원, 변경 신고 및 영업승계 미신고 최대 250만 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미술 서비스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 업종별 특화 지원 등 업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정책 지원체계 구축.
-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가 의무화되고, 허위 감정서 및 유사 감정서의 발급이 금지되어, 미술시장 투명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8

평소 미술품 수집을 즐기는 직장인 최○○ 씨(35세)는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발견하고 구매를 고려했지만, 판매 업체가 실제로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선택 지갑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2026년 7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이후, 해당 업체가 지자체에 정식 신고된 미술품 판매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안심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최씨는 "이제는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어 미술품 구매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력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37

전 국민, # 국민체력100, # 체력인증기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개정

- ⊕ **추진배경**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체력인증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인증기관에게 요구되는 공간규격요건이 지자체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공모 참여 등 신규진입이 제한
- ⊕ **주요내용**
 - (총면적) 체력측정실 기준을 축소하여 총면적 기준을 완화(160→120㎡)
 - (직사각형 공간) '총면적 내에서 7m×17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의 확보'에 대한 단서 신설하여 인접 체육시설 등에서 측정하는 것도 허용
 - (성인 측정공간) 성인 민첩성 측정항목을 '10m 왕복 달리기' 대신 '반응시간 검사'로 대체할 수 있어, 이에 필요한 수준으로 공간 기준을 완화
- ⊕ **기대효과** 인증기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한 신규센터 지자체 참여율 제고
- ⊕ **시행일** 2026년 5월 2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운영기관, 민간 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관 지원 대상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인증기관으로 지정 시 공공체력관리 서비스(국민체력100)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관리자 시스템, 체력인증서 발급 등) 부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 운영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총면적	160㎡	120㎡
총면적 내 직사각형 공간	전용만 인정	인접 공공공간 활용 허용
성인 측정 공간 기준	2m×15m	2m×5m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고시 개정 후 신규센터 모집 공고 확인 후 체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 2단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접수 및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확인
- 3단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 확정 이후 공공체력관리 서비스(국민체력100) 운영을 수행하면서 측정장비, 예산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 받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체육시설이 인증기관으로 참여해 국민은 거주지 인근에서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관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7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사업팀: 02-410-1881~2

임○○씨는 그동안 거주 지역에서 공간 제약 등의 이유로 공공체력관리 서비스(국민체력100)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이 없어 과학적인 체력측정 등을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인증기관 지정 기준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가까운 곳에서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 씨는 자신의 체력 수준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운동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내륙지역에서 해양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개관합니다.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051-773-5229

해양과학관, # 개관, # 청주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 ⊕ **추진배경** 내륙지역 국민의 해양과학 교육·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사회 해양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 **주요내용**
 - (전시 기획·운영) 체험형 미래해양과학관, 실감형 영상체험 디지털아쿠아리움 등 상설 전시와 해양쓰레기 이슈 등 테마 전시로 구성
 - (교육 기획·운영)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는 참여형 교육, 전시 아이템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 고객 눈높이 교육 추진
- ⊕ **기대효과** 국민들에게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륙권 해양 과학 문화 확산으로 지역 격차 해소
- ⊕ **시행일** 2026년 9월(잠정)

Q. 과학관의 주요 관람객층은 누구이며, 어떤 내용을 전시하나요?

-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대의 국민 누구나
- (미래해양전망관) 해양과학기술을 통해 기후변화, 해양오염, 자원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전시
- (디지털아쿠아리움) 몰입형 공간에서 미지의 바다 속 다채로운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실감형 영상체험관
- (어린이해양체험관) 어린이들이 해양쓰레기의 문제점과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높이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해양문화시설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청주해양과학관

Q. 언제부터 방문할 수 있나요?

- 2026년 9월 개관(잠정)부터 이용 가능.

Q.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30 ~ 17:30까지 운영(잠정), 월요일은 휴관.
- * 어린이관은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간대별 인원 제한이 있으며, 신청 방법은 개관 전 확정하여 공지할 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51-773-5229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기획예산부: 044-200-1011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남기헌 씨 임명”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학부모 김○○씨는 아이에게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시켜주고 싶어도, 매년 왕복 5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부산 등으로 가야만 했다. 하지만 2026년 9월 청주에 해양과학관이 문을 열게 되면서 이제는 집 앞 산책하듯 편하게 바다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다. 내륙에 이런 시설이 생겼다는 점이 청주시민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웠다.

전 세계 동포들과 국민들이 다 함께 모이는 대화합의 장이 열립니다.

- 세계한인대회 개최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 032-585-3200, 3205

재외동포, # 한인, # 참여

세계한인대회 개최

- ⊕ **추진배경** 분야별·세대별·지역별 재외동포는 물론 국내동포,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계기 마련으로 전 세계 한인(韓人)들의 대화합 도모
- ⊕ **주요내용**
 - (참석대상) 한인회장, 한인 경제인(한상), 차세대 동포, 국내 체류 동포, 국민 등
 - (행사내용) 전 세계 한인 대표 및 동포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계한인대회 신설
- ⊕ **기대효과** 전 세계 한인네트워크 구축 및 동포사회와 대한민국간 교류 증진
- ⊕ **시행일** 2026년 9월 28~29일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전 세계 한인회장, 한인 경제인(韓商), 차세대 동포, 국내 체류 동포(사할린·중국동포 등)는 물론 우리 국민들도 함께 참여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동포와 국민간 접점	전 세계 동포들과 국민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교류의 장 부재	전 세계 동포들과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세계한인대회" 신설
타 동포대회와의 연계	분야별·세대별·지역별 재외동포 관련 행사 분절 개최 ※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 관련 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하고, 해당 주간에 "세계한인대회"를 신설

Q. 언제 참여할 수 있나요?

- 2026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

Q. 어디에서 참여할 수 있나요?

- 인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일대가 세계한인대회의 행사장으로 꾸며질 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들의 동포에 대한 친밀감 증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력인 동포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인식 개선 계기 마련
-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세계한상대회의 시기적·공간적 일원화 등 연계 개최를 통해 동포간 접촉면 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2-585-3200, 3205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인 박○○씨는 막연하게 "외국에 나가면 도움이 될 한인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 2026년 9월 28일 인천에서 열린 세계한인대회를 찾은 박씨는 미국·캐나다·싱가포르 등지에서 온 한인회장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세계한인대회를 통해 알게된 현지 정착 노하우와 취업 연결망을 통해 해외 취업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 생활 편의를 위해 물사용공간을 증축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합니다.

- 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 -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042-481-4945

고택, # 생활기본시설, # 설치 지원

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

- ⊕ 추진배경**

 - 고택 및 민속마을 거주자의 현대식 생활편의를 허용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2011년 제정, 4차례 개정 시행하였으나 불편 민원 여전
 - * 생활기본시설 : 현대식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 빈집으로 방치되는 고택이 늘어나고 있어, 실거주 유도를 통해 생활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
- ⊕ 주요내용**

 - (공간증축) 현대식 화장실, 욕실 등 물사용공간 별도로 연결 설치 허용
 - (비용지원) 소유자 부담 원칙에서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조 가능
- ⊕ 기대효과**

국가민속 고택 빈집 방지, 거주를 통한 보존 및 활용 확대
- ⊕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예정)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 및 민속마을 내 가옥 소유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행정절차	설치 기준 이내 현상변경 허가 시군구 위임	증축 기준 제시하고 국가유산청 설계승인을 받도록 함
공간증축	화장실, 욕실 설치를 위하여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	물사용공간 별도로 연결 설치 허용 (화장실·욕실 2칸(8㎡) 이내)
수리비용	소유자 부담 원칙	문화유산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조 가능
경미한 수리·행위	-	이동 편의보조시설, 빗물받이 및 물통등, 빗뚫 설비
세부지침	-	'물사용 공간 설치 지침' 별도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확인: 실거주 또는 활용 희망하는 고택
 -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최저주거기준 미달 고택) 우선 선정 예정
- 신청: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 예산 확보 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
 - 방문 신청: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
 -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 소유자 확인 서류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042-481-4945

*참고: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4대째 고택에 살아온 류○○씨는 화장실이 마당 한쪽 노천에 있어 겨울마다 동생들이 불편하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고 하였으나 고택에 손을 대면 문화유산 규정을 위반할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20년을 버텼다. 2026년 6월 개정으로 별도 연결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고 비용까지 지원받게 되었고 공사를 마친 류씨는 “드디어 고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자식들한테도 자신 있게 물려줄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05

환경·기상·에너지



01. 기후에너지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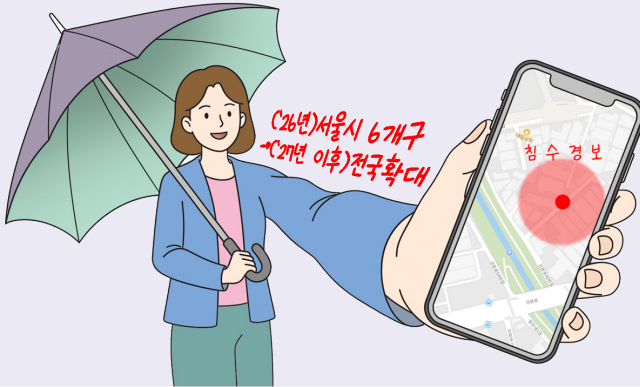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11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침수 정보 제공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시행일 2026년 6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 도시침수예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02.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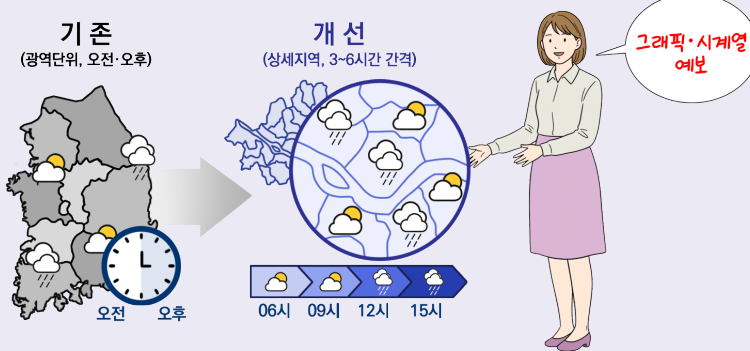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18

중기예보(+6~11일)가 3시간 간격, 5km 격자 상세 정보로 한층 정밀하게 바뀝니다.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시행일 2026년 11월 12일

- 과학적 확률에 근거한 수요자 맞춤형 확률 기반 디지털 중기예보로 바뀝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침수 정보 제공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044-201-7662

도시침수, # 침수예보, # 시범운영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 ⊕ **추진배경**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지역의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축·운영
- ⊕ **주요내용** 서울시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에 관계기관 자료 연계, 대국민 정보 제공, 현장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도시침수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 대상지역 단계적 확대 : (2026년) 서울시 6개구 → (2027년 이후) 전국 확대
- ⊕ **기대효과** 도시침수로 인한 반복되는 인명피해 예방 체계 구축
- ⊕ **시행일** 2026년 6월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서울시 6개 자치구(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 내 국민
- (2027년~) 6개 광역자치시를 시작으로 단계적 전국 확대 예정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도시침수예보 지역 내 모든 국민·지자체, 경찰·소방 등
- (내용) 침수주의보·침수경보 발령시 안전안내문자 링크를 통해 내 위치 기반 '침수우려지역에 있는지 확인' 및 '전체 침수우려지역 확인' 정보 제공
- (체감 혜택) 지도 기반 침수우려지역 정보 제공으로 관련 지역 접근 자제 또는 물막이판 설치 등 사전 대비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정보 수신 대상	지자체 재난담당 공무원	지역 내 국민, 지자체, 경찰·소방 등
수신 정보	침수우려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일반적인 호우 정보	휴대폰 위치 기반 침수우려지역 지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별도 신청 필요없이 해당 지역 내 국민은 수신 가능
- * 안전안내문자 '수신 거부 설정'을 한 경우 수신 불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044-201-7662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도시침수예보TF : 02-590-6133~6141

서울 구로구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김○○씨(70세)는 '2022년 침수피해를 겪은 후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침수우려지역을 지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거나 반지하주택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언제, 어디서든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챗봇 상담 안내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

기후에너지환경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044-201-6795

국민, # 층간소음, # 갈등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 ⊕ **추진배경**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층간소음 민원이 매년 3만여건을 상회하고 있으나, 단순 문의에 대한 반복대응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및 상담인력 피로도 증가
- ⊕ **주요내용** 24시간 언제든지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비대면 갈등상담 안내 서비스 도입
- ⊕ **기대효과** 민원인이 초기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갈등이 심화되기 전엔 원만한 해결 유도
- ⊕ **시행일** 2026년 9월

Q. 언제부터 챗봇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서비스가 구축 완료되는 2026년 9월경부터 이용 가능

Q. 챗봇서비스 이용 대상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이나 비공동주택(오피스텔, 다가구)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간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이용 시간	9:00~18:00		9:00~18:00	24시간
이용 방법	전화		전화	챗봇

Q. 챗봇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홈페이지(floor.noiseinfo.or.kr/floornoise)에 접속하여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이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층간소음 발생부터 갈등단계별 대응 안내 등 정보제공으로 이웃간 분쟁 심화 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044-201-6795
-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 032-590-3564

직장인 김◯ 씨는 한밤중 층간소음에 시달렸으나, 주간(9~18시)에만 운영되는 전화 상담 때문에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4시간 층간소음 챗봇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늦은 밤에도 스마트폰으로 즉시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김 씨는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이웃과 직접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지혜롭게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을 확대(17개→19개) 합니다.

-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044-201-6953

탄소중립, # 녹색생활, #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탄소중립 국민실천 및 범국민 기후행동 확산을 위한 참여 유인을 위해 포인트 지급 항목 확대
- ⊕ **주요내용** 무탄소(전기·수소) 택시 이용,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 ⊕ **기대효과** 항목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확산
- ⊕ **시행일** 2026년 11월(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탄소중립 실천을 하는 일반 국민(14세 이상)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탄소중립포인트 실천항목*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
- *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무공해차 대여, 공유자전거 이용 등 17개 항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항목 수	17개 항목	19개 항목
실천 항목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납,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미세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 나무심기 행사 참여, 가정용 배란다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정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포장	무탄소(전기·수소) 택시 이용,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과 참여기업 확인
- 2단계: 인센티브 항목 실천 및 신청
- 3단계: 항목별 책정된 포인트 지급(현금, 모바일 페이 등) 및 활용
- ※ 현재 지급단계는 미정으로 추후 확정 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044-201-695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처 : 02-2284-1749

평소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 김○○씨는 택시 이용시 관련 어플에서 전기 또는 수소 택시 이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환경에 기여하고 싶었다.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수소 택시를 탄소중립포인트 항목에 추가하면서 어플에서도 전기·수소 택시를 따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전담 법체계 개편으로 2030년 100GW 목표를 뒷받침합니다.

-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제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6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 신재생법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제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 ⊕ **추진배경** 신에너지(수소, 연료전지 등)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제로 개편
- ⊕ **주요내용**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 중이던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하여 제외하고, 재생에너지만을 규정
- ⊕ **기대효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통계의 일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Q.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신에너지(수소, 연료전지 등 3종)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등 8종)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법령명	신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법
규정 대상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8개) +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는 수소법으로 이관

Q. 언제부터 개편된 법 체계로 운영되나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Q. 기존 신에너지 사업자는 어떤 법에 적용을 받나요?

- 법시행일(2026.9.18.)을 기준으로 제도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중전규정 적용을 통해 기존 사업자 보호 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알림·홍보) 보도자료) “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2026.02.12.)”

태양광 발전 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와 함께 묶여 관리되다 보니 수소 관련 정책 변화가 태양광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2026년 9월 18일 재생에너지법이 분리 시행되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전담 법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이 생기니 정책 방향이 더 명확해지고 투자 계획도 확신 있게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먹는 물 안전을 위해 필터, 세라믹볼 등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도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확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044-201-7156

KC인증, # 위생안전기준, # 필터, # 세라믹볼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확대

- ⊕ **추진배경** 최근 급증하는 신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음용 안전성 확보
- ⊕ **주요내용** 필터, 세라믹볼, 수도꼭지 탭 등 부가적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
- ⊕ **기대효과** 필터나 세라믹볼 등에서 유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관리하여 안전한 수도물 공급체계 확보
- ⊕ **시행일** 2026년 12월 20일

Q. 누가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수도용 필터, 세라믹볼, 수도꼭지 탭 등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자

Q.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수도법」 제14조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등이 유출되지 않는지 시험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와 제품에 대해서 인증해주는 제도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인증 대상 여부	X	O
판매 여부	인증없이 제조·판매 가능	인증 받은 제품만 제조·판매 가능
인증 비용 (제품시험별도)	-	국내: 120~150만원 국외: 300~600만원

Q. 어떻게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대상확인: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https://portal.kwtc.or.kr>) 공지사항에서 인증대상 여부 확인
- (2단계) 신청: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온라인 신청
- (3단계) 인증서 수령: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 완료 후 수령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044-201-7156
-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인증팀 : 053-601-6361~4

피부가 민감한 가정주부 김○○씨는 샤워기에 필터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사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소재가 섞여 있는 필터에서 오히려 유해물질이 녹아나오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교체용 필터 등을 위생안전기준(KC) 인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김 씨는 이제 자신이 사용하는 필터도 정부 제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기업 해외진출사업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044-201-7640

물기업, # 해외진출, # 지원사업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물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 **주요내용** 물기업의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를 지원
※ 지원대상 확대: (기존) 물기업 중 중소기업 → (변경) 물기업 전체
- ⊕ **기대효과**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동반 해외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진출에 대한 위험 분산 및 경쟁력 강화
- ⊕ **시행일** 2026년 7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지원,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 지원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대상	물기업 중 중소기업	물기업 전체
지원사업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 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를 지원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홈페이지(한국물산업협회회 www.kwp.or.kr) 공지사항에서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
- 2단계: 홈페이지에서 등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wp@kwp.or.kr)로 제출
- 3단계: 제출된 신청 기업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표 정○○씨는 보유하고 있는 우수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싶으나, 역량 부족과 투자비용 부담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해외진출 경험이 많은 대기업 B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수요처에 동반진출을 할 수 있게 되어 걱정이 줄어들었다. 이제는 중소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해외진출도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동반진출할 수 있어 위험은 분산하고 경쟁력은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한 확인 유효기간 연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29

생활화학제품, # 인센티브, # 전성분 공개
안전정보 공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한 확인 유효기간 연장

- ⊕ **추진배경** 그간 민·관·산 협력(2017~)을 통해, 전성분 공개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제품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왔으나,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필요
*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87개 기업, 4개 시민단체 참여 중)
- ⊕ **주요내용**
 - 기업의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분정보를 추가 공개하거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3년→최대5년)
 - (전성분 공개 등) △제품에 함유된 전성분에 대한 공개 또는 △함유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등급으로 시각화하여 표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
- ⊕ **기대효과**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장려·추진을 통한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제조·소비환경 조성 유도 및 소비자 제품 선택권 향상
- ⊕ **시행일** 2026년 5월 12일(전성분 공개 등), 7월 1일(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자발적인 제품 성분 정보 제공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기업

Q.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내 '자율안전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경우, 제품 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통해 식별 가능

Q. 기존과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일괄 3년	자발적으로 성분정보 추가 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 등에는 최대 5년까지(기본3년 + 최대2년) 유효기간 연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2284-1864

세정제를 제조하는 기업 대표 박○○씨는 제조하는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기 위한 시험검사를 유효기간인 3년마다 실시해왔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발적으로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면 유효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는 정부의 안내를 듣고 '전성분 공개'를 결심했다. 박 씨는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제조하는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예보(+6~11일)가 3시간 간격, 5km 격자 상세 정보로 한층 정밀하게 바뀝니다.

-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495

예보, # 중기예보, # 강수가능성, # 기상정보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 ⊕ **추진배경** 상세·전문화된 중기예보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수요자 맞춤형 확률 기반 디지털 중기예보로 전환
- ⊕ **주요내용**
 - (상세예보) 시간(12~1일→3~6시간)·공간(도 단위→5km 격자) 해상도 획기적 개선
 - (사용자 편의) 그래픽 중심의 정보제공 강화
 - (강수가능성) 중기예보 변화 경향 제공 등 강수 가능성 정보 제공 강화
- ⊕ **기대효과** 3시간 단위 강수 가능성 정보 제공으로 출퇴근·여행 등 일상 계획부터 방재 활동까지 과학적 확률에 근거한 정교한 의사결정 지원
- ⊕ **시행일** 2026년 11월 12일

Q. 누가 활용할 수 있나요?

- 기상청 날씨 서비스(누리집, 앱 등)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개선 내용)
 - (상세예보) 특별(광역)시·도 단위 → 5km 격자 단위로 공간상세화, 12시간~1일 단위 → 3~6시간 단위로 시간상세화
 - (이해하기 쉬운 예보) 강수 가능성 분포도, 지점별 기온·강수 시간별 예측 그래프 등 직관적인 그래픽 중심 서비스로 전환
 - (강수가능성 예보) 기존의 '비가 온다/안 온다' 단정 예보에서, 강수 가능성·예보 변화 경향 정보로 전환하여 과학적 확률에 근거한 의사결정 지원
- (체감혜택) 3시간 단위로 '내가 있는 곳'의 강수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출퇴근·여행·야외행사 등 정밀한 일상 계획 수립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공간해상도	특별(광역)시·도 단위	5km 격자 단위 초정밀 예보
시간해상도	+6~8일 12시간, +9~11일 1일 단위	+6~8일 3시간, +9~11일 6시간 단위
서비스형태	텍스트 중심 통보문	그래픽 시계열 중심 서비스
예보 변화 정보	직전 예보 비교 없음	강수 가능성 변화 추이 제공
예보 예시	서울·인천·경기 +6일 오전 비	경기 파주·문산읍 +6일 새벽 비 가능성 보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또는 날씨알리미 앱(기상청 공식 어플)에 접속
- 2단계: '특보·예보' > '중기예보' 메뉴에서 원하는 지역 선택
- 3단계: 강수 가능성, 예보 변화 경향 정보를 일상 계획 등에 활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5

강원도 동해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손○○씨는 여름 성수기에 중기예보 '비 예보' 때문에 단체 예약이 취소되는 일이 많았다. 개편된 중기예보에서 3시간 단위 시계열로 비가 올 수 있는 시간대가 새벽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오후 야외 활동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해 불필요한 취소를 줄일 수 있었다. 충남 서산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씨는 일주일 뒤 비 예보 때문에 수확 일정을 앞당길지 고민이었다. 5km 단위 시계열 확인 결과 서산 지역 강수 가능성이 낮고 비 시간대도 늦은 밤에 한정됐음을 파악해 계획대로 수확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인건비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었다.

감각장애 학생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교육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실현합니다.

-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

기상청 기후변화감사과 ☎ 042-481-7421

특수교육, # 기후·기후변화, # 콘텐츠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 ⊕ **추진배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후변화과학 교육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후·기후변화 관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감각장애(시·청각)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교재, 교구 등) 개발
 - 주제별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용 강의지침서 제공
- ⊕ **기대효과** 기후·기후변화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한 정보사각지대 해소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 실현
- ⊕ **시행일** 2026년 12월

Q. 누가 활용할 수 있나요?

-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그 학부모, 교사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청각 장애 학생) 시·청각 장애 학생들의 성취기준과 학습 요소를 고려해 수어, 자막, 점자 등을 활용해 최적화된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 (시각효과) 점자, 수어통역, 폰트·텍스트 최적화, 색채 대비효과
 - (청각효과) 화면해설 및 자막, 음성안내, 속도 조절 기능 등을 활용해 접근성 확대
- (학부모) 자녀의 학습 지원과 학습성취도 확인을 위해 학부모들도 집에서 쉽게 다운로드 가능
- (교사) 개발된 콘텐츠를 주제별로 연계해 수업할 수 있도록 선생님용 강의지침서가 함께 제공. 동영상 시청 후 활동지 작성 등 구체적 수업 구성 방안 등을 한글(hwp)이나 파워포인트(PPT) 형식을 제공해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주요 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국민 ※ (2024) 초등 콘텐츠 40종 개발, (2025) 중·고등 콘텐츠 40종 개발 및 웹페이지 제공	(2026) 시·청각 장애인(학생, 교사 등) 맞춤형 콘텐츠로 기후·기후변화정보 제공 대상 확대
콘텐츠 접근성	수준별(초·중·고), 주제별 동영상, 교재, 디지털 교구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수어해설, 자막 서비스 등 배리어프리 콘텐츠 환경 조성
검색 편의성	카테고리 분류 기반의 전체 리스트 단순 나열	키워드 기반의 고도화된 개인화 맞춤 검색 옵션 기능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기상청 기후정보포털(climate.go.kr)에 접속
- 2단계: 교육·자료)기후변화과학)콘텐츠 웹페이지(climate.go.kr/edu)에서 자료 다운로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상청 기후변화감사과: 042-481-7421/042-481-7428

시각 장애 자녀를 둔 김○○씨는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었으나, 그동안 관련한 자료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시·청각 장애 학생 대상으로 기상청에서 새롭게 배포하는 교재·교구재를 통해 기후변화과학 교육이 진행된다는 학교의 이야기를 들었고, 학부모도 학습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자녀의 기후변화과학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입지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바람·햇빛 분석정보’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 -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 042-481-7484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기상정보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

- ⊕ **추진배경**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풍력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 지원
- ⊕ **주요내용**
 - (바람 분석정보) 과거 5년 재현바람장, 재현바람장 기반의 풍력 자원지도 제공
 - (햇빛 분석정보) 천리안위성 기반의 일사량 자원지도 분석기간 확대 제공
※ 관측자료, 과거 1년 재현바람장, 일사량 자원지도 분석자료는 2026년 2월부터 제공 중
- ⊕ **기대효과**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최적 입지선정, 발전량 예측 모델 개선 등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 ⊕ **시행일** 2026년 12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차 수혜자) 태양광·풍력에너지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산업계
 -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발전시설 입지선정 지원
 - 재현바람장(바람 분석정보)을 발전량 예측모델 개선·고도화에 활용
- (2차 수혜자) 모든 국민
 -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낮아지면 에너지 위기가 감소해 국민 경제 안정화 등 편익 확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재현바람장	최근 1년(2024.9.~2025.8.) 재현바람장	▶ 최근 5년(2021.6.~2026.5.) 재현바람장 제공
풍력 자원지도	-	재현바람장 기반 풍력 자원지도 제공
일사량 자원지도	최근 5년(2020~2024) 일사량 자원지도	최근 6년(2020~2025) 일사량 자원지도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energy.kma.go.kr) 접속
- 2단계: 원하는 지역의 기상자원 정보 확인·활용
 - ① 기상자원 서비스 > 풍력 > 재현바람장, 기상자원지도
 - ② 기상자원 서비스 > 태양광 > 기상자원지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042-481-7484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에너지는 사업부지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얻는 것이 곤란하였다. 2026년부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최근 5년의 정밀한 기상자원지도를 얻게 되면서 사업부지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규슈 넘어 난카이 해곡까지... 국외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02-2181-0088

국외지진, # 조기경보, # 서비스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 ⊕ **추진배경** 일본 난카이 해곡 지진 이슈 등을 계기로 대규모 국외지진으로 인한 한반도 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 **주요내용**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난카이 해곡까지 국외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 (기존) 일본 규슈 지역 → (개선) 난카이 해곡(경도 136°까지) 확장
- ⊕ **기대효과** 국내 영향 대규모 국외지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 **시행일** 2026년 11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상청 날씨 서비스(누리집, 앱 등)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영향 가능성이 있고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난카이 해곡까지 국외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국외 지진으로부터 안전 확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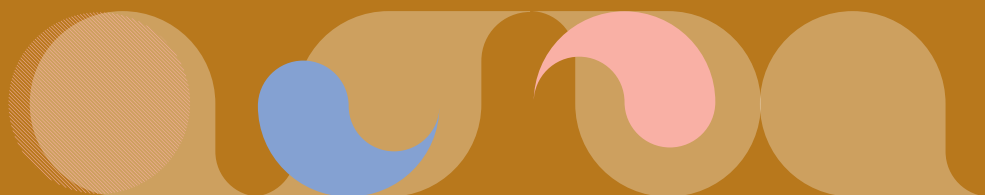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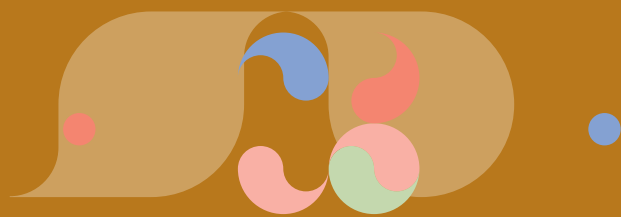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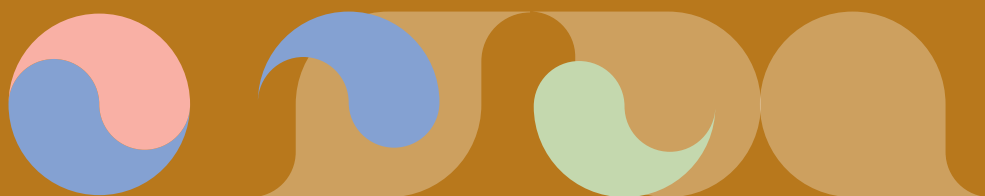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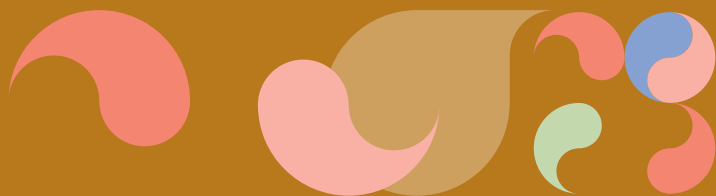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또는 날씨알리미 앱(기상청 공식 어플)에 접속하여 확인
 - ① 기상청 날씨누리 > '지진·화산' > '최근발표' 메뉴에서 지진정보 확인
 - ② 날씨알리미앱 > 하단 우측의 '지진' 탭을 눌러 지진정보 확인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02-2181-0088

부산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김○○씨는 집안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아파트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2016년 경주지진의 기억이 떠올라 또다시 인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러나, 곧바로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일본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한 국외 지진이라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했고, 인근 지진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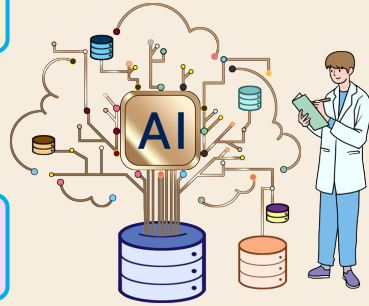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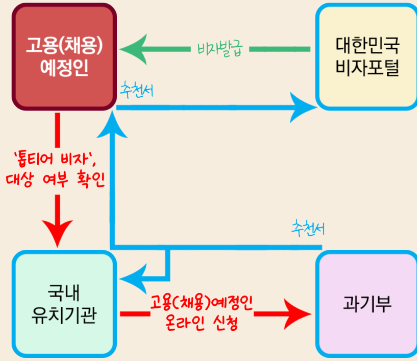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28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토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됩니다.

토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일 2026년 6월

- 과학기술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의 국내 활동과 정착을 지원합니다.



02.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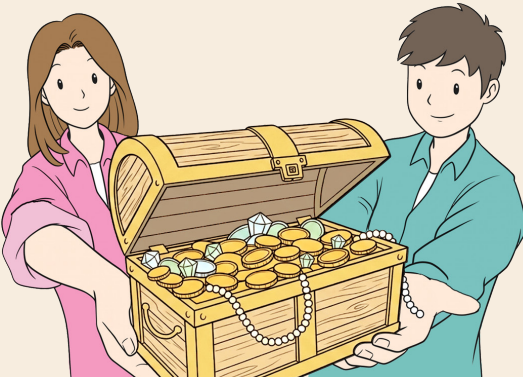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32

5극 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인 성장엔진을 선정합니다.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시행일 2026년 4분기

- 7대 분야 범정부 정책을 파격적으로 지원합니다.



- 재정
- 금융
- 세제
- 규제
- 기술
- 인재
- 인프라

03.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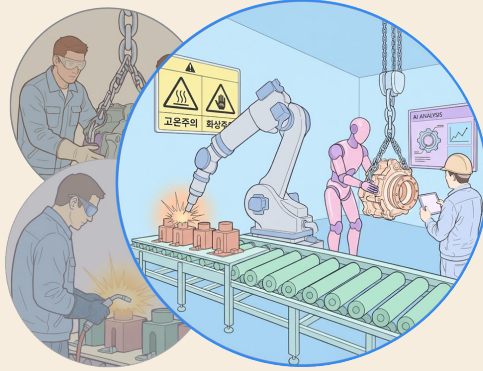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33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시장을 창출합니다.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한 혁신 성장

시행일 2025년 9월 10일(M.AX 얼라이언스 출범)

- 제조업 과정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를 AI 대전환(M.AX)을 통해 해결합니다.



생산성의 획기적 개선
 신시장 창출
 스타트업 성장

04.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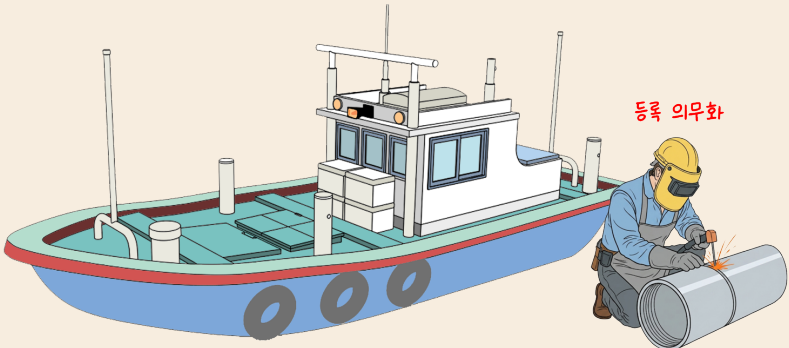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40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2026년 12월 2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시행일 2026년 12월 21일

- 어선건조·개조·수리업자는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05. 중소벤처기업부

자세한 내용은 p. 146

한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검색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시행일 2026년 6월부터 시범운영, 12월 정식 오픈 예정

-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 가능한 중소기업 정책 원 포털 체계가 구축됩니다.



06. 중소벤처기업부

자세한 내용은 p. 147

창업 열풍 확산의 중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도전자 1만명을 모집합니다.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도전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07. 지식재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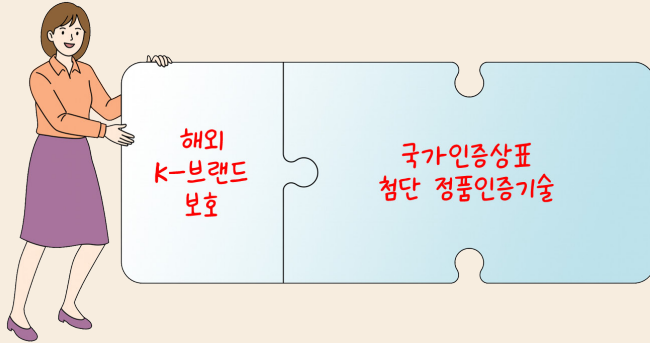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58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유통에 정부가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시행일 2026년 8월

-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 내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하여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시 정부가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08. 지식재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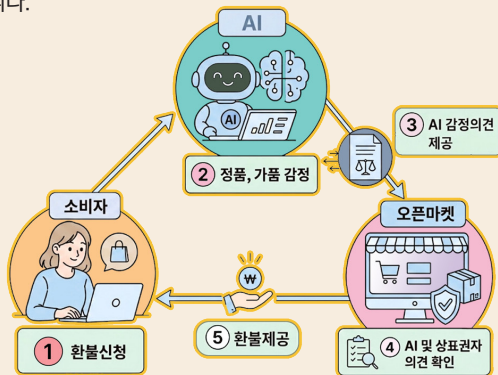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59

위조상품 확인은 간편하게, 환불은 더 빠르게 지원합니다.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시행일 2026년 11월

-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감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환불)하는 지원 체계를 만듭니다.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토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됩니다.

- 토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 044-202-4848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5

외국인, #유치, # 과학기술

토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 ⊕ **추진배경**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의 국내 활동과 정착을 지원
- ⊕ **주요내용** 최우수 과학기술 연구자 및 동반가족에게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배우자 취업 활동 허용 및 영주 패스트트랙 혜택(5년→3년 거주) 제공
※ 과기정통부 추천 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
- ⊕ **기대효과** 해외 최우수인재의 국내 연구활동 및 장기정착 촉진
- ⊕ **시행일** 2026년 6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내 대학, 출연연, 기업 연구소 등 연구기관에 고용이 확정되었거나 채용 협의 중인 해외 최우수 과학기술 인재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최우수인재 거주(F-2) 비자 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정착지원 사업 우선 연계 등 밀착 서비스 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첨단산업 기업 채용 인재 대상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채용 교수·연구원
제공 혜택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채용 교수·연구원은 토티어 비자 혜택을 받지 못함	과학기술분야 교수·연구원 토티어 비자 발급이 가능 본인 및 동반가족 거주권,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영주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고용(채용) 예정인 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전담 담당자를 통해 ‘토티어 비자’ 대상 여부 확인 요청
- 2단계: 국내 유치기관이 유치 연구자에 대해 온라인 신청으로 과기정통부 추천서 신청
- 온라인 추천서 신청 :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국민참여 메뉴 → 토티어 비자 추천신청 안내
→ 유치기관이 공문으로 신청
- 3단계: 국내 유치기관 또는 유치 대상자가 발급된 과기정통부 추천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서 전자비자를 신청하여 비자 발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외 우수 연구자가 채용 확정 이후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연구현장 합류 지연을 최소화
- 배우자 등 동반가족의 체류·취업 여건을 함께 개선하여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장기 정착 부담 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 : 044-202-4848 /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5

해외 연구자인 문○○씨는 국내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초과학 분야 연구직 제안을 받았으나, 유치 확정 이후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동반가족의 체류·정착 문제로 국내행 결정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 역시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고자 하나, 비자·체류 절차와 가족 동반 문제로 채용 및 연구 착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토티어 비자 시행 시 유치 확정 전에도 추천 절차를 사전에 진행할 수 있어, 채용 등 요건 확정 이후 비자 발급 절차로 신속히 연계되고 동반가족의 체류·정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치가 보다 원활해지고, 국내 과학 연구역량 강화와 미래 과학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AI 역량 강화의 기회가 「2026 데이터+AI 혁신 챌린지」로 통합됩니다.

- 데이터·AI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한 4개 경진대회 통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 044-202-6596

#데이터, #AI, #경진대회

데이터·AI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한 4개 경진대회 통합

- ⊕ **추진배경** 개별 운영하던 데이터 경진대회를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묶어 AI·데이터 인재 발굴과 산업 활성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모
- ⊕ **주요내용**
 - (부문 구성) ①데이터+AI 크리에이터 캠프 ②데이터안심구역, ③데이터 문제해결, ④빅콘테스트
 - (운영 방식) 통합 공고, 부문별 예선·본선 평가를 거쳐 수상작 선정, 부문별 대상·최우수상은 12월 클라우드·데이터 진흥주간에 통합 시상
- ⊕ **기대효과** 데이터·AI 분석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기획안들이 사회현안 해결로 이어지는 등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활성화' 기여
- ⊕ **시행일** 2026년 9월 1일 통합 공고 시행
※ (데이터+AI 크리에이터 캠프) 2026년 5월 13일 공고 시행

Q. 누가 참가할 수 있나요?

- 데이터·AI에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 다만,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수상 시에는 1개 부문만 선택
 - ('데이터안심구역' 부문)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
 - ('데이터 문제해결' 부문)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
 - ('빅콘테스트' 부문)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 ※ ('데이터+AI 크리에이터 캠프' 부문/2026.5.13. 공고) 데이터·AI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대학생(4~5인 팀)

Q. 어떻게 참가할 수 있나요?

- 9월 1일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등을 통해 통합 공고 예정

Q. 수상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나요?

- (대상)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장 및 소정의 상금
- (기타 수상) 주관기관장 또는 참여·후원기관장 상장 및 소정의 상금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운영 방식	4개 경진대회 개별 운영 • (NIA) 데이터 크리에이터 캠프 경진대회 • (K-DATA) 데이터 안심구역 경진대회 • (K-DATA)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활용 경진대회 • (KAIT) 빅콘테스트 경진대회	과기정통부 주최 통합 운영 • '2026 데이터+AI 혁신 챌린지'
대회 정보 일원화	대회별 정보 탐색 필요	통합 공고, 공동 보도 등을 통해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
시상	기관별 개별 시상	통합 시상(대상, 최우수상)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데이터+AI 크리에이터 캠프' 부문: 1660-3970 / '데이터안심구역' 부문: 02-3708-5356
- '데이터 문제해결' 부문: 1899-0247(통화연결 후 4번) / '빅콘테스트' 부문: 02-580-074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4-202-6596)에서도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우고 싶었던 이○○씨는 경진대회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대회마다 별도 공고를 찾아야 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2026년부터 데이터+AI 혁신 챌린지로 통합되면서 하나의 공고에서 모든 부문을 한눈에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빅콘테스트 부문에 팀을 꾸려 도전했다. '분산된 대회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이제는 AI 역량을 증명할 기회가 훨씬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가 면제됩니다.

-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 044-202-4957

전파차단장치, # 방위산업수출, # 행정부담완화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 ⊕ **추진배경** 수출용 장치는 국내에 전파 혼신을 줄 가능성이 없으나, 전파법상 내수용 장치와 동일한 인가 대상으로 기업에 부담
- ⊕ **주요내용**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수출 목적 증빙 시 인가 대상에서 제외
- ⊕ **기대효과**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K-방산 수출 활성화에 기여
- ⊕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Q.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전파차단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방산업계 종사자
- (지원내용)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하여 인가 면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과기정통부 전파차단장치 제조인가	O	X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를 통한 수출허가 신청
- 2단계: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임이 확인되면, 제조 인가 면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업 행정 부담 완화: 인가 준비에 투입되던 행정부담 완화
-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복잡한 인가 절차로 인해 지연되었던 수출 타임라인을 단축하여 방산 수출 활성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 044-202-4957

전파차단장치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이○○ 대표는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수출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파차단장치 제조인가를 받기 위해 시험성적서, 계통도 등 복잡한 인가 서류를 준비하느라 실제 수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을 느껴왔다. 하지만 규제 개선으로 수출목적 증빙시 전파차단장치가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행정 절차에 소요되던 기간을 약 45일 가량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고 서류 준비 비용까지 절감하며 K-방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가 완화되고 명확해집니다.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061-338-4711

기업부담완화, # 적합성평가, # 전파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 ⊕ **추진배경**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 부품 조립 등의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 혼란 해소
- ⊕ **주요내용**
 - (변경절차 간소화) 기존에 컴퓨터에만 적용되던 '적합성평가 받은 구성품 대치 시 추가시험 면제' 제도를 전체 기자재로 확대 시행
 - (변경절차 명확화) 추가시험이 필요한 적합성평가 변경사항과 추가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사항을 명확히 구분되도록 변경절차 개선
- ⊕ **기대효과** 제조·수입업체의 재시험 비용 및 제품 출시 기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강화
- ⊕ **시행일** 2026년 6월 말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 소프트웨어, 파생모델 등을 변경하려는 사업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변경절차 간소화	컴퓨터 품목만 추가시험 없이 변경 가능	전체 기자재로 추가시험 면제 확대
변경절차 명확화	파생모델 변경 등 적합성평가 변경 시 추가시험 여부 판단 모호	파생모델 변경 등 적합성평가 변경 시 추가시험 여부 판단 명확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변경내용 및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 2단계: 추가시험 필요 여부 확인 후 변경신청 및 적합성평가 진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제품 구성품을 최신 부품으로 교체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출되던 시험비용 및 약 2~4주의 대기시간 완화
- 시장 출시 지원: 불필요한 절차 부담을 줄여 제품 변경과 출시 과정 간소화
- 제도 예측성 향상: 변경사항별 기준이 명확해져 제조·수입업체가 변경신청 시 추가시험 필요 여부를 사전에 판단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1(제도), 061-338-4713(민원)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변경): 031-644-7531

스마트 TV를 제조하는 A사는 기존 제품에 탑재된 디스플레이 구동 모듈이 단종되어 동등 성능의 다른 부품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과거에는 구성품 교체 시 적합성평가 재시험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험비용 수 주간의 대기 기간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 기능의 구성품이라면 추가시험 없이 변경이 가능해져, 신속한 생산라인 재개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5극 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인 성장엔진을 선정합니다.

-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 ☎ 044-203-4413

5극3특, # 균형성장, # 성장엔진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 ⊕ **추진배경** 성장엔진 선정을 통해 수도권 1극체제에서 5극3특 성장축을 다변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 정책 추진
- ⊕ **주요내용**
 - 기업의 지방 투자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 성장잠재력을 고려하고 국가 산업전략과 일치되도록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
 - 선정된 성장엔진 분야 투자기업에 대해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규제 7대 분야의 정부 지원정책을 패키지로 파격적으로 지원 추진
- ⊕ **기대효과** 성장엔진 분야 지방투자 큰 폭 확대
- ⊕ **시행일** 2026년 4분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성장엔진 분야 지방 투자기업, 성장엔진 분야 지방기업 근로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성장엔진 분야 투자기업
 - 대규모 지방 설비투자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
 -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대출 가능, 무역보험의 보험료 할인 또는 보증한도도 더 많이 적용 가능
 -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지방성장펀드로부터 다양한 형식의 투자 또는 융자를 받아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가능
 - 지방의 거점국립대와 협업하여 실무 중심의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교 선정·운영 및 고급 석박사들이 기업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융합연구원도 설립 예정
- 성장엔진 분야 투자기업 근로자
 - 청년근로자는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까지 면제 가능
 - 성장엔진 분야 지방 산단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산단 근처 민영·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안정적 주거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방식	단순한 개별 인센티브 제공 (ex. 기술개발, 산업육성, 보조금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ex. 보조금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통합하여 패키지로 지원)
지원목적	지역의 특화 산업육성	초광역권 산업 성장 생태계 육성
차등지원	지역간 차별없이 지원	비수도권을 상대적으로 우대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성장엔진 분야 대규모 지방투자를 통해 지역의 기업은 성장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지역에 창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3

목포에서 친환경 선박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수도권에 비해 자금 인력 인프라 모든 면에서 불리해 지방 투자를 망설여 왔다. 2026년 4분기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이후 김 씨 업체가 성장엔진 분야에 포함되면서, 설비투자금에 대한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청년 직원 소득세 5년간 최대 90% 면제 혜택까지 패키지로 받게 되었다. '지방이라는 불리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오히려 지역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김 씨는 말했다.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시장을 창출합니다.

-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한 혁신 성장 -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 044-203-3833

제조AX, # 민·관 협력, # 제조 혁신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한 혁신 성장

- ⊕ **추진배경**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 ⊕ **주요내용**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 등이 모인 'M.AX얼라이언스'를 통해 국가적 제조AX 역량을 결집하고, AI모델 개발·실증,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 제조 암묵지 연계 AI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제조AI 대전환 추진
- ⊕ **기대효과** 제조AX 최강국 도약, 100조원 규모 신시장 창출
- ⊕ **시행일** 2025년 9월 10일(M.AX 얼라이언스 출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I 도입을 희망하는 제조기업, 제조AI 모델을 개발하는 시기업, 연구기관·학계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제조·AI전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M.AX) 관련 주체
- (지원내용) 제조공정 AX, 휴머노이드·자율주행차 등 AI 혁신제품 개발·실증, 국민성장펀드 등 연계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대상	개별 기업 중심	제조기업·시기업·연구기관 등 얼라이언스 중심
지원방식	개별 과제 중심 분절적 지원	R&D-실증-확산이 연계된 통합형 지원
지원내용	사람 또는 자동화기계로 작업 수행	AI와 로봇이 번거롭고 힘든 작업* 수행 * (예시) 시가 불량품 검사, 로봇이 선체용접 수행, 시제방사가 만드는 튀김소보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생산성의 획기적 개선: 제조AI 개발·실증 등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공정 최적화, 불량 감소, 설비 예지보전 등 생산 효율 제고
- 신시장 창출: 얼라이언스 기반 기술협력, 공동 실증 및 투자 연계를 통해 제조AI·로봇·데이터 등 연관 산업 수요 확대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스타트업 성장: 제조 암묵지 디지털화 및 AI 솔루션 개발 연계사업 추진과정에서 청년기업, AI스타트업에 성장기회 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044-203-3833

*참고: 산업통상부 누리집) 보도자료) “제조AX 최강국 위해 기업들 뭉쳤다(2025.9.10.)”

농기계 생산의 마지막 작업은 제품 하자 여부를 찾아보는 검사작업인데 그동안은 작업자가 도장에 있는 흙, 누유 여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해왔다. 사람이 검사하다보니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작은 흠을 뒤늦게 확인하거나, 작업자가 누구냐에 따라 하자가 있는 품목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팩토리 과제로 개발된 비전 시에 기반한 무인검사 시스템을 통해 검사속도는 11% 향상되고, 보다 균일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을 용도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 044-203-4409

공장, # 부대시설, # 카페, # 편의점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 ⊕ **추진배경** 기존에는 기업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을 설치하고자 할때,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발생
- ⊕ **주요내용**
 - (대상)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 (내용)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제과점 추가
- ⊕ **기대효과** 기업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생활 편의여건 개선
- ⊕ **시행일** 2026년 4월 9일

Q.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공장 내 카페, 편의점, 제과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변경 내용	공장 내 카페, 편의점, 제과점 설치하려 할 때 용도변경을 통해서만 가능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 제과점 설치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장 내 카페, 편의점, 제과점을 설치하려 할 때 용도변경 없이도 부대시설로서 카페, 편의점, 제과점 설치가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 044-203-4409/4435

*참고: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2026.1.19.)”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김○○씨는 공장 내에 종업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 등 공장 외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카페가 설치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법령 개정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됩니다.

-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 044-203-4409

지식산업센터, # 지원시설, # 오피스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 ⊕ **추진배경**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설치가 불가하여, 공실 및 준주거 주택 활용에 제약 발생
- ⊕ **주요내용**
 - (대상) 지식산업센터 소유자 등
 - (내용)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 ⊕ **기대효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및 준주거 시설 활용도 제고
- ⊕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Q.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변경 내용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만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가능	▶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내에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해지게 됨으로써 공실 지식산업센터의 활용도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 044-203-4409/4435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방○○씨는 소유한 지식산업센터가 도심에 위치하여 청년층의 왕래가 많아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피스텔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산업통상부 반도체과 ☎ 044-203-4279

반도체, # 기업지원, # 클러스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 **추진배경**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기반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지속적 지원 체계 마련 시급
- ⊕ **주요내용**
 -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지원 및 산업기반시설 우선 구축
 - 투자·기술·인력·규제 등 전방위 기업 성장 뒷받침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 ⊕ **기대효과**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
- ⊕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기업)
-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조성 사업시행자
-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기관 등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인프라 및 입주기업 지원: 클러스터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비 국가가 우선 지원. 입주기업에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 제공
- 인허가 및 규제 완화: 클러스터 조성 시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처리. 반도체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로 사업 추진 속도 향상
- 기술개발 및 공급망 강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실증센터 구축 지원. 소부장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테스트 베드 운영 및 임대료 감면 등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통해 반도체 맞춤형 인력을 육성. 비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 확보 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반도체 생산기반 강화: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 우선 조성으로 국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
- 기업 투자 촉진: 세제 부담금 감면, 인·허가 신속처리로 국내외 기업의 반도체 투자 유치 활성화
-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해외인력 유치 등으로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 확보
- 반도체 주권 확립: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내재화 촉진 등 기술 자립도 제고 및 경제안보 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 반도체과 044-203-4279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37호]

주요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대표 이○○씨는 개발한 소재의 성능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곤란했다. 2026년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정부가 국내 소부장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지정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이 씨는 '드디어 우리 같은 반도체 소재 스타트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생겼다. 해외로 나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지역위기업종의 사업재편도 확대 지원합니다.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 ☎ 044-203-4232

사업재편, # 승인기업, # 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 ⊕ **추진배경**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의 강화 필요성 필요성 제기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 (지원사항) 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 지원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연장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사업재편 지원대상으로 확대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규제완화로 승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
- ⊕ **기대효과** 사업재편 지원대상 확대, 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재편 활성화
- ⊕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승인기업 인센티브(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지원기간 연장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안정, 산업위기지역 유형 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 지원기간(현행 3년)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제외 • 상생형 지원기업이 승인 중소기업 지원 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안정, 산업위기지역 유형 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 지원기간(개정 5년)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포함 • 상생형 지원기업이 승인 중소기업 지원 시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제외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사업재편유형 해당여부 확인
- 2단계: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홈페이지 신청 : <http://www.oneshot.or.kr>
 - 방문 신청: 기업이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 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26개 인센티브 지원기간 5년으로 확대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도 사업재편 신청 가능
- 중소기업 협력사 지원 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면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 044-203-4232 /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02-6050-3162

*참고: 산업통상부 누리집 | 보도자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재편 유형·기간 확대(2026.3.31.)”

산업위기지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최○○씨는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구조전환을 추진 중이었지만 3년 지원기간으로는 사업이 안정화되기 전에 인센티브가 끝나 걱정이 컸다. 2026년 10월부터 지원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3년은 정말 짧았다. 5년이면 사업 방향을 제대로 잡고 성과를 낼 시간이 생긴다’며 안도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 044-203-4937

석유화학, # 사업재편, # 특례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 ⊕ **추진배경**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 필요
-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기업
 - (특례사항)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석유수출입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 화학물질 등록 등 간소화,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 ⊕ **기대효과**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가속화
- ⊕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동행위)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설비 가동률 조정, 생산량 감축 등에 관한 협의 등 공동행위 허용
- (정보교환) 사업재편계획 신청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 (인허가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 (환경기준 특례) 불가피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적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정보교환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등록증 발급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을 법인 등기신청 접수증 등 법인 등기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같음
화학물질 등록 등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록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학물질 등록·신고하거나 확인받은 것으로 간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방지시설 설치의무 유예, 사업재편계획 제출 이후 지체 없이 개선계획서 제출
허가배출기준	법인의 분할로 하나의 통합관리사업장이 둘 이상으로 분할되면 허가배출기준 변경	법인의 분할 전 상태의 허가배출기준 적용 (법인 분할 후의 오염물질 배출량 합계가 법인의 분할 전보다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사업재편계획 수립부터 이행 단계까지 신속한 진행과 사업재편에 따른 분할·합병 등 절차 이후 사업이 조기 안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044-203-4937

석유화학기업 A사와 B사는 사업재편을 위해 공동출자법인을 신설할 계획에 있었다. 신설법인에 대해 석유수출입업 등록, 화학물질 등록 등을 다시 해야 하는데, 2026년 4월부터 석유화학 특별법이 시행되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 사는 '조업 중단 없이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미과 ☎ 044-203-4694

철강, # 탄소중립, # 사업재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 ⊕ **추진배경**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감축 요구 등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실증·협력모델, 저탄소철강 기준·인증, 저탄소철강특구,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등 탄소중립 전환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
 - 정보교환, 공동행위 허용,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 특례
- ⊕ **기대효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 ⊕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철강사업자 및 철강산업 관련 기관·단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실증·협력모델
 - 탄소감축 연구개발 및 실증·성능검증 시설·설비 구축 등 지원
- 저탄소철강 기준·인증
 - 저탄소철강 생산·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저탄소철강 특구
 -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지원
-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 선별·가공 시설 고도화 및 입지, 행정 등 애로 지원
-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특성화대학
 - 인력양성사업, 연구 필요 비용, 계약학과 설립 등 지원
- 사업재편 특례
 -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예외적 승인
 - 사업재편과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 기업결합심사기간이 단축(30+90일 → 30+60일)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미래 경쟁력 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미과: 044-203-4694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202호]

철강기업 임원 박○○씨는 2035 NDC 목표 상향, 유럽 CBAM 도입 등으로 저탄소 전환이 시급했지만 어느 기준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투자 계획 결정을 못했다. 2026년 6월 철강산업법 시행으로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저탄소철강 인증 등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제 저탄소 전환에 투자해도 정부가 연구개발, 인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유럽 수출을 지킬 수 있겠다'고 말했다.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2026년 12월 2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051-773-5555

어선건조개조업, # 어선, # 의무화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 ⊕ **추진배경** 그간 자격 기준이 없이 누구나 가능하던 어선건조·개조업을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와 불법 증개축 예방을 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로 전환
- ⊕ **주요내용**
 - 2026년 12월 20일까지 어선건조·개조·수리업자는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등록
 - 어선건조·개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2026년 3월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선정·고시 및 단지 내 지원센터 구축 등도 본격 추진
- ⊕ **기대효과** 어선의 불법 증개축 차단, 어선건조산업 육성
- ⊕ **시행일** 2026년 12월 21일

Q.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어선의 건조, 개조, 선체의 수리를 하는 사업장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어업관리단(동·남·서해)
 - (신청대상) 2026년 현재 어선 건조, 개조, 선체의 수리를 하는 사업장
 - (신청서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신청서, 시설·장비·인력 기준 만족을 증명하는 서류, 정부수입인지 100,000원, (변경등록 시) 기존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 (체감 혜택) 그간 민간에서 구입하기 어려웠던 어선건조·개조 시 필요한 대형, 고가의 장비를 어선건조 지원센터 내 공용 장비로 활용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증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록기준	등록요건 없음	인력, 시설, 장비기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등록제) 051-773-5555, (진흥단지) 5552
-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91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1-666-1417
-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1-240-7992

그동안 사업자등록만으로 소규모 어선 조선소를 운영하였던 나○○씨는 2026년 12월 21일부터 의무화되는 어선건조업 등록제에 따라 사업장을 '어선건조업'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나 씨의 사업장이 위치한 전남 인근에 조성예정인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 교육, 공용시설이용 등이 가능해져 어선건조 시 필요한 장비, 인력 양성과 관련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이 시작됩니다.

-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51-773-5755

항만배후단지, # 입주기업, # 스마트 전환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 ⊕ 추진배경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효율화를 통한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나, 민간의 자체 투자 여력이 제한
- ⊕ 주요내용
 - (사업내용) 부산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 물류 설비 및 시스템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사업기간/방식) 2026~2028/공모를 통해 스마트 전환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 (사업금액) 총150억원 (국고 70%, 자부담 30%) / 1개社당 최대 45억원
- ⊕ 기대효과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여 물류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화주의 물류비용 부담 경감
- ⊕ 시 행 일 2026년 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 물류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 기업 총 5개사 선정 예정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모를 통해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 물류 설비 및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 (사업기간/대상) 2026~2028/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5개사
 - * 혁신분야 2개사 + 소기업분야 3개사
 - (사업비) 150억원(국고 70%, 자부담 30%) * 1개社 당 소기업 20억, 혁신 45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스마트 설비 도입 지원 대상	없음	▶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5개사 (소기업지원 3개사 + 혁신지원 2개사)
지원금액	없음	▶ 국비 총 105억원 (소기업지원 : 개소당 14억 X 3개사)(혁신지원 : 개소당 31.5억 X 2개사) * 소기업지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으로 확인된 업체에 한하여 지원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부산항만공사에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선정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여 물류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화주의 물류비용 부담 경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51-773-5755

부산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의 최〇〇씨는 수작업 중심의 창고 운영으로 오류와 지연이 잦았지만 스마트 시스템 도입 비용(수십억원)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2026년 7월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최대 31.5억원을 지원받아 WMS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혼자서는 절대 못 했을 스마트 전환을 국비 지원 덕분에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북극항로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 051-773-6315

북극항로, # 연관산업, # 경제성장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 ⊕ **추진배경**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국적선사의 상업 운항을 준비하고, 동남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 ⊕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항로 기본계획 수립,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 구축,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 ⊕ **기대효과**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 **시행일** 2026년 12월

Q. 북극항로 연관산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 북극항로 연관산업은 ①북극항로를 활용한 선박 운항 관련 산업(해운·항만·물류 산업, 항만기술산업), ②운항 지원 인프라·서비스 산업(데이터 산업, 정보통신산업, 기상산업, 해사안전산업, 보험업), ③북극항로 활용 확대에 따라 촉진되는 산업(조선·플랜트 및 선박부품·기자재 관련 산업)으로 구성

Q. 북극항로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 북극항로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에는 ①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도시개발 및 교통망 확충, 항만배후단지·물류단지·산업단지의 조성·지원 및 투자 유치, 자원 조달 및 운용), ②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술 개발, ③친환경 북극항로 운항체제 구축, ④북극항로 안전운항 지원 인프라 확보 사항 등이 포함

Q. 북극항로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30명 이내의 정부 부처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 (기능)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간 정책 조정, 연관산업 육성,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Q. 북극항로 지원 근거 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북극항로사업자 대상 재정 및 금융 지원, ②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실시, ③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④국제행사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사업 추진

Q.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는 북극항로 진출에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를 관련 기업에게 지원하는 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①연관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②운항·물류 데이터 제공 및 상업 운항 지원, ③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 ④북극항로 고정밀 위치 및 최적항로 정보 제공 등 항해안전 지원 등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051-773-6315, 6316

해운·물류 기업의 임원 김○○씨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기존 교역로의 항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수송거리 및 운항시간 단축의 이점이 있는 북극항로를 대체항로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정보 부족 및 안전 리스크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2026년 12월 북극항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재정·금융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사업 여건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극항로 진출을 차근차근 검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신기술 실적 증명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051-773-6221

기업, # 신기술, # 조달특례

해양수산 신기술공사 실적기업 지원

- ⊕ **추진배경** 해양수산 신기술 공사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조달특례 등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 실적을 실시간 발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 추진
 -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해양수산 신기술 공사 실적 보유기업이 공공계약 입찰에 지원한 경우 평가가점 등 조달특례 부여
- ⊕ **시행일** 2026년 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양수산 신기술 및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보유 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업체에서 유선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신기술 실적이 온라인 신청, 나라장터 연계로 간편하게 가점(최대 4점) 부여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실적증명서 발급	업체 유선 요청시 수시발급	▶ 온라인 신청 절차 마련
공공조달 지원	업체의 별도 발급한 서류 제출	나라장터 연계 및 가점(4점) 적용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확인: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시설(공사) 확인을 거쳐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
- 발급신청: 온라인 신청(‘바다봄’)으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 가능
- 국가계약 입찰: 국가계약 입찰시 별도 증빙 없이 신기술 실적에 따라 최대 4점까지의 가점 부여(자동 연계)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신기술 보유기업 성장 지원 및 행정 비용 절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02-3460-0393

해양수산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박○○씨는 공공입찰 때마다 신기술 실적 발급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유선으로 신청하고 조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느라 번거로움이 있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신기술 실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실적증명서가 전송되어, 가점도 자동으로 반영되면서 ‘입찰 준비 시 서류 준비 및 제출에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간편하게 입찰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도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를 블루바이오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051-773-5673

바이오, # 산업화, # 해조류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 ⊕ **추진배경** 중소기업, 연구기관의 영세성, 시설·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블루바이오 소재로 잠재력이 높은 해조류에 접근성 저하
- ⊕ **주요내용** 해조류의 소재 처리, 제품생산 및 연구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 하고, 중소기업·연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 **기대효과** 해조류를 활용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산업화 지원
- ⊕ **시행일** 2026년 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조류 등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을 개발·생산하려는 기업과 연구기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해양바이오 기업: 해조류 원료소재 생산·가공 기반 활용
- 중소·벤처기업: 자체 설비 투자 부담 완화
- 연구기관: 연구용 해조류 소재의 안정적 확보 및 기술사업화 연계
- 지역기업: 완도 지역 해조류 자원을 활용한 제품화 기회 확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해조류 활용	생물 1차 단순가공 중심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업 지원	기업별 자체 설비 확보 필요	공동 활용 가능한 생산·분석 기반 제공
원료 공급	안정적 대량 공급체계 부족	해조류 바이오활성소재 공급 기반 마련
제품화 과정	전처리·품질관리 시설 부족	탈염·중금속 제거 등 전처리 및 품질관리 지원
지역산업	원료 생산 중심	해양바이오 소재산업으로 확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생산을 희망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은 운영기관의 공고 또는 이용 안내에 따라 신청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하반기 준공으로, 시설 구축과 장비 도입, 운영 준비가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시설 이용 가능
-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이용 절차는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 운영기관이 안내 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초기 설비 투자 부담 완화·영세 중소기업의 초기 비용 완화 및 전문 생산·분석시설 활용으로 제품 개발 촉진
- 해조류 활용 확대: 국내 생산이 활발한 해조류를 블루바이오 소재로 활용하여 기업 유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51-773-5673

해양 바이오 소재 스타트업은 운영하는 이○○씨는 미역·다시마에서 기능성 성분을 추출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수익원에 달하는 전처리·가공 설비 구축 비용이 없어 사업화를 포기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가가 구축한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설비 걱정 없이 소재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블루바이오 시장에 도전할 발판이 생겼다'고 말했다.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이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51-773-5757

해외물류, # 물류시설, # 물류기업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추가 조성

- ⊕ **추진배경** 글로벌 물류 이슈 발생 및 우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물류시설 투자를 위해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
- ⊕ **주요내용**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설 투자 시 활용할 수 있는 투자펀드 확대
※ 펀드 규모 확대 : (2025년) 2천억원 → (2026년) 5천억원 / 해양진흥공사 운용
- ⊕ **기대효과**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활성화 기대
- ⊕ **시행일** 2026년 하반기(잠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해외 물류자산 투자를 희망하는 우리 물류기업*
- * ①국내기업(해외법인 포함), ②국내기업이 해당국에 출자한 회사(30% 이상),
③내국인이 운영하는 해외 한상기업, ④한국기업 수출입 화물이 50% 이상 차지하는 물류센터 운영 해외기업 등
- (투자대상) 해외 물류시설(물류센터, 항만·내륙 터미널 등) 및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북미/유럽/아시아 권역에 투자하는 물류기업
해외 물류자산 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물류기업을 폭넓게 인정!
- (지원내용)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물류센터를 매입하고 물류기업은 소수 지분(5%내외)만 보유, 해당 물류시설을 자산운용사로부터 임차하여 이용
- (체감 혜택) 기존에 해외기업에 지출하는 물류센터 임대료 절감, 우리 자산운용사가 직접 물류시설을 보유하여 안정적으로 물류시설 확보(15년 이상)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펀드 금액	2천억 원	5천억 원
자산운용사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 추가선정
확보한 해외 물류센터	4개소 (잠정)	10개소 (예상)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임대비용 절감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수출입 물류 안정화
- 직접 자산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 : 051-773-5757
- 해양진흥공사 : 051-795-1751

2025년 8월 해양진흥공사는 캡스톤자산운용사를 통한 펀드 투자로 3.3만㎡ 규모의 미 물류센터를 매입했다. 美 현지에서 진출한 한국 중소 수출입 이커머스 기업(A社)에게 임차를 제공해 안정적인 수출 거점으로 이용, 물류 경쟁력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한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검색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 ☎ 044-204-7373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24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 ⊕ **추진배경**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각각 검색하고, 사이트별 회원가입·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 추진
- ⊕ **주요내용**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의 지원사업 정보 및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등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 가능한 중소기업 정책 원 포털 체계 구축
- ⊕ **기대효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 성장 솔루션을 제공하여 중소·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에 기여
- ⊕ **시행 일** 2026년 6월부터 시범운영, 12월 정식 오픈 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소상공인·(예비)창업기업 등 누구나 이용 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검색 및 신청 연계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 원스톱 발급(총 21종)
 - 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및 정책 안내 서비스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 정책정보 검색	개별 정책 사이트를 각각 방문하면서 필요한 정보검색	중앙정부·지방정부 등 모든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 중소기업 관련 확인서·인증서 등 원스톱 발급(21종)
지원사업 및 서류발급 신청	사업별 사이트별로 방문하여 각각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기부 정책 시스템을 끊임없이 이용 가능
정책 정보 안내	지원사업 공고, 법령, 서식 등을 나열식 정보 제공	AI 기반으로 지원사업 및 정책정보 안내,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기존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메인화면에 제공되는 배너를 통해 이용 가능
- 2단계: 검색창에 지원사업, 정책정보, 필요 서류 등 입력
- 3단계: 관심있는 지원사업 신청 및 확인서 발급 등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해당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이용 가능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6월에 시범운영, 2026년 9월에는 AI 서비스 시범운영, 고도화 및 안정화를 거쳐 2026년 12월 정식오픈 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가능하여 정책 탐색 시간 절감
-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탐색·추천하여 정부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기여(9월 시범운영)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 : 044-204-7373, 7378

창업 초기 기업 대표 지○○씨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부처·기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고, 공고마다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가 달라 준비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 그러나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검색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까지 추천받을 수 있어, 필요한 정책을 놓치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창업 열풍 확산의 중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도전자 1만명을 모집합니다.

-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044-204-7632

모두의 창업, # 창업, # 예비창업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 ⊕ **추진배경**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도전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 ⊕ **주요내용**
 -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 확대(1715천명 → 271만명)
 - 지원대상 확대(예비창업 + 17업력 3년 이내 기업 → 예비창업 + 27업력 7년 이내 기업)
 - 실패해도 도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1기 도전자의 재도전에 대한 지원 우대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운영기관 확대(대·중견기업, VC, 대학 등)
- ⊕ **기대효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는 국가 창업시대 실현
- ⊕ **시행일** 2026년 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예비창업자 및 이중창업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국 200여곳 창업 인프라에서 혁신 창업가 대상 창업코칭 제공, 자금 지원, 창업오디션 참가 등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창업가별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행하고 향후 창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 (채감 혜택) 보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일상에서 얻는 아이디어로도 창업 가능하며, 창업에 도전한 이력도 경력으로 인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 규모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민 5천명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민 1만명
대상 범위	예비창업자 + 업력 3년 이내 기업	예비창업자 + 업력 7년 이내 기업
재도전 문화 조성	-	1기 도전자의 재도전 우대(아이디어 보완 시)
참여하는 운영기관	대학, AC/VC 등 126개 기관	대·중견기업, VC 등 약 200여개 기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대상확인: 창업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가능. 이중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일 경우 당사 업력을 확인
- 2단계. 신청: 특별한 서류 없이 창업 도전자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플랫폼(www.modoo.or.kr)에 제출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하반기 모집하는 2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전문가 창업 코칭, 자금 지원(1만명) 등을 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창업 관련 전문가·선배창업가 코칭, 사업화자금 등을 통해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까지 실현 가능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도전한 이력도 창업 경력으로 인정하여 타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의 지원 혜택 향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기업부 청년정책과: 044-204-7632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1만 번째 도전자인 권00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창업동아리를 하면서 꾸준히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도전했으나, 사업계획서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본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에 도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참여 가능하여 다시 창업에 용기를 갖고 도전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변경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 044-204-745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변경,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변경

- ⊕ **추진배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규모 확대에 따른 체계적 관리·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변경
- ⊕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수단을 보유한 중기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부처가 변경
- ⊕ **기대효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창업, 판로, 금융 등 중기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업확장 및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여건 마련
- ⊕ **시행일** 2026.11월경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개선 및 발전과제 발굴
- (체감 혜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부처가 중기부로 변경되며 중기부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소관부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감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감독 및 지원을 중소기업부에서 주관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1월 중 중기부로 소관 변경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규모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044-204-7457

*참고: 중소기업부 누리집 > 보도자료 > "[보도자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부로 변경(2026.4.27.)"

○○ 생협은 사회적 경제의 핵심 축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부로 주무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생협의 자생력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공동개척, '지역특화' 맞춤 지원으로 전환합니다.

-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02

지역, # 수출, # 컨소시엄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 ⊕ **추진배경** 수출초보기업이 정보 부족, 초기진입비용 부담 등 개별기업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등)과 공동 해외진출 지원
- ⊕ **주요내용** 지역별 수출희망 중소기업에 바이어발굴, 전시회 참가 등 공동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성과 창출 시 他 수출지원사업 우대
- ⊕ **기대효과** 지역 유망업종 수출초보기업의 지속적인 수출성과 창출을 통해 지역 유망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시행일** 2026년 7월부터 지역별 프로그램 순차 공고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 수출 유망업종에 해당하나, 경험·정보 부족, 초기진입비용 부담 등으로 수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어려운 수출 희망 중소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바이어발굴, 전시회 참가 등 공동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성과 창출 시 他 수출지원사업 우대
 - 공동지원: 수출 전문성을 보유한 수출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등)과 함께 지역의 유망업종별·진출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상담회, 현지 팝업, 시장개척단 등 공동 시장개척 프로그램 기획·운영
 - 개별지원: 수출성과 창출 시, 해당 성과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해외인증획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선정 우대
- (제감 혜택) 공동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기업의 인지도·신뢰도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지원 후속 연계로 지속적 수출성과 창출 유도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기획 단위	일반 수출지원사업은 전국단위 모집공고로 지역특성 반영에 한계	지역별 유망업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수출 지원	개별 수출초보기업은 정보·경험 부족 등으로 수출 도전 및 지속에 애로	수출전문기업 등 전문성 보유 기관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참여하고, 기업의 수출 성과 기반으로 후속지원 연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별 프로그램 기획 완료(6월) 이후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공고되는 프로그램(2026. 下) 별 지원 요건 확인 후 참여 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개별기업 한계 극복: 수출 초기 단계 전문성·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수출 도전 분위기 조성
- 지역 유망산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보를 통한 매출·고용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2, 7513

지역 화장품 제조 업체 A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였으나 수출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 유망 업종과 진출 타겟 국가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획된 해외시장 공동개척 사업에 참여한 결과, 실제 수요가 있는 바이어와 연결되어 수출 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 R&D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합니다.

-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76, 7788

사업화보증, # 정부R&D, # 기술이전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 ⊕ **추진배경** 정부 R&D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R&D금융지원제도 신설
- ⊕ **주요내용** 기업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단위로 평가·소요자금을 산정하여 **現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최대 100억 원 보증지원**
- ⊕ **기대효과** 정부 R&D성과 사업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조달기회 제공 및 공공연구기관·기업 간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
- ⊕ **시행일** 2026년 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 R&D 완료과제를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사업화 프로젝트를 평가·소요자금 산정하여 **現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보증지원(운전자금 30억 포함 최대 100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한도	보증금액 모두 합산하여 한도적용	현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지원
평가 방식	기업단위 평가, 기술력 + 매출	▶ 프로젝트단위 평가, 기술력 + 성장성
자금산정 방식	매출액 기반 지원 가능금액 산정	▶ 프로젝트 소요자금 기반 지원 가능금액 산정
보증료 감면	최대 0.3% 감면	▶ 최대 0.5% 감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최근 5년 이내 정부 R&D과제를 완료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도입 확인
- 2단계: 온라인 신청(www.kibo.or.kr) 또는 방문 신청(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가능
- 3단계: 현장평가와 심사를 통과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 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과거 매출이 부족해도 사업화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은 담보 없이 필요한 사업화 자금 확보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76, 7788
- 기술보증기금 R&D사업화금융추진단: 051-606-7613, 7614

*참고: 중소기업부 누리집 > 보도자료 > "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5.20)"

바이오의약품 연구기업 A사는 2025년 정부R&D를 완료했으나 매출이 적은 신설 법인이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을 통해 50억 원을 지원받아 글로벌 임상을 성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수출 협상 시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제약사에 5백억 원 기술료 수출을 이뤘다.

스타트업,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시제품 제조기업을 찾습니다.

-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044-204-7572

시제품제작, # 제조협업, # 모두의창업

제조소기업-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 ⊕ **추진배경**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업체 탐색 애로 및 스타트업-제조업체간 협업기반 미비
- ⊕ **주요내용**
 - ‘모두의 창업’ 내 시제품 제조기업 찾기 기능 구현
 - 즉시 공개정보와 매칭 후 상세정보를 구분 제공
- ⊕ **기대효과** 스타트업 시장진입 비용·시간 절감, 소공인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사업기회 확대
- ⊕ **시행일** 2026년 12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 시제품 제작 역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공인 및 제조 소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에 특화된 정보 제공
 - * ①적용분야(전자기기, 생활소비재 등), 공정(사출, CNC 등), 소재(플라스틱, 금속 등) 등 기본정보 제공 → ②스타트업이 협업 의향 업체 특정 → ③추가정보 제공 → ④협업 개시
- (채감 혜택) 스타트업은 시제품 제작업체 탐색 시간 및 비용 절감, 제조기업은 신사업 기회 창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시제품 제작 업체탐색	인터넷 검색, 지인 추천 등	플랫폼 기반 검색
제공정보	주 생산품, 위치 등 기본정보	시제품 특화 정보(공정, 소재, 납기, 설비, 공차, 거래조건 등) 제공
업체 연락	직접 일일이 연락하여 확인	시활용 후보군 자동추천(고도화 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접속 후 ‘시제품 제조기업 찾기’ 선택
- 2단계: 제작이 필요한 시제품에 맞는 업체 검색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2월부터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 예정
- 시를 활용한 매칭기능은 추후 고도화 계획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스타트업은 공정·소재·납기 조건으로 원하는 제조기업을 빠르게 찾아 시제품 제작 기간과 탐색 비용을 절감
- 제조 소기업은 플랫폼 등록만으로 스타트업 수요를 유치하여 소량 시제품 수주 등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044-204-7572, 729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044-300-0845, 0843

CNC 금속가공 사업장을 20년째 운영 중인 B사 대표 엄○○씨는 대기업 협력사 발주 물량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자 새로운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스타트업의 소량 시제품 제작 수요는 알고 있었지만 연결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알게 된 후 보유 설비와 가공 가능 소재, 최소 수주 조건 등 정보를 플랫폼에 등록했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스타트업 3곳으로부터 드론 부품, 의류기기 케이스, 모바일리티 부품 브라켓 등 다양한 제작 요청이 이어졌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신산업 스타트업 제품의 첫 고객이 되어 실증과 구매를 지원합니다.

-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044-204-7683

신산업, # 스타트업, # 실증구매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 ⊕ **추진배경** 신산업 스타트업의 R&D 사업화, 공공 시장 진입, 초기 시장 형성 등을 위해 따라 정부가 실증부터 구매까지 지원
- ⊕ **주요내용** R&D 성공 신산업 제품을 정부·공공기관의 실증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시범 구매 및 해외 실증까지 단계적 성장 지원
- ⊕ **기대효과** 신산업 스타트업의 매출 확대 및 판로 확보
- ⊕ **시행일** 2026년 4월 시행, 6월부터 본격 지원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②최근 4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R&D)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업력 10년 이내 로봇 스타트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수요 정부기관과 매칭을 통한 현장 실증 기회 및 실증비용(최대 1억원)
 -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평가시 '공공성 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조달청 시범 구매 대상 및 해외 실증 기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정부·공공 실증	정부·공공기관의 개별 협업	수요과제 기반 매칭 및 실증비용 지원
혁신제품 지정	공공성·기술혁신성·시장성 평가	실증 성공시 '공공성 평가 면제' 등 혜택
시범구매	별도 인센티브 無	프로젝트 참여 기관·기업 우선 매칭
해외실증	창업기업 별도 프로그램 無	창업전문기관을 통한 전용 프로그램 개설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R&D 사업수행 이력 또는 조달청 혁신제품 여부 확인
- 2단계: 모집공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k-startup.go.kr)
- 3단계: 선정 후 수요기관과의 현장실증, 혁신제품 지정, 해외 실증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6월부터 실증, 혁신제품 지정 등 순차적 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정부·공공기관, 해외기관과 실증 기회 및 구매 등 공공 레퍼런스 확보를 통해 민간 시장 진출 기회 제공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044-204-7683 / 창업진흥원 답테크전략실: 044-410-1691

*참고: 중소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 "정부가 첫 고객이 되어 신산업 스타트업의 성장 가속화(2026.4.29)"

창업 8년차의 협지를 오르내리는 4족 보행 로봇 개발 스타트업의 대표 나○○씨는 중소기업기술개발 R&D를 통해 높은 경사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산악 지형을 수색할 수 있는 4족 보행 로봇을 출시하였다. 나 씨는 해외 판매를 알아보았으나, 신뢰할 수 있는 레퍼런스 요구 장벽에 가로 막혔다. 그러던 중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통해 B형의 수요과제 해결기업으로 선발되어 로봇의 우수한 성능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혁신제품에 등록되어 조달청의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제 A기업은 미국 C기관과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허용됩니다.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 044-204-7591

#지역특화발전특구, #외국인의료관광, #규제특례, #의료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 ⊕ **추진배경**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관련 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신설
- ⊕ **주요내용** 특구 내 특화사업자(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게 허위과장 광고금지 및 사전심의 의무화를 조건으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
※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구역: (현행) 공항·면세점 등 6개 → (개선) 기존 6개 + 의료사업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 ⊕ **기대효과**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및 매출·고용 증가 등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예정)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의료 관련 특구 내 특화사업자(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적용대상) 특구 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해당 특구 내에서 병원 위치, 진료 분야, 연계 프로그램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 게시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광고 허용 장소	특정 6개 구역(공항, 항만 등) 한정	기존 장소 +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산출방식	외국어 표기 광고의 실질적 제약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어 광고 허용
기대 효과	특구 내 홍보 부족으로 유치 활동 한계	특구 내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소유·소속 의료기관이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 위치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2단계: 광고 제작 전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율심의 조직(의사회, 한의사회, 소비자단체 등)의 사전심의 완료
- 3단계: 심의 통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해당 특구 안에서 심의받은 내용 및 방법에 따라 게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외국인 의료관광객 방문 증가를 통해 숙박, 음식, 관광 등 지역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
- 글로벌 의료도시 도약: 특구별 특화된 의료 기술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려 대한민국 의료 브랜드 가치를 높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044-204-7591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병원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우수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도 외국어로 된 간판이나 광고를 낼 수 없어 외국인 환자들이 병원을 바로 앞에 두고도 헤매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 제도 개선 후, 병원 인근 거리에도 외국어 광고를 게시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환자의 방문과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소상공인 관심 정보를 한 곳에 몰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94 #소상공인AI도우미, #소상공인시서비스, #소상공인 지능형 서비스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 ⊕ **추진배경**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지원정책, 상권, 등)를 찾고 검토해야 하나, 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부족
- ⊕ **주요내용** 소상공인 관심 정보(정책, 법률, 상권 등)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문답 형식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AI 정보서비스(소상공인 AI도우미) 구축
- ⊕ **기대효과**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가 관심 정보를 확인하고, 정책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어 정책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개선
- ⊕ **시행일** 2026년 하반기(9월중)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포함 대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정보 제공) 분야별로 흩어진 정책, 사업, 상권, 법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여러 분야가 연결된 질의도 요약 답변 제공
 - (신청 연계) 관심 있는 지원정책은 신청 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정보에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정보를 찾을 때	검색 포털 등을 통해 정책공고, 상권분석, 통계자료, 법률정보를 각각 찾아 확인	AI 도우미에 질의하여 정책·상권·통계·법률 정보를 함께 확인
정책을 활용할 때	관심 정책을 확인한 뒤 신청 방법과 경로를 별도로 탐색	관심 지원정책 확인 후 사업 신청 사이트 연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인터넷 주소창에 bigdata.sbiz.or.kr을 입력하거나 검색 포털에서 “소상공인365”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
- 2단계: 정책, 상권, 통계, 법률 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여 답변 확인
- 3단계: 관심있는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플랫폼(소상공인24)으로 연계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하반기(9월) 서비스 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①소상공인 관심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응답이 가능해져 관련 정보 탐색 시간 절감 가능,
②관심 정책에 대한 신청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취약 소상공인 혜택 극대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94

소상공인 김○○ 사장님은 지원정책과 상권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각각 확인해야 했다. 정책 공고와 상권, 법률 정보를 따로 찾아야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쉬웠다. 하지만 '소상공인 AI 도우미'를 이용해서 궁금한 내용을 한 번에 질문하면 정책·상권·통계·법률 정보가 함께 제공되고, 관심 있는 지원 정책의 신청 사이트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차단하겠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900

온누리상품권, # 매출액 상한 # 제한업종 # 부정유통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 + **추진배경**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중소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고 부정유통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
- + **주요내용**
 -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보건업(병·의원 등)·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업종을 제한업종으로 추가
 - 중대한 부정유통(상품권깡 등)에 대해 과징금 도입 등 처분을 강화하고, 신규 유통 부정행위(구역 외 수취, 비가맹점 수취 등) 제재 기준 마련
- + **기대효과** 영세상인 지원 강화, 부정유통 근절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Q. 누가 대상이 되나요?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구역*에 있는 상인 중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거나 전문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및 백년소상공인
- ** 보건업·수의업·법무관련 서비스업·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상품권 깡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가맹점 및 비정상 거래행위(구역 외 상품권 수취, 비가맹점 상품권 수취 등)를 한 점포

Q. 어떤 제한이 있나요?

- 요건 미충족(매출액 30억원 초과 또는 전문업종) 점포는 가맹점 등록·갱신 불가, 등록된 가맹점도 이후 요건 미충족 시 말소

시행 이후 신규 등록 신청 점포	→	가맹점 등록 불가
시행 이전 등록된 가맹점	→	가맹점 갱신(3년마다 의무) 불가
시행 이후 등록 갱신된 가맹점	→	요건 미충족 확인 시 말소

-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강화되고, 비정상 거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등) 신설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매출액 상한	가맹점 등록 시 매출액 제한 없음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 불가
업종제한	일반교습학원, 주류소매업 등 29개 업종 가맹점 등록 불가	기존업종+보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등 총 34개 업종 가맹점 등록 불가
부정유통 처분	① 상품권깡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경미한 제재(2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 비정상 거래행위(비가맹점 수취, 구역외 수취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없음	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당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 부과 ② 비정상 거래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맹취소 처분

Q.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고객매출 가맹점 등이 제한되어 일반 가맹점 방문 고객 및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부정유통이 근절되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등 본래 목적에 맞는 취약상권에서 사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900

전통시장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지만 인근 대형 매점도 가맹점이라 상품권 사용처가 분산됐다고 느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점포는 가맹 등록이 제한됩니다. '우리 같은 영세 가게에 진짜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제 상품권 고객이 우리 쪽으로 올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됩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044-204-7942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 #납품단가, #연동제,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 ⊕ **추진배경** 기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은 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
- ⊕ **주요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에서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 ⊕ **기대효과**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 ⊕ **시행일** 2026년 12월 3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요 에너지 경비가*가 있는 수·위탁거래를 하는 수탁중소기업
*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경비(전기료, 가스비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적용대상)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 경비(납품대금의 10% 이상)가 있는 수·위탁거래 중 적용 예외(위탁기업이 소기업, 90일 이하 단기계약,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미연동합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주요내용) 기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 수탁기업: 주요 에너지 경비 변동 시 사전 협의한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받아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
- 위탁기업: 에너지 가격 변동 위험을 수탁기업과 분담
- (세금 혜택) 에너지 경비 급변에 따른 위험을 수위탁기업이 분담하여 위기상황 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적용대상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가 있는 수위탁거래	주요 원가(원재료+에너지 경비)가 있는 수위탁거래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이 되는 수·위탁거래인지 확인
- 주요 원재료 또는 주요 에너지 경비가 있는 수·위탁거래 중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2단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여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 3단계: 원재료 가격 및 에너지 경비 변동 시 사전에 합의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중소기업거래개선과 : 044-204-7942, 794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본부): 02-368-8969
- 납품대금연동제 포털사이트(납품대금연동제.kr) FAQ

*참고: 중소기업거래개선과 누리집) 보도자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1.14.)”

얼려리 업을 하는 A사는 금속을 녹이기 위해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급증했음에도 납품대금을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수출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044-200-6826

기업, # 수출, # 해외법령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 ⊕ **추진배경**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가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있어 기업이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움
- ⊕ **주요내용**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글로벌 식품법령 기준규격 시스템' 및 '국가 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등에서 제공되는 해외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
- ⊕ **기대효과** 수출기업의 해외법령·규제 정보 접근성 제고
- ⊕ **시행일** 2026년 12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수출·해외 진출 기업 및 모든 국민
- (지원대상)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 * 13개 언어권 58개국의 해외법령 정보 3만여 건을 제공
- (지원내용) '글로벌 식품법령 기준규격 시스템*' 및 '국가 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등에서 제공되는 해외 법령정보를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 * foodlaw.foodinfo.or.kr: 14개국 식품 안전·규격 관련 해외 법령정보 3,760여 건 제공
 - ** www.konetic.or.kr: 전 세계 환경산업 관련 법령정보 1,667건 제공
- (체감 혜택) 여러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도 수출에 필요한 해외법령·규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검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해외 법령정보 검색	여러 플랫폼을 일일이 탐색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원스톱 검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044-200-6826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베트남에 라면을 수출하는 A 기업은 종전에는 '세계법제정보센터'와 '글로벌 식품법령 기준규격 시스템'을 오가며 필요한 현지 법령정보를 찾아 헤맸으나, 2026년 12월부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한 번에 검색 가능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다.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유통에 정부가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 042-481-3471

수출기업, # 위조상품, # 정부직접대응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 ⊕ **추진배경**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제품(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기업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까지 위협
- ⊕ **주요내용**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의 위조시, 법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추진
*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통관보류 직접 요구, 대량·상승 판매자 대상 현지 행사 고소
- ⊕ **기대효과**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제고
- ⊕ **시행일** 2026년 8월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업의 제품 중 KC, HACCP 등 한국의 품질기준 충족 시 사용 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수출 중·중견기업 등
* 대기업도 지원 가능(단,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업에게 사용권 부여
- 정품인증기술 도입지원 (기업 자부담 50%, 기업별 상한액 有)
- 국가인증상표 위조제품 유통시,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통관보류 등 직접 요청 및 손해배상소송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침해 발생시 대응	개별 기업 차원 대응 (정부 후방 지원)	법정부 차원 대응(정부 직접 대응)
정품 확인 방법	정품 확인 불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 가능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정부 지원 없음	정부 지원 50%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모니터링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 결정
- 2단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koipa.re.kr)에 사용 신청
- 3단계: 인증상표에 정품인증기술을 적용
- 4단계: 침해 발생 시, 정부가 직접 대응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신제품 개발 등에 집중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 K-브랜드 신뢰도 제고: 해외 소비자가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042-481-3471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6196-2041

동남아시아에 마스크팩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제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유통되어 매출이 감소하고 브랜드 신뢰도도 저하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상표 분쟁에 직접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으나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하면서, 침해 발생 시 정부가 직접 침해 증거를 확보하고 현지 정부에 대응함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이 차단되어 매출이 정상화되었다.

위조상품 확인은 간편하게, 환불은 더 빠르게 지원합니다.

-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 042-481-8282

위조상품, # 환불, # 온라인쇼핑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 ⊕ **추진배경** 온라인플랫폼 등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환불)하기 위한 감정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 ⊕ **주요내용** 시를 활용한 위조상품 감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환불)하는 지원 체계 구축
※ 우선 적용 대상 : 국민의 안전·건강과 직결된 품목(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아동완구 등 일부 품목)
- ⊕ **기대효과** 위조상품 구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건강한 거래질서 확립
- ⊕ **시행일** 2026년 11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소비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위조상품 구매 소비자
- (지원내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감정을 지원하고 감정 결과에 따른 환불 실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운영	위조상품 감정 지원 체계 無 → (소비자) ①고객센터 위조상품 신고 접수, ②입증자료 수집·제출, ③실물 택배 발송(상품 반송) → (상표권자) 상품 감정 → (온라인플랫폼사) 환불	시를 활용한 감정지원 체계 구축 → (소비자) 환불 신청 → (상표권자) 시 활용 '감정지원 보고서' 확인 후 '감정의견' 제공 → (온라인플랫폼사) 시스템 연계를 통해 상표권자의 '감정의견' 확인, 위조상품 환불 유통차단 등 후속 조치
처리기간	택배 배송 및 감정 기간(수일~수개월)	업무 기준일 14일~1개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위조상품 의심 상품을 구매한 쇼핑몰을 통해 환불신청 후, 해당 상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 완료
- 2단계: 감정결과가 위조상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비자 입증 부담 해소: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위조상품 감정절차를 국가가 지원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권리 보호
- 시간 및 비용의 획기적 절감: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매한 제품 사진 업로드'를 통해 감정 신청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042-481-8282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위조상품 감정지원팀: 02-6196-2028

국내 A 온라인플랫폼사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황○○씨는 제품의 패키징과 외관이 기존 사용하였던 공식 인증 판매사에서 구매한 제품과 다소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 올해부터 정부 차원의 시 활용 위조상품 감정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환불 신청 페이지에서 제품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위조상품 감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감정지원 결과 위조상품으로 밝혀졌고,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황 씨에게 환불처리가 되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전 K-브랜드(상표) 무단선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K-브랜드 지킴이 구축 -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 042-481-5999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

K-브랜드 지킴이 구축

- ⊕ **추진배경** 한류의 확산으로 해외에서 외국인(기업)에 의해 국내 기업 상표의 악의적 무단선점(선출원 사례) 증가로 우리 기업 피해 가중
- ⊕ **주요내용** K-브랜드 지킴이를 구축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 상표의 악의적 무단선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경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대응을 지원
- ⊕ **기대효과** 악의적 무단선점 사전 대응으로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
- ⊕ **시행일** 2026년 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국내 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업종별 상표 무단선점 위험도 및 대응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정보 획득 가능
- 위험도 대시보드를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위험도·출원 동향·다수선점자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악의적 무단선점자(상표브로커) 정보제공 및 위험도(4등급) 분류하여 등급별 경보 제공
- 시를 활용해 수출기업의 출원(예정) 상표와 기존 등록상표 간 유사도 평가 서비스 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응시점	현지 진출 이후 해외 무단선점 발견 → 사후 대응	현지 진출 전 무단선점 경보사전 인지 → 사전 대응
대응방식	기업이 자체적으로 국가별(업종별) 해외 무단선점 정보수집 및 개별 대응	국가별(업종별) 통합 정보획득 및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신속 대응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K-브랜드 보호포털 內 K-브랜드 지킴이를 통해 무단선점 정보 획득·대응이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외 상표 무단선점 조기 인지·초기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상표권 확보
- 이의신청, 심판 등 후속 지원사업(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연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042-481-5999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8145(ARS 5번)

*참고: 지식재산처 누리집)보도설명자료)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현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6.3.30)"

국내 화장품 기업 A사는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K-브랜드 지킴이를 통해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가 현지에서 출원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적시에 제기함으로써 상표 등록을 저지하였으며, 향후 브랜드 사용 제한이나 고비용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분쟁 비용 발생을 예방하고 중국에서 자사 상표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역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수도권·대경권·전남권 IP 종합지원센터 개소 -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 042-481-5861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지식재산, #원스톱지원

수도권·대경권·전남권 IP 종합지원센터 개소

- ⊕ **추진배경** 지식재산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산업환경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성장 도모
-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지역 현장에서 IP 창출·거래·사업화·보호 전범위 원스톱 지원
 - (지원방식) IP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는 지식재산 전문가 현장·온라인 상담
- ⊕ **기대효과** 권역별 지식재산 거점 구축으로 지역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 ⊕ **시행일** 2026년 7월 (2028년 전국 8개 전 권역으로 확대 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누구든지 권역별 IP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식재산 종합 상담 서비스 활용 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식재산 창출·거래·사업화·보호 등 관련 서비스를 단일창구에서 통합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기능	IP 창출 중심 지원	IP 창출·거래·사업화·보호 원스톱 통합지원
거래·이전		7개 지역지식재산센터 거래전문관 배치 (인천·대전·경남·전북·광주·대구·부산)
사업화 지원	수도권에 집중된 IP 인프라	중소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 및 판로지원 강화
IP 보호		지식재산보호원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 분쟁대응 전라지원 및 상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권역별 IP 종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단계. 지식재산 기본 상담 → 분야별 전문위원 심층 상담 진행
- 3단계. 맞춤형 지원사업 매칭 및 연계
- 진단결과에 따라 IP 창출·거래·사업화·보호 등 사업 매칭 및 연계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원스톱 통합 지원) IP종합지원센터(단일창구)에서 IP관련 상담·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창출·거래·사업화·보호 등 단계별 칸막이 없이 연속 지원
- (지역 혁신성장) 권역별 IP 거점 마련을 통한 지역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042-481-5861

부산에서 정밀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 대표 김○○씨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특정 기술의 특허권 이전이 절실했으나, 기술이전 절차와 계약 검토 등 생소한 과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산 IP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IP거래전문관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특허 기술을 발굴하고 거래 매칭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후 사업화 지원사업과도 연계되어 신제품 출시 일정을 단축하고 매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어려운 특허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허 AI Agent를 지원합니다.

-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특허 요약·검색서비스 적용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 042-481-5077

지식재산, # 인공지능, # 특허정보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특허 요약·검색서비스 적용

- ⊕ **추진배경**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허 문서를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 개선 필요
- ⊕ **주요내용** 대국민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서 자연어 질의를 이용한 AI 검색 및 사용자 수준별(학생, 일반인, 연구자) 맞춤형 요약정보 제공
- ⊕ **기대효과** 일반 국민의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이해도 제고
- ⊕ **시행일** 2026년 12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KIPRIS)를 이용하는 이용자

Q. 어떤 기능들이 지원되나요?

- 자연어 질의를 이용한 AI 검색 및 사용자 수준별(학생, 일반인, 연구자) 맞춤형 요약정보 제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검색방법	사용자가 원하는 특허 검색을 위하여 검색조건(키워드 조합) 직접 설정 필요	사용자가 입력한 자연어 질의의 의미를 이해하여, 시가 이와 관련된 특허 검색결과 도출
문서 요약	특허 출원 시 출원인이 기재한 특허문서 요약만 존재	특허 문서 전체를 이해한 시가 사용자 수준(학생, 일반인, 연구자)에 맞게 문서 요약결과 제공
기타	사용자 입력 문서와 유사한 개념의 특허검색 서비스 미존재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를 분석하여,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기술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검색결과 도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특허 검색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국민도 자연어 문장을 이용하여 손쉽게 특허 검색이 가능
- 특허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의 기술 이해도 수준에 맞는 요약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처가 보유한 방대한 공공 데이터인 특허정보의 활용도 및 접근성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 042-481-5077, 042-481-5347

발명경진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 초등학생 박○○ 학생은 떠오른 아이디어가 실제 특허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서는 특허 검색을 위한 조건을 직접 입력해야 해서 학생이 생각하는 발명의 내용이 이미 특허로 존재하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KIPRIS의 AI 기반 검색/요약 서비스를 통해 박○○ 학생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문장 그대로 검색하고, 또 검색된 특허들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쉽게 풀어서 요약된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한 특허분석을 거쳐 개발된 기술을 출원하면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 042-481-8756

특허분석, # 산업재산진단기관, # 출원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 ⊕ **추진배경** R&D 성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한 특허분석 수행을 활성화할 필요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 (지원범위) 민간 R&D 단계에서 진단기관을 통해 수행한 특허분석 비용
 - (지원내용) 특허분석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 ⊕ **기대효과** 특허 출원품질 향상 및 특허권 무효·분쟁 예방
- ⊕ **시행일** 2026년 12월 28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Q.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지원범위) 민간 R&D 실시를 위해 자체 부담한 특허분석 비용
 - 특허분석을 통해 R&D를 설계·실시하여 출원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 맞춰, R&D와 연관 없는 특허분석은 지원 제외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정부 R&D 지원사업의 특허분석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특허분석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특허수수료 납부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 부여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산업재산진단기관에 심사 요청
 - ① 특허출원 이후 특허분석을 수행한 산업재산진단기관에 지식재산포인트 지급기준 충족여부 심사 요청
 - ② 진단기관이 심사 후 '지식재산포인트 지급 심사 결과서' 발급
- 2단계: 지식재산처에 지식재산포인트 지급 요청
 - ① 신청인이 '지식재산포인트 지급신청서'와 그 외 증빙자료를 지식재산처에 제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특허 관련 비용부담을 경감
- 특허분석 활성화를 통해 특허출원의 품질이 향상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042-481-8756

자사 제품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수의 좋은 특허를 만들기 희망하는 A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R&D와 R&D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특허분석이 필요했다. A 중소기업은 자체 특허분석 수행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산업재산진단기관에 특허분석을 의뢰해야 하나, 특허분석 의뢰 시 건당 비용이 높아 재정부담을 겪고 있었는데 '지식재산포인트 지원 제도' 덕분에 특허분석 의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고, 다수의 좋은 특허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손쉽게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02-2100-3058

공공데이터, # 가명처리 특례, # AI 개발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 ⊕ **추진배경** 공공부문은 선진적인 공공데이터 축적·개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내부 거버넌스 미정립, 소극적 관행 등으로 가명정보 제공이 저조
- ⊕ **주요내용**
 - (가명정보책임관 지정) 데이터 보유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 역할·책임 명확화로 가명정보 제공 관련 효과적인 의사결정 가능
 - (가명정보 제공 절차 표준화) 가명정보 제공 신청 접수, 가명처리·적정성 검토 등 절차 전반에 대한 통일된 가명정보 제공 체계 마련
- ⊕ **기대효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AI 발전 촉진 등
- ⊕ **시행일** 2026년 9월 26일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 기업, 연구자 등 누구나
-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특정 목적*으로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기업)은 가명정보책임관을 통해 가명정보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후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음
-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가명정보책임관 도입	총괄부서 부재로 협의 자체가 어렵거나 데이터 보유 부서와 일일이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정보책임관을 통해 가명정보 제공 신청 및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가능 • 가명정보 제공 신청 후 14일 이내(최대 28일)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가명정보 제공 절차 표준화	가명정보 제공 신청 후 제공 절차까지 기관별 절차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정보 제공 신청 접수, 검토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절차 마련

Q. 어떻게 가명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 1단계: 기관별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해 가명정보책임관 확인
- 2단계: 전자우편 등으로 가명정보 제공 신청서 제출 및 가명정보 제공 가능 여부 회신(최대 28일 이내)
- 3단계: 가명정보책임관을 통해 가명처리 현황 확인, 가명처리가 완료되면 가명정보를 제공받고 신청 목적에 맞춰 활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가명정보 제공 창구 일원화) 기존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 가능
- (데이터 활용 산업 활성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및 알고리즘 개발, 보건·의료 분야 연구, 시장 조사 및 예측 등이 가능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이○○ 교수팀은 최근 '위키기구 발굴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복지 수혜 이력 데이터가 필요했다. 하지만 예전에는 데이터 보유 부서마다 가명처리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전담 창구가 없어 여러 부서를 전전하며 협의하는 데만 수개월을 허비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 교수는 '가명정보책임관'을 통해 즉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었고, 단일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화물이 아닌 수리용 부품도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 가능해 집니다.

-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25

보세창고, # 자가화물, # 선(기)용품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 **추진배경** 선박용품 공급업체가 선사 스케줄 등을 사유로 적재 의뢰받은 수리용 부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 자가용 보세창고 외 보관이 적합한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가 있음
- ⊕ **주요내용** 선사가 직접 수입·소유하며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품은 자가화물이 아니지만, 선박용품 공급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 **기대효과** 선박용품 공급업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공급업 활성화 기대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선박·항공기 물품공급업 등록되어 있는 자가용 보세창고 운영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자가용 보세창고는 자기 화물만 반입 가능하나,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품에 한하여 타인 소유 화물이더라도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을 허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대상	자가화물	자가화물 +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품 및 부속품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물품 특성상 선박용품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며 공급·적재하기 곤란한 수리용 부품의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하여 선박용품 공급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공급업 활성화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25

자가용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선박용품 공급업체 A사는 자신의 보세창고에 '자기 소유'의 물건만 보관할 수 있었다. 그래서 A사가 소유하기 힘든 고가의 타인 화물(선박·항공기 수리용 부품)은 A사 창고가 있어도 추가 비용을 들여 외부 유료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큰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용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게 되어, A사는 물류비 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향상되었다.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을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및 계약절차를 간소화 합니다.

-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266

공공조달, # 종합쇼핑몰, # 인공지능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 **추진배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요건 등으로 인해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
- ⊕ **주요내용**
 - (쇼핑몰 진입요건 완화) 납품실적 면제, 업체수 3개사 → 1~2개사로 완화
 - (계약 패스트트랙) 쇼핑몰 계약시 절차 및 서류제출 간소화
 - (2단계경쟁 우대) 인공지능제품에 대해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조정
- ⊕ **기대효과**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및 공공기관 구매 확대
- ⊕ **시행일** 2026년 8월 1일

Q. 누가 혜택을 받나요?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AI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조달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I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더 쉽게 등록될 수 있도록 진입요건 및 계약절차 간소화
 - AI 제품은 납품실적(3천만원 → 면제), 업체 수(3개사 이상 → 1~2개사) 등록요건 완화
 - AI 제품은 적격성 평가 면제, 가격자료 제출 생략 등 계약절차를 간소화하는 계약 패스트트랙 적용
 - AI 제품에 대해 2단계경쟁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추가 경쟁 없이 직접구매가 가능토록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AI제품 쇼핑몰 진입요건	(납품실적) 3천만원 (업체 수) 3개사 이상 (규격)업체 공통규격	(납품실적) 면제 (업체수) 1~2개사 (규격) 업체 제시규격도 가능
서류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격자료 등	자료 제출 생략 가능
2단계경쟁기준금액	(일반) 5천만원 이상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	(일반) 2억원 이상 (중기간경쟁제품) 4억원 이상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AI제품 제조 또는 공급업체는 나라장터 쇼핑몰 진입이 쉬워져 조달시장에 더 빠르게 참여
- 공공기관은 필요한 AI제품을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공공조달을 통한 AI산업 육성에 도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66

*참고: 조달청 누리집) 보도자료) “공공조달,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 문턱은 낮춘다.”(2026.6.1.)

AI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 대표 최○○씨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AI 제품을 등록하려 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납품실적 요구 등으로 공공시장 진입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2026년 8월부터는 AI 제품 등록 요건 및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제 공공시장 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민간보다 먼저 공공에서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중소기업이라면 공공조달 2단계 경쟁 평가에서 가점 1점을 받습니다.

-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시 가점 부여 -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266

공공조달, # 종합쇼핑몰, #국산화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시 가점 부여

- ⊕ **추진배경**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필요
- ⊕ **주요내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 시 신인도 가점 1.0 부여
- ⊕ **기대효과**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하여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부품 국산화 노력 유도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혜택을 받나요?

-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으로 확인 받은 조달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에서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에 가점(1.0점)이 부여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쇼핑몰 2단계평가	별도 가점 없음	부품국산화 중소기업 가점 1.0 부여

Q.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나요?

- 1단계: 중소벤처기업부에 부품 국산화 확인 신청
- 2단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등록 신청 후 승인
- 3단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 시 가점으로 활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에서 우대를 받아 평가에 유리
- 업체의 자발적인 소재·부품 국산화를 유도하여, 국산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66

*참고: 조달청 누리집) 보도자료) “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2026.1.13.)

소재·부품 국산화에 투자한 중소기업 대표 이○○씨는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공공조달 경쟁에서 국산화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2026년 7월 1일부터 2단계 경쟁 평가 시 가점 1.0점이 부여됨에 따라 ‘국산화에 투자한 기업이 공공조달에서도 제대로 인정받게 됐다. 앞으로 소재·부품 국산화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수한 AI 제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을 도입합니다.

-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 042-724-7283

#공공조달, #AI, #중소·벤처, #우수제품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 ⊕ **추진배경** AI 제품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 창출 및 정책 지원이 필요, 또한 진짜 우수한 AI 제품인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AI 기술특성을 고려한 별도 심사체계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기존 심사분야와 별도로 AI심사 분야 신설
 - AI 관련 심사위원 전문분야 세분화
 - 기술심사 배점 및 기술품질 가점 상향
- ⊕ **기대효과** 우수한 AI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AI제품 활용 확대 촉진
-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 희망하는 조달기업

Q. 어떤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나요?

-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AI 평가트랙을 신설하여, AI 제품은 기술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 분야와 평가기준을 통해 우수제품 지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심사방식	AI 제품도 일반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및 평가	AI 제품에 특화된 별도 심사 분야 및 평가지표 도입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를 확인 후 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AI 제품의 기술특성을 반영한 심사가 가능해져 진짜 우수한 AI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용이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AI제품은 공공기관 납품 기회와 판로가 확대되어, 기업의 초기시장 확보에 도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83

AI 기술이 적용된 물품을 개발한 (주)○○○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 여러 차례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서가 일반제품에 맞게 구성되어 AI 기술의 우수성, 혁신성을 인정받지 못해 좌절했었다. 그러나 우수제품 심사에 AI 기술 제품만의 심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AI 기술을 인정받아 우수제품에 지정되었고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계약체결은 물론 다양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검정시험이 시행됩니다.

-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 054-716-1514

공공조달, # 자격제도, # 조달관리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 ⊕ **추진배경** 공공조달 분야의 투명·공정성, 전문성 및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 ⊕ **주요내용** 공공조달 전 과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공공조달 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신설하여, 2026년 10월 제 1회 검정시험 시행
- ⊕ **시행일** 제1회 검정시험 : 2026년 10월 3일(필기), 11월 14일(실기)

Q. 누가 적용을 받나요?

- 공공조달에 전문성을 쌓고자 하는 국민, 조달기업, 공공기관 조달담당자 등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 가능

Q. 어떤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나요?

- 입찰, 계약, 납품, 검수, 분쟁 해결 등 공공조달 전(全) 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공조달 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신규 도입

Q. 시험은 언제, 어떻게 시행되나요?

- 2026년 하반기에 첫 시험이 시행되며, 필기와 실기로 구분
 - (필기) 2026.10.3.(토) / 원서접수: 9.14.(월)~9.17.(목)
 - (실기) 2026.11.14.(토) / 원서접수: 10.12.(월)~10.15.(목)

Q.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총 4과목(필기 3과목, 실기 1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 (필기) ①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②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③공공계약관리
 - (실기) 공공조달 관리실무

Q. 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나 강의가 있나요?

- 조달청에서 표준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
 - (표준교재): 조달 실무 전반을 담은 교재를 조달청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누리집에 PDF 형태로 무료 공개
 - (온라인 강의): ‘나라배움터(pps.nhi.go.kr)’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공조달 분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국민 누구나 새로운 전문자격 취득 가능
- 조달기업과 공공기관은 공공조달 전문인력을 통해 입찰, 계약, 분쟁대응 등 조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육기획팀: 054-716-1514

공공기관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이○○씨는 수년간 경험을 쌓았지만 공공조달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자격증이 없어 아쉬웠다. 2026년 10월 3일 제1회 공공조달관리사 검정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내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자격증을 따서 조달 분야에서 더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07

국토·교통



01.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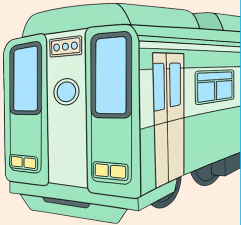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73

9월까지 '모두의 카드(K-패스)' 환급 혜택을 높여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겠습니다.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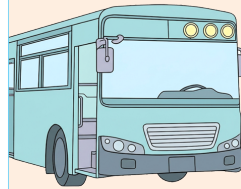
시행일 2026년 4월

-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 경감을 위해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합니다.



모두의카드

- (정률제)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하면 환급률 최대 89.9% 적용
-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50%일괄 인하



02.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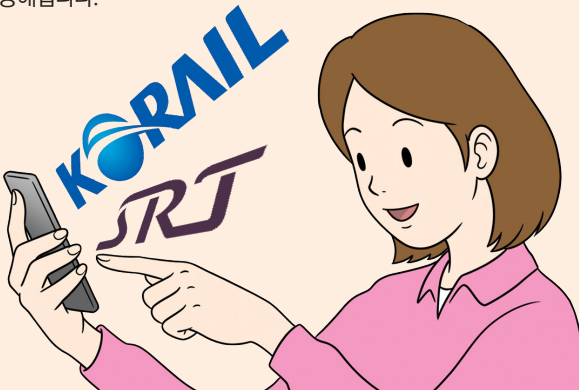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74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의 예매가 가능해집니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시행일 2026년 8월

- 열차-노선별로 구분하여 구매하였던 열차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일괄조회 및 예매, 발매가 가능해집니다.



9월까지 '모두의 카드(K-패스)' 환급 혜택을 높여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겠습니다.

-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 044-201-5022

시차출퇴근, # 모두의카드, # 고유가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 ⊕ **추진배경**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 경감을 위해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 ⊕ **주요내용**
 - 출퇴근 시차시간* 설정 및 환급률 인센티브(30%p) 제공
* (출퇴근 시차시간) 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 모두의카드 정책제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 ⊕ **기대효과**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 ⊕ **시행일** 2026년 4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상 정기적으로(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4월~9월 한시 적용 내용
 - (정책제)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차액) 무제한 환급
(정책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단위: 만원)

구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 3.0	10 → 5.0	5.5 → 2.5	9.0 → 4.5	4.5 → 2.2	8.0 → 4.0
일반 지방권	5.5 → 2.7	9.5 → 4.7	5.0 → 2.3	8.5 → 4.2	4.0 → 2.0	7.5 → 3.7
우대지원지역	5.0 → 2.5	9.0 → 4.5	4.5 → 2.1	8.0 → 4.0	3.5 → 1.7	7.0 → 3.5
특별지원지역	4.5 → 2.2	8.5 → 4.2	4.0 → 2.0	7.5 → 3.7	3.0 → 1.5	6.5 → 3.2

- (정률제)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정률제(기본형) 환급률)

구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	저소득층
시차시간	50%	60%	80%	83.3%
기타	20%	30%	50%	53.3%

- (제감 혜택)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절감 및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모두의카드 전용 카드 발급 및 회원가입(korea-pass.kr) 후 이용 가능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4월 이용분부터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실질적 가계 가용소득 증대: 모두의카드 이용자 월 평균 대중교통비 7만원 중 '62%'인 4만 4천원 환급 (2026년 4월 기준)
- 출퇴근시차시간 인센티브 제공으로 교통수요 분산, 교통혼잡 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044-201-5022
- 모두의카드 고객센터: 031-427-4415(이용 및 환급금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441, 7442, 7446(정책문의 및 개선사항)

*참고: 국토부 누리집 <참고·설명자료> "4월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인천시에 거주하는 임○○씨는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출퇴근 시차출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매일 60,000원을 지출하고, 18,000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부터 9월까지 36,000원을 환급받게 되었다.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의 예매가 가능해집니다.

-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

국토교통부 고속철도통합추진TF ☎ 044-201-5286

#철도, #통합, #교통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 ⊕ **추진배경** 국민의 확대 및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고속철도 통합을 추진 중으로 기존 이원화된 열차승차권 예매 앱을 하나로 통합
- ⊕ **주요내용** 열차·노선별로 구분하여 코레일 특과 SRT 앱에서 구매하였던 열차승차권을 통합된 하나의 앱에서 일괄조회 및 예발매 가능
- ⊕ **기대효과** 열차나 노선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 앱에서 모든 열차승차권 조회 및 예·발매 가능
- ⊕ **시행일** 2026년 8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
 - (지원내용) 기존 열차 및 노선에 따라 코레일 특과 SRT 앱으로 분리되어 있던 예매 창구를 일원화
 - (체감 혜택) 하나의 통합 앱에서 모든 승차권의 통합 조회 및 구매를 지원하여 대국민 이용 편의성 대폭 향상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열차 승차권 예매 등	코레일 특과 SRT 앱에서 각각 열차 조회 후 승차권 예발매	하나의 통합 앱에서 모든 열차 조회 후 승차권 예발매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8월 통합 앱 출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열차나 노선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 앱에서 모든 열차승차권 조회 및 예·발매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고속철도 통합추진 TF: 044-201-5286
-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통합추진지원단TF: 042-615-6346
- 에스알 영업본부 승무처 : 02-6484-4231

세종시에서 서울로 잦은 출장을 다니는 40대 직장인 최○○씨는, 급한 회의를 잡힐 때마다 목격지(서울역 수서역)와 시간에 맞는 가장 빠른 기차를 찾기 위해 코레일특과 SRT 앱을 번갈아 접속해야 했다. 앱을 오가며 잔여 좌석을 비교하는 사이 표가 매진되어 난감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되면서, 단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의 모든 시간표를 한눈에 비교하고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마칠 수 있게 되어 출장길의 피로와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0, 3883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 **추진배경** 차량소유의 다변화(임차·대여)에 따른 감면제도 확대, 출산을 저하에 따른 인구비상대책회의 과제로 다자녀가구 감면 도입
- ⊕ **주요내용** (대상) ①장애인, 유공자(洞세대원 포함)가 장기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50% 할인, ②다자녀가구(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차량이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할인(3명 이상은 20%)
- ⊕ **기대효과** 차량소유형태를 고려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다자녀가구 주말 통행료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 및 정부혜택범위 확대
- ⊕ **시행일** 2026년 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으로 장애인·유공자당 1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다자녀가구로,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으로 세대당 1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유공자 탑승 확인 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부 또는 모가 탑승한 다자녀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10~20% 감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장애인·유공자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유공자(세대원 포함) 본인 소유의 자동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유공자(세대원 포함) 본인 소유의 자동차 및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 부모 소유 또는 장기 임차·대여 차량,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10% 할인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20%)
다자녀가구 차량	-	

Q. 언제부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하반기 중 시행, 아래와 같은 혜택 부여

구분(2026. 하반기~)	1단계	2단계
장애인·유공자 차량	대상확인 및 신청 (감면대상 차량확인 및 차량통행료 감면 등록)	고속도로 이용시 통합복지카드 지참 또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여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차량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후 휴대전화 위치확인을 통해 통행료 감면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차량 소유형태의 다변화에 대응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 다자녀가구 지원 : 저출산·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범정부 지원책으로 주말 통행료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 및 정부혜택 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3883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5(대표 1588-2504)

장애인인 이○○씨는 소유 차량으로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아왔다. 오래된 자동차를 처분하고 목돈 부담 등으로 장기간 렌트 형식으로 새차를 구입하였으나 더 이상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낙담했다. 그런데 2026년 하반기 중으로 장기 임차·대여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로 사업속도가 빨라집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 044-201-4927

주택공급, # 노후계획도시정비, # 속도제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 ⊕ **추진배경** 1기 신도시,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필요성 제기
- ⊕ **주요내용**
 -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노후계획도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주민 등이 사업 초기 신탁사, LH 등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추진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같음
- ⊕ **기대효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제고
- ⊕ **시행일** 2026년 8월 4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예비사업시행자) LH, 신탁사 등과 협약등을 체결하여 사업초기부터 정비사업 전문성이 있는 예비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
- (동의서 인정 특례)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같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예비사업시행자	선도지구에만 시범 적용	전체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동의서	모든 동의서 별도 징구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상호 인정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예비사업시행자)
- 1단계. 주민대표단 구성: 과반 동의 + 지정권자 승인
 - 2단계.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협약 등 체결 + 과반 동의 (동의 인정)
 - 1단계. 대상 확인: 법령에 제시된 동의인정 대상 확인
 - 주민대표단 설립 ⇨ 선도지구 지정,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등
 - 2단계. 동의서 징구: 시행령상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서 징구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정비사업 추진경험이 부족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초기부터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아 사업속도 제고
- 동의서 제출로 소요되는 시간·비용 및 주민 피로도 등을 줄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044-201-4927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주택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15.)”

1기 신도시 아파트 소유자인 조○○ 씨는 주택난과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재건축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선도지구 선정에 탈락하면서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였으나, 선도지구에서 시범운영 하였던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전체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적용되면서 신탁사, 공공기관 등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정비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위험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빨라집니다.

- 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044-201-3587

시설물, # 보수·보강, # 기한

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 ⊕ **추진배경**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최대 5년간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하여 입법 취지인 사고 방지의 실효성 저하
- ⊕ **주요내용** 기존 2년 이내 조치 착수, 3년 이내 조치 완료인 보수·보강 조치 기한을 1년 이내 착수, 2년 이내 완료하도록 기한 단축
*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 가능
- ⊕ **기대효과** 시설물의 조속한 보수·보강 조치를 통해 시설물 사고 방지
- ⊕ **시행일** 2026년 12월 4일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D등급(미흡)·E등급(불량) 위험 시설물 인근 주민·이용자 모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한 단축: 조치 착수: 2년 이내 → 1년 이내 (1년 단축), 조치 완료: 3년 이내 → 2년 이내 (1년 단축)
-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한 연장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 •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변동 없음
보수·보강 기한	조치 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수,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 조치 완료	조치 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수,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 조치 완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의 조속한 보수·보강 조치를 통한 시설물 사고 예방 및 공공의 안전 도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596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시설물안전법」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2025.11.25.)

이○○씨는 매일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교량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함을 느꼈다. 그런데 '보수는 2-3년 뒤에나 시작한다'는 말에 막막했다. 2026년 12월부터 D등급 시설물은 1년 안에 보수에 착수하고 2년 안에 완료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씨는 '5년을 기다리는 것과 3년 안에 완료되는 것은安心감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통합심의 확대로 주택건설사업이 빨라집니다.

-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044-201-3369

사업계획승인, # 통합심의, #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평가 등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 심의 과정에서 각종 평가 지연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발생
- ⊕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
- ⊕ 기대효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심의기간 단축
- ⊕ 시행일 2026년 8월 4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심의기간 단축)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평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능위주설계 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포함)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 *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 약 3~6개월 단축 효과 예상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주택관련 통합심의 대상	1.건축심의 2.도시·군관리계획심의 3.광역교통개선대책 4.교통영향평가 5.경관심의	1.건축심의 2.도시·군관리계획심의 3.광역교통개선대책 4.교통영향평가 5.경관심의 6.교육환경평가 ^{신설} 7.재해영향평가 ^{신설} 8.소방성능평가 ^{신설}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심의하도록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신속 인·허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6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70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A 건설사는 주택건설사업 시행하고자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각종 법령에 따른 심의를 별도로 진행함에 따라 인허가가 상당히 지연되었다. 그러나 2026년 8월부터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검토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어 신속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듈러주택의 사후점검·관리 절차를 신설하여 안전성을 높입니다.

-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044-201-3366

공업화주택, # 사후점검 강화, # OSC·모듈러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 ⊕ **추진배경** 「주택법」 상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인정기간이 장기(5년)임에도 인정 이후 사후점검이 없는 등 절차 내실화 필요
- ⊕ **주요내용**
 - (점검신설) 공업화주택 인정 이후 인정서 내용대로 성능 및 생산설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점검하는 근거 마련
 -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법령 상 규정이 미비했던 기간연장·변경절차 마련
- ⊕ **기대효과**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관리 내실화 및 활성화 지원
- ⊕ **시행일** 2026년 11월7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 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장·변경절차)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연장 및 세부내용 변경시 변경신청 가능 여부 등이 모호 → 법령 근거 마련
- (공업화주택 수요자) 공업화주택 인정 이후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적정 성능을 갖춘 공업화주택 구매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사후점검	인정기간이 장기임에도 사후관리규정 미비	공업화주택 인정 이후 점검 절차 신설
연장, 변경	기간연장, 변경기준 등 법령 근거 미비	유효기간 연장, 변경 필요사항 등 법령 기준 마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업화주택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신청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내실화로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연장·변경 기준 명확화로 업체의 사업 안정성 제고
- 사후점검 의무화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공업화주택 구매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67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66

공업화주택 인정 취득을 원하는 사업자 문○○ 씨는 인정 내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했는데 2026년 11월부터 기준이 명확해져서 오랜 기간 노력해서 완성한 공업화주택에 대해서 수월하게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을 1개월→2개월 전으로 앞당겨 여행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044-201-4632

교통, # 관광, # 외국인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 ⊕ 추진배경 항공, 숙박 등의 예약 주기에 맞춰 철도 승차권 예매 조정으로 여행 및 일정 준비 편의성 제고
- ⊕ 주요내용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을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
- ⊕ 기대효과 항공·숙박시설 등은 보통 이용일 기준 약 2개월 전에 예매가 이뤄지는 반면, 철도는 1개월 전부터만 예매가 가능하여 이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철도 사전 예매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해 다른 분야의 예매 일정과 맞추어 이용객 편의 증진
- ⊕ 시행일 2026년 10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철도 승차권을 예매하는 회원, 비회원 등 모든 내·외국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가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별도의 신청이나 추가 절차 없이 기존 철도 승차권 예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발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예매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숙소·항공과 동일 2개월 주기로 여행 일정 통합 계획 가능, 철도 관광 활성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044-201-3973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 : 042-615-3969

외국인 단체 대상 행사를 기획하는 이○○씨는 철도 여행시 1개월 전이나 예매가 가능해서 행사 준비 기간에 비하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철도 승차권 확보가 늘 고민이었다. 이제는 행사 기획 단계에서 항공권과 철도 승차권을 2개월 전부터 함께 확보할 수 있어 대관 업무와 행사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다.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이 면제됩니다.

-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044-201-4632

#재승차, #광역전철, #코레일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 ⊕ **추진배경** 수도권 전철 13개 운송기관 중 서울시 산하기관만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제도 시행(2023년 7월~)으로 고객 혼란 및 불편 야기
- ⊕ **주요내용** 수도권 전철 중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도 동일한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제도 시행
- ⊕ **기대효과** 전철 이용 도중 추가 부담없이 급한 용무를 해결할 수 있어 교통비 절감과 일관된 서비스 시행으로 이용자 편의성 확대
- ⊕ **시행일** 2026년 6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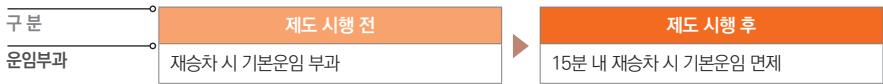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도권 광역전철 이용 고객(코레일 운영구간*)
- * 1호선(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 3호선(일산선), 4호선(과천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경강선, 경춘선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코레일 운영구간 내 수도권 광역전철 이용 도중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별도의 신청이나 추가 절차 없이 광역전철 하차 후 15분 승차 태그 시 기본운임 면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전철 이용 도중 추가 부담없이 급한 용무를 해결할 수 있어 교통비 절감과 일관된 서비스 시행으로 이용자 편의성 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044-201-3973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 : 02-3149-3270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직장인 김OO 씨는 갑작스런 배달로 급하게 개찰구 밖 확장실을 이용하고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또 지불해야 했다. 2026년 6월부터는 급한 용무를 해결하고자 개찰구를 나가서 15분 내에 재승차하는 경우에는 기본운임이 면제되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 부담 없이 광역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민 및 여객의 안정적인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예비선이 1척에서 3척으로 늘어납니다.

- 연안여객선 예비선 2척 신규 건조·투입 운영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51-773-5737

연안여객선, # 예비선, # 해상교통

연안여객선 예비선 2척 신규 건조·투입 운영

- ⊕ **추진배경** 선박검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연안여객선 결항에 대비하여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선 확보·운영
- ⊕ **주요내용**
 -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시민 및 여객
 - (운영) 예비선 1척을 6개 항로에 운영 중이고, 신규 건조 예비선 2척을 추가 투입하여 예비선 운영 항로 확대
- ⊕ **기대효과** 도서지역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선박·이용객 안전 도모
- ⊕ **시행일** 2026년 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 및 여객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예비선 2척 신규 건조·투입, 연안여객선 선박검사·수리 등으로 결항 예상 시 신속한 예비선 투입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국가보조항로 도서지역 주민 및 여객	연안여객항로 도서지역 주민 및 여객
지원	예비선 : 1척 • 평균 선령 : 23.59년 • 예비선 투입 항로 : 6개 항로	예비선 : 3척 • 평균 선령 : 7.86년 • 예비선 투입 항로 : 연안여객선 99개항로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규 건조 예비선 2척이 2026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투입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예비선 3척 체제로 결항 발생 시 더 빠른 대체선 투입 가능, 평균 선령 대폭 감소로 최신 선박으로 안전성 강화
- 연안여객 99개 전체 항로 커버하여 어느 섬이든 결항 대응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51-773-5737

전남 외딴 섬에 거주하는 박○○씨는 겨울철 선박 수리로 결항이 잦아 병원 방문이나 본토 나들이를 수일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런 날은 섬에서 끔찍없이 갇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예비선이 3척으로 늘어나고 기존 6개 항로에서 99개 전체 항로로 확대됨에 따라 '예전에는 내가 사는 항로에 예비선이 안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어디든 예비선이 온다고 하니 훨씬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자동화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배포, 스마트 항만건설 표준을 세웁니다.

-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51-773-5951, 5952

자동화 항만, # 항만운영사, # 기술기준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 **추진배경** 글로벌 완전 자동화 항만 확산 추세에 대응하고, 해외 기술자료에 의존하던 국내 자동화 항만 설계의 기술 자립 및 표준화를 위해 추진
- ⊕ **주요내용** 국내 항만 여건에 최적화된 ‘자동화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동화 장비의 배치부터 운영 시 주의할 점까지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지침 제공
- ⊕ **기대효과** 선진항만과의 기술격차 해소 및 국내 항만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기존 수동 항만 대비 운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 ⊕ **시행일** 2026년 12월 31일

Q. 누가 활용할 수 있나요?

-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를 계획 중인 운영사 및 건설관계자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정보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Q. 무엇이 제공되나요?

- 자동화 장비 배치 활용을 위한 세부 설계 기준과 현장 적용시 필수 체크포인트 포함한 설계기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기술수준	자동화 개념 설명 및 단순 예시 위주	장비 배치·활용 등 상세 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제공
현장 적용성	해외 사례 및 실무자 개인 경험에 의존	설계 시 필수 체크포인트 및 실무 검토 기준 제시
접근방법	공식화된 국내 기술자료 부재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

Q.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항만기술기준정보시스템 (<https://kpcs.portcals.go.kr>)에 접속,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즉시 활용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외 의존도를 탈피하고, 축적된 국가 R&D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선진 항만과의 기술격차 해소
- 국내 항만 운영인과 기술인의 실무 전문성 강화, 생산성 향상으로 물류 비용 절감,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51-773-5951, 5952
- 한국항만협회 항만기술기준본부: 02-2165-0087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신항 서컨 7부두를 조성할 당시에는 국내 기술자료가 부족하여 해외 자료(PIANC, 영국항만협회 등)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하는 했지만, 그간 수행된 국가 R&D 성과를 집약하여 국내 기술 환경에 최적화된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우리 기술로 스마트 항만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항만 설계사인 A사는 ‘현장 실무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국내 항만 운영자와 기술인들이 즉시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기술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민과 기업에게, 북항이 해양비즈니스와 레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활성화 -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 051-604-3110

재개발, # 공공, # 레저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활성화

- ⊕ 추진배경 최근 글로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부지 민간분양 및 상부시설 건축이 다소 저조
- ⊕ 주요내용
 - (공공-비즈니스 활성화)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수립
 - (문화-레저 활성화) 상부콘텐츠 조성계획 수립
- ⊕ 기대효과 해양관련 기관 직접화로 북항 해양 비즈니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다양한 해양 레저, 문화콘텐츠 도입으로 북항 유입인구 증가 및 원도심 경제활성화 기여
- ⊕ 시 행 일 2026년 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산항 북항 입주를 희망하는 해양·항만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북항을 방문할 부산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대상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업의 산학연 클러스터 내 네트워킹과 비즈니스 시너지 확보 및 시민의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마리나, 오페라하우스 등 쾌적한 여가공간 향유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민간분양 저조로 인한 유휴부지 발생	공공기관 클러스터 조성 레저시설 조성에 따른 시민혜택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양비즈니스 핵심 거점 확보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해양레저 관광객 유입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051-604-3110
- 부산항만공사(BPA) 항만재생사업단: 051-999-3170

부산 원도심에 사는 김○○씨는 북항 재개발 구역을 지나며 '딩 빈 부지가 언제쯤 바뀔까' 생각했다. 2026년부터 공공이 선도하는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마리나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서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시민에게 개방된다는 소식에 '우리 동네에 이런 공간이 생긴다니, 주말에 바다를 즐길 곳이 생기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해양 IT 기업을 운영하는 박○○씨는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가능성을 알고 '부산에서 글로벌 해양 기업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거점이 생긴다면 사육을 부산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가 금지됩니다.

-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08

알선광고, # 유상운전교육, # 불법도로연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 ⊕ **추진배경** 처벌 규정 부재로 인해 온오프라인상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가 다수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
- ⊕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 따른 학원 무등록자의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 및 처벌
- ⊕ **기대효과**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교육시장 정상화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요?

- 운전면허를 취득받고 운전을 막 시작한 학생, 사회초년생을 포함하여 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성인 대상

Q. 금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알선·광고 금지: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의 알선·광고 행위 자체를 금지-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알선·광고 행위자 처벌 불가	알선·광고 행위자 처벌
지급액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경찰청 홈페이지(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실→운전면허)에서 학원별 교육성과와 주소·연락처를 확인
- 운전학원 홈페이지 하단 등에 경찰청 부여 학원 코드(예: 11-089)로 합법 여부 확인
- 합법 운전교육 매칭 온라인 플랫폼사이트·앱에서도 등록된 학원명, 주소 등을 손쉽게 조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보험 미적용 불법 교육 피해 방지로 초보운전자 안전 확보
- 불법 업체 저가 경쟁·허위 광고 근절하여 소비자 피해 감소, 준법문화 확산 및 공공 정책의 신뢰도 향상
- 등록 운전학원 시장 정상화로 양질의 운전교육 환경 조성, 교육시장 정상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08

운전면허를 만 지 3개월 된 최○○씨는 SNS에서 '저렴한 방문 운전 교육'이라는 광고를 보고 예약했다가 교육 중 접촉 사고가 났다. 보험 처리를 하려다 강사가 무등록 업자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런 불법 알선·광고 자체가 처벌된다는 것을 보고 '알선하는 것도 처벌된다니 이제 불법 광고가 눈에 띄게 줄 것 같다. 처음부터 등록 학원을 찾아볼 걸 후회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기존 제1호지구(산단 1·2·5·6공구)에 더해 제2호지구(산단 3·7·8공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 ☎ 063-733-1086

새만금, # 투자진흥지구, # 법인세, # 소득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 ⊕ **추진배경** 제1호 투자진흥지구가 대부분 분양되어, 최근 매립하여 기업입주가 가능한 3·7·8공구를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 필요
- ⊕ **주요내용**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 창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이 업종에 따라 5~20억원 이상 투자 및 10~3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 수 요건 충족 시 세제 감면 혜택 제공
*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 ⊕ **기대효과**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들의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 ⊕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6.28.) 및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2026.4.15.) 이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지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사업장(기존 사업장 이전 제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 업종에 따라 5~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30명 이상의 고용 필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지역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8.1km ²)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8.1km ²) + (확대) 3·7·8공구(6.0km ²)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창업일 또는 사업장 신설일, 세법상(소득법 제121조의17) 업종별 투자금액 및 상시근로자수 요건 충족여부 확인
- 2단계: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또는 군산세무서 방문 신청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세제 혜택 전폭적 지원: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3년 100% + 2년간 50%), 투자 진입장벽 완화 및 비용부담 획기적 경감
- 새만금개발 촉진 기대: 새만금 국가산단 내 지속가능한 기업 투자여건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 063-733-1086
- 군산세무서 법인팀: 063-470-3401, 3402
- 국세상담센터: 126

*참고: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보도자료) “제33차 새만금위원회,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심의-의결(202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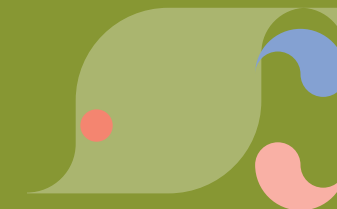
타지역에서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이○○씨는 공장 부지 비용과 세금 부담으로 사업 확장이 막혔다. 새만금 제2호 투자진흥지구 지정 소식을 접한 이씨는 세무사와 함께 계산해보니 새만금에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연간 5억원 수준인 법인세가 3년 100%+2년 50% 감면으로 5년간 총 20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씨는 이에 따라 타지역보다 새만금에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01.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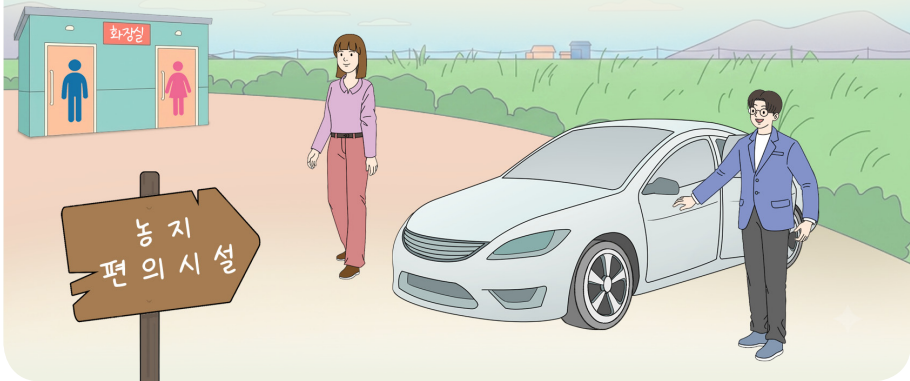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91

농지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에 농업인화장실 및 주차공간이 추가됩니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시행일 2026년 8월(예정)

- 화장실·주차공간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설치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0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 192

베트남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이 편리해지도록 현지 물류·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시행일 2026년 7월(예정, 하노이·호치민 각 1개소)

-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초보 수출기업에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0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 193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가에 40kg 포대당 6만 원의 중간정산금이 지급됩니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시행일 2026년 9월 이후 (공공비축미 매입 시점)

• 수확기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중간정산금을 상향 지급합니다.



04.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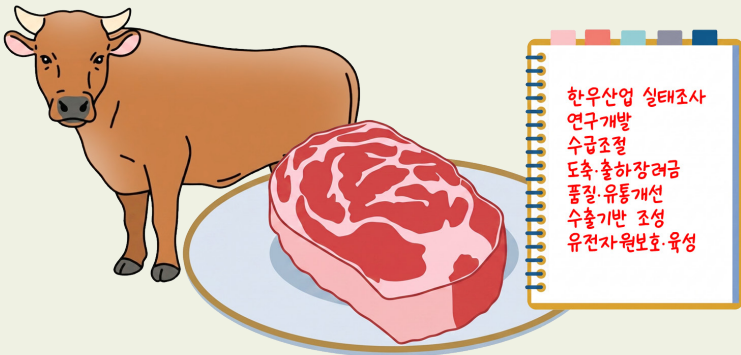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94

한우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법이 생겼습니다. 수급 안정·농가 소득 보호·가격안정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일 2026년 7월 23일

• 국가와 지방정부가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05.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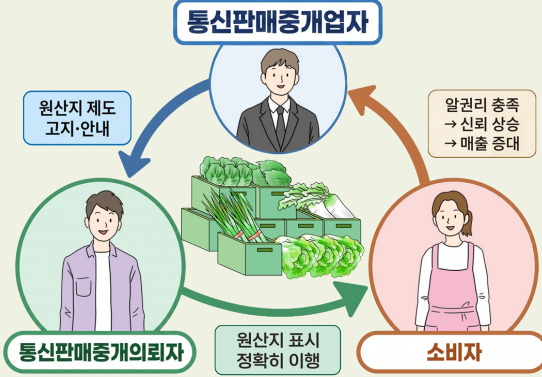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195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농수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 원산지 표시 제도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합니다.



06.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 203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낮게 나와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선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지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에 농업인화장실 및 주차공간이 추가됩니다.

-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4

농지, # 농업인화장실, # 농업인주차공간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 ⊕ **추진배경**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 증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화장실·주차공간과 같은 편의시설의 농지 설치 필요성 증가
- ⊕ **주요내용** 기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설치 가능했던 화장실·주차공간을 별도의 전용허가없이 농지 위 설치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 ⊕ **기대효과** 농작업 편의 증대 및 농업인 권익 향상
- ⊕ **시행일** 2026년 8월(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농업인 화장실·주차공간	농지전용허가 대상	농지전용 허가없이 농지 위 설치 허용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8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설치 요건 확인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수백만 농업인 농작업 중 화장실 불편 해소, 농지전용허가 절차 생략으로 시간·비용 절감 등 농작업 여건 실질적 개선
- 트랙터·농기계 등 주차공간 확보 규정 마련으로 농업 규모화·현대화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4

경기도 이천에서 채소 농사를 하는 이○○씨는 하루8시간 이상 밭에서 일하지만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포기하고 있었다. 2026년 8월부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바로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 농민이 밭에서 화장실 하나 짓는 게 이렇게 어려웠다'며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트남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이 편리해지도록 현지 물류·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044-201-2174, 2180

K-푸드 수출, # 베트남, # 물류·마케팅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 ⊕ **추진배경** 베트남 대상 수출 물류 손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 물류 거점을 운영하여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지원
- ⊕ **주요내용**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법인 포함), 수입업체 (바이어)
 - (지급한도) 업체당 최대 90백만원
- ⊕ **기대효과** 수출기업의 베트남 현지 마케팅 지원 및 물류센터·운송지원을 통한 물류 효율화로 對베트남 수출확대 기대
- ⊕ **시행일** 2026년 7월 (예정, 하노이·호치민 각 1개소)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베트남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법인 포함) 및 수입업체 (바이어)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출 전 과정 지원 (V-Express사업)
 - 전년 베트남 수출실적 30만불 이하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법인 제외)에 대해 수출 준비부터 입점·시험판매까지 수출 손과정 일괄 지원 (업체별 3개 제품까지 신청 가능)
- 물류·마케팅 지원 (DC + Marketing)
 - 對베트남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베트남 수입업체 (바이어)에 대해 거점 물류센터 입고·출고·보관비 및 현지 마케팅 지원
 - * 한국 농식품을 수출하는 외식업체 (현지법인 포함) 등도 포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 내용	물류청고 및 콜드체인 이용료	통관부터 입출고, 보관, 운송, 마케팅 등 전 과정 지원
지원 대상	바이어, 수출업체 현지법인	수출업체(현지법인 포함), 바이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T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 DC-Marketing의 경우 바이어·수출업체 현지법인인 지사 이메일로 신청
- * aT 하노이지사(hanoi@at.or.kr), 호치민지사(atcenterhcmc@at.or.kr)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수출 초보 업체 수출 손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판로개척 기회 제공 및 수출 애로 해소 지원
- 對베트남 수출업체 대상 현지 물류(입·출고, 보관, 피킹·패킹, 포장, 라벨링 등), 마케팅 통합 지원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4, 2180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신시장개척부 : 061-931-0961, 0962

닭고기 수출 중소기업 대표 최○○씨는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고품질 신선식품에 대한 현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산 신선 닭고기의 수요가 많은 국가여서 수출에 관심이 많았다. 최 씨는 2026년 7월부터 DC(물류) + Marketing 사업을 통해 한국산 닭고기를 수출하게 되었고 제품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지 물류 전 과정 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 지원받아 수출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었다.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가에 40kg 포대당 6만 원의 중간정산금이 지급됩니다.

-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17

농업인, # 공공비축, # 쌀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 ⊕ **추진배경** 수확기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최근 산지쌀값 흐름,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간정산금 상향 결정
- ⊕ **주요내용**
 - (지급대상) 2026년산 공공비축미 출하 농업인
 - (지급금액) 6만 원/40kg(조곡 기준)
- ⊕ **기대효과** 기존 4만 원 지급 대비 50% 인상한 6만 원 지급으로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 지원
- ⊕ **시행일** 2026년 9월 이후 (공공비축미 매입 시점)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업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 6만 원/40kg 지급
- (지급시점) 공공비축미 구매 직후 순차 지급
- * 유의사항!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이 확정(12월 말)된 이후 지급되며, 중간정산금이 최종 매입가보다 높을 경우 초과 지급분 환수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급액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4만 원/40kg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6만 원/40kg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공공비축미 매입계약 체결
 - ① 리·통 공공비축매입협의회로부터 배정수량 확인
 - ② 지역농협과 2026년산 공공비축미 구매 계약 체결
- 2단계: 지정된 매입장소·일자에 본인이 생산한 벼를 공공비축미로 출하
- 3단계: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중간정산금 지급 여부 확인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9월 1일(공공비축미 매입 시점) 이후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최종 매입가 지급 이전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여 영농비, 부채 조기 상환 등에 활용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7

충남 당진에서 2ha 면적으로 쌀을 재배하는 김○○씨는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 수확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농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시기에 현금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며 “예전에는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메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부담이 한결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우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법이 생겼습니다. 수급 안정·농가 소득 보호·가격안정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2

한우, # 한우산업, # 법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 추진배경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안정 등
- ⊕ 주요내용
 - 한우산업 등의 정의, 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한우산업 실태조사, 연구개발,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품질·유통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유전자원 보호·육성 등 근거 마련
- ⊕ 기대효과 한우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호해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향상
- ⊕ 시행일 2026년 7월 23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우 농가, 관련 업체 및 소비자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내용)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한 수급·가격 안정, 농가 소득 보호, 유통 효율화, 소비자 가격 안정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법적 근거	-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추진, 수출기반 조성 등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한우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호해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향상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2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색

한우 100두를 키우는 농가를 30년째 운영하는 박○씨는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할 때마다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 불안했다. 2026년 7월 한우산업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에 의한 수급조절·출하장려금·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법이 생겼다는 게 국가가 한우 농가를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 같다. 자식한테도 이 일 이어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농수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276

원산지표시, #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 ⊕ **추진배경** 최근 배달앱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강화
- ⊕ **주요내용**
 - (의무대상)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고지
 - (고지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
- ⊕ **기대효과** 배달앱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원산지 표시 제도 위반 감소
- ⊕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 일반국민(소비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점 판매자) 플랫폼으로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아 오기·누락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을 사전에 방지 가능
- (일반국민(소비자)) 배달 음식·온라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투명한 원산지 정보 확인으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통신판매 중개업자	원산지 표시 관련 법적 고지 의무 없음 (판매자가 스스로 알아서 확인)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 고지 (미이행시 플랫폼에 과태료 부과)
통신판매 중개의뢰자	원산지 표시 제도를 몰라 의도치 않은 위반 발생	입점 시점부터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고지를 받아 법령 위반 사전 예방
소비자	배달앱 등에서 원산지 정보 누락/허위 기재로 인한 불안감 존재	플랫폼의 관리 강화로 정확하고, 투명한 원산지 정보 확인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플랫폼 시스템 정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 입점 계약 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약관, 공지사항, 팝업창 등을 통해 고지하는 시스템 구축
- 2단계(판매자 확인 및 등록): 입점업체(판매자)는 플랫폼이 고지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 표시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확인 후,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플랫폼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 강화, 소비자는 투명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받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미표시, 거짓표시 등) 감소
-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두터워지는 안심 비대면 소비 환경 정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76, 2277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153

배달앱으로 치킨을 판매하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 이○○씨는 플랫폼에 입점업체 신규 가입을 하였으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했다. 2026년 10월부터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 신규 가입 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생겨서 '이제 입점업체 신규 가입 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어 오기 및 누락 사항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됩니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2

임산부, # 친환경농산물, # 꾸러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 **추진배경** 임산부에게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
- ⊕ **주요내용**
 - (지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임산부
 - (지급금액)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 ⊕ **기대효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미래세대에 건강한 먹거리 제공
- ⊕ **시행일** 2026년 7월(잠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임산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했거나 사업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사람에 대해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온라인 주문) 제공
- 영양플러스사업(복지부) 또는 농식품바우처사업(농식품부)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중복신청 불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	임산부
지급액	-	지급액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또는 현재 임신 중 확인
- 2단계: 예코이몰 접속 후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3단계: '예코이몰' 회원가입 후 친환경농산물을 주문, 결제 시 주문금액의 80%는 지원받은 포인트 사용, 20%는 신청자 부담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을 통해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정책환경 조성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 수요처를 제공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도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임신 7개월에 접어들 이○○씨는 뱃 속 아이와 나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 싶었지만, 일반 농산물 보다 가격이 비싸서 구매를 망설였다. 2026년 7월부터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게 되어 '예코이몰'에서 유기농 채소를 주문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먹고 싶어도 가격이 부담이었는데, 이제 마음 편하게 고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 확대와 과정중심 인증제 전환을 위해 비의도적 오염 시 처분기준이 개선됩니다.

-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

#친환경농업, #비의도적오염, #과정중심인증제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 ⊕ **추진배경** 항공방제 증가에 따라 농약 흘날림 등으로 인근의 친환경 재배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되는 피해 발생
- ⊕ **주요내용** 인근 농가에 의한 농약 오염 방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농약이 검출된 경우 농약의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 ⊕ **기대효과** 과정중심 인증제 전환 및 불합리한 인증취소 피해 발생 예방
- ⊕ **시행일** 2026년 7월(잠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비의도적 오염 방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약이 검출된 경우 농약의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비의도적이더라도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시 : 1,2차 시정명령, 3차 인증취소,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 인증취소
 - (개정) 비의도적인 경우, 농약 검출량에 상관없이 1,2차 시정명령, 3차 인증취소(즉시 취소 없음)
- ※ 단, 의도적인 농약 사용 행위 등은 예외 없이 인증취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행정처분 기준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비의도적 농약 검출 → 인증취소	비의도적 농약 검출 → 1, 2차 시정명령, 3차 인증취소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출하농산물에 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농업인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조사하여 비의도적 오염의 경우 인증취소를 유예(2회)
 - 친환경 농업인은 영농일지, 농약구입 여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친환경농가의 잘못이 아닐 경우 인증을 유지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인근 관행농가의 항공방제 등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인증이 취소되는 등 부당한 피해 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054-429-4176

중남에서 10년째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최○씨는 인접 논에서 항공방제 후 바람이 불었고 출하한 쌀에서 농약이 소량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 손으로 농약을 뿌린 적이 없는데도 인증이 취소되었는데 2026년 7월부터 비의도적 오염임을 증빙하면 즉시 취소 없이 시정명령으로 처리됨에 따라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취소되는 일이 이제 없어진다. 마음 놓고 친환경 농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함께 생산한 가족은 공동생산자로 표기가 가능해집니다.

-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

#친환경농업, #공동생산, #친환경인증품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 ⊕ **추진배경** 친환경 인증품의 생산자 표시방법은 인증사업자만 표시가 가능하고 부부 등 공동생산자의 정보 기재시 규정에 위반
- ⊕ **주요내용** 인증 신청 시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며 공동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경우 함께 표시 가능
- ⊕ **기대효과** 부부 등 공동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 **시행일** 2026년 7월(잠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단위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자(배우자, 자녀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친환경 인증품에 인증사업자와 공동생산자의 성명 병기
- 단, 생계를 같이하며 공동으로 친환경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으로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사업자만 표기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사업자 외 영농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업인(가족에 한함)
내용	영농활동에 참여해도 인증품에 표시 불가	인증사업자와 함께 공동생산자 이름 표시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인증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공동으로 친환경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 해당 여부 확인
- 2단계: 기존 인증신청 서류(인증신청서·생산계획서 등), 주민등록등본 준비
- 3단계: 인증 신청(기존의 친환경 인증신청과 동일)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동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의 이름을 인증사업자와 함께 기입하여 공동생산자 권익을 보호하고,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 참여로 친환경농업 확산 지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054-429-4176

20년째 남편과 함께 유기농 채소를 재배해온 박○○씨 아내인 조○○씨는 모든 작업을 남편과 함께 하지만 인증품에는 항상 남편 이름만 적혀 있어서 불만이 있었다. '내가 만든 농산물인데 내 이름은 없다. 정식 농업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2026년 7월부터 공동생산자로 아내 이름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되자 조 씨는 '모정재에 우리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적힌 친환경 농산물을 팔 수 있게 된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농산업체의 소중한 핵심 기술, 맞춤형 기술보호 전략으로 튼튼하게 지켜드립니다.

-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2

중소기업, # 기술보호, # 디지털보안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 ⊕ **추진배경** 농식품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확보로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 ⊕ **주요내용**
 - (지급대상) 농림식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R&D 수행기업 우선 지원)
 - (지원금액) 총사업비 40백만원 내외
- ⊕ **기대효과** 중소·영세 농산업체 현장에 적합한 기술보호 대응전략 확보
- ⊕ **시행일** 2026년 7월(잠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농림식품 관련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농식품 R&D 과제 수행 및 기술인증 획득 등 핵심기술 보호가 시급한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자금·인력 부족으로 자체 기술보안 체계 구축이 어려운 농산업체로서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농식품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술보호 전문가 밀착 컨설팅, 디지털 보안 솔루션 지원 등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범위	기본적 역량진단 및 보호전략 마련	디지털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컨설팅 방식	1회성 현장인터뷰 및 진단	다회차 현장 밀착 지원 및 모의훈련 실시
투입 전문가	일반 경영 컨설턴트	변리사, IT 보안 전문가가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농림식품 분야 종사하는 중소기업 여부 확인
- 2단계: 상생누리플랫폼(www.wininnuri.or.kr)에서 온라인 접수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술탈취 예방: 외부 협력사, 퇴직자, 경쟁사 등에 의한 핵심기술(레시피, 공정값 등) 유출 사전에 방지 가능
- 법적 분쟁 시 든든한 방어력 확보: 분쟁 발생에 대비한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및 모의훈련을 통한 실천 대응 역량 확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2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획조정실 : 061-338-9716

전통 간장 레시피를 현대화한 농식품 스타트업 대표 이○○씨는 협력업체에 기술 자료를 공유했다가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2026년 7월 기술보호 컨설팅에 선발된 이 씨는 변리사와 IT 보안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레시피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디지털 보안솔루션을 구축해 주는 혜택을 받았다. '이제는 누가 우리 기술을 가져가도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생겼다'고 안도했다.

그린바이오산업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개설합니다.

-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44

그린바이오, # 계약학과, # 기업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 ⊕ **추진배경** 빠르게 성장하는 그린바이오 분야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필요
- ⊕ **주요내용**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개설로 IT, BT 분야 모두에 전문성을 가진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그린바이오 기업 재직 중인 학사학위 소지자
 - (지원내용) 교육생 등록금(국비 65%), 학과운영비(연 70백만원 이내, 100%),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연 50백만원 내외, 70%)
 - (지원규모) 1개 대학 약 20명/재교육형, 석사과정(2년 4학기제)
 - (교육내용) 그린바이오분야 이론·실습교육, 현장애로기술 해결과제
- ⊕ **기대효과** 그린바이오분야 융합형 실무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화 촉진 기대
- ⊕ **시행일** 2026년 9월

Q.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 개발이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 *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종자, 곤충, 미생물, 천연물, 동물용의약품, 식품소재
-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수리 기업 해당

Q.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그린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IT·BT 기술 통합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학과 석사과정 신규 개설
- * (운영) 경성국립대학교 / (대상) 그린바이오기업 재직 중인 학사학위 소지자 20명
- 교육생 등록금(국비 65%), 학과운영비(연 70백만원 이내, 100%),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연 50백만원 내외, 70%) 지원
- * 2026년은 가을학기 개설로 1학기 운영비 35백만원, 과제 수행비 17.5백만원 이내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내용	미운영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신설

* (참고) 식품기업 맞춤형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2020년 개설 후 10개 대학 참여 중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현장문제 해결이 연계되는 산학협력 모델 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44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451(계약학과 운영 사업시행 문의)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 “그린바이오산업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대학과 기업이 함께 키워 나갑니다(2026.4.16)”

경남의 중소 바이오 기업 A사에 10년째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김○○씨는 기존 연구 방식만으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신설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A사는 김 씨를 포함한 핵심 연구 인력 2명을 선발하여, 경성국립대학교의 ‘그린바이오 계약학과’에 지원시켰다. 김씨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쌓음으로써, 향후 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향후 그린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동물류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 044-201-2184

국가식품클러스터, # 공동물류, # 물류비절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시행

- ⊕ **추진배경**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개별 물류 계약으로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입주기업들 '통합화주'로 묶어 물류비 단가 인하
- ⊕ **주요내용**
 - (대상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공동물류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수거-집하-배송'으로 이어지는 공동물류 지원 및 택배비 할인
- ⊕ **기대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물류비(택배) 단가 인하 및 업무효율 향상
- ⊕ **시행일** 2026년 4월 20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공동물류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물류비용 절감) 입주기업들을 하나의 '통합화주'로 묶어 택배사와 협상함으로써 기존 대비 낮은 단가 적용
- (물류 효율화) 개별 수거 방식에서 벗어나 '수거-집하-배송'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공동물류 시스템 이용
- (운영 부담 완화) 기업의 배송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운영방식	입주기업별 개별 소량 계약	입주기업들 '통합화주'로 그룹화
물류비용	높은 택배 단가 부담	규모의 경제를 통한 할인 단가 적용
물류체계	개별 수거 및 배송(비효율)	'수거-집하-배송'의 공동물류 시스템 적용으로 물류 효율화 도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전화(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063-720-0574)로 신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044-201-2184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063-720-0574

*참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누리집(<https://www.foodpolis.kr>) 정보센터 > 보도자료 > "식품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공동물류 지원 사업 본격 가동"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물류 담당자 이○○씨는 이전에는 소량 물량이라는 이유로 택배사와 높은 단가로 계약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입주기업들과 함께 '통합화주'로 묶여 대량 물량 기준의 할인단가를 적용받아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서 기분이 좋았다. 또한 이 씨는 이전에는 택배 수거 후 배송 현황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운송장을 대조하거나 택배사에 문의해야 했으나, 이제는 시스템을 통해 '수거-집하-배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가 매우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럼피스킨병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되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완화됩니다.

-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5

럼피스킨병, # 가축전염병, # 제2종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 ⊕ **추진배경** 럼피스킨병은 폐사율이 낮고 백신접종 및 매개체 방제로 차단이 가능하므로 효과적인 방역 대응을 위해 방역조치 조정 필요
- ⊕ **주요내용**
 - 럼피스킨병의 가축전염병 분류가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조정됨에 따라, 전국 또는 시도 단위 긴급 방역조치가 발생농장 및 역학농장 중심으로 변경
 - 가축 이동제한도 발생농장과 역학농장 위주로 제한적으로 적용
- ⊕ **기대효과** 럼피스킨병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 부담을 완화
-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전국 소 사육농가
- (지원내용) 가축 이동제한 범위를 발생농장과 역학농장 위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가축시장 폐쇄조치 제외, 살처분 유예 등 방역조치 완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긴급방역조치	전국 또는 시도 단위 일시이동중지, 양성축 살처분 등 방역조치	발생농장 및 역학농장 중심으로 방역조치 및 양성축 살처분 유예
이동제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가축 이동제한	발생농장과 역학농장 위주로 가축 이동제한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금지	발생 및 인접 시도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 등 금지	발생 및 인접 시도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 등 금지 조치 미적용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럼피스킨병 발생농장과 역학농장 이외의 소 사육농가의 경우에는 방역조치 명령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비발생 농장은 가축의 이동제한이 해제되어 정상 가축 거래와 도축장 출하 가능
-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 금지 미적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5

경기도 ○○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씨는 한우 일부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고 송아지를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인접한 소 사육농가(5km 이내)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여 모든 거래가 취소되었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가축 거래 또는 도축장 출하를 할 수 없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간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한 전국 또는 시도 단위 방역조치로 역학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牛) 사육농장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2026년 10월 1일부터 럼피스킨병에 대한 방역조치가 발생농가 및 역학농가 중심으로 변경되어 역학적으로 관련이 없는 축산농가는 정상적으로 가축 거래 및 도축장 출하할 수 있게 되었다.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낮게 나와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51-773-5515-6

연근해어업, # 감척사업, # 폐업지원금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 ⊕ **추진배경** 기후변화 등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현 기준(평년수익액 3년분)으로는 폐업지원금 산출이 곤란하여 감척 포기 등 발생
- ⊕ **주요내용**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3조 개정(2026.3.10 공포, 2026.9.11 시행)
- ⊕ **기대효과** 어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
- ⊕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9월 11일 이후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기존 방식(평년수익액 3년분)으로 산정한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보다 낮은 감척 대상 어업인
- (지원내용)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 3년분)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보상 기준	평년수익액의 3년분	평년수익액의 3년분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 시, 그 차액 지원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신청서·어업허가증 등 지참하여 어선 등록지의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감척대상자로 선정되어 폐업지원금 산정 결과가 기준액 미만 시, 기준액으로 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어획량 급감으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어업인도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을 해수부령에서 정한 기준액까지 보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수부 어업정책과: 051-773-5515~5516 /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7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 「감척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촉진한다(2026.2.12.)」

30년째 어선을 운영해온 정○○씨는 어획량 급감으로 수익이 크게 줄었다. 감척을 결심했지만 평년 수익액이 낮아진 탓에 폐업지원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못 미치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어획이 줄어서 수익도 줄고 감척도 못 하는 이중고였는데, 이제는 기준액을 보장해줘서 마음 편하게 감척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식탁에 자주오르는 대중성 어종 5개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추가하여 촘촘하게 관리합니다.

-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 ☎ 051-773-5414

유통이력, # 수입수산물, # 대중성 어종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 ⊕ **추진배경**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대중성 어종(냉동 고등어, 냉동 오징어 등)이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품목에서 제외되어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가 어려움
- ⊕ **주요내용**
 - (정책대상)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 (이해관계인) 수입수산물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
- ⊕ **기대효과** 수입산 대중성 어종의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및 공정거래 유도
- ⊕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입수산물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 전체

Q.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는 양도후 5일 이내 유통이력(양수업체, 거래량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정 품목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	▶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5개 품목 추가
지정 기한	2023.8.28 ~ 2026.7.31	2026.6.29~2029.4.30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품목 확인
 - 양도 후 5일 이내 전산 신고 또는 서면신고서 제출
- 2단계: 정부에서 최종 판매이전까지 유통이력 전 단계 추적·관리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나, 수입산 비중이 높은 대중성 어종에 대한 수입·유통 전 단계를 추적하여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전국민적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대중성 어종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위해 방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 051-773-5414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 김○○씨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고등어·오징어의 위생·안전에 관심이 많았다. 작년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품목은 뱀장어, 냉동 조기 등 22개 품목을 관리하였으나 2026년 6월 29일부터 냉동 고등어·오징어도 유통이력 수입수산물로 지정되었다. 정부에서 수입·유통 전 단계를 추적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 식품 수출업소 등록을 일괄 처리하여 수출 기업의 행정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중국 수출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043-719-2027

K-푸드, # 수출지원, # 중국 수출

중국 수출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 ⊕ **추진배경**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직접 중국에 공장등록을 해야하는데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려움 발생
- ⊕ **주요내용**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2026.1.5 체결)에 따라 식약처가 중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영업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출업체 일괄 등록
- ⊕ **기대효과** 업체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나, 일괄 등록하는 경우 2주 정도로 대폭 단축 예상
- ⊕ **시행일** 2026년 8월중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제조 관련 사업자*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식약처에서 영업등록, 허가 사실관계 등 확인 후 수출업소 등록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對중국 식품수출업소	영업자가 직접 수출업소 등록	식약처가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괄등록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수출업소 등 등록 신청 창구신설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 → 중국 식품업체 수출등록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27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보도자료 > “식약처, 중국 수출 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등록 일괄추진, K-푸드 수출지원 강화(2026.1.5.)”

가공식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배○○씨는 중국 수출을 위해 수출업소 등록에만 2~3개월이 걸린다는 말에 막막했다. 2026년 8월부터 식약처에서 수출업소 등록을 일괄 대행함에 따라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2주 만에 등록 완료 통보를 받았다. ‘직접 했으면 몇 달 걸렸을 일을 2주 만에 해결했다.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이 현실이 됐다’며 기뻐했다.

가축분뇨발효액의 주성분 최소함유량을 0.3%에서 0.2%로 완화하였습니다.

-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063-238-0828

농·축산업인, # 비료, # 가축분뇨발효액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 ⊕ **추진배경** 가축분뇨발효액의 비료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주성분 함량 기준 완화 필요
- ⊕ **주요내용** '가축분뇨발효액'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을 0.3%에서 0.2%로 변경
- ⊕ **기대효과** 농업과 축산의 자원 순환(경축순환) 및 화학비료 대체재 공급 확대로 비료비용 절감 및 탄소 저감에 기여
- ⊕ **시행일** 2026년 5월 12일(즉시 시행)

Q.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농작물 재배농가) 화학비료 가격이 상승하여도 이를 대체할 가축분뇨발효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경영비 절감 가능
- (축산농가, 자원화시설 등) 기존에는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기준 미달로 폐기처리 해야 했던 가축분뇨발효액도 비료로 활용 가능
- (일반국민) 정화방류 등으로 처리하던 가축분뇨발효액의 자원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가축분뇨발효액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2%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가축분뇨발효액은 관비(관수+비료)로 상시 공급할 수 있어 화학비료 사용량의 60~70% 이상 감소 가능(2026년 농사로 영농기술)
- 폐기되는 가축분뇨 785만 톤 중 일부를 자원화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063-238-0828)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보도자료) 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완화 완료 “비료 공급 안정과 자원순환 앞당긴다(2026.5.14.)”

한우 200두를 키우는 이○○씨는 가축분뇨발효액을 비료로 쓰고 싶었지만 주성분 합계가 0.3%에 조금 못 미쳐 매번 폐기처리해야 했다. 처리 비용도 아까웠고 자원을 버린다는 게 항상 안타까웠다. 그러나 기준이 0.2%로 완화됨에 따라 '이제 우리 농장에서 나온 분뇨발효액을 인근 논밭에 비료로 쓸 수 있게 됐다. 화학비료도 덜 쓰고 처리비도 아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고령농업인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 063-238-1037

농업인, # 온열질환, # 폭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 ⊕ **추진배경** 야외 농작업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고령 농업인은 온열질환에 취약하며, 사망 위험이 높음(체온조절 기능 저하, 초기대응 미흡 등)
- ⊕ **주요내용**
 - (현장밀착지원) 선도농업인을 예방요원(시군당 8명 이상)으로 선발, 고령 농업인 등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폭염 위험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 수칙을 안내
 - (예방물품보급) 폭염 알림 배지, 아이스 목밴드, 쿨토시, 냉각 조끼, 응급 구급 키트 등 폭염 대비 예방 용품 지원
- ⊕ **기대효과**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으로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
- ⊕ **시행일** 2026년 6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91개 시·군(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농업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장밀착 안전관리 및 예방용품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내용	정보 전달, 주의 당부 중심의 교육 홍보 • 리플릿 등을 활용한 일반적 예방 수칙 안내	현장 밀착형 능동적 안전 지원 •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고령농업인 등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폭염 위험노출 점검에 따른 맞춤형 예방수칙안내·용품 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시행 지역인 9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안전업무 담당부서)에 신청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여름철 폭염 중점 관리기간(2026년 6~8월) 동안 온열질환 예방 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 : 온열질환 예방요원의 안전관리를 통해 농업인 스스로 폭염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 및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사망 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063-238-1037)
- 각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안전업무 담당 부서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본격 추진...발대식 개최(2026.5.18.)”

77세의 박○○씨는 여름철 혼자 논을 관리하다 몇 년 전 폭염에 쓰러진 경험이 있다. 그 이후로 가족들이 매년 여름이면 걱정을 놓지 못했다. 2026년 6월부터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박씨의 농가를 직접 방문해 폭염 위험 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였다. ‘누군가 직접 와서 관찮은지 확인해준다는 게 마음에 큰 위안이 된다. 농사일 그만두려고 하던 자식들도 이제 좀 안심하겠다’ 라고 박 씨는 말했다.

치유농업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를 첫 시행합니다.

-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 063-238-1025

#치유농업, #1급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 ⊕ **추진배경** 고도로 숙련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대국민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을 향상
- ⊕ **주요내용** 1급 치유농업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역량에 대한 자격시험
- ⊕ **기대효과**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돌봄비용 절감
- ⊕ **시행일** 2026년 9월(1차), 11월(2차)

Q. 누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 2급 자격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농업, 보건, 복지 등) 경력·학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관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Q.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어디인가요?

- 수도권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충청권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라권 (전주기전대학), 경상권 (경상국립대학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1급 제도 도입 전	1급 제도 시행 후 (2026년~)
자격체계	2급 치유농업사 단일 자격 운영	1급-2급 국가전문자격 체계 완성
양성기관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운영(4개소)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운영(23개소)
전문분야	치유농업서비스 실무 및 운영지원	정신건강 및 재활 등 심화, 경영·관리 지원

Q. 어떻게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나요?

- 1단계(교육이수): 지정된 1급 양성기관에서 124시간(이론 60, 실습 64)의 교육과정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2단계(자격시험): 「치유농업ON」시스템에서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1차·2차 시험에 최종 합격 시 국가전문자격증을 발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고, 어디서 정보를 찾을 수 있나요?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063-238-1025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치유농업지원센터: 063-919-1365
- 치유농업 정보제공 포털인 "치유농업ON"을 통해 관련 정보수집, 시험일정 등을 확인 가능 (6월 공고 예정)

○○원예치료센터 김○○ 대표는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후 '노인복지관 등 시설에서 진행하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농장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참여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운영소득 또한 20%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비료 비용 절감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축분 퇴비 처방서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물환경과 ☎ 063-238-2464

흙도람, # 가축분 퇴비, # 비료사용 처방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 ⊕ **추진배경** 비료가격 인상 등 비료수급에 대한 우려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 퇴비의 적정 활용을 위한 정보 요구가 급증
- ⊕ **주요내용**
 - (적용대상)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려는 농업인
 - ① 표준 비료사용량에 화학비료 대체 퇴비량 자동 산정(「흙도람」)
 - ② 인근 대표 필지 분석값으로 퇴비량 처방 가능
 - ③ 자가퇴비 성분량 분석으로 정밀한 퇴비 처방 가능
 - (분석비용) 인근 시군농업기술센터 이용시 무료
- ⊕ **기대효과** 퇴비 활용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해 화학비료 의존도 감소, 농가 비료비 절감, 가축분뇨 자원 활용 촉진
- ⊕ **시행일** 2026년 7월부터 개선 사항별 순차적 시행

Q. 누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요?

-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사용하려는 모든 농업인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작물명, 재배면적으로 비료표준사용량 기준 퇴비량 확인)
「흙도람(soil.rda.go.kr)」에서 '작물별 비료표준사용량 처방'을 클릭해서 작물명, 재배면적을 입력 후 퇴비처방량을 확인
- (토양검정(흙 분석)하여 정밀한 퇴비 처방: 2가지 방법 중 선택)
 - ① 인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시료를 의뢰하여 퇴비량 처방 받기
 - ② 농가가 경작하는 필지에 토양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인근 대표필지 평균값을 활용해 처방 받기
- (자가퇴비 분석하여 퇴비량 확인)
농가가 자가 제조한 퇴비의 시료를 시군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자가퇴비 성분함량으로 맞춤 퇴비처방서 발급 받기
* 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분석이 가능한 곳에 한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사용 기준 화학비료만 처방 • 토양검정(흙 분석) 값 입력 시 퇴비처방 • 퇴비 평균 성분함량으로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명, 재배면적 입력시 퇴비량 처방(신설) • 인근 대표필지 평균값으로 퇴비 처방 • 농가 자가퇴비 성분함량 입력하여 처방(확대)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관행으로 과도하게 사용한 퇴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농가경영비 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
* 배의 경우, 10a 당 질소 2.5kg, 인산 4.5kg, 칼리 3.2kg이 절감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물환경과: 063-238-2464
- 내 땅이 속한 시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참고: 흙도람(soil.rda.go.kr)

경북 안동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 농업인(62세)은 올해 화학비료값이 크게 올라 영농비 부담이 커졌다. 퇴비를 활용해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싶었지만 매년 토양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기가 번거로웠다. 마침 2026년 하반기부터 인근 대표필지 평균값을 이용해서 퇴비 처방량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흙도람'을 통해 작물명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화학비료 대체 퇴비량까지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다.

원예작물 수출 능가 및 산업체를 위한 「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 063-238-6520

신선농산물, # CA 컨테이너, # 선박수출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 ⊕ **추진배경** 신선농산물 선박수출 확대에 대응하여 현장 맞춤형 품질관리 및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통합 플랫폼 필요
- ⊕ **주요내용** 「원예작물 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을 통한 최적 조건 검색 프로그램 구축
수출품목 데이터베이스(DB) 확보 및 공정별 품질관리 콘텐츠 제공
※ 대상작물 : 딸기, 참외 등 수출품목 20여 종
- ⊕ **기대효과** 수출기술 확보를 통한 수출국 확대 및 선박수송 품질 유지기간 연장
- ⊕ **시행일** 2026년 6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선농산물을 CA 컨테이너(선박)로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 수출업체 및 물류 관계자 누구나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신선농산물 선박 수출을 준비하는 농가 및 유통업체
- 선박 수출 관련 데이터 기반 정보제공으로 원하는 수출 시기, 국가, 품목, 수송기간에 맞춰 단일 및 혼합품목의 CA 컨테이너 최적조건(온·습도, O₂, CO₂ 등)을 즉시 검색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정보 제공	산발적인 수출 정보에 의존 및 혼합 품목의 선박수출 조건 파악 어려움	작물 DB 기반의 최적조건, 혼적 가능 여부 및 적재 요령 정보 원스톱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접속): 「원예작물 CA 수출·품질관리」 공식 누리집 접속(www.nihhs.go.kr/caContainer)
- 2단계(검색): 메뉴(수출시기, 수출국, 품목, 수송기간) 선택
- 3단계(확인/적용): 도출된 품목별 최적 CA 조건과 혼적 조건, 적재 순서 정보를 확인하여 실제 선박 수출 공정에 바로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물류비 절감: 비싼 항공수송 대신 저렴한 비용의 선박수송 확대
- 수출 경쟁력: 체계적 환경관리로 클레임 감소 및 원거리 수출국 개척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063-238-6520

H사 수출팀장 엄○○씨는 딸기·포도 등 다품목을 소량씩 선박으로 수출하고 싶었지만 CA 컨테이너 수송 조건 정보가 부족해 혼합선적이 가능한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품목마다 온도·산소 농도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섞어 실어야 할지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2026년 6월 관련 누리집이 개설되면서 수출시기와 품목을 입력하면 혼합선적 가능 여부와 권고 적재 순서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생산자 단체와 사전 협의가 훨씬 쉬워졌고 클레임 걱정 없이 장거리 수출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시민의 산촌체류 기회 확대 및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증진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

산림청 산지정책과 ☎ 042-481-4123

산촌체류, # 지역균형, # 임업인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 ⊕ **추진배경** 산촌체험·귀산촌에 대한 도시민 관심 증가, 원거리 거주 산주의 안정적 산림관리 여건 마련을 위해 산지 내 산촌체험 등이 가능한 임시숙소 시설의 설치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산림기본법」상 산촌지역 내 본인 소유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통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시설* 설치 허용
* 부지면적 100㎡ 미만, 쉼터 시설면적 33㎡ 이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횡수만큼 연장 가능,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는 입지가 제한
- ⊕ **기대효과**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지역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 ⊕ **시행일** 2026년 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산촌체류에 관심있는 도시민, 원거리에 거주하는 임업인 등 본인 산지 소유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도시민	귀산촌 전 산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부족	임시숙소 마련으로 산촌체류 기회 확대
원거리 임업인	산지 소재지 내 거주자 문제로 산림경영 및 관리 어려움	산지 소재지 내 체류 가능한 임시숙소 마련으로 산림경영 및 관리 효율성 증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준비): 본인 소유 산지가 산촌체류형쉼터 설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구비서류 준비
- 본인 소유 산지가 산촌지역 및 재해발생 우려지역(산사태취약지역 등) 해당 여부를 확인 등 산촌체류형쉼터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한 다음 산지일시사용신고 구비서류 등 준비
- 2단계(신청):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가능
- 산지일시사용신고: 온라인(산e랑) 신청 가능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스템으로 신청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온라인(세움터) 신청 또는 방문신청 가능
*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스템 또는 방문 신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림청 대표전화 : 1588-3249
- 산림청 산지정책과 : 042-481-4123

서울에 거주하는 이○○씨는 강원도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귀산촌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 '직접 살아보아야 하는데 미리 체험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2026년 7월부터 본인 소유 산지에 33㎡ 이하 임시숙소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이○○씨는 간단한 쉼터를 짓고 주말마다 산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귀산촌 준비를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에 사는 임업인 박○○씨는 충북에 위치한 산지를 관리하기 위해 내려갈 때 마다 휴식공간 부재, 숙소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다. 박○○씨는 '이제 산을 관리하러 갈 때마다 숙소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산촌체류형 쉼터를 이용해 산림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겠다'며 제도 개선을 반겼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 042-481-1242

임업직불금, # 의무준수사항, # 마을공동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 ⊕ **추진배경**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의무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하고 있어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발생
- ⊕ **주요내용**
 - 지급대상자 중 의무준수사항(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 이행 대상 의무준수사항(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 미이행자
 - (지원금액) 임업직불금 지급금액의 10% 감액 제외
- ⊕ **기대효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 삭제)를 통한 임업인 소득 지원 강화
- ⊕ **시행일** 2026년 5월 19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2019.4.~2022.9.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서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종사(임산물생산업·육림업),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임산물생산업) 등 요건 해당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 미이행 시 직불금 지급금액 10% 감액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준수사항에서 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을 삭제하여 미이행 시에도 직불금 지급금액 감액 제외
지급액	직불금 지급금액 10% 감액	직불금 지급금액 감액 없음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대상확인):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2019.4.1.~2022.9.30.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를 보유한 임업인 대상으로 혜택 적용
- 2단계(혜택적용): 의무준수사항에서 '공동체 활동' 제외
 - 2026년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2026년 3~4월) 내 접수된 건 중 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 미이행 시에도 지급금액에서 10% 감액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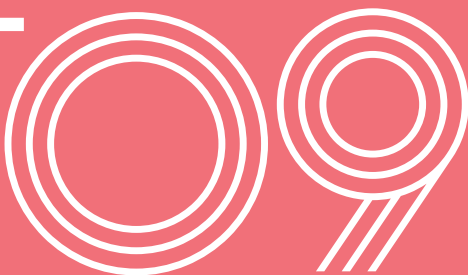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042-481-1242 / 산림청 임업직불금 콜센터: 1588-3249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인 임업인 김○○씨는 그간 고령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웠던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행하지 못해 작년까지 직불금 1,000만원 중 100만원(10%)이 감액되어 900만원만 수령했다. 올해부터는 의무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활동이 제외되어 감액 없이 1,0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 씨는 '임지 관리를 위한 자재 구입비·비료비 등을 추가 지원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하면서 '고령이라 활동하기 힘든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항상 억울했는데, 이제 그 억울함이 해소됐다'고 전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방·병무



01.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 215

군인의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시행일 2026년 8월 4일

• 간부로서의 군 복무를 장려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1,200만원 일시금

장교

학군사관 후보생

학사사관 후보생



1,000만원 일시금

부사관

현역부사관

민간 부사관

학군부사관 후보생

임기제 부사관 (4년복무회정자)

군인의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

국방부 인력정책과 ☎ 02-748-5143

단기복무장려금, # 장려금, # 간부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간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간부로서의 군 복무를 장려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필요
- ⊕ **주요내용**
 - (기존) 장교는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재학 중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사관은 현역복무 경력이 있는 일부 부사관에게만 장려수당을 지급
 - (개선) 장교는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부사관의 장려수당은 제도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으로 통합하면서 민간부사관과 학군부사관후보생(RNTC)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
- ⊕ **시행일** 2026년 8월 4일
* 관련 법률(군인사법) 공포: 2026년 2월 3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교) 학군사관후보생(ROTC) 또는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
- (부사관) 단기복무부사관(4년 복무)으로 확정된 사람
※ 2026년 1월 1일 이후 현역부사관, 민간부사관, 학군부사관후보생(RNTC)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교) 1,200만원 일시금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대학교 3학년에, 학사사관후보생은 재학 중 선발된 경우 대학교 4학년에, 졸업 후 선발된 경우 장교 양성교육 과정 시 지급
- (부사관) 1,000만원 일시금으로, 현역부사관 및 민간부사관은 양성교육 과정 시, 학군부사관후보생(RNTC)은 입영 시, 임기제부사관은 4년 복무 확정 후 3개월 이내 지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장교) • 학군사관후보생 • 학사사관후보생(재학생) (부사관) • 현역부사관 • 임기제부사관(입관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 확정자)	(장교) • 학군사관후보생 • 학사사관후보생(재학생, 졸업생) (부사관) • 현역부사관 • 임기제부사관(4년 복무 확정자) • 민간부사관 • 학군부사관후보생
제도	장교는 단기복무 장려금, 부사관은 단기복무 장려수당으로 각각 운영	장교·부사관 모두 장려금으로 통합운영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선발 → (2단계) 각군 담당자가 선발 명부 등 확인 후,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안내 → (3단계) 보증보험 가입 후, 각군 담당자가 입관 유형별 지급시기에 맞추어 개인계좌에 일시금 입금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방부 인력정책과 : 02-748-5132, 5143 / 육군본부 획득정책과 : 042-550-1157
해군본부 인재획득과 : 042-553-1167 / 공군본부 인재획득과 : 042-552-1424
해병대사령부 인재획득과 : 031-8012-3134

*참고: 국방일보 "단기복무장려금 형평성 제고... 초급간부 확보 청신호(2026.1.19.)"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의 길을 선택한 이○○씨는 재학 중 선발된 친구들은 장려금을 받는데 졸업 후 지원한 자신은 제외된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꼈다. 그러나 2026년 8월 4일부터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도 장려금 1,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이○○씨는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원 시점만 다르다고 차이가 컸던 게 불합리했다. 이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더 자신 있게 군 복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총으로 나라를 지키고, 책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 ☎ 02-748-6268

현역병, # 독서, # 한손한책

병영독서 활성화와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 ⊕ **추진배경** 연간입대 장병 20.5만여 명이 신병교육대 입소 시부터 군 복무 기간을 국방의 의무뿐 아니라 독서를 통해 문무(文武)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 ⊕ **주요내용**
 - 신병교육 기간 : 1권 독서를 통한 독서 입문 기회 제공
 - 입소시 '인생 책'이나 평소 읽고 싶었던 '내일 책'을 지참하도록 권고
 - * 희망하지 않거나, 가져오지 않은 훈련병은 부대 도서관에서 대여
 - 독서코칭 강연 지원, 독후감 작성·제출 시 포상(외출 1일) 부여
 - 신병수료 시 희망도서(2만원 내) 1권 증정
 - 자대 복무 기간 : 독서습관 형성하여 지성·인성·전문성을 함양
 - 병영도서관·북카페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독서 환경 개선
 - '장병e음' 활용 전자책, 정기구독권, 종이책 구매 지원(1인당 연 64,000원)
 - 계급별 독서 권장량(훈련병1, 이병1, 일병2, 상병3, 병장 4권) 독서 유도
 - 북콘서트, 쇼츠 독후감 공모전 등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시행
- ⊕ **기대효과** 복무간 독서 습관을 형성하여, 장병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역 후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됨
- ⊕ **시행일** 2026년 7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7월부터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는 현역병(연간 20.5만여 명)을 포함한 전 장병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병교육 시기) '인생 책' 또는 읽고 싶은 '내일 책' 한 권 지참(없으면 부대 도서관 대여), 전문강사의 독서코칭(2시간), 독후감 작성 시 외출 1일(자대배치 후 사용 가능) 포상, 수료 시 희망도서(2만원 내) 1권 증정
- (자대복무 시기) 병영도서관·북카페 복합문화공간 이용, 1인 연 6.4만원(최대 12.8만원) 정기구독권, 전자책·종이책 구매 비용(80%) 지원, 계급별 독서 권장량(훈련병1→병장4권, 복무 중 10권 이상) 독서 유도, 북콘서트·독후감 공모전·격오지 이동도서관·독서병 운영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참여 제공

Q. 대상별 어떤 체감 효과가 있나요?

- 신병 입소부터 독서 습관을 형성하여 군 복무기간을 국방 의무 수행과 개인 성장의 시간으로 전환
- 독서하는 장병들로 부대 내 소통이 원활해지고 인화 단결되어 안전 및 군기강 사고 예방 및 전투력 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 : 02-748-6268 / 육군본부 인사기획과 : 042-550-1112
- 해군본부 정신전력과 : 042-553-6612 / 공군본부 정신전력과 : 042-552-6916
- 해병대사령부 정신전력과 : 031-8012-3023

참고: 국방일보) 보도기사)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독한 전투력 확립'(2026.4.24.)

입대 시 아버지가 골라준 책 한 권을 가져간 이○○ 훈련병은 자유시간에 책을 읽으며 낯선 군 생활의 긴장감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었다. 독후감을 제출하고 외출 포상을 받으니 군 생활 중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점차 자발적으로 책을 찾게 되었다. 지휘관 김○○ 대위는 '독서병을 중심으로 독서동아리가 생기면서 부대가 화합하고 교육훈련 성과도 높아졌다고 전했고, 이들의 군 생활을 걱정하던 부모 박○○씨는 '책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연락에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

병무청 현역기획과 ☎ 042-481-2739

병역연기, # 병역이행, # 예측 가능성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 ⊕ **추진배경** 현행 규정상 '시험일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병역이행 예측 가능성 제고
- ⊕ **주요내용**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명확화
- ⊕ **기대효과** 입영일자 연기 처리기준 명확화 및 병역의무자의 연기가능 여부 예측 가능성 제고
- ⊕ **시행일** 2026년 7월 중

Q. 누가 적용 대상인가요?

- 시험응시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는 병역의무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내용	'시험일정'으로 규정	'시험일자'로 명확화

Q. 공무원 시험처럼 필기시험·면접시험 등 단계별로 진행되는 시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단계별로 시행되는 시험은 해당 단계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단계 시험일까지 연기처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 현역기획과: 042-481-2739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자격증 시험 준비 중 입영 예정자 최○씨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입영일자 연기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었다. 연기 기준이 '시험일자'로 명확해짐에 따라 최씨는 "이번 기준 명확화를 통해 시험일자와 입영일자를 비교하여 연기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기준이 명확해져 입영과 시험 준비 계획을 보다 쉽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본인이 선택한 현역병 입영일자가 보장되어,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입영, # 입영일자 본인선택, # 상근예비역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 ⊕ **추진배경**
 -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본인의지와 무관하게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는 불합리 해소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반복되는 신청과 취소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실입영 희망자의 입영일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 ⊕ **주요내용**
 -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는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 입영일 본인선택 취소횟수 입영일 30일전까지 3회 → 1회
- ⊕ **기대효과**
 - 병역의무자 선택사항 보장으로 행정신뢰 제고
- ⊕ **시행일**
 - 2026년 7월

Q. 상근예비역은 무엇인가요?

- 상근예비역은 방위소집제도 폐지에 따른 지역방위 인력충원을 위해 도입,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 수료 후 지역예비군부대 등에서 출·퇴근 복무하며 업무를 수행

Q. 현역병 본인선택자를 언제부터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나요?

- 2026년 7월에 접수예정인 다음연도(2027년) 본인선택자부터 적용되어, 2027년에 복무할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

Q. 현역병 본인선택자의 취소횟수 1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7월에 접수예정인 다음연도(2027년) 본인선택자부터 적용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현역병 입영대상자(다음연도 본인선택자 포함) 중 선발	현역병 입영대상자(다음연도 본인선택자 제외) 중 선발
신청 취소 횟수	입영일자 30일전까지 3회로 제한	입영일자 30일전까지 1회로 제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본인선택 취소횟수가 1회이므로 선택과 취소에 따른 과열경쟁이 완화되어 실제 입영희망자의 입영일자 선택권 존중
- 병역의무자의 복학, 사회진출 등 미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상근예비역 직권선발에서 제외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병역 이행 환경 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 병무청 상담센터: 1588-9090

*참고: 병무청 누리집 | 공지사항 > “다음연도(2027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안내(2026.3.31.)”

대학 복학 계획을 세운 예비입대자 박○○씨는 복학 날짜에 맞춰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했다. 그런데 상근예비역으로 강제 선발됐다는 통보에 모든 계획이 흔들렸다. 상근예비역을 원치 않았는데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선발된 것이 억울했다. 그러나, '2026년 7월부터 접수하는 2027년 본인선택자는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가 고른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있다니 이제는 복학 계획을 자신 있게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군 일반병, 자격·면허·가산점과 관계없이 공개추첨으로 선발됩니다.

-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20

청년, # 공군, # 모집병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 ⊕ **추진배경** 모집병 합격을 위해 군 복무 수행과 무관한 자격증 취득, 헌혈·봉사활동 실적을 쌓기 위한 과열 양상이 나타남.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병 지원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모집병 선발제도를 개선
- ⊕ **주요내용**
 - (선발방식) 고득점순 →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
 - (선발주기) 월 단위 → 연 단위 (2회) 선발
- ⊕ **기대효과**
 - 모집병 지원자가 자격증 취득, 헌혈·봉사활동 실적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 입영시기 불확실성을 조기해소하여 학업·진로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미래설계와 입영준비에 도움
- ⊕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Q. 공군 일반병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서 접수연도 기준 18세~28세
- 병역판정검사 결과 1급~4급 현역병입영대상(모집병 지원신체검사 포함)
 -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선발자에 한하여 모집병 지원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선발방식	평가항목별로 점수화하여 고득점순 선발* 평가항목 : 자격·면허, 전공, 가산점 등	자격·면허, 가산점 등과 상관없이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 선발
선발주기	매 월 모집, 3개월 후 입영	연 2회 모집, 다음연도 입영(입영 전년도에 일괄 선발)

Q. 2027년 입영하는 공군 일반병 모집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하반기에 2027년도 입영하는 공군 일반병을 2회 선발
 - (1회차 모집) 8월에 접수, 10월에 최종 선발
 - (2회차 모집) 10월에 접수, 12월에 최종 선발
- 일반병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 선발은 공군 일반병 선발부터 우선 적용, 2027년부터 해군·해병대까지 확대 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헌혈·봉사활동·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 입영 전년도에 일괄 모집을 통해 입영계획을 조기에 결정하여 학업 등 진로설계에 도움

Q. 공군 일반병 모집 관련 세부일정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병무청 누리집)「군지원(입영신청)안내」 이달의 모집계획」 공군 모집계획」에서 확인 가능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공군 지원을 준비하는 의무자 김○○씨는 공군병 공개추첨 선발,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꿈꿈이 생각해 보니, 이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개추첨 선발이 오히려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불필요한 경쟁이나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앞으로 공군병 지원하는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사전안내로 예비군 훈련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총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90

예비군, # 훈련, # 알림톡

총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 ⊕ **추진배경** 매년 지역별 총무훈련 시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전시 대비 예고없이 실시되는 훈련소집 참가 부담경감 필요 * 지자체에서도 총무훈련 홍보 실시 중
- ⊕ **주요내용**
 - (기존) 총무훈련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동원미지정 예비군에게 예고없이 소집일을 정하고, 소집 4일 전 통지서 교부 후 불시소집점검 실시
 - (개선) 해당 대상자에게 총무훈련 시작 10일 전, 비상소집 가능성 및 전시임무 관련 알림톡 발송 * 소집통지서 교부 및 불시소집점검 절차는 동일
- ⊕ **기대효과** “총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가능성”을 사전 안내하여 훈련에 대한 관심 및 훈련참가 준비도 제고
- ⊕ **시행일** 2026년 10월(대전지역 시범운영, 4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예비군 및 예비군의 직장(회사, 가게) 고용주
- (주요내용)
 - 총무훈련 기간 중 하루,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림톡 발송 사전 안내
 - 회사 업무 일정조율, 대체인력 사전 확보 등 스케줄 조정을 통한 훈련참가 준비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불시소집훈련 가능성-전시임무 인지	소집일 4일 전	소집일 10일 전
주요업무 일정조율 등 조치	X(곤란)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90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음식점을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 예비군 김○○씨는 총무훈련 2일전에 소집통지서를 받아, 훈련일에 가게를 대신 봐줄 사람을 급히 찾았지만 구하지 못해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2026년 10월 총무훈련 부터는 소집일 10일 전에 알림톡으로 미리 훈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10일 전 정도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예약 손님에게도 미리 연락할 수 있어 장사에 지장이 덜 할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는 훈련인데 생계 때문에 눈치 보는 불편한 상황이 덜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해외이주신고를 했어도 실제로 그 나라에 살지 않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 042-481-2954

병역, # 국외여행허가, #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 ⊕ **추진배경**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악용사례 발생 우려
- ⊕ **주요내용**
 - (현행)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해외이주신고 사실을 허가
 - (개선) 연고이주를 제외하고 해외이주신고 이주국가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 후 허가
- ⊕ **기대효과**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허가로 제도 악용 방지
- ⊕ **시행일** 2026년 7월 예정

Q. 누가 적용대상 인가요?

- 해외이주법에 따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병역의무자
- 해외이주신고 이주종류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대상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다만, 연고이주 외에는 이주국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

Q.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연고이주, 현지이주 신고자는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사실 증명서류 제출 시 국외여행허가 가능
- 연고이주는 기존대로 해외이주신고 사실 확인으로 국외여행허가 가능

Q.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국외여행허가제도 악용 방지로 병역이행의 공정성 강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757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이○○씨는 최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중 제도 변경 소식에 불안했지만, 해외이주신고를 한 국가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안도했다. '재학증명서 등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 살지도 않으면서 허가를 받는 사례를 막을 수 있어 더 공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임신검진 동행휴가(최대 10일)를 신설해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사회복무요원, # 청원휴가, # 임신검진동행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 ⊕ 추진배경 국가기공무원 및 군인의 휴가 개정사항(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 2025.7.22.)을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도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 필요성 제기
- ⊕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 기대효과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
- ⊕ 시행일 2026년 8월 예정(「병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임신한 사회복무요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 가능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최초 신청시 배우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 임신검진 동행 후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6년 8월 중(「병역법 시행령」개정 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을 통해 안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연가 사용	청원휴가 사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저출생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출산을 준비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부담 완화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환경 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41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회복무요원 박○씨는 임신검진 날짜마다 연가를 써야 했지만 연가 일수가 부족해 동행을 포기한 적도 있었다. '아이 생기면 뭐든 같이 하고 싶는데 복무 중이라 연가사용이 눈치 보였다고 말했다. 2026년 8월부터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배우자 검진에 함께 갈 수 있게 됐다. 복무 중에도 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연구시설 기준을 완화합니다.

-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2

병역지정업체, # 선정, # 완화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 ⊕ **추진배경**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과기부)이 완화*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요건과 괴리,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이중비용 발생 우려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2.1.시행)
- ⊕ **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 물리적 요건 완화
* (기준) 고정 벽체로 된 독립공간 → (개선)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 포함
- ⊕ **기대효과**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시 기준 혼동 예방 및 공간적 부담 완화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완화된 기준으로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기관) 선정 신청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1단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여부를 확인
- 2단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2026년 6월 중(세부일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 공고 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을 위한 별도의 공간 배치 조정이 불필요
- 기업부설연구소와 동일하게 물리적 요건을 완화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시 기준 혼동 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8

IT 스타트업은 운영하는 강○○씨는 연구개발 인력을 전문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싶었지만 이동형 파티션으로 구성된 연구공간이 '고정 벽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이 반려됐다. 고정 벽체 공사비로만 수백만원이 필요해 포기했는데 2026년 7월부터 높이 2m 이상 이동형 벽체도 인정됨에 따라 '과기부 연구소 인정과 병역지정업체 기준이 달라서 이중으로 비용을 써야 했는데, 이제 하나로 통일돼서 비용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 시, 병역의무를 대체복무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4

대체복무, # 소집기피, # 병역이행기회 제공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 ⊕ **추진배경**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이후 현역병 입영의무 등이 부과되거나 종교적 신념 등으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 시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 발생
- ⊕ **주요내용** (개정사항)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에서 제외(대체역법 제25조 개정)
- ⊕ **기대효과**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기회를 제공하여 반복적 형사처벌 방지
- ⊕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Q.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대체역 편입자 중,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Q.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종전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어 현역병 입영 등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대체역 신분이 유지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이행이 가능

Q. 어떤 부분에서 좋아지나요?

- 대체역 소집기피자에 대한 반복적 형사처벌에 따른 논란 방지
- 개인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재부여하여 양심과 조화된 병역이행의 효과성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대체역으로 편입된 성○○씨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못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대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대체역은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종료 후 다시 현역병 입영의무가 부과되게 된다. 그러나 2026년 4월 21일부터는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대체역 신분은 유지됨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지 않고 다시 대체역으로 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방산물자 수출허가 면제 후 제출하는 '수출거래현황' 제출 기한이 7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31

방산, # 수출, #규제완화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 ⊕ **추진배경** 현행법상 수출허가를 면제받아 방산물자를 수출한 업체는 7일 내 수출거래 현황 제출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워* 개정 필요성 제기
* 수출대상국 서류발급 행정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자료 제출 지연 발생
- ⊕ **주요내용**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을 현행 7일에서 20일로 연장
- ⊕ **기대효과** 방산물자 수출업체의 업무 부담 경감
- ⊕ **시행일** 2026년 하반기 (방위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회부)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출허가를 면제받아 방산물자를 수출한 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출거래 현황 제출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방산물자 수출업체의 서류 준비 시간 확보 등 업무 부담 경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7일 이내	20일 이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수출허가 면제요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수출
 - * ①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최초 수출허가 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에게 수출하는 경우,
 - ②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 2단계: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dapa.go.kr)을 통해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을 20일 이내에 제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제출서류 중 가장 시간이 소요되는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 시간 확보로 수출업자 행정 부담 경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1

방산 수출업체 수출팀장 이○○씨는 수출허가 면제 대상 방산물자를 수출하고 나면 7일 이내에 수출거래 현황 관련 서류를 내야 했는데, 이중 최종사용자증명서는 수입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거라 아무리 빨리 요청해도 2주는 걸렸다. 기한을 어길까봐 항상 긴장했고 법 위반이 될까봐 불안했는데 2026년 하반기부터 20일로 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서류 하나 때문에 밤새 이메일 보내던 날들이 이제 좀 줄어들겠다. K-방산 수출을 더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로 방산관련 업체는 저렴한 보증·공제 이용길이 열립니다.

-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금융지원TF ☎ 02-2079-6417

방산, # 우주항공, # 보험, # 공제조합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민수분야 우주항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경쟁력 강화 및 방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제 시스템 구축 필요
 - 현행법상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도 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 **주요내용**
 -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
 - 공제조합의 가입대상에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및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
- ⊕ **기대효과**
 - 방산 및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보증·보험(공제) 경제적 부담 경감
- ⊕ **시행일**
 - 2026년 하반기(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및 우주항공사업자
- (지원내용) 공제조합 활용을 통해 기업 금융 부담 경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사업범위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조합원의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 사업 포함) 수행 및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가입대상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및 우주항공사업자 추가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방위산업공제조합 홈페이지 및 유선 신청 가능
 - 홈페이지: kdbg.or.kr/ | 이메일: kdbg@kdbg.or.kr
 - 방위산업공제조합 보증 02-2197-7631~5, 공제 02-2197-7641~9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저렴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더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금융 비용 경감 및 경영 안정성 제고 기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방위산업금융지원TF : 02-2079-6417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 055-856-4334
- 방위산업공제조합 보증 02-2197-7631~5, 공제 02-2197-7641~9

우주항공 소형위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대표 박○○씨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으려 할 때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높은 보증료를 요구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이 더 저렴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우주항공사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2026년 하반기 법 개정 후 우주항공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저렴한 공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증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그만큼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K-우주항공을 기우려면 이런 금융 인프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도연구기관-방산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체계수준의 연구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AI선도연구협력사업 지원 -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02-2079-6470

방산, # 중소기업, # 연구개발, # 국방AI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AI선도연구협력사업 지원

- ⊕ **추진배경** 우수기술 보유한 중소기업이 협력업체의 역할을 넘을 수 있도록, 체계수준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회 부여 필요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선도연구기관과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대상과제) 인공지능지휘통제기반 멀티모달 경계플랫폼 개발
 - (지원규모) 6.27억 (2026년 예산 기준, 총사업비 3년간 190억)
-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역량 증진
- ⊕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공고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선도연구기관*과 2개 이상의 방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우수 기술-인프라-인력을 보유한 산학연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관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선도연구기관·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규모) 6.27억원 (2026년 예산 기준, 총사업비 3년간 190억)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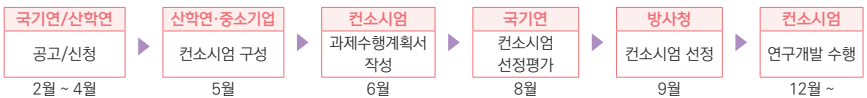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과제	-	인공지능지휘통제기반 멀티모달 경계플랫폼 개발
지원대상	-	선도연구기관과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규모	-	6.27억 (2026년 예산 기준, 총사업비 3년간 190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선도연구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시 중소기업이 참여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상반기 공고(~4. 30), 연구개발 주관 컨소시엄 선정(9월) 및 연구개발비 지원(12월)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소기업에게 체계 수준의 연구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역량을 증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02-2079-6470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역신팀: 042-259-9845~6

AI 기술을 보유한 방산 중소기업 대표 최○○씨는 '체계 수준의 국방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만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항상 하청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체계급 연구는 시도조차 어려웠다. 국방AI선도연구협력사업을 통해 선도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드디어 우리 AI 기술을 국방 체계급 연구에 직접 접목할 기회가 생겼다. 3년을 이사업으로 성장하면 그 이후 독자적인 무기체계 연구도 꿈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합니다.

-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

방위사업청 방산자원전략과 ☎ 02-2079-6464

방산, # 상생협력, # 부품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 ⊕ **추진배경** 체계기업(대·중견기업/부체계기업 포함)과 개발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및 방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술 보유 중소기업
 - (지원내용) 연구개발과제비의 75%를 정부지원금과 체계기업의 상생협력출연금을 1:1매칭하여 공동지원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전액 국고지원)
- ⊕ **기대효과** 방산 대·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부품개발 촉진 및 동반성장
- ⊕ **시행일** 2026년 3월 11일(2026년 신규과제 공고: 4월 29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우수 방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단,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
- *투자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중 중견·대기업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1:1로 매칭하여 중소기업의 부품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최대 100억원, 개발기간 5년 이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공모방식	하항식 지정 공모	하항식 지정 + 상항식 자유응모 (상항식 : 상생협력부품국산화)																												
부품국산화 지원유형	<table border="1"> <thead> <tr> <th>핵심부품</th> <th>수출연계부품</th> <th>전략부품</th> </tr> </thead> <tbody> <tr> <td>최대 100억원 이내</td> <td>최대 100억원 이내</td> <td>총사업비 500억원 이내</td> </tr> <tr> <td>하항식</td> <td>하항식</td> <td>하항식</td> </tr> <tr> <td>정부지원</td> <td>정부지원</td> <td>정부지원</td> </tr> </tbody> </table>	핵심부품	수출연계부품	전략부품	최대 100억원 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총사업비 500억원 이내	하항식	하항식	하항식	정부지원	정부지원	정부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핵심부품</th> <th>수출연계부품</th> <th>전략부품</th> <th>상생협력</th> </tr> </thead> <tbody> <tr> <td>최대 100억원 이내</td> <td>최대 100억원 이내</td> <td>총사업비 500억원 이내</td> <td>최대 100억원 이내</td> </tr> <tr> <td>하항식</td> <td>하항식</td> <td>하항식</td> <td>상항식</td> </tr> <tr> <td>정부지원</td> <td>정부지원</td> <td>정부지원</td> <td>정부 + 체계기업 공동지원</td> </tr> </tbody> </table>	핵심부품	수출연계부품	전략부품	상생협력	최대 100억원 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총사업비 500억원 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하항식	하항식	하항식	상항식	정부지원	정부지원	정부지원	정부 + 체계기업 공동지원
핵심부품	수출연계부품	전략부품																												
최대 100억원 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총사업비 500억원 이내																												
하항식	하항식	하항식																												
정부지원	정부지원	정부지원																												
핵심부품	수출연계부품	전략부품	상생협력																											
최대 100억원 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총사업비 500억원 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하항식	하항식	하항식	상항식																											
정부지원	정부지원	정부지원	정부 + 체계기업 공동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 2단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에 신청서류 제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소기업 수의계약 가능: 국산화 개발 성공 후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시 5년 이내 수의계약 권한 보유로 안정적 판로 확보
- 투자기업 상생협력 인센티브 제공: 상생협력확인서 발급받아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가점(최대 0.3점) 부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위사업청 방산자원전략과: 02-2079-6464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품개발사업관리팀 : 055-751-4823, 4825

*참고: 방위사업청 누리집(보도자료) "지속 가능한 방산 동반성장", 중소기업 부품 개발에 정부와 대기업이 힘 모아 뒷받침(2026.3.12.)

방산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대표 정○○씨는 국산화 개발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수역~수식역원에 달하는 개발비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체계기업(대기업)에 손을 내밀기도 어려웠다. 2026년 3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이 신설되어 체계기업과 정부가 1:1로 매칭해서 연구개발비의 75%를 지원하고,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정부가 지원해 주게 되었다. 국산화에 성공하면 5년 수의계약 권한도 생기다 보니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해 준다면, 중소기업도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기회에 국산화에 성공해서 우리 기술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10

행정·안전·질서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세한 내용은 p. 235

통신3사와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시행일 2026년 6월 1일 ~ ※ 사업자별 시행 시기 상이

-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접근권을 강화합니다.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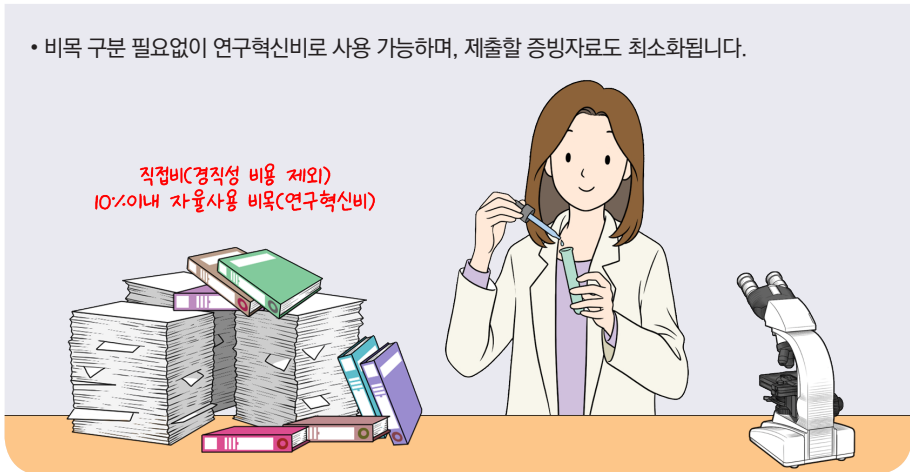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236

연구비 사용 자율성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시행일 2026년 5월 6일(연구혁신비는 2026년 下 준비된 사업부터 적용 후 2027년 전면 시행)

- 비목 구분 필요없이 연구혁신비로 사용 가능하며, 제출할 증빙자료도 최소화됩니다.



03.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 240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됩니다.



04.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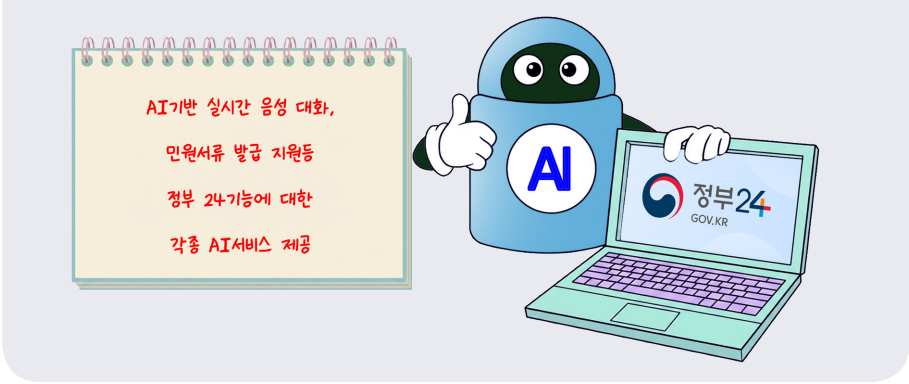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 242

정부24에서 정부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인공지능(AI)이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AI 정부24 정식 개통

시행일 2026년 12월 정식 서비스 개통(26.3월부터 시범서비스 제공 중)

- 정부24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분들께 AI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5.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 249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시행일 2026년 11월

•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전 (사고위험 가능성 ↑)

안전기준이 강화된 후 (사고위험 가능성 ↓)

- 후방영상장치
- 안전표지판
- 한 조운영
- 안전기준 준수

06.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 251

동종·유사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원인조사·분석 자료를 전면 공개합니다.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시행일 2026년 6월 1일

•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재해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재해조사보고서
노동부·공단
누리집에서
대국민 공개

07. 성평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 255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08.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 260

어선에 승선하여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합니다.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인원과 상관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정부24 등 190여개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시행일 2026년 5월 6일

-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통신3사와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044-202-6655

이동통신, # 통신비, # 어르신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 ⊕ **추진배경** AI·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접근권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 통신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 (어르신(만 65세 이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 **기대효과** 데이터 통신비 부담 완화 및 기본통신권 보장
- ⊕ **시행일** 2026년 6월 1일 ~ ※ 사업자별 시행 시기 상이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LTE·5G)를 가입한 이용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월간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이용자
 -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도입하여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적인 속도*로 데이터 이용 가능
 - *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수준(약 400Kbps)
- 월간 통화·문자량에 제한이 있는 어르신(만 65세 이상) 이용자
 -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를 추가제공(2만원대: 음성·문자 기본제공, 1만원대 음성30분/문자50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적인 통신비 부담 없이 메신저, 네비게이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사용이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5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보도자료)“데이터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 추진(2026.4.9.)”

70대 김○○ 어르신은 손주들과 자주 안부를 주고받고는 했으나, 이용 중인 2만 원대 요금제의 제공량을 소진한 후에는 초과 요금 걱정으로 연락을 망설였었다. 하지만 통신사의 ‘데이터 안심옵션’과 ‘음성통화 무제한’ 혜택을 제공받아 초과 요금 부담 없이 손주들과 메신저 및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 ⊕ **추진배경**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 ⊕ **주요내용** 직접비(경직성 비용 제외) 10% 이내 자율사용 비목(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방식(사용불가항목 외 연구관련 비용 모두 사용가능) 전환
- ⊕ **기대효과**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몰입 환경 조성
- ⊕ **시행일** 2026년 5월 6일(연구혁신비는 2026년 下 준비된 사업부터 적용 후 2027년 전면 시행)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Q. 어떤 점이 개선되나요?

- (연구자) 현재 연구자는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 사용에도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 연구자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 사용에도 비목 구분 필요없이 연구혁신비로 사용 가능하며, 제출할 증빙자료도 최소화(카드매출전표, 사용목적)되어 행정부담이 완화
- (연구기관) 연구기관은 간접비 사용용도 규정이 포지티브(사용가능항목 명시) 방식으로 되어 있어 연구기관은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용도의 비용을 규정 개정없이 사용 불가
→ 간접비 규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구기관은 연구 관련 새로운 용도의 비용도 규정 개정없이 사용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증빙자료 최소화, 직접비의 10% 자유 사용으로 연구자의 행정부담 대폭 완화, 행정처리 시간 절감·연구 몰입 시간 확보
-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으로 새로운 연구 용도 규정 없이 즉시 사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3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보도자료)“[연구행정 혁신+①]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2026.4.28.)”

(연구자 체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박○○ 연구원은 연구 수행을 위해 간단한 회의비, 출장비, 연구재료 구입비 등을 사용할 때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나 엄격한 비목 구분 관리 때문에 연구행정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나, 연구혁신비 신설로 인해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 비용 사용 시 일일이 비목 구분할 필요없이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구비하도록 바뀌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늘었다.

(연구기관 체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A대학 산학협력단은 A서비스 이용 비용같이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임에도 간접비 사용용도에 사용가능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용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간접비 사용용도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되어 사용불가능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A서비스 이용처럼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비용도 규정 개정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통신사는 자사 이용자에게 데이터 사용량 등을 고려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합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044-202-6655

최적요금제, # 이동통신, # 이용자 선택권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 ⊕ **추진배경**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지는 다양해졌으나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관련 정보제공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통신3사에 자사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이용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할 의무 부여
- ⊕ **기대효과** 최적요금제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
- ⊕ **시행일** 2026년 10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통신3사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신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 및 관련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편리하게 안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데이터 사용량	평균 사용량 파악이 번거로움	주기적으로 고지되는 정보를 통해 현재 요금제와 실제 사용량의 차이 인식
이동통신 요금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 비교·선택 어려움	최적요금제 정보를 활용하여 요금제 선택권 강화 및 통신비 절감 유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 받을 수 있음(최적요금제를 고지받는 방식(문자, 이메일 등)은 선택 필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5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보도자료)“이용자는 내게 꼭 맞는 통신요금제를 추천받고, 통신사는 대포폰 방지,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강화(2026.3.24.)”

직장인 이○○ 씨는 2년 전 가입한 8만 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계속 쓰고 있었다. 하지만 통신사로부터 실제 데이터 사용량(20GB)에 맞춘 5만 원대 요금제 추천 알림을 받게 되었으며, 안내에 따라 요금제를 변경하자 매달 3만 원 이상의 통신비가 절감되었다.

통신 사업자 관련 전화(방문, 우편 등)민원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민원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 1335, 02-2110-6566

민원, # 통신, # 업무자동화

민원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

- ⊕ **추진배경** 노후화된 통신민원 처리시스템을 재구축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AI상담지원 기능을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상담 품질 개선
- ⊕ **주요내용** (대상) 통신사 관련 민원 상담·접수가 필요한 국민 모두
※ 2025년도 통신관련 민원 26,000여건 접수 및 처리
- ⊕ **기대효과**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상담 품질 개선, 투명한 민원처리 과정 확인
- ⊕ **시행일** 2026년 11월(예정)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통신사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모든 국민

Q. 어떤 점이 개선되나요?

- 기존에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경로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과정(접수, 처리기간 연장, 처리내용)을 민원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
 - 처리과정 통보 업무를 자동화하여 민원인이 본인의 민원 처리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받음으로써 행정 투명성 확보 및 민원처리 신뢰도 제고
- 민원처리 담당자가 법령과 정책을 신속히 확인하고, 유사한 민원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AI 민원 검색 시스템 도입
 - 민원검토 시간이 줄고, 일관된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돕는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처리 신속도 제고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 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민원신청) 메뉴 이용
- 전화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대표번호 1335
 - ※ 필요 서류: 신분증, 휴대전화번호, 민원신청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AI 상담지원으로 민원 처리 속도 향상, 민원상담 정보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2025년 기준 연간 26,000건 수혜)
- 단계별 자동 안내로 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대표번호: 133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02-2110-6561

통신요금 민원 신청인 박○○씨는 통신사 요금 관련 민원을 신청했지만 어디쯤 처리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여러 번 전화로 확인해야 했다. 2026년 11월부터 처리 단계마다 자동 안내가 오고 전문 상담사가 AI상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나의 민원과 유사한 민원을 찾아서 안내해 주었다. '불필요한 전화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시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을 수령인 1인이 일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

외교부 여권과 ☎ 02-2002-0117

여권, # 우편배송, # 묶음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 ⊕ **추진배경** 현행 여권 우편배송 제도는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여권들에 대해 개별배송만 가능하여, 민원인이 여권 수량만큼 배송비 부담
- ⊕ **주요내용**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에 대해 대표 수령인 1인을 지정하여 일괄 수령할 수 있는 '여권 묶음 우편배송 서비스' 도입
- 여권 신청 접수시 묶음배송 여부 및 대표 수령인 1인 지정
- ⊕ **기대효과** 대표 수령인을 통한 묶음배송으로 1회 배송·수령이 가능해져 배송비 부담 경감 및 우편 수령 시간 절약 기대
- ⊕ **시행일** 2026년 10월 6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 신청자(예: 가족 단위 신청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대표 수령인 1인을 지정하여 복수의 여권을 한 번에 수령 가능
- 배송비 부담 경감 및 우편 수령 시간 절약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주요내용	동일 주소지라도 여권별 개별배송만 가능하여 신청 건수만큼 배송비 부담 발생, 반복 수령 필요	대표 수령인 지정에 따른 묶음배송으로 1회 배송 수령 가능, 배송비 부담 경감
비용·시간	여권 신청 건당 개별 배송비·시간 소요	1건 기준 묶음 배송비·시간 절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여권 묶음 우편배송을 신청
- 최대 5권까지 여권 묶음배송이 가능, 대표 수령인 1인 지정
※ 필요 서류: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위임장 등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민원인의 여권 우편배송 이용 편의성 제고 및 비용 부담 완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7
- 한국조폐공사 공공사업부: 042-870-1194

정○○씨는 가족들의 여권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가족 구성원별로 여권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를 신청해야 해 4인 기준 배송비(5,500원×4인)를 부담하고, 배송 때마다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표 수령인 1인을 지정하여 가족들의 여권을 한 번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배송비 부담을 줄이고 우편물 수령에 소요되는 시간과 번거로움도 함께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

법무부 전자감독과 ☎ 02-2110-3763

스토킹, # 전자장치, # 피해자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 ⊕ **추진배경**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정보'만 제공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
- ⊕ **주요내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도입
※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가해자 접근 사실 및 위치 등이 통보되며, 경찰은 현장 출동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
- ⊕ **기대효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 가능
- ⊕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 2025.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해자 접근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근거 마련, 2026. 6. 24. 개정 법률 시행 예정

Q. 누가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피해자, 성폭력 등 전자감독 피해자

Q.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 (제공 내용) 가해자 접근 위치와 동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제공
- (기대 효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에서 미리 확인하고 대처 가능

Q.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보호관찰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바일 앱 제공 등의 여부를 확인
- 2단계: 모바일 앱 제공에 동의 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로 출장하여 모바일 앱 설치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 모바일 앱 지도로 미리 확인하고 대처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763
- 전국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참고: 법무부 누리집(법무뉴스)보도자료) "스토킹가해자 '실시간 동선' 확인 가능해진다(2026.4.6.)"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한○○씨의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접근 중이라는 알림이었다. 한씨는 당황하지 않고 앱을 열어 지도 위에서 가해자 위치를 직접 확인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보호관찰관과 경찰은 이미 한씨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가해자는 현장에 도착한 보호관찰관과 경찰에게 검거된다. 한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가 경찰에게 검거되어 멀어지는 동선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귀가한다.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자증거,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법무부 국제형사과 ☎ 02-2110-3296

디지털 성범죄, # 해킹범죄, # 디지털증거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 **추진배경** 기존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변경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증거가 삭제·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해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여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 실시
- ⊕ **기대효과** ▲단기간 보관되는 전자증거의 소멸 방지, ▲디지털 성범죄, 해킹, 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역량 강화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지원 내용) 수사기관이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해 달라고 요청 시 즉시 보전조치
- (체감 혜택)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라지기 쉬운 메시지·이메일 등 대화내용, 접속 로그기록, 게시물 또는 댓글, 계정정보 등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하여 디지털 범죄 수사의 실효성 제고

Q.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어떤 단계로 이용되나요?

- ① 수사기관이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삭제·변경 우려 확인
 - ②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 요청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전자정보를 즉시 보전
 - ④ 이후 압수·수색영장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 실제 증거 확보
- ※ 보전 요청 가능 요건 : ① 중대한 범죄(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가 의심되고, ②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위해 필요하며, ③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전자증거 보전제도	별도 제도 없음 → 압수·수색으로만 전자증거 확보 가능	즉시 전자증거를 확보 후, 압수영장 등 후속 절차를 통해 확보 가능
전자정보 특성 대응	압수·수색에 시간이 많이 소요 → 전자정보 소멸 빈번하여 수사 진행에 차질	증거 확보 전 수사 연속성 확보
해외 플랫폼 대응	국내 영장으로 대응 불가	국내외 플랫폼 대상 보전요청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296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12.)

취업 준비생 정○○씨는 '고수익 투자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금전 피해를 입었다. 운영자는 채팅방을 폐쇄하고 모든 기록을 삭제하려 했으나, 수사기관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활용해 대화내용을 보전했다. 그 결과 조직적인 사기 구조가 밝혀져 피해자 다수가 구제받았다. 정씨는 "증거가 남아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정부24에서 정부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인공지능(AI)이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 AI 정부24 정식 개통 -

행정안전부 통합포털정책과 ☎ 044-205-2922

#AI행정, #복지, #혜택, #민원

AI 정부24 정식 개통

- ⊕ **추진배경** 모든 국민이 각종 정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
- ⊕ **주요내용**
 - 국민이 정확한 행정용어를 몰라도 일상용어로 묻고 시가 질의 의도를 파악하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2만여종의 민원·혜택서비스 중에서 사용자 정보 및 대화 내용에 기반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AI 지능형 검색 고도화
 - 민원창구 공무원이 응대하듯이 정부24의 주요 민원에 대해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시범서비스 제공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 기반 음성 대화 시범서비스 및 전용 UI 제공
- ⊕ **기대효과** 국민 2,500만 명이 이용 중인 정부24에 AI를 도입하여 AI 행정서비스의 효능감 제고
- ⊕ **시행일** 2026년 12월 정식 서비스 개통(26.3월부터 시범서비스 제공 중)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서비스 검색	복잡한 행정용어나 정확한 민원명을 모르면 검색 불가	일상용어로 물으면 시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 제공
민원서류 발급	사용자가 성명, 주소 등 서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신청화면에 직접 입력	별도의 신청화면 없이 사용자 정보에 기반하여 시가 민원서류 발급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고령자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활용이 어려움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 및 전용 UI를 통한 접근성 제고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정부24(plus.gov.kr)에 접속(웹·앱 모두 가능)
- 2단계: 검색창에 원하는 질문을 대화하듯이 일상적인 용어로 질문
 - * 예) 이사하고 나서 뭐부터 해야 할까?/취업 준비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있을까?
- 3단계: AI와의 대화를 통해 필요한 혜택·서비스를 안내, 이용
 - * Tip1. 정부24에 로그인하면 시가 민원신청이력 등의 기록을 활용하여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추천 가능
 - Tip2. 위치정보, 연령대, 가족구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맞춤형으로 필요한 혜택·서비스 안내
- 4단계 :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입력화면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로 음성만으로 서비스 이용

*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보도자료) "이제 정부 서비스도 대화로 찾는다. 인공지능(AI)로 똑똑해진 정부24+(2026.3.10.)"

생활기록부 발급이 안돼 답답했던 민원인 김○○씨는 "2003년 이전 졸업자는 왜 생활기록부 발급이 안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체계가 2003년부터 전산화 되어 그 이전 정보는 발급이 안된다는 안내가 즉시 나와 궁금증이 해결되어 편리했다.

홀로사는 이00씨는 평소 정부 혜택을 찾고 싶었지만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 몰랐다. 시정부24에 "70세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오타를 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맞춤 혜택 목록이 바로 났다. 화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버튼을 눌러 그 자리에서 신청까지 마쳤다.

모바일 신분증을 11개 앱 중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 ☎ 044-205-2757

모바일 신분증, # 신분증, # 신원확인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 ⊕ **추진배경**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 제고
- ⊕ **주요내용** 모바일 신분증을 4개의 민간앱(신한SOL뱅크, 우리WON뱅크, 하나원큐, i-ONE Bank)에 추가 개방하여 총 11개의 앱 중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앱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사용 가능
- ⊕ **시행일** 2026년 10월

Q. 어떤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추가 4개) 신한SOL뱅크, 우리WON뱅크, 하나원큐, i-ONE Bank
- (기존 7개) 정부앱(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삼성웰렉, 카카오펙, 네이버, 토스, KB스타뱅킹, NH은행

Q.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 가능

Q. 민간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정부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법적효력이 동일한가요?

- 민간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와 방법은 정부앱과 동일하며 안전성과 신뢰성, 법적 효력도 정부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

Q.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발급하여 사용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 044-205-2757
- 모바일신분증 고객센터: 1688-0990

직장인 최○○씨는 모바일 신분증을 쓰고 싶었지만 전용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번거로워 미루고 있었다. 2026년 10월부터 매일 쓰는 하나원큐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자 '따로 앱을 깔지 않아도 된다. 이제 지갑 없이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을 개편하고 새롭게 지정합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044-205-3531

지방우대,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 ⊕ **추진배경**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한 도래(2026.10.)
- ⊕ **주요내용**
 - (지정기준)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과 활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인구감소지수 산출 지표 수정·보완
 - (지속 지원) 지방소멸·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지방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로 행·재정적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 ⊕ **기대효과** 지역의 정주 여건과 활력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및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지원에 따른 정책 효과 유지
- ⊕ **시행일** 2026년 10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및 해당 지역 주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 (주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의료·보육·교육 등 행정 특례 및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세제 혜택, ▲아동수당, 지역사회상품권 등 주요 재정사업 우대

Q.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지정기준 개선) 인구 지표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과 활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
- (지속 지원) 지방정부가 노력하여 정주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행·재정적 지원 중단으로 정책적 효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 추진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0월 지정 이후 시행 예정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31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만 9세 김○○군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친구가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과는 달리, 13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부담없이 필요한 학습 교재를 구매할 수 있었다.

미취업 청년 2,0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을 제공합니다.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 044-205-3217

사회연대경제, # 청년, # 일경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 ⊕ **추진배경** 청년의 취업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에게 일자리 도약·경험·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정부「청년뉴딜 추진방안」 추진(2026.4.)
- ⊕ **주요내용**
 - (사업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000명
*지방정부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최고 39세 이하까지 가능
 - (사업내용)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 제공
※(대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 **시행일** 2026년 6월 ~ ※ 지자체별 상이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방정부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최고 39세까지 가능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
- 참여 청년에게 일경험 수당 월 234만원(세전)을 지원
- 참여 기업에게 멘토·운영비 월 35만원을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기업	민간기업 위주 일경험 제공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업에서 일경험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모집시기 지자체별 상이)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6월부터 시행(지자체별 상이)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실무 중심 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및 새로운 진로탐색

취업준비생 김○○씨는 졸업 이후 경력 부족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였다. 마을기업에서 5개월간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김○○씨는 "일반 기업과는 차별화된 지역사회 기반 실무 경험이 취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배우자의 자녀도 같은 가족” 주민등록표 표기 차별이 개선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47

주민등록, # 가족관계, # 등재순위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 ⊕ **추진배경** 최근 재혼가정 증가 등 가족구성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 및 세대원 등재 순위로 인해 가족관계가 유추되어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 발생
- ⊕ **주요내용**
 - (관계표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하여 표기
 - (등재순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동순위로 기재
- ⊕ **기대효과** 재혼가정 등 가족구성에 따른 민감정보 노출 방지 및 사생활 보호 강화
-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재혼가정 구성원, 특히 배우자의 자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관계표기	등·초본상 가족 관계 상세 표기(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로 재혼가정임이 노출	등·초본에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하여 표기
등재순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재혼가정 자녀)이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보다 후순위로 등재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동순위로 기재

* 정확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후 기존 표기법대로 발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별도 신청 없이도 개정 기준에 따라 자동 적용되며, 개정 시행 이후(2026년 10월 29일) 등·초본 발급분부터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재혼 여부 등 민감한 가족정보가 등·초본에 드러나지 않아 자녀의 학교 생활, 각종 행정서류 제출 시 불필요한 노출 방지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47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보도자료)“배우자의 자녀도 같은 가족, 주민등록표 차별 개선된다(2026.4.21.)”

재혼 가정 엄마 김○○씨는 자녀의 학교 서류 제출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 과거에는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어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 이후 '세대원'으로 표기되어 가족 형태가 노출되지 않게 되었다. 김씨는 "아이가 불필요한 시선을 걱정하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 주민세 부담, 이제 법으로 확실히 덜어드립니다.

-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44-205-3816

주민세, # 사업소분, # 태양광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 ⊕ **추진배경**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주민세 과세 해석의 불분명함을 제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함
- ⊕ **주요내용** 태양에너지설비를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기계장치)에서 제외
- ⊕ **기대효과** 지방정부의 세정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주민세 과세기준일 기준, 납기: 8.16.~31.)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 대상)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이 1,000kw 이상으로 운영 인력(전기안전관리자)이 상주하여 근무하는 사업소
- (주요 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면적은 과세 제외

< 주민세* 사업소분 개요 > * 과세제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 (과세표준·세율) 기본세율+사업소 연면적(250원/1㎡)

※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 및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
 ※ 기계장치: 동력장치를 부착하여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 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과세 근거	예규 및 유권해석에 의존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문화
사업주	주민세 납부 판단에 혼선	통일된 기준 적용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민세 과세기준일(7.1.)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지방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또는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 안정적 세제 지원 효과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6

공장 옥상 태양광 설치 제조업체 대표 이○○씨는 공장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했지만 태양광 면적도 주민세 과세 기준에 포함돼 세금이 늘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태양에너지설비 면적이 과세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해 투자했는데 세금 부담도 줄어드니 설비를 더 늘릴 동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상세한 재난정보를 담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중복·과다 발송이 줄어듭니다.

-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 044-205-5309

안전, # 재난, # 재난문자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 ⊕ **추진배경** 재난문자 글자수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보 전달 한계 및 재난문자 중복·과다 발송으로 국민 피로도가 상승
- ⊕ **주요내용** 재난문자 글자수 확대 및 재난문자 중복 검토기능 도입
- ⊕ **기대효과** 구체적인 재난상황이나 행동요령 전달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중복 문자 수신 최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
- ⊕ **시행일** 2026년 10월(예정)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재난문자를 수신하는 모든 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존의 단순 경고에서 구체적 재난 상황, 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안내
- 동일지역·재난 중복 문자 필터링하여 불필요한 반복 알림 감소로 국민 불편 해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구분		
글자수	재난문자 글자수 90자 한계	재난문자 글자수 157자 확대로 재난정보 전달력 강화
중복 송출	여러 기관에서 재난문자 중복 발송	중복검토 기능 도입하여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 발송 방지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10월 중 전면 시행 예정

Q.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상세한 내용의 재난정보와 행동요령 전달을 통해 국민의 안전확보에 실질적인 도움
- 재난문자 중복수신이 최소화되어 국민 불편 해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 044-205-5309

*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보도자료)재난문자, 정보는 늘리고 중복발송 줄인다!(2025.10.30.)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박○○씨는 태풍 경보 때마다 짧은 경고 문자만 받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같은 문자가 5~6번씩 와서 나중에는 무시하게 됐다. 2026년 10월부터 구체적 행동요령이 포함되고 중복이 줄어들며 따라 '이제 문자를 받으면 뭘 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고, 중복이 없어서 더 신뢰하고 볼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4

생활폐기물, # 수집운반, # 안전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 ⊕ **추진배경** 공동주택,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 설정 등을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는 경우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
* 청소차량 후방영상장치 등 설치, 학생, 입주자 등 안전 조치 마련 등
- ⊕ **기대효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어린이와 입주민의 인명피해 예방
- ⊕ **시행일** 2026년 11월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인근 주민 및 어린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 대상지) 사람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공동주택, 교육 기관인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이 포함
- 공동주택, 학교 등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청소 차량에 신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매립장 등에 이동 시
- (주요 내용)
 - (안전장치) 청소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없애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 (안전기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치 정기점검, 청소차량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의 기준을 규정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2026.11.12. 시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안전장치	정기점검 의무 없음	정기점검 의무화
운전자 교육	미흡	안전 교육 실시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4, 044-201-7429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씨는 아파트 단지 내 새벽 청소차량의 생활폐기물 수거 때 어린 자녀가 가까이 다가가 아찔했던 경험이 있었다. 2026년 11월부터 학교, 아파트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신고 가는 차량에는 차량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작업인원 기준 및 입주자·학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 씨는 '이제 청소차량이 우리 아파트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더 안전하게 운행할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하천구역을 불법점용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 044-201-7538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 044-203-7702

하천법, # 불법 행위, # 하천관리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 **추진배경**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성 확보 필요
- ⊕ **주요내용** 하천구역 반복·상습적인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근거 마련(하천법 개정)
- ⊕ **기대효과** 불법점용 행위 제거로 홍수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재인 하천의 이용불편 해소
- ⊕ **시행일** 2026년 9월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하천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이행강제금 부과	-	원상회복 명령 등 미이행시 부과
부과빈도	-	1년 2회 범위내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6년 9월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불법점용 행위 제거로 홍수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재인 하천의 이용불편 해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 044-201-7538

주말에 가족들과 인근 하천으로 나들이를 간 40대 중년 이○○씨는 하천에 자리잡은 불법 점용시설로 인하여 눈살이 찌푸려졌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도 걱정되어 마음놓고 가족 나들이를 즐길 수 없었다. 2026년 9월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이러한 불법 시설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 씨에게 하천은 온 가족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쉼터가 되었다.

동종·유사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원인조사·분석 자료를 전면 공개합니다.

-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 044-202-8954

#산업재해예방, #재해조사보고서, #중대재해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 **추진배경**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재해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9.15.)
- ⊕ **주요내용** 재해조사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관계 전문가 등이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를 노동부·공단 누리집에서 대국민 공개
- ⊕ **기대효과**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동종·유사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
- ⊕ **시행일** 2026년 6월 1일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동종업종 사업주·안전보건 담당자, 근로자, 모든 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 원인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는 기간 수사·재판에 활용되어 대외적으로 비공개되었으나, 이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
- (기업) 동종 업종에서 발생한 재해 내용을 토대로 사업장 재해예방대책 수립·강화에 활용
- (노동자·일반 국민) 주요 중대재해의 경위·원인 확인
- (연구자) 산업재해 관련 학술 연구에 활용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공개여부	비공개	고용노동부 누리집 전면 공개
활용방안	불가	동종업종 유사재해 예방 즉시 활용

Q. 재해조사보고서는 어디에 공개되나요?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에 공개(업종·재해유형별 검색 가능)
-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 재해사례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Q.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언제부터 공개되나요?

- 2026. 6. 1. 이후에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

Q.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되어 동종·유사재해 예방 효과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 044-202-895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화학공장 안전보건 담당자 이○○씨는 동종업종 중대 재해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공장에도 같은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구체적인 재해 원인을 알 방법이 없었다. 2026년 6월부터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이제 다른 사업장 사고에서 배울 수 있게 됐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이 씨는 말했다.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확대됩니다.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 044-202-8923, 8824

산업재해예방, # 위험성평가, # 위험성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 ⊕ **추진배경**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여 위험성평가 실효성 확보
- ⊕ **주요내용**
 - 노동자·노동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 보장 강화
 -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험성평가 결과 등의 노동자 공유
- ⊕ **기대효과**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 ⊕ **시행일** 2026. 6. 1
※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일 : (2027년) 50인 이상 → (2028년) 50인 미만

Q. 누가 해당되나요?

- 업종·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Q. 어떤 의무가 강화되나요?

- 노동자 참여권 및 알 권리 보장 강화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 등을 노동자에게 교육, 서면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노동자 참여 의무,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결과 등 공유 의무,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Q. 의무 위반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 노동자·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

Q.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상시근로자 수 기준)
 -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 1. 1부터 적용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 1. 1부터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 8824

50인 이상 제조업체 대표 최○씨는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제재가 없어 서류상으로만 처리해 왔다. 2027년 1월부터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사업주로서 책임감을 더욱 느꼈다. 최 씨는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우리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개선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국민 누구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044-202-8903

산업재해예방, # 신고포상금, # 안전수칙 위반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 **추진배경**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험 상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
- ⊕ **주요내용** 안전보건규칙 위반, 산재은폐, 사용·작업중지 명령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 **기대효과**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일터의 위험상황 해소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 ⊕ **시행일** 2026년 하반기(예정)

Q. 포상금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안전수칙 위반 등을 신고.
 -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를 통해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
 - ※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일시·장소를 특정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
- 2단계.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정보를 노동포털에 입력
 - 고용노동부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하면, 신고자에게 SMS 또는 메일로 안내. 안내를 받은 경우 노동포털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입력

Q.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사용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
- ※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Q. 포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하반기 (예정)
- ※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안전수칙 위반 등 신고 가능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안전수칙 위반 등 신고 가능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포상 금액	-	1건당 최대 5백만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일터의 위험상황 해소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효과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08

일반 시민 이○○씨는 노동자들이 위험하게 작업하는 장면을 목격하면 걱정은 됐지만, 그냥 지나치곤 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안전수칙 위반 등 신고자에게 1건당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접하고 '내 신고로 산재도 막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니, 노동자 안전을 위해 용기 내어 신고할 것 같다.'고 이 씨는 말했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 위촉하고, 대상 사업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044-202-892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 # 자율안전관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 ⊕ **추진배경**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촉진
- ⊕ **주요내용**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위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추천할 수 있었으나,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 가능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시키도록 함
- ⊕ **기대효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가능 근로자대표 범위 확대 등으로 더 많은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체제 구축 촉진
- ⊕ **시행일** 2026년 8월 1일

Q. 명예감독관을 추천·위촉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 가능
-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 가능

Q. 근로자대표는 의무적으로 추천을 하여야 하나요?

- 추천은 의무가 아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소속 노동자를 의무 위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규모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촉	임의규정(위촉할 수 있다)	강행 규정(위촉하여야 한다)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8월 1일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규모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 참여 확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 확대·촉진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29

소규모 제조업체 근로자 대표 김○○씨는 30명이 일하는 공장에서 안전에 관심이 많았지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되지 못했다. 2026년 8월1일부터 규모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제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장도 자율 안전관리를 더 잘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 02-2100-6212

통합지원단, # 디지털성범죄 근절, # 긴급차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 **추진배경**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 적극적 제재 조치, 수사 연계 등 총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 **주요내용**
 - 불법촬영물등 유포연황 정보수집 및 심층분석, 긴급차단
 - 위급·중대 피해에 대한 통합 대응 및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의 신속 유통차단 등 통합 대응방안 마련·이행
 -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 등과 협력체계 구축
- ⊕ **기대효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실질적 차단·삭제 및 불법사이트 제재·처벌 강화로 디지털성범죄 근절 도모
- ⊕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Q. 통합지원단은 왜 설치하나요?

- 그간* 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약 153만 건의 삭제지원을 통해 약 5만 3천 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으나,
 - * 2018년 4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 시 ~ 2025년 12월
 - 특히 해외서버 기반 불법 유휘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상 행정제재가 어려워 삭제요청 불응과 피해영상물 반복 게시로 피해가 지속
- 이러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통합지원단을 설치

Q. 통합지원단은 무슨 일을 하나요?

- 불법촬영물의 주 유통경로와 삭제 불응 사이트를 분석하여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등의 제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히 대응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요청 불응·반복 게재 사이트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차단하고, 집단 피해 등 중대 사안은 통합지원단에서 대응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URL 중심 삭제 지원에 중점	삭제불응, 반복게재 사이트 집중 분석, 사업자 제재 등 종합 대응 강화 - 폐쇄조치 필요 사이트 지속발굴·수사의뢰
미등록 해외사업자 대응 곤란	해외 법률 등을 적용, 민·형사상 제재 조치 이행하여 삭제 미조치에 적극 대응
즉각적인 접속차단 조치 불가 (방미심위 심의 요청 필요)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이행 (피해자 특정된 경우 심의 전 차단 등)

Q.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대표 상담전화 '1366' 및 통합 온라인 창구(d4u.stop.or.kr)를 통해 피해 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삭제지원, 심리치료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사 정○○씨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삭제지원 업무를 해왔는데, 그동안 유포 사이트의 삭제 불응, 지속적인 반복 게시로 피해가 지속되어 무력감이 들었었다. 그러나 2026년 4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신설되고, 이제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어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었다.

홀로서기가 두렵지 않게,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합니다.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02-2100-6397

미성년, # 성폭력피해, # 복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 **추진배경**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충분한 회복과 안정적인 자립 준비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성 제기
- ⊕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 확대 (25세가 될 때까지)
- ⊕ **기대효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미성년 피해자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중이며 입소 당시 나이가 19세 미만(미성년자)인 피해자
* 보호시설에 입소한 시점이 법 시행(2026.7.1.) 이전인 경우에도 포함됨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유형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 입소 가능
- 상담·의료·법률·심리치료 등 지속 제공,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생활 지원 강화
-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지원기준 충족 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최대 4년 6개월간 입소 가능 - 1년(원칙)+1년 6개월(연장)+2년(추가연장) • (특별지원)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 19세가 될 때까지(원칙)+2년(연장) • (자립지원) 최대 4년간 입소 가능 - 2년(원칙)+2년(연장) ※ 장애인보호시설은 피해회복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유형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 입소 가능 ※ 장애인보호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해회복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가야 한다”는 부담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 및 자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취업을 준비하고 퇴소 후 자립 실패를 최소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02-2100-6396, 6397

*참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알림·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3.)

친척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장 남○○씨는 다가오는 퇴소 날짜로 좀 더 보호시설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피해자 이○○양의 걱정에 수차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곤 했다. 입소기간 연장이 된다는 법 개정 소식을 듣고 시설장 남 씨는 피해자 이 양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가 함께, 친밀한 관계 속 폭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02-2100-6425

친밀관계, # 상담소, # 경찰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 ⊕ **추진배경** 재발위험성이 높은 친밀관계폭력은 지속적으로 가-피해자 동향 파악, 위험 징후 조기 발견·개입이 중요하나 수사기관에 대한 피해자 방어기제, 상담 전문성 부족 등 경찰력만으로 한계
- ⊕ **주요내용**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중 상담소 연계에 동의한 경우 상담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경찰에 회신하며, 경찰은 조사·보호조치 등에 활용
- ⊕ **기대효과** 상담소의 전문성을 살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계성 범죄* 피해자 중 상담소가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동의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음
* 가정폭력 · 교제폭력 · 스토킹범죄
- 경찰이 위험도 평가 및 상담소 연계 대상 선정, 상담소 연계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는 기존과 같이 경찰에서 모니터링 실시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소에서 2개월마다 1회 모니터링을 진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경찰이 관리 대상자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관리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상담소가 모니터링 실시(*재발위험성이 낮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중 상담소 연계에 동의한 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112신고(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 2단계: 경찰에서 '상담소로의 연계' 동의 여부 확인 시 동의하시면 향후 상담소에서 모니터링 진행 [프로세스] (경찰) 사건접수 익일 사후 콜백 → (경찰) 관리 대상자 선정, 상담소 모니터링 대상자 송부 → (상담소) 모니터링 실시, 경찰에 결과 회신 → (경찰) 수사·피해자 보호조치 등 사건관리 및 현장대응에 활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25

*참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보도자료)“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2026.5.17.)”

교제폭력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와 분리조치 되었으나 피해자가 임신과 생활고로 가해자와 다시 동거하고, 가해자는 과거 사건에 대한 처벌 불원을 강요하며 폭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경찰의 형사적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과 지자체, 가정폭력상담소가 협업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 긴급생계비·치료비·이사비를 지원해 가해자 주거지에서 분리하고 임대주택을 신청하였다. 또 반복된 폭력피해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02-2100-6387

일본군위안부, # 명예훼손, # 처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 ⊕ **추진배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가 지속되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피해사실 부정·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여 피해자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금지행위)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처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 **기대효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 ⊕ **시행일** 2026년 6월 11일

Q.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위안부피해자법 제16조)

Q.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 신문·방송·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강의·토론회·집회 등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위안부피해자법 제17조제1항)

Q. 처벌이 예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예술·학문·연구 및 학술 발표, 시사보도 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함(위안부피해자법 제17조제2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유족인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과거에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였으나,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고소·입증 부담이 크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 시행되고,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처벌됨에 따라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해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매년 점검을 의무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58

사업용 자동차, # 화물·특수자동차, # 정기점검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 ⊕ 추진배경 2024년 2월 화물차 가변축 바퀴이탈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화물차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
- ⊕ 주요내용 바퀴삐짐 사고 등 예방을 위해 가변축이 설치된 대형 화물차·특수차가 일정 차령 경과시 정기점검(가변축 분해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
- ⊕ 기대효과 바퀴이탈 등 중대사고 예방 및 차량 안전성 강화, 국민 불안감 해소
- ⊕ 시 행 일 2026년 12월 3일

Q. 누가 정기점검 대상인가요?

- 가변축이 설치된 대형(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사업용 화물·특수차 중에 차령 8년(차령 7년 경과) 이상 차량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정기검사	모든 자동차	모든 자동차(동일)
정기점검	-	차령 8년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가변축 매년 1회(신설) 분해점검

Q. 언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며, 차령 13년 이상(12년 경과) 차량부터 단계적 적용
 * (2026.12.3) 차령 13년 이상(12년 경과) / (2027.12.3) 차령 10년 이상(9년 경과) / (2028.12.3) 차령 8년이상(7년 경과)

Q. 정기점검을 안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4만원(점검 지연기간 30일 이내)부터 최대 60만원(115일 이상)까지 부과
- 도난, 사고발생, 부품 수급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대사고 예방: 정기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정비 후 재점검을 받도록 하여 중대사고 예방, 국민불안감 해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8,3859

대형 화물차 운전자 박○○씨는 오래된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바퀴 상태가 걱정됐지만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바쁜 일정에 점검을 미뤘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정기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화가 되니까 이제 꼭 점검하게 된다. 사고 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맞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어선에 승선하여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051-773-5523

어선안전, # 구명조끼 착용, # 의무 확대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 **추진배경**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 추진
- ⊕ **주요내용**
 - (착용대상)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
 - (착용조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
- ⊕ **기대효과** 구명조끼 착용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Q.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 어선에 승선하여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구명조끼 착용 의무	① 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거나, ②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기상특보·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23, 051-773-5524

통영에서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 김○○씨는 2026년 9월 조업 중 상대 선박이 갑자기 다가와 충돌했고 눈 깜짝할 사이 해상추락하여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배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황이 펼쳐졌고 바닷물은 상상 이상으로 차갑고 거칠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호흡을 조절하며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귀찮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겠지만, 구명조끼 착용으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올 여름부터 항만안전관리비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등이 가능해 집니다.

-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051-773-5791

안전투자, # 재해예방, # 근로자안전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 ⊕ **추진배경** 항만작업의 특성상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여, 항만근로자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항만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항만안전관리비를 이용하여 온열질환 예방 장비·물품 구입 등 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 **기대효과** 항만작업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고 감소
- ⊕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국 31개 무역항의 항만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항만하역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온열질환 예방 장비·물품 구입 지원
- (체감 혜택) 온열질환 대비를 위한 체온계, 물, 냉방장치, 근로자 쉼터 등 안전투자 확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항만안전관리비 용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 불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 가능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항만근로자의 항만작업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고 감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051-773-5791, 6030
- 항만물류협회: 070-5069-2610

항만 하역 일을 하는 박○씨는 여름철 폭염 속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해야 했지만 냉음료나 그늘막 같은 기본적인 온열질환 예방 물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2026년 6월 22일부터 항만안전관리비로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 여름에 아이스 조끼라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작은 배려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선박에서도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051-773-5893

선박, # 선박보안, # 보안경보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 ⊕ **추진배경**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결과는 검사 증빙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되나, 일부사용자만 결과 확인가능 등 선사(선원)의 업무 시 불편 초래
- ⊕ **주요내용**
 - 점검결과를 해당선박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동발송하는 기능 개설
 - 누리집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
- ⊕ **기대효과** 전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필요한 시간에 정보 활용 가능
- ⊕ **시행일** 2026년 하반기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가 필요한 선원, 선사 관계자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선원과 선사 담당자
- (지원내용) 전자우편을 통해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자동 발송,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계정담당자	해당선박의 선원 등
확인수단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 모바일 앱 + 전자우편을 통해 선박에 자동 발송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별도의 신청없이 시스템에 등록된 선박 전자우편으로 발송, 모바일웹에서도 기존 선사 계정으로 점검 결과정보 확인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전 세계를 운항하는 우리 선박 선원이 필요할 때 시간에 제약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정보 확인 수단 다양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051-773-5893

국제항해하는 선박은 외국 항만에 기항했을 때, 외국 항만의 점검관으로부터 선박보안경보장치 작동상태 점검결과를 요구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기존에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계정담당자만 정보열람이 가능했기에,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는 경우 적시에 정보를 열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항해하는 상선에서 항해사로 근무하는 최○씨는 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를 확인하려면 육상 본부에 연락해야 해서 즉각 대응이 어려웠으나 2026년 하반기부터 선박 내에서도 실시간으로 점검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최 씨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도 모바일기기를 통해 보안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선원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6종 검사 도입으로 공직사회 마약 확산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 044-201-8208

채용, # 신체검사, # 마약류 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 ⊕ **추진배경** 최근 국민 일상에 마약류 침투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사회 신뢰 보호를 위해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 도입
- ⊕ **주요내용**
 - (검사대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신규 채용 공무원
 - (검사항목)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6종
- ⊕ **기대효과** 채용단계 마약류 검사 실시를 통해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사전 차단
- ⊕ **시행일** 2026년 6월 16일부터

Q. 검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 법령 시행 후 신규로 채용되는 일반직·외무공무원 전체

Q. 마약류 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6종

Q.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실시 후, 임용예정기관에 검사결과서 제출

【신체검사 마약류 검사 절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검사항목	마약류 검사 미시행	6종 마약류 검사 시행
유효기간	1년	기존 신체검사 항목 1년, 마약류 검사 4개월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 (6월 16일 시행)

Q. 마약류 검사 도입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공직 내 마약류 확산을 사전 차단하여 공직사회 신뢰보호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8

*참고: 인사혁신처)누리집)보도자료)“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2026.6.9.)”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씨는 마약류 검사 추가 소식을 들었다. 평소 마약과 전혀 무관한 이○○씨에게는 큰 부담이 없지만, ‘마약’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는 데 당연히 동의한다. 이런 검사가 공직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공무원 순직심의에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 공무원 순직심 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 044-201-8079

순직, # 재해보상, # 국민참여

공무원 순직심 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 ⊕ **추진배경** 순직 심의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신뢰성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유족의 수용성 제고
- ⊕ **주요내용**
 - (참여단 구성) 성별, 나이, 직업군 등을 고려한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 10~15명 범위에서 선정
 - (운영 방식) 국민참여단이 직접 심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회 최종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 결정
- ⊕ **기대효과** 의학적·법적 판단 기준과 일반 국민의 상식 간의 간극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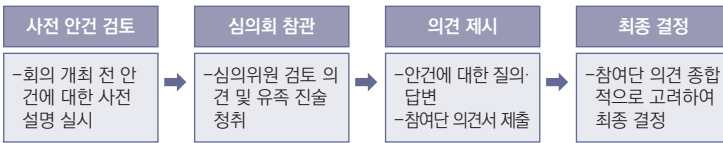
Q. 국민참여 순직심으로 선정되는 안건은 무엇인가요?

-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건, 국민의 상식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인정하는 안건으로 유족이 국민참여 심의에 동의하는 경우 실시

Q. 국민참여 순직심 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국민참여단의 ①사전 안건 검토, ②심의회 참관, ③의견 제시, ④심의회 의 최종결정 단계로 진행

【국민참여 순직심 의 진행 절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의사결정	의료·법률·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 의 판단에 따라 순직 여부 결정	심의회 의 최종 의사결정 전 국민참여단 의 의견을 참고하여 순직 여부 결정
공개여부	회의 진행과정 비공개	국민참여단에 대해 회의 진행과정 공개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6년 5월 13일 첫 시범 회의 개최, 하반기부터 분기 1회 개최 예정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참여를 통해 공무원 순직심 의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과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 044-201-8079

*참고: 인사혁신처 누리집(보도자료)“공무원 순직 심 의, 국민 참여 방식 첫 운영(2026.5.14.)”

사망한 공무원 남편의 순직 신청을 준비 중인 박○씨는 순직심 의에 전문가들만 참여하여 일반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의문이 있었다. 일반 국민이 심 의에 참여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되면 외부 시간이 반영된 더 공정한 심 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박 씨는 ‘국민이 함께 보는 심 의라면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율과 책임으로 일하고, 불필요한 일은 덜어냅니다.

-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 혁신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 044-201-8112

일하는 방식, # 혁신, # 인사처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 혁신

- ⊕ **추진배경** 정책환경 고도화에 부합하도록 일하는 방식 혁신 필요
- ⊕ **주요내용**
 - (자율·책임기반업무) 핵심업무 공개, 상시기록·피드백 기반으로 자율과 책임이 작동하도록 업무 수행
 - (AI·DATA기반업무) AI모델 개발을 통해 주요 인사업무 운영상 문제 해결
 - (단순·반복업무제거) 지능형출장앱, 학습실적등록·서명부관리 자동화 추진
- ⊕ **기대효과** 공직자 자긍심 고취와 책임 중심의 성과관리를 통한 국민 체감 행정 구현
- ⊕ **시행일** 2026년 4월 16일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 중

Q. 누가 해당되나요?

- 인사처 구성원 및 모든 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직자는 스스로 책임지는 일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조직은 성과와 책임이 분명해지며, 국민은 행정의 내용을 직접 체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자율·책임 기반 업무	지시 중심 업무 수행	핵심업무 공개, 상시기록·피드백 기반으로 자율과 책임이 작동하는 업무 수행
AI·DATA 기반 업무	기존 프로세스 의존도가 높고, AI·DATA의 전략적 활용이 제한적	AI모델 개발을 통해 주요 인사업무 운영상 문제 해결(중앙징계위원회 우선 도입)
단순·반복 업무 제거	서무 담당자의 단순·반복 업무로 인해 효율성 저하 사례 존재	지능형 출장앱, 학습실적 등록·서명부 관리 자동화로 업무 효율화 추진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핵심업무 설정과 상시 피드백, 성과기록 등 일하는 방식을 일상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현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성과는 드러내고 책임은 분명히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가치와 신뢰 완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 044-201-8112

*참고: 인사혁신처 누리집(보도자료) "자율과 책임으로 일하고, 불필요한 일은 덜어낸다(2026.4.16.)"

인사혁신처에서 근무하는 조○○씨는 부서내 단순·반복 업무로 인해 업무부담이 컸다. 그러나 4월부터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면서, 지능형 출장앱 및 학습실적 등록 자동화 등이 도입되어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044-200-6786

법령정보, # 검색, # 최신법령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 ⊕ **추진배경**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후 화면을 개선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국민이 누리는 보편적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 **주요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복잡한 화면 UI/UX을 직관적인 검색 화면과 주요 기능 중심의 단순화된 메뉴 체계로 개편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
- ⊕ **기대효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 ⊕ **시행일** 2026년 11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법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국민) 법령 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스마트폰 등 사용하는 기기에 관계없이 PC에서 보던 화면 그대로 법령정보를 이용
- (시각장애인 · 어르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지원 및 스크린리더 최적화, 어르신을 위한 큰글씨 · 고대비 화면 제공을 통해 별도의 도움 없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확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구조의 변화	메뉴 구조가 복잡하여 찾기 어려움	사용자 중심 화면으로 검색 시간 단축
접근성의 변화	시각장애인은 제한적으로 정보를 탐색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모든 정보를 탐색
환경의 변화	모바일 접속 시 글씨가 과도하게 작아져 가독성이 심각하게 저하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법령정보 가독성 확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면, 별도의 설치나 절차 없이 누구나 개선된 법령정보 서비스 이용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스마트기기의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여, 반응형 웹 기반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일관된 품질의 법령정보 접근 가능
-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최적화 지원, 고대비 및 다크모드 지원 등을 제공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법령정보 서비스 이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44-200-678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안내: 1551-3060(1번)

시각장애인 김○○씨는 매일 장애인 지원 관련 법령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스크린리더가 메뉴 구조를 정확히 읽지 못해 원하는 법령을 찾는데 매번 10분 이상 소요되었다. 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스크린리더를 활용한 메뉴이동이 편리해져 몇 번의 키보드 입력만으로 원하는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이제는 판결이 발생한 사건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적용된 법령과
법조문을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 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044-200-6788

판결문, # 법령정보, # 연혁법령

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 ⊕ **추진배경** 판례와 법령간 정확한 시점 기반 관계정보 제공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 판결문 내 인용 법조문의 정확한 연혁법령을 연계하여 법조문-판례 간 관계데이터 구축 및 제공
 - 구축된 관계데이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오픈api를 통해 제공
- ⊕ **기대효과** 판례와 법령 간 정확한 연결을 통해 법적 해석의 신뢰도 향상
- ⊕ **시행일** 2026년 12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 법령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 등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판결문에 인용된 법조문을 사건 당시 기준의 법령정보로 정확하게 확인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법조문 연결 기준	현재 법령 또는 선고일 직전의 연혁 법령	사건 시점 기준 연혁법령으로 정확히 연결
정보 정확성	실제 적용 법과 불일치	실제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확인 가능
활용성	단순 참고 수준	판례·법령 통합 이해 가능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
- 2단계: 판례 내 법조문 링크를 클릭해 사건 당시의 법령 조문 확인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법률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대폭 향상
 - 판례를 보면서 "당시 법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이해 가능
 - AI 법률서비스, 리걸테크, 연구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44-200-6788

중소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김○○씨는 2015년에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의 판례를 검토하던 중 판결문에 인용된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어느 시점의 조문인지 알 수 없어 난감했다. 현행 법령 사이트에서는 최신 조문만 나왔고, 연혁법령을 일일이 뒤져야 했다. 2026년 12월 서비스 개통 후, 김 변호사는 판결문의 법조문 링크를 클릭하자마자 해당 사건 날짜 기준의 근로기준법 조문이 바로 표시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 판례 검토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라고 말했다.

이제 밤에도, 주말에도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국가데이터 분석을 지원합니다.

- AI기반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 042-481-2350

인공지능, # 데이터, # SDC

AI기반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 추진배경**
 대용량 빅데이터의 연계 및 분석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기존 SDC는 가동 시 분석코드 오류로 인한 시스템 장애(서버다운 등) 우려로 정규 업무시간(09~18시) 내에만 제한적으로 운영
- ⊕ 주요내용**
 - (AI 코드 안정성 검사기 도입) 최신 AI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통계분석 코드(SAS, R, Python 등)의 장애 위험을 사전에 차단
 - (24시간 데이터 분석 지원) 검사기를 통과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코드는 야간 및 주말에도 시스템 중단 없이 데이터 분석 가능
- ⊕ 기대효과**
 시스템 장애 리스크 원천 차단으로 24시간 중단 없는 지능형 대국민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환경 제공
- ⊕ 시 행 일**
 2026년 7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통계데이터센터(SDC) 이용 국민 누구나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분석 시간 획기적 확대) 기존 9시간(주간)으로 제한되었던 데이터 분석 환경이 야간 및 주말을 포함한 24시간 체제로 확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분석 가능시간	9시간 (09:00~18:00 업무시간 내)	24시간 (야간 및 주말 무인 가동 포함)
장애 대응방식	코드 에러 시 시스템 강제종료	AI기반 에러 코드 사전 식별 및 원천 차단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야간분석 신청(이용자) 및 코드 안정성 검사(운영요원)
- 2단계: 검사 결과에 따른 야간 분석 및 코드 보완 후 재신청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센터에서 사용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분석 대기시간 절약: 퇴근 후에도 알아서 척척, “내 소중한 시간 절약”
- AI기반 코드 에러 방지: 초보자도 에러 걱정 뚫, “스트레스 없는 안심 분석”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 042-481-2350

*참고: 통계데이터센터 누리집(<https://data.mods.go.kr>)공지사항

경제 동향 예측 논문을 준비하던 김○○씨는 SDC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낮 시간에만 돌릴 수 있어 코드 오류로 서버가 다운될까 매일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다. AI 코드 안정성 검사기 도입 후 달라졌는데 퇴근 전 코드를 시가 10초 만에 검사하고, 분석은 밤새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결과만 확인하면 되다 보니 ‘서버 다운 걱정 없이 24시간 돌릴 수 있게 되어 논문을 예정보다 훨씬 빨리 끝냈다’고 말했다.

찾기 어려운 업종통계, 이제 ‘생활 중심’으로 한눈에 보입니다.

-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서비스과 ☎ 042-481-6948

업종통계지도, # 생활밀접업종, # 뿌리산업, # 산업분류개편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 ⊕ **추진배경** 기존 업종통계지도는 산업분류 중심으로 구성되어 국민 생활 및 산업 현장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최신 산업분류 기준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
- ⊕ **주요내용**
 - 생활밀접업종 중심으로 업종을 재구성하여 국민 체감도 제고
 - 뿌리산업을 별도 체계로 구분하여 산업 기반 분석 기능 강화
 - 최신 제11차 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 구조 변화 반영
- ⊕ **기대효과**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계 제공 및 최신 산업구조를 반영한 분석 기반 마련
- ⊕ **시행일** 2026년 6월 26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업종통계지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기업, 연구원 또는 정책담당자 등 국민 누구나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업종을 직관적으로 찾고 비교·분석 가능, 연구 및 교육자료 활용, 창업·입지 선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등 실질적 도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구성방식	산업분류 중심	생활밀접업종 중심 재구성
산업반영	일부 신산업 미반영	제11차 산업분류 반영으로 최신 산업구조 반영
산업분석	일반 산업 혼합	뿌리산업 별도 구분 제공
이용 편의성	이해 어려움	직관적 구조로 활용성 향상

Q.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1단계: 생활밀접업종 또는 뿌리산업 등 관심 분야 업종 선택
- 2단계: 지역별 업종 분포 및 특성 확인 및 분석
- 3단계: 창업, 정책 수립, 연구 등에 활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 체감형 통계 제공(생활 중심 구성으로 이해도 향상)
- 산업 분석의 정확성 제고(최신 산업분류 반영으로 현실 반영성 강화)
- 정책 및 창업 활용도 증가(실질적 의사결정 지원)

*참고: 국가데이터처 누리집(새소식)보도자료“우리 동네 상권·매출 추이를 한눈에... 진화하는 ‘업종통계지도’(2026.6.26)”

서울에서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김○○씨는 업종통계지도를 활용했지만 ‘휴게음식점’, ‘기타 서비스업’ 같은 산업 분류로만 표시돼 카페·디저트 카페·베이커리 카페를 구분할 수 없어 경쟁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 생활밀접업종 중심으로 개편된 후 ‘외식업 > 카페’ 기준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 지역의 카페 밀집도와 경쟁 정도를 한눈에 확인한 김○○씨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피해 인근 상권으로 입지를 바꿔 창업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었다. ‘내가 하려는 업종으로 바로 찾을 수 있으니 훨씬 실용적이다’라고 말했다.

고의·과실로 인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손해배상 및 과징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 ☎ 02-2110-1571

허위조작정보, # 가중손해배상제, # 과징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 ⊕ **추진배경**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피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 **주요내용**
 - (손해배상) 정보통신망에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부과 및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 할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 도입
 - (플랫폼 책무 강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자율규제 및 조치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정부는 사업자의 자율제도 운영 사항에 대해 조사 가능
 - (과징금)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반복적으로 유통한 제재자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 ⊕ **기대효과**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 최소화
- ⊕ **시행일** 2026년 7월 7일

Q. 누구나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

Q. 허위조작정보도 손해배상의 대상인가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법률적 정의가 명확해짐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도 손해배상의 대상(가중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내)에 포함
-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URL주소), 신고 이유·근거, 신고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신고된 정보의 유통방지 조치 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
- 신고자는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 당사자간 조정안 수락 및 기명날인 시 합의 성립 가능

Q. 과징금 규제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법원이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의도적으로 유통하는 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손해배상 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률적 정의 부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 명확화
분쟁조정 제도	명예훼손	명예훼손+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Q.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허위조작정보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강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억제하여 건전한 정보 생태계 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 02-2110-1571

허위조작정보 피해자 이○○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조작정보가 확산으로 명예가 실추됐지만 기존에는 긴 소송 외에 빠른 구제 수단이 없었다. 2026년 7월 7일부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가중손해배상제도 시행 후 피해를 입증해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씨는 '이제 허위조작정보 유통자가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도 현실화됐으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추천·보증 광고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044-200-4415

국민 전체, # 소비자, # 가상인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 **추진배경** 최근 AI를 활용하여 가상의 의사·교수등의 전문가 및 소비자를 생성하여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사례 남발
- ⊕ **주요내용**
 - AI를 기반으로 생성한 가상인물 표시 규정 신설
 - 매체별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예시 마련
- ⊕ **기대효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지원, 수법자의 법 위반 예측 가능성 제고
- ⊕ **시행일** 2026년 6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 생애주기의 소비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내용: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추천·보증 주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상인물' 신설 및 매체별 표시문구와 표시방법 구체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문자 중심 매체	별도 규정 미비	제목 또는 첫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 표시
사진 및 영상매체	별도 규정 미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 표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추천·보증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5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소식·뉴스)보도자료)「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시행(2026.6.1.)”

어느 화장품 회사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루언서 'OO'를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였다. OO는 SNS에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것처럼 추천하는 글을 게시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고, 자신이 AI로 생성된 인물이라는 점도 밝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이를 실제 사용 후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광고'임과 '가상인물 포함'됨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광고이며 가상인물에 의한 추천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쇼핑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044-200-4449

소비자, # 사용후기, # 온라인쇼핑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 ⊕ **추진배경** 온라인 플랫폼-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약용한 상품 사용후기 조작·삭제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 발생·제재
- ⊕ **주요내용**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플랫폼)에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그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
- ⊕ **기대효과** 사용후기를 남용한 기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
- ⊕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익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온라인 쇼핑몰이 자율적으로 결정	온라인 쇼핑물이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익제기 절차 등 정보를 의무 공개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 또는 그 연결 화면에서 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확인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기와 관련한 조작·삭제 등의 기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9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30.)”

평소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송○○씨는 종종 자신이 작성한 리뷰가 판매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온라인 쇼핑물의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익제기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자신의 리뷰가 삭제된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중앙·지방정부에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의 범정부 협력적 해결·관리를 맡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설치·운영합니다.

- 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과 ☎ 044-202-1212

집단민원, # 특이민원, # 갈등조정

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 ⊕ **추진배경**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경청과 소통」에 기반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별 집단·특이민원 총괄 직위 운영 필요
- ⊕ **주요내용**
 - (설치 대상)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및 시·도교육청 17개
 - (업무 내용) 기관 내 집단·특이민원 접수·처리 현황 파악·점검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 업무 총괄,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조정 등 갈등 해결 지원 역할 수행
- ⊕ **기대효과**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민원과 관성·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현장 책임자 지정, 국민 불편·갈등 대응 역량 및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 해결 역량 강화
- ⊕ **시행일** 2026년 5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집단민원·특이민원 등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국민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부서·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직무 담당	기관마다 일반·고충·집단·특이민원 등 민원 유형별 담당 부서가 제각각, 민원 청구 분산 및 행정 비효율 발생	집단민원·특이민원 관련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담당관을 기관별로 지정하여, 일원화된 청구를 통해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민원 대응 강화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서 제출 등을 통해 집단·특이민원 접수 시,
-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이 민원의 접수·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과 협력하여 해결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4월부터 각급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추진, 다수 기관이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과 행정기관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합의로 집단민원을 해결,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해결되는 국민 중심 행정 실현
- 경청과 소통을 통한 관성·반복적 특이민원 대응을 통해 국민의 해묵은 민원 해소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과: 044-202-1212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 책임관리(2026.5.12.)"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있는 국가 소유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와 벌레가 무성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여건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많은 주민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담은 민원을 제기했으나 장기간 대책이 수립되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원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 방치 건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뤄, 2천 명이 넘는 인근 주민·학생의 고충이 해소되고 환경권과 통학권이 개선되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표준화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 044-200-7127

공정채용, # 채용비리, # 청년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 ⊕ **추진배경**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공무직·기간제·단시간)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채용절차의 기준과 원칙 등에 관한 규정 표준화 필요
- ⊕ **주요내용**
 - (채용심의기구) 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 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채용 관련 심의기구 설치·운영
 - (채용원칙)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 수립 또는 공고내용 변경 등 금지
 - (심사위원) 외부위원 포함 원칙, 친족·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 금지 등
 - (피해자 구제)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 근거 및 피해자 구제 기준 마련
- ⊕ **기대효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 **시행일** 2026년 7월 7일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에 지원하는 구직자, 채용비리 피해를 입은 구직자

Q. 비공무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의미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채용규정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규정의 형식 및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관별로 상이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 절차의 기준 및 원칙 등이 표준화되어 통일된 비공무원 채용절차 확립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지고,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 문화가 확산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문의(044-200-7127)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2026.4.6.)”

모 중앙부처 공무직 채용에 불합격한 이○○씨는 본인이 지원한 기관의 기관장 가족에게 유리하게 채용공고가 변경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후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막막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이 시행되어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 수립 또는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채용비리 발생시 채용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한다.

수소의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행위 공익신고됩니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044-200-7754

공익침해행위,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보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 ⊕ **추진배경** 수소경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소의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 ⊕ **주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에 포함
- ⊕ **기대효과** 수소의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호) 공익신고자등(신고자, 협조자)은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분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보상) 신고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비용의 절감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에 미포함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에 포함
지원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지원 없음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익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위반내용·증거자료를 갖춰 국민권익위원회·수사기관·국회의원 등에 기명 문서로 신고
- (보호·보상 신청)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 등을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신고 동기를 부여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4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상담: 국번없이 1398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주채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국·공유지가 불법으로 무상 양도되는 사실을 발견한 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하였다. 신고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공공기관 재정 손실이 회복됐고, 이○○씨는 보상금 18억 2,130만원을 지급받았다.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합니다.

-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 044-200-7274

청소년, # 정책참여, # 참여권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 ⊕ **추진배경**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생각함(국민정책참여 플랫폼)에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 ⊕ **주요내용** 청소년들의 관심이 큰 교육·청소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청소년 정책 패널' 대상으로 의견 수렴, 미래세대 시각에서 일상생활 속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등
- ⊕ **기대효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 육성되는 효과 도모
- ⊕ **시행일** 2026년 4월 13일부터 패널 모집, 하반기 본격 활동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미만의 초등학교(5-6학년),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 관심이 큰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청소년 정책 패널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응모로 직접 정책 제안
 -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상시), 행정기관 탐방 및 간담회(11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우수 참여 패널 시상(12월)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	청소년 관심사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확인: 청소년 정책 패널 연령 확인
 -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
- 신청: 국민생각함 패널 가입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패널 가입 불가 통보를 받지 않는 경우 외에는 모두 패널 가입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청소년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 육성되는 기반 마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 044-200-7274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모두의 생각, ‘국민생각함’에 모여라(2026.4.13.)”

정책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이○○씨(17세)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 어른들 관점에서만 만들어진다고 느꼈다. 국민생각함 청소년 패널 모집 소식을 듣고 나서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설렌다.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대를 통한 본인정보 직접 관리, 공공부문부터 시행됩니다.

-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 02-2100-3172

#마이데이터, #본인전송, #전분야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 ⊕ **추진배경**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 ⊕ **주요내용**
 -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분야 확대) 정보전송자 범위를 의료, 통신 분야에서 분야 관계 없이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 * ▲평균매출액등이 1,800억 초과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정보 처리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제3차대상정보전송자
 - (개인정보 전송(다운로드))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내려받는 형태,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 사용시 안전한 전송방식 사전협의
- ⊕ **기대효과** 정보주체가 원하는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
-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평균매출액등·정보주체수 기준 전송자 시행일: 2027.2.20.)

Q.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서, 모든 국민
- * 국민(정보주체)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받는 개인정보처리자

Q.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전 분야의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다운로드 등)해줄 것을 요구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본인대상정보전송자	의료·통신분야 개인정보처리자	▲평균매출액등 및 정보주체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제3차대상정보전송자
대상 정보	의료·통신분야 고시 정보	해당·동의, 계약, 법령에 의해 수집된 정보 제외: 1)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2)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타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기관이 본인대상정보전송자 해당여부 확인→(해당시)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전송요구 방법·대상정보 확인 후 전송 요구
- ※ ▲평균매출액등·정보주체수 기준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개별확인 ▲공공시스템운영기관: 국세청, 건보공단 등(개인정보외 홈페이지 게재) ▲제3차대상정보전송자: 상급종합병원, 통신3사 등(개인정보외 고시)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국민이 원하는 자신의 정보를 전송(다운로드)받아 상시 관리, 활용 가능
- 본인이 전송받은 정보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에 제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02-2100-3172, 3176
- 한국인터넷진흥원 마이데이터팀: 061-820-2660, 2662

*참고: 개인정보위 누리집|보도자료|'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2026.2.10.)"

직장인 한○○씨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의 효과로서, 여러 대형병원에 흩어져 있는 건강검진, 진료내역 등을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거나(의료), 필요할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장기 치료 중인 질병에 부담이 적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고(고용), 치료 중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복지지원금 신청을 자동 안내받을 수 있으며(복지), 구매 내역을 분석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추천받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유통).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께서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02-2100-3102

개인정보, # 유출, # 통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 **추진배경**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 의무를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로 한정하여 유출등 가능성이 있는 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
- ⊕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 통지
- ⊕ **기대효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초기 단계부터 정보주체에게 미리 통지하여 정보주체가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 ⊕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Q. 누구에게 통지하는 건가요?

-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
-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통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개인정보처리자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통지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통지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초기 단계부터 미리 통지해 국민(정보주체)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 대응 및 불안 최소화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00-3102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2026.3.9)”

직장인 이○○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특정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불법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 사이 다른 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무단 로그인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유출 가능성이 있으면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유출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비밀번호를 바꾸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기업·기관 대표자(CEO)가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 02-2100-3082

CEO, # 최종책임자, #총괄관리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 ⊕ **추진배경**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는 대표자(CEO)의 책임 규정이 전무하고 일반 임직원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총괄책임을 지는 구조로 기업 수장인 CEO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인식 저조
- ⊕ **주요내용** 기업·기관의 대표자(CEO)에게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책임자로서 전문인력과 충분한 예산 지원 등 총괄적 관리조치 법제화
- ⊕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가 규제 준수나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업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경영의 핵심의제로 인식을 전환하여 전사적·상시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
- ⊕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Q.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개인정보처리자(기업·기관)의 소유주 또는 대표자(CEO)

Q. 어떤 의무를 수행하나요?

- CEO는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예산·인력 확보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할 의무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자(CEO)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무) 전무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책임자로서 총괄 관리 의무 수행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기업·기관의 대표자(CEO)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해 상시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신뢰도 제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2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2026.3.9)”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씨는 개인정보 보호는 IT 담당자 일이라고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2026년 9월 11일부터 CEO에게 개인정보 총괄 관리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이제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CPO를 제대로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영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병원 근무 방사선 업무 종사자는 혈액검사 항목이 4개로 통일, 이직·업무변경 시에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273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 #혈액검사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 ⊕ **추진배경** 원자력안전법·의료법·수의사법 등 적용 법에 따라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에 차이가 있어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 ⊕ **주요내용**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도록 개선
※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로 일치시키고 진단결과 서식을 통일
- ⊕ **기대효과**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직 또는 업무변경으로 소관 법령이 달라질 경우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가능
- ⊕ **시행일** 2026년 7월(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병원 등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이직 및 업무변경 등으로 원자력안전법·의료법·수의사법 등 적용 법령이 변경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켜 이직 및 업무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더라도 건강진단 상호 인정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종사자	적용법이 달라질 경우 건강진단 재검	유효기간 내 재검 불필요
의료기관	적용 법령마다 다른 서식 발급	표준화된 통합서식으로 진단결과 발급
추가 경비 등 부담	재진단시 추가비용 부담	1회 진단비용만 부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21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043-719-7512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044-201-2652

*참고: 원자력안전위원회(보도자료)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2026.3.20.)”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의료법」 적용을 받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X선) 취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원자력안전법」 적용을 받는 방사선발생장치인 선형가속기(LINAC)를 취급하는 사람이 이직을 하게 되어 조만간 그 업무로 변경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소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이 달라 다시 피를 뽑아야 했는데 이제는 법령 장벽 없이 건강진단 결과가 상호 인정되어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으로 위해물품은 철저히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강화합니다.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042-481-7852

국민안전, # 해외직구, # 전자상거래통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 ⊕ **추진배경** 급증하는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약용하는 불법·부정행위를 차단하고, 통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함
- ⊕ **주요내용** 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보유한 거래정보(주문·결제 등) 사전입수, ②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③ 전자상거래 공급망 정보 기반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 ④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 ⑤ 전자상거래 전용 웹 구축
- ⊕ **기대효과** 해외직구를 약용한 위법행위 차단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환경 조성
- ⊕ **시행일** 2026년 8월 15일(오픈 예정)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혜자) 해외 물품을 사이버몰을 통해 구입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위해물품 차단) 마약·총기·유해 식의약품 등 위험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사전 차단
 - (개인정보 강화) 새로운 본인 인증체계를 도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를 원천 차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위험관리	과거 적발 이력으로 선별	사전거래정보 입수를 통한 선제적 차단
신고 체계	기존 B2B기반 일반 신고서 사용	B2C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도입
개인정보 보호	고정된 부호 반복 사용	일회용 부호 및 인증번호 도입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ecos.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상태 확인(8.15. 오픈예정)
- 2단계: 온라인(통관포털 본인 인증) 또는 세관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정보변경 신청
- 3단계: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도입으로 통관절차 안전성 강화, 포털에서 개인별 통관 현황, 인증번호 발급내역 등 실시간 조회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2
- 관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25
-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88-1285

참고: 관세청 누리집(보도자료)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본격 돌입(2025.1.14.)

해외 직구를 즐기는 김OO씨는 결제할 때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돼 모르는 물건이 내 이름으로 들어올까 걱정됐다. 8월 15일부터는 누군가 김OO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순간 본인에게 즉시 알림 문자가 오자 김OO씨는 "이제 해외 쇼핑물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도 불안하지 않아 마음 편하게 직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정부24 등 190여개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02-6399-7174

재외국민, # 재외국민인증서, # 정부24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 ⊕ **추진배경** 재외국민이 정부24, 국민연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국내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재외공관 방문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 존재
- ⊕ **주요내용** 정부24, 국민연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재외국민 인증서를 확대 적용
- ⊕ **기대효과**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개선
- ⊕ **시행일** 2026년 5월 6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만14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외국민은 해외 휴대전화로 정부24, 국민연금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재외국민 인증서”로 민원신청, 서류발급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활용처 확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등 20여개 웹사이트	정부24, 국민연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190여개 웹사이트

Q.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1단계: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조건(재외국민 등록, 주민번호, 유효 전자여권, 만 14세 이상) 확인
- 2단계: 해외 휴대전화에 간편인증서 앱을 설치하고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 (간편인증서 앱)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토스, 아이핀
- 3단계(활용): 공공기관 웹사이트 접속 → 로그인 시 ‘간편인증’ 선택 → 해외 휴대전화 번호 입력 →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외 체류 재외국민들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민원, 국민연금 등)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02-6399-7174, 7171
-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 044-205-2742, 2741

*참고: ① 재외동포청 누리집(알림·소식·소통)보도자료)“재외국민, 국내 휴대전화 없어도 ‘재외국민 인증서’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한다(2026.5.6.)”

②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누리집(민원신청)인증서)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해외자사에 근무중인 노○○씨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 방문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나, 이제는 해외 휴대전화에 재외국민 인증서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아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 032-585-3119

재외동포, # 협력센터, # 통합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 ⊕ 추진배경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업무 중복 해소 및 효율화를 위한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필요
- ⊕ 주요내용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과 인력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여 조직 일원화
- ⊕ 기대효과 정부 예산 절감 및 재외동포 대상 효율적인 사업 수행
- ⊕ 시 행 일 2026년 10월 1일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사업 수행 주체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청
행정 서비스	정책 집행 이원화로 동포 지원 관련 행정창구 혼선	재외동포청으로 창구 단일화
예산 절감	경상운영비(임대료, 운영비 등) 중복	경상운영비 등 절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원스톱 행정 체계 구축: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까지 창구를 일원화하여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
- 정부 예산 절감: 재외동포협력센터 경상운영비 등 중복 비용 제거를 통해 정부 예산 절감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032-585-3119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2-585-3200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김○○씨는 한국 방문 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에 각각 연락했지만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매번 헷갈렸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재외동포청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제 어디에 물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동포 서비스가 한결 쉬워졌다'고 말했다.

연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연안사고를 예방해 나갑니다.

- 연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032-835-2248, 2239

연안, # 안전관리, # 사고예방

연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 ⊕ **추진배경** 연안은 해양레저, 낚시, 관광 등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이며, 일반 국민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정책 지속 추진 필요
- ⊕ **주요내용**
 - 다기능(열화상 카메라·방송장비 등) 순찰 드론 5대를 배치(2026.9월 중)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갯벌에서의 안전순찰 등 역할 수행
 - ※ 2030년까지 총 77대 도입(2026년 5대→2027년 20대→2028년 20대→2029년 20대→2030년 12대)
 - 연안 위험구역 민간순찰요원인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및 활동시간 확대**
 - *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 194명 배치(2026.5.~10.)
 - ** 활동시간 확대(月 51시간 → 80시간)
 -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운영(2026.4.~12.)
 - ※ 최근 5년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운영 실적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참여학생(명)	22,867명	40,813명	80,197명	106,793명	117,614명

- ⊕ **기대효과** 연안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안전에 기여
- ⊕ **시행일** 2026년 4 ~ 12월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해양경찰 파출소에 연안순찰 드론을 배치해 갯벌 고립 사고 예방
- 지역주민 ‘연안안전지킴이’가 위험구역 순찰과 안전시설물 점검
-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통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기회 제공 등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835-2248, 2239

갯벌에서 해루질 활동을 하는 낚시객 박○씨는 “아간에 해루질 활동 중 드론이 접근하여 갯벌활동 안전정보(밀물 시간) 등을 방송 장비를 통해 제공해 주어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어 안심이 되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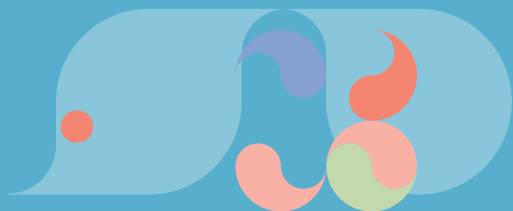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신구대비표



01 금융·재정·조세

재정경제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지연 가산세(①+②) ① 지연에 대한 이자 - 법정납부기한~납부일: 미납세액×1일 0.022% ②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방법 개편 ① 체납이후 월단위 부과로 변경 -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 미납세액×1일 0.022% - 지정납부기한~납부일 : 미납세액×매 1개월 마다 월 0.66% ② (좌 등) 	국세기본법 (‘26.7.1.)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 외납세액공제 대상 소득 • 배당소득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소득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소득 추가 • (좌 등) • 이자·연금·퇴직·기타소득 <p><small>※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small></p>	소득세법 (‘26.7.1.)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2)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연 1,8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p><small>※ (참고) 2025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편안</small></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26.4.1.)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밀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의 주류제조·저장·판매용 기계·기구·용기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밀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주류 제조·저장 용기 신고 및 제조 면허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시 용기 신고 간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6.7.1.)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7)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 (이월공제)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p>☞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참고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p>	조세특례제한법 (‘26.7.1.)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관장이 자율발급 지정한 자는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p>☞ (참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p>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6.7.1.)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 일반 혁신제품 평가 (공공성, 혁신성) 기준 적용	● AI 제품에 별도 심사기준 적용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 "구윤철 부총리 AI 혁신기업 현장 방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26.9월경)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044-215-5233)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042-724-7203)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 국가계약의 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 15%	● 국가계약의 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 10%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 "공공계약 참여기업 부담 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5.13.)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 최초 선금 지급시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	● 최초 지급시 의무지급률 범위내(30~50%) 지급 (단, 발주기관 판단하에 필요시 의무지급률 초과 선금지급 허용)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6.2.2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26.7.1.)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044-215-5211)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09:00~다음날 새벽 2시	●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월요일 6시~토요일 6시 무중단 운영 ☞ (참고) 재정경제부 누리집) 보도자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발표"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044-215-4731)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044-215-4713)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은 3년 이내 투자 의무 비율 준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기한을 5년으로 확대 <p>※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안내(2026.1.06.)"</p>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투자조합 GP가 운영하는 전체펀드 의무(40%), 개별 펀드의 투자 의무(20%) 준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펀드의 투자 의무 폐지 <p>※ (참고) 중기부 누리집) 보도자료)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안내(2026.1.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인정 투자 대상은 "초기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정투자 범위에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5년내 창업기업" 포함 <p>※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안내(2026.1.06.)"</p>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044-204-7728)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취업 연계 상환지원 제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 	소상공인기본법 제4장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25.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후 근속과 연계한 금리감면 제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대출잔액에 대해 0.5%p 금리감면 지원 	

기획예산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판매점과 PC로만 구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로도 구매 가능 • 다만, 모바일은 월요일 ~ 금요일만 구매 가능 *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보호를 위해 주말 제외 <p>☞ (참고)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복권기금 배분은 현장 수요에 맞게, 이제 로또 복권도 모바일에서" 20여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 추진</p>	복권 및 복권기금법 ('26.2.9.)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 (044-214-3431)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정 위주 재정정보 공개 ● AI 서비스 제한적 운영 * 재정보고서 4,000여건 학습 ● 공급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교육 재정 정보 통합 제공 ● AI 검색 서비스 고도화 * 재정보고서 및 사업설명자료 등 82,000여건 학습 • 사업설명자료 등 공개기준 및 범위도 통일 • 통계·보고서 분석 AI 신설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정 콘텐츠 확대 • '온라인 재정박물관' 신설 	국가재정법 제9조 ('26.12월)
			기획예산처 열린재정정보과 (044-214-1950)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30~40% ● 지역업체 우대 제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35~45% ●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업체 우대가점(~10점) 신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26.2.13)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044-214-3334)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단체와의 협약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사업자단체의 요건 및 관련절차 미규정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약요청 시,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사업자단체의 요건 등 규정, 등록제 운영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약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시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규정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소식 뉴스) 보도자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12.3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1)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보증의무 면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 ②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 ③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제사유 대폭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의무 면제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8.1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4956)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연동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에 대해 연동 의무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8.1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495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피해 하청업체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상금 지급 대상에 피해 하청업체도 포함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3.25.)"</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8.1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 4955,4956)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합에 대해 최소 0.5%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등 과징금 제도가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역부족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과징금 가중 공정위 조사 협조 시 10%까지, 심의 협조 시 10%까지 각각 과징금 감경 위반행위 자진사정 시 위반 효과 제거 정도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감경 가벼운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 시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합에 대해 최소 10%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 가중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 공정위 조사·심의 모두에 협조한 경우에 한하여 10%까지 과징금 감경 위반 효과가 상당 부분 제거된 경우에 한하여 10% 범위 내에서 감경 가벼운 과실에 따른 과징금 감경 규정 삭제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소식·뉴스)공정위 소식)보도자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p>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6.4.30.)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34)

금융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가지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상금 지급상한 30억원 ●위반행위 중요도,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10등급)로 지급 ●금융위·금감원 신고시에만 지급 ●가담자가 고발·수사기관 통보된 경우 포상금 지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부당이득 30% 지급 ●경찰청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공유·이첩시 지급 ●타인에게 불법행위 참여강요하거나 반복위반이 아닌 한 가담자도 지급 <p><small>※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가지작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2026.5.20.)</small></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26.5.19.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91/ 02-2100-2688)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SCB)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들은 대출 심사시 미래 성장성 평가 없이 기존 신용등급으로만 심사를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대출 심사시 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p><small>※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금융이력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2026.4.10.)”</small></p>	없음 (‘26.8월~ 시범운영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5)

국세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챗봇은 정해진 질문만 답변하고 대화흐름 파악의 한계로 납세자의 상담에 한정적인 답변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챗봇은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여 납세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증된 학습자료에 기반한 폭넓고 유연한 상담 서비스 제공 	(‘26.5.1.)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044-204-4452)
국세·국세외수입 채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국세 채납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납 촉소를 위한 노력에도 누적 채납액 지속 증가 ●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영세사업자가 국세 채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 발생 	<국세 채납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채납관리단」의 채납자 전수 실태확인으로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생계형 채납자에 대한 납부무소멸, 복지연계 등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 	(‘26.3.5.)
	국세청 채납분석과 (044-204-3042)		
국세·국세외수입 채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국세외수입 채납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외수입은 기관별로 개별관리되고 있어 징수 인프라 부족 등 관리 미흡상태 지속 ● 징수 전문성 부족, 채납정보 부실 등으로 미수납액 증가 	<국세외수입 채납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전문성을 가진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채납 통합관리체계 구축 ● 「국세외수입 채납관리단」 신설하여 누적 국세외수입 채납실태를 파악하고 전수 실태확인을 통한 채납자 유형별 징수체계 구축 	(‘26.7.1.)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02-760-9163)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도 과세관청에서 조사 일정 등을 일반적으로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부담 등 불편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조사 대상자가 사전에 조사일정을 안내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부담 축소 및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6.4.2.)
			국세청 조사기획과 (044-204-3512)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지역기준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 정비하여 544개 지역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가능하여 민생경제 활력 및 조세 형평성 제고 	간이과세 배제기준 ('26.7.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01)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시 고려해야 하는 각종 세무상 애로사항에 대한 소통창구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국내복귀 관련 세무컨설팅 제공 	('26.7.1.)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044-204-2812)

관세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비용 지급 신청은 해당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전산잔액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6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전산잔액 등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6.7.1.)
			관세청 통관검사과 (042-481-7866)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로 출국할 때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입국하여 교환요청할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며, 재출국 시에 교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시 자진신고할 필요없이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택배·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환 가능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6.7.1.)_예정
			관세청 보세산업과 (042-481-7853)

조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가 있을 경우만 조사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조사 가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6.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의 부당요구 금지 및 시정요구권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의 부당요구 금지 및 시정요구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거부·불응기업에 대한 제재수단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거부·불응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042-724-6028)
공공조달 종합·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공사업만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공사업 + 전문공사업 대상 입찰자격 사실조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6.7.1.)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628)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 - 80.495~87.995% ●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 79.995~87.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 - 82.495~89.995%(+2%p) ●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 81.995~89.745%(+2%p)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6.5.26.)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302)

02 교육·보육·가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AI디지털배움터 확대 및 고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실생활 디지털 교육 제공(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3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AI·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실생활 디지털 교육부터 AI기본역량까지 제공 (AI디지털배움터 69개소) 	(~'26.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2)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이 AI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라는 인식으로 사용을 주저 ● 글로벌 AI 모델 대비 국산 AI 서비스 활용 기회는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경험'을 통해 AI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AI의 중요성을 인식 ● 국내 AI 서비스 확산의 계기로 적용 	(~'26.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기반조성팀 (044-202-6316)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학 중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학 교육에 과학관 특화 AI 교육까지 확대 	(~'26.10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042-601-7940)

교육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첨단분야 교육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비재학생) 대상으로 첨단분야 및 첨단 외 분야(인문·사회, 예술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과정 제공 ● 청년층 사회참여, 마음건강, 경력설계 등 맞춤형 종합 지원 <p>※(참고) 교육부 누리집<보도자료>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계획 공고 안내"</p>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계획 공고 ('26.4.29.)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044-203-725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학자금지원 5구간이하 ●(기간) 대출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학자금지원 6구간이하,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이하 ●(기간) 대출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졸업 시점 무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6구간-'26.7.1.) (지역 8구간 - '26.11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9)

성평등가족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지급 ●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① 소득기준 폐지 ②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지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26.10.29., ②'26.4.28.)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추가 	- ('26.6월)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9)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가족센터별 개별 홈페이지 안내 ● 지역 가족센터별 비정기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센터 통합 홈페이지(familynet.or.kr)에서 종합 안내 등 교육정보의 접근성 향상 ● 가족센터 가족관계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센터별 교육주간 운영(매월 셋째주) - 주말·야간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 기업, 학교 등 찾아가는 가족관계교육 	- ('26.7월)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23)
성별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 및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들의 소통 공간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을 본격 운영하고,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 ('26.하반기)
			성평등가족부 성형평성기획과 (02-2100-6144)

국가교육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국민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절차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국민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절차를 진행 <p>☞ (참고)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 > 국민의견플랫폼</p>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6.6~7월 중)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소통기획과 (02-2100-3381.3384)

03 보건·복지·고용

외교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지역인재를 추천받아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파견하여 6개월간 일경험 기회 제공 	(‘26.7~12월)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 (02-2100-8482)

국가보훈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제주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일부만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제주 거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준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법 (‘26.8.20.)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044-202-5693)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이 제대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조국수호장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여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26.8.20.)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6)

보건복지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시행(인천, 충북, 울산, 전북)	● 위기가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7개 시도에서 본사업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6.3.26.)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044-202-3702,3703)
취장의 인술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 15개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16개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취장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26.7.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8)
필수과목 전문대 대상 지역근무수당 등 지원	● 4개 지자체 시행(강원, 경남, 전남, 제주)	● 6개 지자체 시행 확정(강원, 경남, 전남, 제주, 충남, 경북) ● 공모를 통한 5개 지자체 추가 선정 및 보건의료원 16개소 지원 예정 ※ (참고) 보건복지부 알림)보도자료>충남·경북, 울하반기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2.24.)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3)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소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25.12~'26.4) 68개 시군구에서 129개소 운영 ● 본사업('26.5.18~) 158개 시군구에서 280개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시행('26.9~) 229개 시군구에서 300개소 운영 <p>※ (참고) 보건복지부)보도자료)“꼭 필요한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 운영체계 재정비 추진”</p>	시범사업 시행 ('25.12.1~)
			본사업 시행 ('26.5.1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61)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사업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에게 사회복지 일 경험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사업 신설 <p>※ (참고) 보건복지부누리집)보도자료) “청년은 일경험을 통해 성장, 돌봄 현장은 인력난 완화”</p>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사업 추경 편성 ('26.4.1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4-202-327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소아의료 취약지역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새롭게 운영하여, 소아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취약지-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 시작*(2026.4.1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6.5.1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6)
주류용기· 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건강상 위험 및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문구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건강상 위험 및 임신 중 음주 위험, ‘<u>음주운전 금지</u>’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 표시, 경고문구 글자 크기 등 확대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 ‘음주운전 금지’경고도 추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26.11.9.)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1)

고용노동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6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임금채권 보장법 (‘26.8.2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26.12.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4-202-7545)
단기 육아휴직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단기 육아휴직 사용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확산하여 지급 (하위법령 개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6.8.20.)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05,747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출산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육아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 급여자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육아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6.9.18.)</p>
			<p>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1, 7412)</p>
난임치료 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급여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 급여자원 <p><small>※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 보도자료)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small></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6.11.27.)</p>
			<p>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045, 7438)</p>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지역 업종 고용위기 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 지원 사유에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 경우 추가 	<p>고용보험법 제21조 ('26.5.12.)</p>
			<p>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9)</p>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이 휴업·휴직으로 구분 (유급) 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휴직: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업: 30일 이상. 휴업,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휴직: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휴직, 30일 이상 휴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을 통일 (유급)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휴업수당 지급 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고용보험법 제21조 ('26.5.12.)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9)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7호 ('26.6.1.)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3)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26.7.1.)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3)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 이상 저조 ●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 직전 12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신청사유: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등)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12개월간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동기비 5% 이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6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 이상 저조 ● 직전 6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 직전 6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신청사유: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회사사정 등)가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26.5.4.)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3)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다만,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26.7.1.)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까지 지원 확대 <p>☞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뉴스·소식)보도·설명)“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p>	고용보험법 시행령 (26.7.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자율기획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자율운영·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p>※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청년의 도약을 돕는다! 「K-뉴딜 아카데미」 본격 시동(2026.4.22.)"</p>	('26.6월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9)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p>* 주말훈련에 참여한 재직자에게 훈련수당 5만원 지급</p>	고용보험법 시행령 ('26.7.1.)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317)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7조 ('26.10.8.)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8)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퇴직급여 채불범죄 법정형 상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6.9.18.)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657)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대상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일하는 모든 사람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26.7.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7560)

성평등가족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바우처 방식 지원(월 1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 대상,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지급기) 비치 (기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병행)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34조 (2026.7.)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02-2100-6157)
지방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육성'이라는 수혜 대상으로 인식 ※ 청소년위원 위촉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직접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자로 전환 ※ 청소년위원 위촉 명문화 	청소년기본법 (26.10.29.)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8)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대표자의 선출) 승무 중인 선원 간 호선(互選)으로 안전대표자 1명 이상을 선출 ●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위험성 평가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대표자의 선출) 승무 중인 선원 간 호선(互選) 또는 임명(任命)으로 안전대표자 1명 이상을 선출 ●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선원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장소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26.12, 잠정)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773-5745, 5768)

기획예산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신설	●(해당사항 없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약 지원) 설립 5년 미만의 초기 협동조합 30개소 대상 최대 1천만원 상당의 인사·회계·협동조합 운영 등 관련 경영 컨설팅 제공 ●(고도화 지원) 설립 5년 이상의 본격적인 규모화(Scale-up)가 필요한 성장기 조합 27개소 대상 최대 5천만원까지 사업 고도화 지원 	협동조합 기본법 (‘26.6~7월)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044-214-1753)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일로 단축	●신약 420일(‘23), 바이오시밀러 406일(‘22~24), 신기술의료기기 398일(‘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 240일 ☞ 동시·병렬심사 및 수시검토·보완·접수 체계 도입, 허가·심사 체크리스트 개발·제공,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 등 소통 확대 	신약 품목 허가·심사 업무절차, 신기술의료기기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26.6.1.)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정책추진단 (043-719-137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관(사람)이 서류검사 실시하여 수입신고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처리기간 최대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된 시스템이 서류검사를 실시하여 실시간 처리 가능(365일 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처리기간 5분 이내 처리 가능 	위생용품 관리법 ('26.5.1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26.5.12)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4)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의무화(영업자) 및 검사 결과의 공개(식약처) 	담배유해성관리법 ('25.11.1.)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팀 (043-719-1796)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처리기간 약 4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처리기간 25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6.9.30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043-719-5353)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보도자료 > *식약처, 2등급 의료기기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시범사업 실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질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대상) 시각·청각장애인 ●(적용범위)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대) (신 설) ●(방송 품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적용범위)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추가 ●(편성시간대)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의무 신설 * 평일 19시-23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23시 ●(방송 품질)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 추가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고시('26. 下)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02-2110-1465)

소방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방관 전문진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 반영 특화 공공병원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소방병원을 통한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 화상·재활·정신건강 관리, 건강검진, 총복 지역주민 외래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6.2.27.)
			소방청 구급의료팀 (044-205-7095)

질병관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7세 여성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7세 여성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과 12세 남성청소년에게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p>☞ (참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보도자료>“남학생도 이제 무료접종, 5월부터 12세 남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시작”</p>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26.5.6.)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65)
국가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인체위해성 심사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연구용 LMO) 제한적인 약제내성 유전자 승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숙주-벡터계 확대로 면제 범위 확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6.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용 LMO) 심사 기간 270일, 13개(세부 항목 102개) 항목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기간 90일 (180일 단축), 6개 항목(세부항목 24개) 제출 (절반 이상 축소)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2)

04 문화·체육·관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전시품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기술(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슈트, 증강현실 등)과 초능력을 융합한 체험 전시품 도입 	(‘26.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개념별 체험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수강생 콘셉(입학부터 졸업까지)으로 몰입형 전시체험 제공 	국립중앙과학관 산업기술팀 (042-601-7988)

법무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이상 심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초과부터 인원 구간별 차등 배점 지역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 의료기관) 현행 유지 (유치업자) 유치실적 200명 이상 심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 의료기관) 현행 유지 (유치업자) 유치실적 200명 초과부터 인원 구간별 차등 배점 지역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 부여 	의료관광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25.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 부여 <p>※ (참고) 법무부 누리집)보도자료) “법무부, 의료관광 비자 개선을 통해 지역 특화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 가동(‘26.4.17.)</p> <p>법무부 누리집)보도자료) “현장 의견이 곧 정책... 법무부, 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26.2.10.)</p>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할인쿠폰 적용 시 경로/장애인 할인 대상자 등 온라인 영화 예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할인쿠폰 적용 시 경로/장애인 할인 대상자 현장 할인 적용 가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6.5.13.)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044-203-3232) 영화진흥위원회 공정성장팀 (051-720-4743)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분야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전시·영화 분야 최대 20만원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 최대 20만원 지원금 지급 	문화예술 진흥법 (‘26.11.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6)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접속차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차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접속차단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차단) 문체부장관의 긴급차단(임시) 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접속차단 확정(최종) ● (접속차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제도로 존속 	저작권법 (‘26.5.1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09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압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크로 이용한 구매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크로 이용여부 무관하게 모든 압표 부정거래행위 금지 ● 신고 접수·처리 기관 지정, 부정거래 확인자료 제출명령 등 ● 부정판매에 대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압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p>공연법 (‘26.8.28.)</p> <p>국민체육진흥법 (‘26.8.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p>〈신 설〉</p>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크로 이용여부 무관하게 모든 압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매크로 이용여부 무관하게 모든 압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정판매 행위 관련 취득 금품이나 그 외 이익 모수 또는 가액 추정 가능 ●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확인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예외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p>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2)</p> <p>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p>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신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 미술 서비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 미술 서비스업자의 영업의 승계 • 미술 서비스업자의 신고의무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p>※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현행법령>미술진흥법</p>	미술진흥법 (’26.7.26.)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8)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면적 기준) 160㎡ ● (총면적 내 직사각형 공간) 전용면적만 가능 ● (성인 측정 공간 기준) 2m×1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면적 기준) 120㎡ ● (총면적 내 직사각형 공간) 인접, 공용공간 활용 가능 ● (성인 측정 공간 기준) 2m×5m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26.5.2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7)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립청주 해양과학관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권 중심의 과학관(국립울진해양과학관) 운영으로 내륙권 국민의 해양과학문화 향유 기회에 지역적 제약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륙권 국민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해양과학 전시·체험·교육 기회 확대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남기헌 씨 임명”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3.21.)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51-773-5229)

재외동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세계한인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 동포들과 국민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 전무 분야별·세대별·지역별 재외동포 관련 행사 분절 개최 ※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세계한상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 동포들과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세계한인대회” 신설 재외동포 관련 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하고, 해당 주간에 “세계한인대회”를 신설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2-585-3200, 3205)

국가유산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민속 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부담) 소유자 부담 원칙 ● 화장실, 욕실 설치를 위하여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보조) 문화유산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조 가능 ● 물사용공간 별도로 연결 설치 허용 (화장실·욕실 2칸(8㎡) 이내)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26.6.30.)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042-481-4945)

05 환경·기상·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재난담당 공무원간 도시침수 관련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폰 위치 기반으로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포함한 정보를 국민, 지자체, 경찰, 소방에 제공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26.6.3주)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044-201-7662)
충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시간에 충간소음 문의 및 상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언제든지 충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충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이용 가능 	소음·진동 관리법 ('26.9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79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탄소중립 국민실천 자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실천 항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실천항목 구분</th> <th>포인트 산정 금액</th> </tr> </thead> <tbody> <tr><td>1. 전자영수증 발급</td><td>10원/건</td></tr> <tr><td>2. 텀블러·다화용컵 이용</td><td>300원/개</td></tr> <tr><td>3. 일회용컵 반환</td><td>100원/개</td></tr> <tr><td>4. 리필스테이션 이용</td><td>500원/회</td></tr> <tr><td>5. 다화용기 이용</td><td>500원/회</td></tr> <tr><td>6. 무공해차 대여</td><td>100원/km</td></tr> <tr><td>7. 친환경제품 구매</td><td>500원/건</td></tr> <tr><td>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td><td>300원/kg</td></tr> <tr><td>9. 폐휴대폰 반납</td><td>1,000원/개</td></tr> <tr><td>10. 미래세대실천행동</td><td>기후행동1.5℃</td></tr> <tr><td>11. 공유자전거 이용</td><td>100원/km</td></tr> <tr><td>12. 잔반제로 실천</td><td>100원/건</td></tr> <tr><td>13. 나무심기 행사 참여</td><td>3,000원/회</td></tr> <tr><td>14.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td><td>10,000원/회</td></tr> <tr><td>15. 재생원료 사용제품</td><td>100원/건</td></tr> <tr><td>16. 장바구니 이용</td><td>50원/회</td></tr> <tr><td>17. 개인용기 식품포장</td><td>500원/회</td></tr> </tbody> </table>		실천항목 구분	포인트 산정 금액	1. 전자영수증 발급	10원/건	2. 텀블러·다화용컵 이용	300원/개	3. 일회용컵 반환	100원/개	4. 리필스테이션 이용	500원/회	5. 다화용기 이용	500원/회	6. 무공해차 대여	100원/km	7. 친환경제품 구매	500원/건	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300원/kg	9. 폐휴대폰 반납	1,000원/개	10. 미래세대실천행동	기후행동1.5℃	11. 공유자전거 이용	100원/km	12. 잔반제로 실천	100원/건	13. 나무심기 행사 참여	3,000원/회	14.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10,000원/회	15. 재생원료 사용제품	100원/건	16. 장바구니 이용	50원/회	17. 개인용기 식품포장	500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개 실천 항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실천항목 구분</th> <th>포인트 산정 금액</th> </tr> </thead> <tbody> <tr><td>1. 전자영수증 발급</td><td>10원/건</td></tr> <tr><td>2. 텀블러·다화용컵 이용</td><td>300원/개</td></tr> <tr><td>3. 일회용컵 반환</td><td>100원/개</td></tr> <tr><td>4. 리필스테이션 이용</td><td>500원/회</td></tr> <tr><td>5. 다화용기 이용</td><td>500원/회</td></tr> <tr><td>6. 무공해차 대여</td><td>100원/km</td></tr> <tr><td>7. 친환경제품 구매</td><td>500원/건</td></tr> <tr><td>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td><td>300원/kg</td></tr> <tr><td>9. 폐휴대폰 반납</td><td>1,000원/개</td></tr> <tr><td>10. 미래세대실천행동</td><td>기후행동1.5℃</td></tr> <tr><td>11. 공유자전거 이용</td><td>100원/km</td></tr> <tr><td>12. 잔반제로 실천</td><td>100원/건</td></tr> <tr><td>13. 나무심기 행사 참여</td><td>3,000원/회</td></tr> <tr><td>14.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td><td>10,000원/회</td></tr> <tr><td>15. 재생원료 사용제품</td><td>100원/건</td></tr> <tr><td>16. 장바구니 이용</td><td>50원/회</td></tr> <tr><td>17. 개인용기 식품포장</td><td>500원/회</td></tr> <tr><td>18. 무탄소차 택시 이용</td><td>미정</td></tr> <tr><td>19. 다화용 택배상자 이용</td><td>미정</td></tr> </tbody> </table>		실천항목 구분	포인트 산정 금액	1. 전자영수증 발급	10원/건	2. 텀블러·다화용컵 이용	300원/개	3. 일회용컵 반환	100원/개	4. 리필스테이션 이용	500원/회	5. 다화용기 이용	500원/회	6. 무공해차 대여	100원/km	7. 친환경제품 구매	500원/건	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300원/kg	9. 폐휴대폰 반납	1,000원/개	10. 미래세대실천행동	기후행동1.5℃	11. 공유자전거 이용	100원/km	12. 잔반제로 실천	100원/건	13. 나무심기 행사 참여	3,000원/회	14.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10,000원/회	15. 재생원료 사용제품	100원/건	16. 장바구니 이용	50원/회	17. 개인용기 식품포장	500원/회	18. 무탄소차 택시 이용	미정	19. 다화용 택배상자 이용	미정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련 규정 (기후부고시) (*26.11월)
	실천항목 구분	포인트 산정 금액																																																																															
1. 전자영수증 발급	10원/건																																																																																
2. 텀블러·다화용컵 이용	300원/개																																																																																
3. 일회용컵 반환	100원/개																																																																																
4. 리필스테이션 이용	500원/회																																																																																
5. 다화용기 이용	500원/회																																																																																
6. 무공해차 대여	100원/km																																																																																
7. 친환경제품 구매	500원/건																																																																																
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300원/kg																																																																																
9. 폐휴대폰 반납	1,000원/개																																																																																
10. 미래세대실천행동	기후행동1.5℃																																																																																
11. 공유자전거 이용	100원/km																																																																																
12. 잔반제로 실천	100원/건																																																																																
13. 나무심기 행사 참여	3,000원/회																																																																																
14.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10,000원/회																																																																																
15. 재생원료 사용제품	100원/건																																																																																
16. 장바구니 이용	50원/회																																																																																
17. 개인용기 식품포장	500원/회																																																																																
실천항목 구분	포인트 산정 금액																																																																																
1. 전자영수증 발급	10원/건																																																																																
2. 텀블러·다화용컵 이용	300원/개																																																																																
3. 일회용컵 반환	100원/개																																																																																
4. 리필스테이션 이용	500원/회																																																																																
5. 다화용기 이용	500원/회																																																																																
6. 무공해차 대여	100원/km																																																																																
7. 친환경제품 구매	500원/건																																																																																
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300원/kg																																																																																
9. 폐휴대폰 반납	1,000원/개																																																																																
10. 미래세대실천행동	기후행동1.5℃																																																																																
11. 공유자전거 이용	100원/km																																																																																
12. 잔반제로 실천	100원/건																																																																																
13. 나무심기 행사 참여	3,000원/회																																																																																
14.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10,000원/회																																																																																
15. 재생원료 사용제품	100원/건																																																																																
16. 장바구니 이용	50원/회																																																																																
17. 개인용기 식품포장	500원/회																																																																																
18. 무탄소차 택시 이용	미정																																																																																
19. 다화용 택배상자 이용	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044-201-6953)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를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8개)와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를 함께 규정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재생에너지법」으로 개편하고,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수소법으로 이관 <p>*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 (개정) 「재생에너지법」(제명 변경) : 재생에너지</p>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26.9.18.)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단급수설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 2) 관류 3) 밸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단급수설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 2) 관류 3) 밸브류 4) 필터, 세라믹볼, 수도꼭지 탭 등 <u>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u>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고시) (*26.12.20.)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044-201-7156)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기업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기업 전체 ●(지원사업)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기술·공법·제품의 수출지원,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지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6.7. 8.)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정제·세탁세제·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확인* 유효기간은 3년 * 안전기준(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 등) 적합확인 및 신고하여야 시중 유통·판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자발적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분정보를 추가 공개*하거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3년 → 최대 5년) * 전성분 공개, 안전정보 공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5.12)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6, 6829)

기상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수 유무 중심 단정예보 특별(광역)시·도 단위 예보 구역 +6~8일 12시간, +9~11일 1일 단위의 예보 시간 간격 텍스트 중심의 체계 직전 예보와 비교 정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수 가능성 정보 제공 5km 격자 단위 지역별 상세 예보 제공 +6~8일 3시간, +9~11일 6시간 단위로 예보 시간 간격 상세화 그래픽 중심 서비스 체계 직전 예보 대비 강수 가능성 변화 추이 제공 	예보업무규정 (11.12.)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5)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초·중·고등학생 및 비장애인 중심의 국민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24~'25) 비장애인 대상 교육 주제별 동영상, 교재, 디지털 교구 등 개발 및 제공 웹페이지 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테고리 분류 기반의 전체 리스트를 단순 나열한 형태로 사용자가 직접 찾아서 활용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 장애인(학생, 교사 등)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대상 확대 수어동역, 자막해설, 점자, 음성안내, 색채 대비효과 등 배리어프리(Barrier-free) 콘텐츠 개발 '특수교육' 카테고리 추가 및 키워드 기반의 맞춤 검색 옵션 기능 추가 	기후변화 감시에측법 ('24.10.25.)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042-481-742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10분 간격의 재현바람장 제공 ● 최근 5년 일사량 자원지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현바람장 제공기간 5년으로 확대 ● 재현바람장 기반 풍력 자원지도 신규 제공 ● 일사량 자원지도 제공기간 6년으로 확대 <p>☞ (참고) 기상청 누리집) 보도자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람, 일사량 자료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공개"</p>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25.3.25.)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042-481-7484)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지진조기경보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규슈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카이 해곡(경도 136°)까지확장 	지진관측법 ('26년 11월)
			기상청 지진확산기술팀 (02-2181-0088)

06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튜터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기업 고용 최우수 인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으로 대상 확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 (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26.6.1.)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 044-202-4848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5
데이터·AI 활용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위한 4개 경진대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진대회 개별 운영 • (NIA) 데이터 크리에이터 캠프 경진대회 • (K-DATA) 데이터안심구역 경진대회,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활용 경진대회 • (KAIT) 빅콘테스트 경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부 주최 「2026 데이터+AI 혁신챌린지」로 통합 운영 • 통합공고, 공동 보도자료 배포, 홍보채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된 경진대회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하여 관심 분야 정보를 더 쉽게 확인 • 2026 클라우드·데이터 진흥주간 통합 시상 	-
			* (참고) 과기정통부 누리집 보도자료>「데이터·AI 인재 발굴 본격화, '2026 데이터+AI 크리에이터 캠프' 공고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파차단장치는 수출용/내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가 후 제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목적 증빙 서류 제출 시 제조 인가 면제 	전파법 제29조 제8항 (‘26.10.22.)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 (044-202-4957)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에 한해 내장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으로 대체 시 추가시험 면제 적합성평가 변경시 추가시험 여부 판단 모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제품의 내장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으로 대체 시 추가시험 면제 적합성평가 변경시 추가시험 여부 판단 명확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26.6월 말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1)

산업통상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 개별 사업 및 제도에 근거한 지원	●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 기술창업·규제 7대 분야의 정부 지원정책을 패키지로 파격적으로 지원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15-4413)
제조업의 AI 대전환(M.AX)를 통한 혁신 성장	● 개별 기업, 개별 과제 중심의 분절적 지원체계로 인해 제조혁신 지연	● 정부, 제조기업, AI기업, 연구기관·학계 등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개발·실증·확산 등 패키지 지원, 산업 데이터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제조업의 AI 전환(M.AX)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참고) 산업통상부 누리집> 보도자료>"제조AX 최강국 위해 기업들 뭉쳤다"(25.9.10.)	M.AX얼라이언스 출범 (25.9.10.)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044-203-3833)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설치 가능	● 식당, 휴게실, 세탁장, 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식당, 문화시설, 체육시설, 편의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및 의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참고) 국가보훈부 누리집> 보도자료>"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4.9.)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044-203-4409)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 입주 불가 ● (예외)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안팎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 입주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4.28.)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044-203-440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기술개발 및 공급망 내재화 지원, 전문인력양성,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37호]"</p>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6.8.11.)
			산업통상부 반도체과 (044-203-4279)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계획기간(현행3년)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 제외 ● 상생형 지원기업 제외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계획기간(연장 5년)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 포함 ● 상생형 지원기업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제외 규정 신설 	기업활력제고에 관한 특별법 ('26.10.22.)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 (044-203-423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6.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등록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을 법인 등기신청 접수증 등 법인 등기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법인 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학물질 등록·신고하거나 확인받은 것으로 간주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044-203-49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방지시설 설치의무 유예, 사업재편계획 제출 이후 지체 없이 개선계획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분할로 하나의 통합관리사업장이 둘 이상으로 분할되면 허가배출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분할 전 상태의 허가배출기준 적용(법인 분할 후의 오염물질 배출량 합계가 법인의 분할 전보다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 기준·인증 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사업재편 특례 등 철강산업 지원 강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26.6.17.)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044-203-4694)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어선 건조·개조업자의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 마련 (산업관리)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어선법 (‘25.12.21.)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3)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한 물류기업 3개사를 대상으로 3년간 개소당 최대 50억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항만법 (‘26.7.~)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51-773-5755)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항로 기본계획 등 수립, 재정 및 금융 지원,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하고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26.5.7)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051-773-6315)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정책정보 검색 시, 사업별 관련 사이트 개별 방문 지원사업 및 서류발급 신청 시, 개별 사이트를 방문하여 각각 회원가입·로그인 정책 정보 안내 시, 지원사업 공고 등 나열식 단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지방정부 지원 사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 및 각종 확인서 원스톱 발급 가능 한번의 로그인으로 중기부 정책 시스템을 끊임없이 이용 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안내 제공 	'26.12월 (6월 시범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 (044-204-7373)
아이디어로 실제 사업화까지, 국가 창업시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5천명 모집 (대상 범위) 예비창업자 + 업력 3년 이내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1만명 모집 (재도전) 1기 참여한 도전자 대상 우대 지원(신설) (대상 범위) 예비창업자 + 업력 7년 이내 기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 모집 공고 (’26.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044-204-7632)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중소벤처 기업부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소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소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부로 변경 ☞ (참고) 중소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부로 변경”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26.11월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044-204-745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수출지원사업은 전국단위 모집공고로 지역특성 반영에 한계 ● 개별 수출초보기업은 정보·경험 부족 등으로 수출 도전에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유망업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수출전문기업 등 전문성 보유 기관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참여하고, 기업의 수출 성과 기반으로 후속지원 연계 	('26.7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2)
정부 R&D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정책보증과 합산하여 매출액 기반의 소요자금 산정 방식으로 보증지원 ● 기존 정책보증과 합산하여 매출액 기반의 소요자금 산정 방식으로 보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정책보증과 별도한도로 프로젝트의 사업화에 소요자금을 산정하여 보증지원 <p><small>※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 "국가 연구개발 성과, 현장으로 빠르게 연결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5.20)"</small></p>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6.5.2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76, 7788)
제조소기업- 스타트업 협업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은 시제품 제조기업 탐색 비용과 시간이 과다 소요 ● 제조소기업은 기존 거래쳐 중심 사업운영으로 스타트업과 협업 기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시제품 제작업체 정보를 제공 ● 스타트업은 최적의 제조기업을 신속히 찾고, 제조소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가능 	('26.12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044-204-757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결과가 ①정부-공공기관 실증을 통해 ②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③시범 구매 및 ④해외 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프로젝트 추진 <p>☞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 “정부가 첫 고객이 되어 신산업 스타트업의 성장 가속화(2026.4.29.)”</p>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26.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044-204-7683)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 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 금지 ● 단,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공항, 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자 중 일정 요건(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갖춘 자는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능 ● 단, 치료 전·후 비교 사진 등 환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 사전에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 의무화 <p>☞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p>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6. 7. 1.)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044-204-7591)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공고, 상권분석, 통계자료, 법률정보를 각각 찾아 확인 ● 관심 정책을 확인한 뒤 신청 방법과 경로를 별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도우미에 질의하여 정책·상권·통계·법률 정보를 함께 확인 ● 관심 지원정책 확인 후 사업 신청 사이트 연계 	(‘26.9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94)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신청자의 매출액에 따른 제한 없음 ● 보건업(병의원, 치과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업종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 상품권강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경미한 제재(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비정상 거래행위(비가맹점 수취, 구역외 수취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 매출액 등이 30억원을 초과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불가 ● 보건업, 수의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불가 ●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 부과 ● 비정상 거래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맹취소 처분 <p>☞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사용,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점으로 제한"</p>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6.6.17.)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900)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주요 원재료에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p>☞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6.12.3.)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7948)

법제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청구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법령정보가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있어 사용자가 일일이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여러 번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해외 법령정보까지 한 번에 검색 ※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26.12.15.)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044-200-6826)

지식재산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인증장표를 부착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시, 정부가 해외 현지 정부에 직접 대응* * 수사·단속·통관보류 요구, 대량·상습 판매자 현지 형사 고소 등 ※ (참고) 지식재산처<보도자료>“해외 K-브랜드 짝퉁, 이제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	발명진흥법, 지식재산기본법 (‘26.8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 협력총괄과 (042-481-347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조상품 감정 지원 체계 無 → (소비자) ①고객센터 위조상품 신고 접수, ②입증자료 수집·제출, ③실물 택배 발송(상품 반송) → (상표권자) 상품 감정 → (온라인플랫폼社)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를 활용한 감정지원 체계 구축 → (소비자) 환불 신청 → (상표권자) AI 활용 '감정지원 보고서' 확인 후 '감정의견' 제공 → (온라인플랫폼社) 시스템 연계를 통해 상표권자의 '감정의견' 확인, 위조상품 환불·유통차단 등 후속 조치 	('26.11월)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042-481-8282)
K-브랜드 자킴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진출 이후 해외 무단선점 발견·사후대응, 자체적으로 무단선점 정보수집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진출 전 무단선점 경보를 통한 사전 대응 가능, 국가별(업종별) 통합 정보획득 및 후속 지원사업을 통한 신속 대응 <p>※ (참고) 지식재산처 누리집) 보도실명자료)*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현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p>	('26.7.30.)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042-481-5999)
수도권· 대경권· 전남권 IP 종합지원센터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 IP 권리화 중심 지원 • 거래·사업화·보호 등은 별도 사업체제로 분리 운영 • 수도권에 집중된 IP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종합지원센터로 개편 • IP 창출·거래·사업화·보호 원스톱 통합지원 • 5극 3특 권역별 구축 ('26.7월 시범 3개 권역 → '28년 전 권역) • 7개 지역 IP거래전문관 배치 	발명진흥법 제23조 ('26.7월)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042-481-586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특허 요약·검색 서비스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 내 AI 특허검색/요약 기능 미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 내 AI 특허검색/요약 기능을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쉽게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26.12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042-481-5077)
특허분석 수행 후 출원 시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한 특허분석 수행 비용에 대한 지원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출원한 경우 특허분석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포인트 지급 	지식재산 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26.12.28.)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042-481-875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거버넌스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데이터 보유 부서를 직접 찾아 가명정보 제공 관련 전반사항을 직접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명정보책임관에게 가명정보 제공을 신청하면, 일률적인 관련 절차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공 받음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26. 9.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명정보 결합 시 데이터 보유 기관과 일일이 협의하여 가명정보를 제공 받아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기관을 소집하여 결합 전반사항을 협의하고, 협의된 바에 따라 원활하게 가명정보 결합 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02-2100-3058)

관세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용 보세창고에는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화물 외 운영인이 선박 항공기에 공급하는 수리용 부품품 및 부속품을 보관 가능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6.6.22.)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25)

조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쇼핑몰 진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실적: 3천만원 • 업체수: 3개사 이상 • 규격: 업계공통규격 ● 종합쇼핑몰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쇼핑몰 진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실적: 면제 • 업체수: 1~2개사 이상 • 규격: 업체제시규격허용 ● 종합쇼핑몰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면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업무처리규정 (‘26.8.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66)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시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국산화 기업에 대한 우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국산화 중소기업 대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신인도 가점(1.0)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업무처리규정 (‘26.7.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66)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제품 심사 시 AI제품도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제품 심사 시 AI제품에 특화된 별도 심사 분야 및 평가지표 도입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26.10.)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83)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입찰, 계약체결, 분쟁 등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술자격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 분야에 특화된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신설 ● 제1회 공공조달관리사 자격 검정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 ’26.10.3.(토) • 실기: ’26.11.14.(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6.1월)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054-716-1514)

07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실현>

-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50% 일괄 인하 -

(정액제) 변경 전						
구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만원	10 만원	5.5 만원	9.0만원	4.5 만원	8.0 만원
일반 지방권	5.5 만원	9.5 만원	5.0 만원	8.5만원	4.0 만원	7.5 만원
우대지원지역	5.0 만원	9.0 만원	4.5 만원	8.0만원	3.5 만원	7.0 만원
특별지원지역	4.5 만원	8.5 만원	4.0 만원	7.5만원	3.0 만원	6.5 만원
(정액제) 변경 후						
구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3.0 만원	5.0 만원	2.5 만원	4.5 만원	2.2 만원	4.0 만원
일반 지방권	2.7 만원	4.7 만원	2.3 만원	4.2 만원	2.0 만원	3.7 만원
우대지원지역	2.5 만원	4.5 만원	2.1 만원	4.0 만원	1.7 만원	3.5 만원
특별지원지역	2.2 만원	4.2 만원	2.0 만원	3.7 만원	1.5 만원	3.2 만원

*관련법규(제도시행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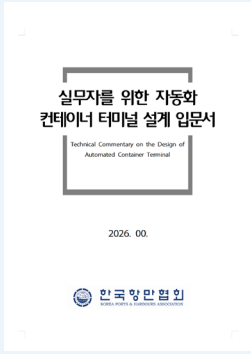
*관계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044-201-502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레일 특과 SRT 앱에서 각각 별도 예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철도 통합 앱에서 전 열차 통합 예·발매 	(‘26.8월)
			국토교통부 고속철도통합추진 TF (044-201-528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유공자(동일 세대원 포함)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유공자(동일 세대원 포함) 본인 소유 차량 및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신설) <p>☞ (참고) 국토교통부 뉴스·소식)보도자료)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p>	유료도로법 시행령 (‘26.7.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5)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선도지구에만 시범적용 ● 모든 동의서 개별 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 ● 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 <p>☞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 "주택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8.4.)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044-201-4927)
시설물 중대한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지정되는 경우, 중대한결함등 통보를 받은 경우 2년 이내 보수·보강 등 조치 착수,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 조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 명령,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수,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 조치 완료 <p>☞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p>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5.12.4.)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8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심의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심의 3. 광역교통개선대책 4. 교통영향평가 5. 경관심의 6. 기타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심의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심의 3. 광역교통개선대책 4. 교통영향평가 5. 경관심의 6. 교육환경평가^{신설} 7. 재해영향평가^{신설} 8. 소방성능평가^{신설} 9. 기타 필요한 사항 <p>☞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 “주택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6.1.15.)</p>	주택법 (‘26.8.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69)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기간이 장기(5년) 임에도 사후관리규정 미비 ● 기간연장, 변경기준 등 법령 근거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화주택 인정 이후 점검 절차 신설 ● 유효기간 연장, 변경 필요사항 등 법령 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11.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67)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출발 전까지	●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출발 전까지	(‘26.10월)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3)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	● 재승차 시 기본운임 부과	●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26.6.20.)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3)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연안여객선 예비선 2척 신규 건조·투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선 : 1척 ● 평균 선령 : 23.59년 ● 예비선 투입 항로 : 6개 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선 : 3척 ● 평균 선령 : 8.06년 ● 예비선 투입 항로 : 연안여객선 99개 항로 	해운법 (’25.10.1.)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51-773-5738)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을 계획, 설계할 때 최소한의 준수사항과 활용장비, 배치, 운영상의 주의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배포 (2026.12.31.)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51-773-5951, 5952)
공공이 선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의 민간분양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저조하여, 항만 재개발에 따른 효과 반감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항 재개발 구역 내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및 상부 공공콘텐츠 도입계획 수립 등으로 공공부문이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26. 하반기)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 개발추진단 (051-604-3113)

경찰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규정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도로교통법 (‘26.7.1.)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08)

새만금개발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 內 창업 또는 신설 사업장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3년간 100% + 2년간 5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 및 3·7·8공구 內 창업 또는 신설 사업장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3년간 100% + 2년간 50%) 지원 <p>☞ (참고)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보도자료>“제33차 새만금위원회, 투자진흥지구 확대...”</p>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6-6호 (‘26.4.15.)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 (063-733-1086)

08 농림·수산·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농지 위 화장실, 주차장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필요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농지 위 화장실, 주차장 설치 허용	농지법 (’26.8.28.)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4)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베트남 내 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 이용료 지원	●베트남 초보 수출기업 대상 시범수출, 통관, 보관, 운송, 마케팅 등 수출 조과정 지원 ●베트남 수출업체 대상 입·출고, 보관, 포장, 운송, 마케팅 등 지원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개소 (’26.6월 중 개소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4, 218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비축미 매입 시 중간정산금 4만 원/40kg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비축미 매입 시 중간정산금 6만 원/40kg 지급 	<p>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 ('26.7월 개정 예정)</p> <hr/> <p>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7)</p>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p>〈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6.7.23.)으로 법적 기반 마련 (정의) '한우', '한우농가', '한우산업' 정의 규정 마련 (추진체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 시·도별 계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근거 마련 (지원정책) 한우수급 관련 중장기적 정책 수립, 도축 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 비용 부담완화 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 규정 <p><small>☞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색</small></p>	<p>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7.23.)</p> <hr/> <p>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2)</p>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통신판매 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26.10.22.)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7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기획예산처 협의후 시행 ('26.7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검출 처분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의도적 오염이라도 농약 검출 기준 초과 검출시 1회에 인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의도적 오염이 확인되면 농약 검출량에 상관없이 1, 2회 시정명령, 3회 인증 취소로 변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7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으로 영농에 참여하더라도 인증받은 1인만 생산자명을 표기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으로 영농에 참여하는 가족에 한하여 공동으로 생산한 농산물에 인증사업자와 함께 공동생산자로 병기 가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7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컨설팅 서면진단 및 1회성 현장 방문 컨설팅 ● 물리적/관리적 보안 지침 및 문서 양식 제공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리사, IT 보안전문가 등 투입 및 다회차 밀착 컨설팅 ● 실질적 방어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4.1.9.)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2)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바이오산업 융합형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개설 <p><small>※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그린바이오 계약학과 모집</small></p>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5.1.3.)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44)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별 개별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량 물량으로 인한 협상력 부재 ● 높은 택배 단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단가 적용으로 인한 비용 상승 ● 개별 수거 및 배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인프라 부족 및 효율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화주'로 대량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 실현 ● 할인 단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화주 지원을 활용한 물류비 인하 ●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거-집하-배송'의 일관 시스템 도입으로 물류 효율화 <p><small>* (참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누리집(https://www.foodpolis.kr)정보센터) 보도자료) *식품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공동물류 지원 사업 본격 가동*</small></p>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044-201-2184)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 전국 또는 시도 단위 방역조치 ● 방역대 설정, 가축시장 폐쇄,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 전국 또는 시도 단위 방역조치를 발생농장 및 역학농가 중심으로 변경 ● 방역대 설정, 가축시장 폐쇄,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 ('26.10.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5)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 3년분)	●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 3년분)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 시, 그 차액 지원 가능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감척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26.9.11.)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51-773-5515-6)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 지정 및 관리	●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5개 품목 추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26.6월)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 (051-773-5414)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국 수출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 중국으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중국에 수출업소 등록을 직접 신청	● 식약처가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괄등록 ※ (참고) 식약처 누리집> 보도자료>“식약처, 중국 수출 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등록 일괄추진, K-푸드 수출지원 강화(2026.1.5.)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 ('26.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27)

농촌진흥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 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분뇨발효액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 %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분뇨발효액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2 %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p>☞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 보도자료)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완화 원료 '비료 공급 안정과 자원순환양달린다' (2026.5.14.)</p>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26.5.12.)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28)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전달, 주의·당부 중심의 교육 홍보 ●리플릿 등을 활용한 일반적 예방 수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밀착형 능동적 안전 지원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고령농업인 등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폭염 위험노출 점검에 따른 맞춤형 예방수칙 안내 및 안전용품 지원 <p>☞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 보도자료)“농촌진흥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본격 추진…발대식 개최(2026.5.18.)”</p>	(2026.6.1.).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063-238-1037)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 자격시험 첫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급 치유농업사 중심의 단일 자격 체계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2급 국가전문자격 위계 확립 및 고속권 전문가 양성 <p>☞ (참고) 치유농업 정보제공 포털인 “치유농업ON”을 통해 관련 정보수집, 시험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6월 공고)</p>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2026.6월)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과 (063-238-102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비료사용 처방을 받을 경우 퇴비 사용 시 화학비료 대체량 별도 계산(토양검정) 표준비료사용 처방을 해주는 「흙도람」 내 자동 산정 기능 없음 토양검정 결과 없으면 퇴비 처방 불가 직접 검정을 받아야만 처방 가능 맞춤 퇴비처방 기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흙도람」 PC·모바일에서 화학비료 대체 퇴비량 자동 계산 제공 농가에서 즉시 영농 활용 가능 인근 읍·면·동 대표 필지 분석값 활용으로 처방 가능 토양검정 이력 없는 농가도 처방 서비스 이용 가능 자가퇴비를 사용할 경우 퇴비시료를 시군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자가퇴비 성분함량으로 맞춤 퇴비처방서를 발급 	2026년 7월부터 개선 사항별 순차적 시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물환경과 (063-238-2464)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별 CA 수송 조건, 혼합선적 가능 여부, 품질관리 공정 정보가 개별 자료와 현장 기술지원 중심으로 제공되어 수출농가·업체의 접근성에 한계 혼합품목 선박수출 조건은 현장 경험과 개별 검토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예작물 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을 통해 품목별 CA 조건, 혼합선적 조건, 품질관리 공정 콘텐츠를 통합 제공 <p>☞ 참고: 「원예작물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 www.nihs.go.kr/caContainer</p>	(2026.6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063-238-6520)

산림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	●본인 소유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통해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시설 설치가능 * 참고 : 세부 시설기준은 법령개정 이후 별도 홍보 예정	산지관리법 (26.7.1)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23)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등 공동 활동 미이행 시 지급금액에서 10% 감액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준수사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등 공동 활동을 삭제하여 미이행 시에도 지급금액 감액 없음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6.5.19.)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042-481-1242)

09 국방·병무

국방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 중 선발된 사관후보생에게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 ● 현역부사관 및 임기제부사관(임관 후 1년 이내 4년복무 확정된 사람)에게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후 선발된 사관후보생에게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 ● 민간부사관,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임기제부사관(4년 복무를 확정된 사람)에게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 	군인사법 (‘26.2.3.)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2, 5143)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병교육 시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생책·내일책 1권 지참(없으면 부대 도서관 대여) ② 전문강사 독서코칭(2시간) ③ 독후감 작성 시 외출 1일 포상 ④ 수료 시 희망도서(2만원 내) 1권 증정 ● 자대 복무 시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병영도서관·북카페 복합문화공간 이용 ② 1인 연 6.4만원(최대 12.8만원) 정기구독권·전자책·종이책 구매 지원(80%) ③ 계급별 권장량(훈련병1→병장4권, 복무 중 10권 이상) ● 북콘서트·독후감 공모전·격오지 이동도서관·독서병 운영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정훈·문화활동 훈령 (‘26.7.)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 (02-748-6268)

병무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험응시 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일정'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일자'로 명확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26.7월-)
			병무청 현역기획과 (042-481-2739)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영일자 본인선택자는 다음해 입영하는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 포함되어 선발순위에 해당시 직권선발 ● 입영일자 본인선택 취소는 입영일자 30일전까지 3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영일자 본인선택자는 다음해 입영하는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 ● 입영일자 본인선택 취소는 입영일자 30일전까지 1회 허용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26.7.1.)
			병무청 현역인영과 (042-481-2716)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방식) 점수제 선발 ● (선발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모집 • 3개월 후 입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 선발 ● (선발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모집 • 다음연도 입영 * 입영 전년도에 일괄 선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26.3.27.)
			병무청 현역인영과 (042-481-2720)
충무훈련 10일 전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알림톡 사전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무훈련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동원미지정 예비군에게 예고없이 소집일을 정하고, 소집 4일전 통지서 교부 후 불시소집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대상자에게 충무훈련 시작 10일 전, 병력동원 훈련소집 가능성 및 전시임무 관련 알림톡 발송 → 불시소집가능성 및 전시임무 인지로 주요업무 일정조율 등 조치 가능 	26년 대전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실시계획 보고(시범실시) (‘26.4.17.)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9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 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가능	● 연고이주를 제외하고 해외이주 신고 이주대상국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국외여행허가 가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26.7월 예정)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954)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신 설〉	● 사회복무요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 가능	병역법시행령 (*26.8월 예정)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병역자정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요건 완화	● 물적요건 :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 물적요건 :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또는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된 공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26.8월 예정)
			병무청 산업자원과 (042-481-2772)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시 대체역 편입취소 후 현역병 등 입영의무 부과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도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 이행 가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6.4.21.)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

방위사업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현황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후 20일 이내에 수출거래현황 제출 	「방위사업법」 (‘26. 하반기)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1)
방위산업 공제조합 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 	「방위산업발전법」 (‘26.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시선도 연구협력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체계 수준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방위산업발전법」 (25.10.1.)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26.1.12.)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02-2079-6470)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체계 부품 중 핵심부품, 수출연계부품, 전략부품 국산화를 지원함 * '25년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체계 부품 중 핵심부품, 수출연계부품, 전략부품 및 상생협력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함 ※ (참고) 방위사업청 누리집 <보도자료> "지속 가능한 방산 동반성장", 중소기업 부품 개발에 정부와 대기업이 힘 모아 뒷받침	「방위산업발전법」 (25.10.1.)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26.03.11.)
			방위사업청 방산자원전략과 (02-2079-6464)

10 행정·안전·질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3사의 일부 저가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안심옵션 미적용으로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 <p>※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보도자료> "데이터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 추진"</p>	(26.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5)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 사용에도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비(경직성 비용 제외) 10% 이내 자율사용 비목(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방식(사용불가항목 외 연구관련 비용 모두 사용가능) 전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6.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3)

10 행정·안전·질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에게 자사 이용자의 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이용패턴에 적합한 최적요금제를 안내해야할 의무 부여 <p>※(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보도자료>“이용자는 내게 꼭 맞는 통신요금제를 추천받고, 통신사는 대표폰 방지,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강화”</p>	전기통신 사업법 (’26.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5)
민원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신뢰도 및 신속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기 전화, 문자 중심 처리 진행상황 확인 관련 2차 민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앱 등 다채널 자동 알림을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공과 진행상황 통보를 통한 신뢰도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고충민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가 수기로 법령, 정책자료, 유사 사례 검색·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정책 정보 및 유사 민원 확인을 통한 신속한 상담 서비스 제공 	

외교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주소지라도 여권별 개별배송만 가능하여 신청 건수만큼 배송비 부담 발생, 반복 수령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 수령인 지정에 따른 묶음배송으로 1회 배송·수령 가능, 배송비 부담 경감 	여권법 시행규칙 (’26.10.6.)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7)
			한국조폐공사 공공사업부 (042-870-1194)

법무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 및 동선을 스마트폰 모바일 앱 지도로 확인 <p>※ (참고) 법무부 누리집 법무뉴스>보도자료>“스토킹가해자 ‘실시간 동선’ 확인 가능해진다”</p>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법률 (‘26.6.24.)
			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763)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증거 보전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증거 보전요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전요청 대상범죄가 중대하고, 압수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증거의 멸실 또는 변경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일 + 30일(1회 연장 가능) 비밀유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사항 공개 또는 누설 금지 의무 부과 <p>※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12.)”</p>	형사소송법 (‘26.7.1.)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296)

행정안전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AI 정부24 정식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워드 기반의 통합검색을 지원하는 정부24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용어로 묻고 시가 질의 의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AI 지능형 검색 제공 AI 에이전트 기반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서류 분석·대화형 질의응답 제공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 및 전용 UI 제공 	(‘26.12월)
			행정안전부 통합포털정책과 (044-205-2922)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7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 정부앱, 삼성윌렛,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스타뱅킹, NH윌뱅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1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 (4개추가) 신한SOL뱅크, 우리WON뱅크, 하나원큐, i-ONE Bank 	(‘26.10월)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 (044-205-2757)
인구감소(관심) 지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 지표로 인구감소지수 산정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타 지역에 비해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대한 지원 지속 여부 불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과 활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개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위 유지 및 지속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6.10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3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기업 위주 일 경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업에서 일 경험 제공 	(‘26.6월~)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044-205-321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초본상 가족 관계 상세 표기(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로 재혼가정임이 노출 ●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재혼가정 자녀)이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보다 후순위로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초본에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하여 표기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동순위로 기재 <p>☞ (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 보도자료) "배우자의 자녀도 같은 가족" 주민등록표 차별 개선된다(2026.4.21.)</p>	주민등록법 시행령 ('26.10.29.)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관계법운영예규 및 유권해석으로 과세 제외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시행령」으로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중 기계장치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26.6.1. 시행)
			*주민세 과세기준: 7.1. 납기: 8.16.~3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6)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문자 글자수(90자) 한계 ● 재난문자 중복·과다 송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문자 글자수(157자) 확대 전국 시행 ● 재난문자 중복 검토기능 전국 시행 <p>☞ (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 보도자료)재난문자, 정보는 늘리고 중복발송 줄인다!</p>	('26.10월)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044-205-5309)

기후에너지환경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운영할 것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판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폐기물관리법 (26.11.12.)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4)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구역 반복·상습적인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1천만원 이하) 	하천법 (26.9.18.)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044-201-7538)

고용노동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재해조사보고서 비공개	●'26.6.1.부터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산업안전 보건법 ('26.6.1.)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044-202-8954)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신 설>	●근로자대표 요구 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26.6.1.)
	<신 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 알려야 함	
	<신 설>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규정은 '27년부터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 8923,8824)

10 행정·안전·질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사용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26.하반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08)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노동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하여야 함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감독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26.8.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29)

성평등가족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L 중심 삭제 지원에 중점 ● 미등록 해외사업자 대응 곤란 ● 즉각적인 접속차단 조치 불가 (방미심위 심의 요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불응, 반복계재 사이트 집중 분석, 사업자 제재 등 종합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쇄조치 필요 사이트 지속발굴·수사의뢰 ● 해외 법률 등을 적용, 민·형사상 제재 조치 이행하여 삭제 미조치에 적극 대응 ●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이행(피해자 특정된 경우 심의 前 차단 등) <p>☞ (참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보도자료)법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5.6.)</p>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운영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934호) (‘26.5.)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02-2100-621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최대 4년 6개월간 입소 가능 • (특별지원)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 (자립지원) 최대 4년간 입소 가능 ※ 장애인 보호시설은 피해회복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유형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 입소 가능 ※ 장애인 보호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해 회복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p>(참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보도자료)법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5.6.)</p>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7.1.)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02-2100-6397)

10 행정·안전·질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월 1회 • 저위험 2개월마다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경찰이 모니터링 실시 (월 1회) ● (저위험) 상담소가 모니터링 실시 (2개월마다 1회) <p>※ (참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보도자료)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2026.5.17.)”</p>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5.18.)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2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부인이나 왜곡,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명시적 금지 규정이 미비하여,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적용 외에는 법적 대응과 처벌에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훼손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피해 사실 부인 및 왜곡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7조)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26.6.11.)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7)

국토교통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	●모든 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만 시행	●일정 차령(8년) 이상 대형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정기점검을 추가로 시행	자동차관리법 (‘26.12.3.)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8)

해양수산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구명조끼 착용 의무대상인 ①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거나, ②승선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으로 한정	●구명조끼 착용 의무대상인 기상특보·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26.7.1.)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23)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 불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 가능	항만안전 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 (‘26.6.22.)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051-773-5791)
선박보안 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일부사용자(선사의 계정담당자)만 결과 확인 가능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	●실제 점검 결과정보를 활용하는 선박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동발송 ●누리집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26.하반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51-773-5893)

인사혁신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 마약류 검사 미시행	● 6종 마약류 검사 시행 ☞ (참고) 인사혁신처 누리집 보도자료)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 ('26.6.16.)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8)
공무원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 의료·법률·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여부 판단	● 심의회의 최종 결정 전 국민참여단 의견을 참고하여 순직 여부 판단 ☞ (참고) 인사혁신처 누리집 보도자료) "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방식 첫 운영"	공무원재해보상법 ('27년 개정 추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 (044-201-8079)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 혁신	● 지시 중심의 업무수행	● 자율·책임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전환, AI·DATA 기반 업무방식으로 전환, 단순·반복 업무 제거 ☞ (참고) 인사혁신처 누리집 보도자료) "자율과 책임으로 일하고, 불필요한 일은 덜어낸다"	('26.4.16.)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 (044-201-8112)

법제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메뉴 구조와 작은 글씨 등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법령정보를 찾는 데 어렵고,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이용에도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관적인 검색 화면과 주요 기능 중심으로 화면 UI/UX를 개편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쉽게 법령정보를 검색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26.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44-200-6786)
법조문 연계 판례 관계데이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결문에 인용된 법조문이 사건 당시 적용된 법령이 아닌 현행 법령 또는 선고일 직전의 법령으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결문에 인용된 법조문을 당시 적용된 법령 및 법조문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 국민 누구나 판결 당시 실제 적용된 법조문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 가능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26.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44-200-6788)

국가데이터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AI 기반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데이터센터(SDC)의 업무시간 내 제한적 운영 평일 업무시간 (09:00~18:00)에 한하여 데이터 분석 가능 통계분석 코드 예외로 인한 시스템 중단 리스크 때문에 야간 무인 가동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데이터센터(SDC)의 24시간 무중단 지능형 분석 지원 평일 야간 및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상시 데이터 분석 가능 최신 AI 기술 기반 「AI 코드 안정성 검사기」 도입으로 예외 코드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야간 무인 가동 실현 <p>☞(참고) 통계데이터센터 누리집 (https://data.mods.go.kr) 공지사항</p>	통계법 제31조2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운영 (’26.7.1.))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 기획협력과 (042-481-2350)
업종통계지도 체계를 생활밀접업종, 부리산업 중심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적 개념의 업종 제공 일부 신산업 미반영 일반 산업 혼합 제공으로 부리산업 분석 한계 업종 탐색·활용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밀접업종으로 재구성 제11차 산업분류 반영 부리산업 별도 구분 제공 직관적 구조로 편의성 향상 <p>☞(참고) 국가데이터처 누리집> 새소식>보도자료> “우리 동네 상권 매출 추이를 한눈에… 진화하는 ‘업종통계지도’(2026.6.26.)”</p>	(’26.6.26.)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서비스과 (042-481-694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가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중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7.7.)</p> <hr/> <p>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 (02-2110-1571)</p>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 별도 규정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을 생성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천·보증인이 인공지능 등에 의해 생성된 가상인물임을 공개하여야 한다. <p><small>※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소식 뉴스) 보도자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026.4.8.)</small></p>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26.6.)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5)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온라인 쇼핑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쇼핑물이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 수집·처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 <p><small>※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small></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6.7.2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9)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앙·지방정부 갈등조정담당관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마다 일반·고충·집단·특이민원 등 민원 유형별 담당 부서가 제각각, 민원 청구 분산 및 행정 비효율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특이민원 관련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담당관을 기관별로 지정하여,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민원 대응 강화 <p>※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 책임관리”</p>	(‘2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과 (044-202-1212)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별 비공무원 채용규정의 형식 및 내용이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 절차의 기준 및 원칙 등 표준화 <p>※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p>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26.7.7.)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044-200-7127)

10 행정·안전·질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추가	-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26.9.18.)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국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 목소리를 분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p><small>※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모두의 생각, ‘국민생각함’에 모여라”</small></p>	(‘26.4.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00-727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대상정보전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대상정보전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초과 & 정보주체수 100만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명 이상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인 자 	<p>개인정보보호법 (’26년 8월. 평균매출액등· 정보주체수 기준에 따른 자 ’27년 2월)</p> <p>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02-2100-317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전송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전송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제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전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전송요구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전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때 안전성 확보 위해 사전협의한 방식으로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10 행정·안전·질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 의무가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도 관련 사실 등을 통지 <p>☞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p>	개인정보 보호법 (*26.9.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00-3102)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CEO) 책임 규정 전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총괄 책임을 지는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CEO)에게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책임자로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p>☞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p>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3 (*26.9.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2)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상이	●부처별 소관 법령의 혈액검사 항목 및 진단결과 서식 통일 ※ (참고) 원안위 누리집>보도자료>“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안위고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26.7월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관세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기존 B2B 기반의 신고 체계와 위험관리를 B2C 거래에도 적용함	●B2C 거래에 맞는 신고서와 위험관리 도입 ※ (참고) 관세청 누리집>보도자료>“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본격 돌입”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26.8.15.)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2)

재외동포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 국민연금 이용 시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 금융인증서(재외공관 방문 필요), 국내 휴대전화 개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 후 각종 증명서 발급 가능 <p>※ (참고) 재외동포청 누리집 알림·소식·소통>보도자료 "재외국민, 국내 휴대전화 없어도 '재외국민 인증서'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한다(2026.5.6.)"</p>	('26.5.6.)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02-6399-7174/7171)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 집행의 분리로 재외동포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주체가 이원화되어 재외동포 대상 혼란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 집행의 통합으로 단일 창구에서 신속하고 간편한 원스톱 지원 실현 	「재외동포기본법」 ('26.10.1.)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032-585-3119)

해양경찰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연안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 파출소 드론 미보유	● 갯벌 등 접근이 어려운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드론(5대) 도입·배치	('26.4월)
			해양안전과 (032-835-2248)

